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를 발간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홍성무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홍성무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11일 출범하여 올해 4월 8일까지 운영된 심의위원회가 백서 발간을 통해 그 활동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9개월간의 대장정을 함께하는 내내 공정한 시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백서 발간에 정성을 기울여 준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선거일 약 8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는 다른 선거에 비해 훨씬 긴 호흡과 흔들림 없는 안목이 필요하기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일관된 심의기준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현행 심의기준의 큰 틀 안에서 보도유형별로 심의기준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안정적인 심의위원회 운영과 제재 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선거가 전개되는 양상과 보도가 게재된 시기를 고려하여, 선거가 임박한

본 백서는 보다 성숙한 선거보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례와 각종 통계 및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시기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심의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를 내려 불공정한 기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성 아래 운영된 우리 심의위원회는 총 열 다섯 차례의 회의를 열
어 자체심의안건 73건, 시정요구심의안건 12건 등 총 85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안건입니다.

이번 선거는 양당 유력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기간 초반부터 중반까지 엮히락뒤
치락하며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만큼 심의 결과에도 이러한 양상이 반영된 듯합니
다.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의 우열
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보도가 전체 안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유독 치열했던 만
큼 후보자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
도 12건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안전을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심의위원회로서는 적어도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하는 듯하여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선
거보도의 증가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선거의 공정성 내지 정당성을 위협하는 결과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됩니다.

본 백서는 보다 성숙한 선거보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
로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례와 각종 통계 및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언론계, 학계를 비롯한 선거보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로 하여금 공정한 선거
보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심의제도 및 선거보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발간사	002

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008
제2장 심의·의결 절차	012

2부

심의·의결 현황

제1장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018
I. 심의·의결 현황 개요	018
1. 자체심의	018
2. 시정요구심의	021
3. 반론보도청구회부 및 재심청구	021
II. 자체심의 분석	022
1. 위반유형별 분석	022
2. 결정유형별 분석	029
3. 매체유형별 분석	036
III. 시정요구 심의·의결 현황	040
1. 경고	040
2. 주의	041
3. 기각	042
제2장 역대 대통령선거 심의·의결 현황	044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3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054
제2장 결산 좌담	065

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의결 사례	072
1. 주의사실 게재	072
2. 경고	089
3. 주의	138
4. 권고	288
5. 안내문 송부	295
제2장 시정요구심의 의결 사례	297

부록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8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363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374
4. 심의대상 매체 현황	397
5. 색인	400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1. 운영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021년 7월 1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 약 9개월간 설치·운영되었다.

■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9.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에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2. 11. ~ 2017. 5. 12.	2017. 4. 12.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3. 20. ~ 2017. 6. 8.	2017. 5. 9.	2017. 3. 10.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2. 12. ~ 2018. 7. 13.	2018. 6. 13.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2018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8. 4. 13. ~ 2018. 7. 13.	2018. 6. 13.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9. 2. 2. ~ 2019. 5. 3.	2019. 4.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9. 12. 16. ~ 2020. 5. 15.	2020. 4. 15.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0. 2. 15. ~ 2020. 5. 15.	2020. 4. 15.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1. 2. 6. ~ 2021. 5. 7.	2021. 4. 7.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1. 7. 11. ~ 2022. 4. 8.	2022. 3. 9.	

2. 구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언론인단체)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이력	추천단체	비고
위원장	홍성무	(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조원봉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윤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국민의힘	- 유정화 위원 사퇴(2021. 11. 26.)에 따른 위촉(2021. 12. 6.)
	김경환	(현)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대광	(현) 김대광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남영진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기자협회	
	엄기홍	(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원영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 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앞줄) 왼쪽부터 남영진 심의위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홍성무 심의위원장, 김윤영 심의위원
(뒷줄) 왼쪽부터 엄기홍, 정원영, 김경환 심의위원, 조원봉 부위원장, 김대광 심의위원,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한 후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제재조치 관련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정정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반론보도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1. 자체심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 담당부서인 심의2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 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 기사를 자체 모니터링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한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결정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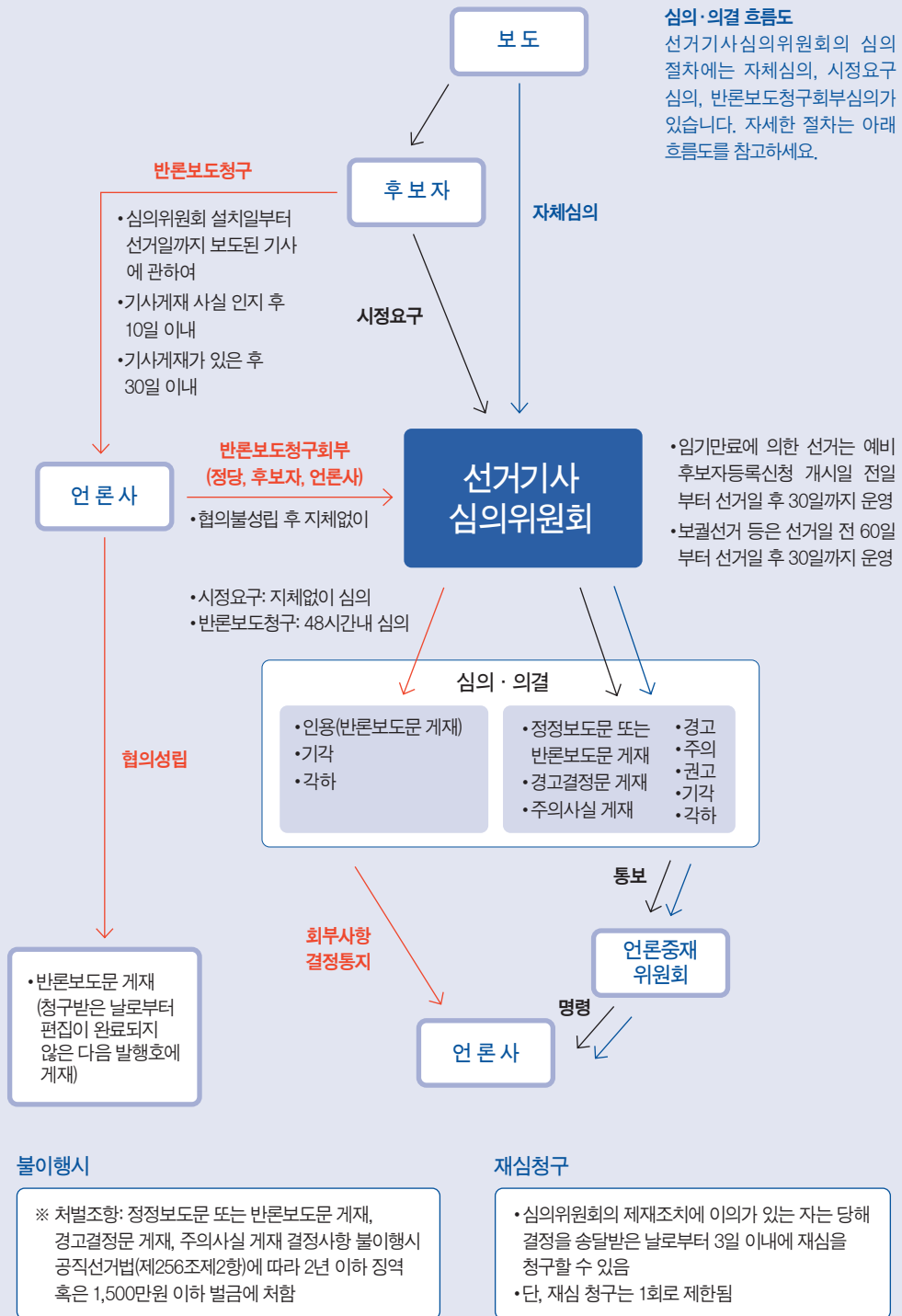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동안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이를 지체없이 심의한다.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적절한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를 결정한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지체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 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 심의절차





심의 · 의결 현황

제1장

심의 · 의결 현황 및 분석

제2장

역대 대통령선거 심의 · 의결 현황

I 심의 · 의결 현황 개요

1. 자체심의

선거기사심의 실무를 담당하는 심의2팀 직원 및 모니터링 전담 심의원은 447개(중앙일간지 29개, 지역일간지 134개, 기타일간지 5개, 종합주간지 34개, 지역주간지 211개, 월간지 22개, 뉴스통신 12개)의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사설·논평·광고 등을 검토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총 15차례 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 73건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고, 총 72건의 제재조치와 1건의 안내문 송부를 의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 조치가 49건(67.1%)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17건(23.3%), 주의사실 게재 4건(5.5%), 권고 2건(2.7%) 순이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안건 1건(1.4%)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1건(42.5%),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42건(57.5%)이었다. 보도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보도가 40건(54.8%)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이 12건(16.4%), 후보자의 홍보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후보자의 동정, 주요 공약 등을 보도한 일반선거기사가 10건(13.7%), 제한된 광고가 9건(12.3%), 객관성이 결여된 인터뷰 보도가 1건(1.4%),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평이 1건(1.4%)이었다.

■ 회차별 자체심의 의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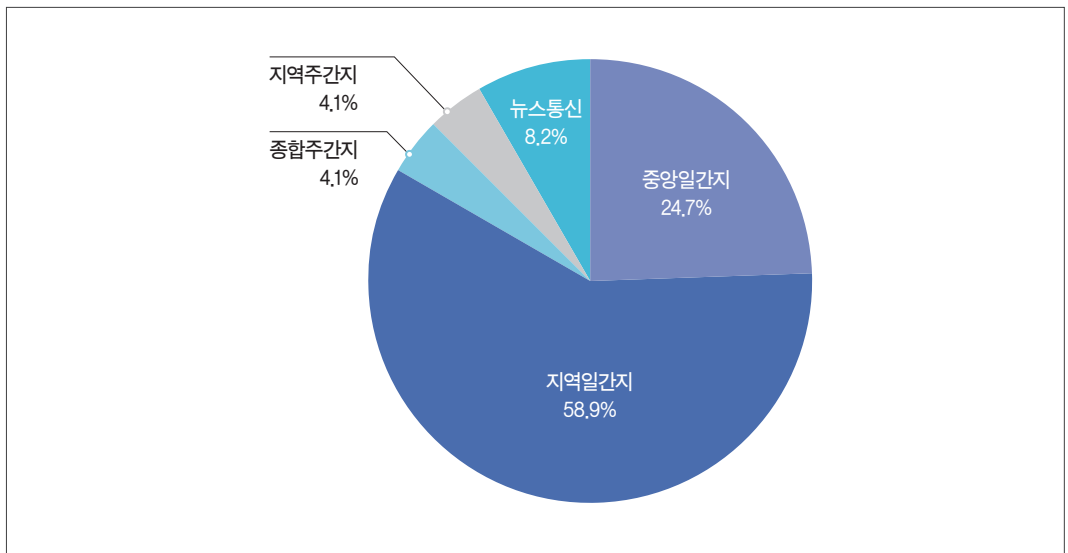
회차	계 (%)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이미지)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2차	3	3			1				2					1	1	1
3차	4	4			2				2				3	1		
4차	5	3	2		2	1		1	1				2	3		
6차	5	2	3			3			2				1	4		
7차	1	1							1					1		
8차	8	3	5		2	5				1			2	6		
9차	13	1	12			12			1				1	11	1	
10차	14	5	9		2	9			1	2		2	2	10		
11차	4	2	2		1	2				1			2	2		
12차	11	5	6			6				5		1	3	7		
13차	2	1	1				1		1				1	1		
14차	3	1	2			2			1			1		2		
총계 (%)	73 (100.0)	31 (42.5)	42 (57.5)	0 (0.0)	10 (13.7)	40 (54.8)	1 (1.4)	1 (1.4)	12 (16.4)	9 (12.3)	0 (0.0)	4 (5.5)	17 (23.3)	49 (67.1)	2 (2.7)	1 (1.4)

* 제1차, 제5차, 제15차 회의의 경우 자체심의 상정안건이 없었음

제재 대상이 된 매체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일간지가 43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18건(24.7%), 뉴스통신 6건(8.2%), 종합주간지 및 지역주간지 각 3건(4.1%) 순이었다.

간별		계 (%)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어른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이미지)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일간	중앙	18	7	11		1	9	1			7		1	3	14		
	지역	43	20	23		7	23		1	10	2		3	11	26	2	1
주간	종합	3	2	1		1	1			1			1	2			
	지역	3	2	1		1	1			1			2	1			
뉴스통신		6		6			6							6			
총계 (%)		73 (100.0)	31 (42.5)	42 (57.5)	0 (0.0)	10 (13.7)	40 (54.8)	1 (1.4)	1 (1.4)	12 (16.4)	9 (12.3)	0 (0.0)	4 (5.5)	17 (23.3)	49 (67.1)	2 (2.7)	1 (1.4)

■ 매체유형별 자체심의 의결현황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총 12건이었고, 대상 매체는 모두 중앙일간지였다. 심의위원회는 보도내용 및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심의대상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심의하였고, 경고 3건, 주의 2건 등 총 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후보자의 시정요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7건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간별	계 (%)	결정내용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중앙일간지	12 (100.0)					3 (25.0)	2 (16.7)			7 (58.3)

3. 반론보도청구회부 및 재심청구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2건이었다.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원심결정(주의사실 게재)을 취소하고 경고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기각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에는 반론보도청구회부 안건은 없었다.

■ 재심청구 의결현황

의결번호	원심결정	결과
제20대 대선-재심1	제20대 대선-시심11 (주의사실 게재)	일부 인용 (주의사실 게재 → 경고)
제20대 대선-재심2	제20대 대선-자심60 (주의사실 게재)	기각

II

자체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해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사는 모두 31건이었다. 이들 기사의 유형은 크게 (1)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을 게재한 경우, (2) 특정 후보자 관련 성명서나 기자회견문 등 홍보자료를 그대로 게재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거나 선거일전 90일 이내에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4)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만평의 연속 게재, 기사량 불균형 등의 경우로 구분된다.

(1)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은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칼럼 및 기고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칼럼 및 기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내지 검증을 폭넓게 인정하되, 정당한 평가 내지 비판을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주의사실 게재부터 권고까지 다양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전북중앙신문(제20대 대선-자심71)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았다.

경북신문(제20대 대선-자심6), 일요시사(제20대 대선-자심7), 뉴영남매일(제20대 대선-자심42)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정반대로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후보자 사퇴 내지 반대를 유도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한 광전매일신문(제20대 대선-자심13), 열린순창(제20대 대선-자심27), 경북도민일보(제20대 대선-자심69) 또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투데이충남(제20대 대선-자심14)과 대구신문(제20대 대선-자심18)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운세를 통해 후보자들의 당락을 예측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각 주의 조치를 받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지만 비교적 위반 정도가 경미했던 경북도민일보(제20대 대선-자심8) 또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광전매일신문(제20대 대선-자심1)은 특정 후보자만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반복하여 게재하였지만, 심의위원회는 게재 시점이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이고 선거일까지 7개월 이상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 조치하였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 · 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사례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과
제20대 대선-자심1	광전매일신문	7월 14일	11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회화화	권고
		8월 4일	11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	
제20대 대선-자심2	The대한일보	7월 23일	15	2022년 대선 기상도	안내문송부
제20대 대선-자심6	경북신문	8월 2일	18	윤석열, 인천상륙작전2	경고
제20대 대선-자심7	일요시사	7월 25일	5	홍준표에게 기회를!	경고
제20대 대선-자심8	경북도민일보	9월 27일	15	개그정치를 막으려면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3	광전매일신문	10월 27일	11	윤석열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경고
제20대 대선-자심14	투데이충남	10월 14일	9	대선 판세와 주역 점괘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8	대구신문	10월 12일	22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천기와 미래운	주의
		11월 9일	22	제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천운	
제20대 대선-자심27	열린순창	12월 1일	23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생각하며	경고
제20대 대선-자심42	뉴영남매일	1월 7일	15	윤석열의 줄타동시(啐啄同時)	경고
제20대 대선-자심69	경북도민일보	2월 8일	15	말(言)의 오염	경고
제20대 대선-자심71	전북중앙신문	2월 21일	15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주의사실게재

(2) 특정 후보자 관련 홍보물 게재

심의기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을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물로 규정하고(제7조제2호), 홍보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경우 선거에 유 ·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유로 심의 및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게재한 대부분의 언론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고, 경고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심의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한 세계타임즈(제20대 대선-자심40)와 호남제일신문(제20대 대선-자심41)에 대해서는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하였다.

사건의내막(제20대 대선-자심5)은 후보자의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하였는데, 특정 후보자에 관한 지지선언문과는 달리 비교적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고, 아직 정당의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게재된 점을 고려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 특정 후보 관련 홍보물 게재 사례 (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과
제20대 대선-자심4	문화매일신문	8월 19일	2	전주 3040세대 815명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경고
제20대 대선-자심5	사건의내막	8월 15일	3	후보 역량·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 통해 국민께 희망 드러야	주의
제20대 대선-자심9	호남제일신문	9월 10일	11	'공정한 세상'과 '지방분권 실현' 위한 익산 시민 8,336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경고
제20대 대선-자심19	부천신문	11월 11일	3	부천시을 서영석, 윤석열 후보선출에 '공정과 상식'의 재건...	경고
제20대 대선-자심20	세계타임즈	11월 26일	2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3자 정책토론 제안	경고
		11월 29일	3	심상정 대통령 후보 청년정의당 출범식 인사말	
		12월 6일	2	국가혁명당, 여론조사 지지도 3위,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 즉각 중단 하라	
제20대 대선-자심40	세계타임즈	1월 7일	3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주의사실 게재
제20대 대선-자심41	호남제일신문	1월 7일	11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 광고 같다!	주의사실 게재
제20대 대선-자심54	새만금일보	1월 10일	11	마스크에 감춘 이재명의 실체를 벗기다	경고

(3) 광고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거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광고를 게재하는 등 제한된 광고를 게재하여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는 9건이었다.

중앙일보(제20대 대선-자심21)는 모 원외정당의 의뢰를 받아 특정 후보자가 배임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처럼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동일한 정당의 의뢰에 의해 또다시 정권교체와 정권유지 측 후보자의 자질과 주요 공약 등을 비교·평가한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제20대 대선 자심60). 참고로, 같은 내용의 의견광고가 중앙일보 외에 조선일보(제20대 대선-자심59), 동아일보(제20대 대선-자심61), 문화일보(제20대 대선-자심62)에도 게재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광고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타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일한 심의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한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각 경고 조치하였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국제신문(제20대 대선-자심44)과 특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부산일보(제20대 대선-자심55)는 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스포츠경제(제20대 대선-자심43)와 브릿지경제신문(제20대 대선-자심58)은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광고를 게재하여 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사례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과
제20대 대선-자심21	중앙일보	12월 1일	35	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3	한국스포츠경제	12월 23일	1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주의
		1월 3일	10		
제20대 대선-자심44	국제신문	1월 7일	18	윤석열 후보 승리의 마지막 선택은?	경고
제20대 대선-자심55	부산일보	1월 18일	16	“자유진영 대선후보단일화를 촉구한다”	경고
제20대 대선-자심58	브릿지경제신문	1월 26일	4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9	조선일보	1월 26일	35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경고
제20대 대선-자심60	중앙일보	1월 26일	31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사실 게재
제20대 대선-자심61	동아일보	1월 26일	27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경고
제20대 대선-자심62	문화일보	1월 26일	31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경고

(4) 기타

경인종합일보(제20대 대선-자심3)는 대통령선거에 출마 예정인 현직 지자체장의 주요 공약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1면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형평성 위반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중앙신문(제20대 대선-자심10)은 특정 후보자는 우호적으로 표현한 반면, 여타 후보자에 관해서는 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만평 20건을 게재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 보도량 불균형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과
제20대 대선-자심3	경인종합일보	7월 21일	1	이재명 “정치가 천직이라 느낀다”	주의
		7월 21일	1	이재명 “통통불은 간호 공무원 손, 잊지 않겠다”	
		7월 23일	1	이재명 “임기내 청년 年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7월 23일	1	이재명 “윤석열, 구태 정치인의 전형... 안타깝다”	
		7월 26일	1	이재명 “사학비리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	
		7월 27일	1	이재명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평 게재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과
제20대 대선-자심10	중앙신문	7월 15일	14	윤석열 파일 검증 중...외 19건	주의

나.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기준을 위반해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사는 모두 42건이었다.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기준을 위반한 기사의 유형은 크게 (1)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기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1)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관련 심의기준 위반은 대부분 여론조사 보도에서 발생하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여야 후보자 간 지지율의 차이가 접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다수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라는 점을 간과한 채, ‘골든크로스’, ‘역전’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보도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이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동일하게 주의 조치하였다.

한편, 중앙신문(제20대 대선-자심11)은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제목을 사용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데일리(제20대 대선-자심39)는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제목에 작게나마 ‘오차범위 내’라고 표시한 사실을 감안하여 권고 조치를 받았다.

■ 여론조사보도 기준 위반 사례 (4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결과
제20대 대선-자심11	중앙신문	9월 2일	2	홍준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경고
제20대 대선-자심15	경상일보	10월 19일	4	이재명, 양자대결서 윤석열 · 홍준표에 다 밀려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6	뉴영남매일	10월 27일	4	홍준표만 이재명 앞섰다…양자대결 洪45.1%, 李 40.6%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7	전국매일신문	10월 15일	4	이재명, 與野 4자 가상대결서 모두 앞섰다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2	매일신문	12월 3일	1	이준석 '잠수' 탄 사이 李 35.5% > 尹 34.6%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3	서울신문	12월 2일	4	이재명 35.5% vs 윤석열 34.6%… 李,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4	세계일보	12월 2일	4	尹 컨벤션 효과 다했나… 李, 지지율 첫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5	한국경제	12월 2일	6	李 35.5% vs 尹 34.6% 지지율 첫 '골든크로스'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6	헤럴드경제	12월 2일	5	'李,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까지...尹, 돌파구있나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8	UPI뉴스	12월 16일	정치	'골든크로스' 이재명 35.4% · 윤석열 33.3%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9	강원도민일보	12월 10일	8	대선 지지율 이재명 38%, 윤석열 36%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0	광주매일신문	12월 10일	4	"李 38% 尹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1	대구일보	12월 10일	3	이재명 38%- 윤석열 36% 4자대결 지지율 '첫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2	아시아뉴스통신	12월 10일	정치	'한달 만에 역전' 이재명 38%, 윤석열 36%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3	연합뉴스	12월 9일	정치	"이재명 38% 윤석열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4	전국매일신문	12월 10일	4	李 38% · 尹 36%...李,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5	전남매일	12월 10일	5	이재명 38% · 윤석열 36%...첫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6	전북중앙신문	12월 10일	2	'이재명 38%-윤석열 36%'... 李가 尹 앞질러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7	천지일보	12월 10일	1	이재명, 6주 만에 지지율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8	광주일보	12월 10일	3	대전 다자대결, 이재명 38% · 윤석열 36%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9	이데일리	12월 10일	8	한 주 새 5%p 오른 이재명, 윤석열 오차범위 내 추월... 20대 표심향방 '최대변수'	권고
제20대 대선-자심45	주간동아	12월 27일	4-5	尹, 여론조사 6승 3패... 무능 이미지 고착 시 데드크로스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6	The대한일보	12월 21일	3	이재명 40.3% 윤석열 37.4%... 李, 2.9%p차로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7	호남신문	12월 21일	2	이재명 40.3% 윤석열 37.4%...李, 2.9%p차로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8	뉴스토마토	12월 21일	1	이재명, 윤석열에 골든크로스... 5자 가상대결서 첫 추월	주의
		12월 21일	4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과
제20대 대선-자심49	뉴시스	1월 3일	정치	이재명 40.9% 윤석열 39.2%...李, 尹에 첫 추월[리얼미터]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0	서울뉴스통신	1월 3일	정치	이재명 41.0%, 윤석열 37.1%...李, 3주 연속 우위	주의
		1월 4일	정치	리얼미터 등 6개 여론조사... 이재명 1위	
제20대 대선-자심51	무등일보	1월 4일	1	이재명으로 기울었다...연말연시 골든크로스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2	디지털타임스	1월 6일	4	안철수 2030 지지율 2위... 처음으로 윤석열 제쳤다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3	한국경제	1월 6일	6	安 2030 지지율, 尹 추월...“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6	목포투데이	1월 12일	4	안철수 급부상, 2030 지지율 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7	일간경북신문	1월 20일	6	뒤집혔다... 尹 36.1 vs 李 34.9%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3	뉴시스(NEWSIS)	1월 24일	정치	윤석열 37.8%, 이재명 33.6%... 李 · 尹, 격차 4.2% 포인트[글로벌리서치]	주의
		2월 3일	정치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한길리서치]	
제20대 대선-자심64	The대한일보	2월 4일	3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5	호남매일	2월 4일	3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6	광전매일신문	2월 4일	3	이 5.1%p 급반등 윤 0.5%p 하락...이, 역전 이, 3040서 강세... 윤, 60세서 과반 지지율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7	문화일보	1월 27일	4	단일화 적합도는 安...경쟁력은 尹이 앞서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8	헤럴드경제	2월 4일	1	한달만에 재역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72	국제신문	2월 22일	4	유력해진 다자대결 구도... 李 비상체제 돌입 총력전	주의
제20대 대선-자심73	조선일보	2월 26일	4	5.6%p 격차가 1.6%p로... 李 수도권서 역전, 尹 2030 계속 우세	주의

(2) 기타

헤럴드경제(제20대 대선-자심12)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선정한 정치전문가들의 선거 전망을 단순 합산하여 당내 경선 및 선거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주의 조치를 받았다.

뉴스토마토(제20대 대선-자심70)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입장만을 게재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 후보자 비교 · 평가의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과
제20대 대선-자심12	헤럴드경제	9월 3일	1	“대선, 결국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전문가 10인 전망	주의
		9월 3일	3	“李7·李1 vs 尹6·洪2 劉1... 대선 승리는 민주당 우세”	

■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한 인터뷰를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결과
제20대 대선-자심70	뉴스토마토	2월 10일	2	갈팡질팡 서울 2030 “김혜경 갑질 논란 보고 마음 굳혔어요”	주의

2. 결정유형별 분석

가. 주의사실 게재

자체심의 안건 중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는 주의사실 게재로 총 4건이었다. 세계타임즈(제20대 대선-자심40)와 호남제일신문(제20대 대선-자심41), 중앙일보(제20대 대선-자심60)가 이미 한 차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심의기준을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제재수위가 상향되었고, 각 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받았다. 전북중앙신문(제20대 대선-자심71)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았다.

■ 특정 후보자 관련 홍보물 게재 사례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40	세계타임즈	1월 7일	3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공정성 및 형평성	일반선거기사
제20대 대선-자심41	호남제일신문	1월 7일	11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공정성 및 형평성	일반선거기사

■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60	중앙일보	1월 26일	31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공정성 및 형평성	광고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칼럼 및 기고문 게재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71	전북중앙신문	2월 21일	15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나. 경고

자체심의 안건 중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17건(23.3%)이었다. 보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을 게재한 사례가 6건, 특정 후보자의 기자회견, 성명서 등 홍보물 전문을 게재한 사례가 5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사례가 5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한 사례가 1건이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3건, 지역일간지 11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2건이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사례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6	경북신문	8월 2일	18	윤석열, 인천상륙작전2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제20대 대선-자심7	일요시사	7월 25일	5	홍준표에게 기회를!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제20대 대선-자심13	광전매일신문	10월 27일	11	윤석열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제20대 대선-자심27	열린순창	12월 1일	23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생각하며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제20대 대선-자심42	뉴영남매일	1월 7일	15	윤석열의 줄탁동시(啐啄同時)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제20대 대선-자심69	경북도민일보	2월 8일	15	말(言)의 오염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 특정 후보자 관련 홍보물 게재 사례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4	문화매일신문	8월 19일	2	전주 3040세대 815명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공정성 및 형평성	일반선거기사
제20대 대선-자심9	호남제일신문	9월 10일	11	'공정한 세상'과 '지방분권 실현' 위한 익산시민 8,336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공정성 및 형평성	일반선거기사
제20대 대선-자심19	부천신문	11월 11일	3	부천시을 서영석, 윤석열 후보선출에 '공정과 상식'의 재건...	공정성 및 형평성	일반선거기사
제20대 대선-자심20	세계타임즈	11월 26일	2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3자 정책 토론 제안	공정성 및 형평성	일반선거기사
		11월 29일	3	심상정 대통령 후보 청년정의당 출범식 인사말		
		12월 6일	2	국가혁명당, 여론조사 지지도 3위,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 즉각 중단하라		
제20대 대선-자심54	새만금일보	1월 10일	11	마스크에 감춘 이재명의 실체를 벗기다	공정성 및 형평성	일반선거기사

■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사례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44	국제신문	1월 7일	18	윤석열 후보 승리의 마지막 선택은?	공정성 및 형평성	광고
제20대 대선-자심55	부산일보	1월 18일	16	"자유진영 대선후보단일화를 촉구한다"	공정성 및 형평성	광고
제20대 대선-자심59	조선일보	1월 26일	35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공정성 및 형평성	광고
제20대 대선-자심61	동아일보	1월 26일	27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공정성 및 형평성	광고
제20대 대선-자심62	문화일보	1월 26일	31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공정성 및 형평성	광고

■ 여론조사 결과 왜곡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11	중앙신문	9월 2일	2	홍준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다. 주의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안건의 67.1%에 해당하는 49건에 대해 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38건은 여론조사보도에 관한 것으로,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자가 앞서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다. 그 외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고문, 홍보물 전문, 만평, 광고 등을 게재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사례가 9건이었고, 후보자를 비교·평가하거나 유권자들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2건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14건, 뉴스통신 6건, 종합주간지 2건, 지역주간지 1건 순이었다.

■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 사례 (3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15	경상일보	10월 19일	4	이재명, 양자대결서 윤석열·홍준표에 다 밀려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16	뉴영남매일	10월 27일	4	홍준표만 이재명 앞섰다...양자대결 洪45.1%, 李 40.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17	전국매일신문	10월 15일	4	이재명, 與野 4자 가상대결서 모두 앞섰다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22	매일신문	12월 3일	1	이준석 '잠수' 탄 사이 李 35.5% > 尹 34.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23	서울신문	12월 2일	4	이재명 35.5% vs 윤석열 34.6%... 李,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24	세계일보	12월 2일	4	尹 컨벤션 효과 다했나... 李, 지지율 첫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25	한국경제	12월 2일	6	李 35.5% vs 尹 34.6% 지지율 첫 '골든크로스'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26	헤럴드경제	12월 2일	5	'李,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까지...尹, 돌파구있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28	UPI뉴스	12월 16일	정치	'골든크로스' 이재명 35.4%·윤석열 33.3%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29	강원도민일보	12월 10일	8	대선 지지율 이재명 38%, 윤석열 36%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30	광주매일신문	12월 10일	4	"李 38% 尹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31	대구일보	12월 10일	3	이재명 38% - 윤석열 36% 4자대결 지지율 '첫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32	아시아 뉴스통신	12월 10일	정치	'한달 만에 역전' 이재명 38%, 윤석열 3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33	연합뉴스	12월 9일	정치	"이재명 38% 윤석열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34	전국매일신문	12월 10일	4	李 38% · 尹 36%...李,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35	전남매일	12월 10일	5	이재명 38% · 윤석열 36%...첫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36	전북중앙신문	12월 10일	2	‘이재명 38% - 윤석열 36%’...李가 尹 앞질러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37	천지일보	12월 10일	1	이재명, 6주 만에 지지율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38	광주일보	12월 10일	3	대전 다자대결, 이재명 38% · 윤석열 3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45	주간동아	12월 27일	4-5	尹, 여론조사 6승 3패... 무능 이미지 고착 시 데드크로스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46	The대한일보	12월 21일	3	이재명 40.3% 윤석열 37.4%...李, 2.9%p차로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47	호남신문	12월 21일	2	이재명 40.3% 윤석열 37.4%...李, 2.9%p차로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48	뉴스토마토	12월 21일	1	이재명, 윤석열에 골든크로스... 5자 가상대결서 첫 추월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12월 21일	4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제20대 대선-자심49	뉴시스	1월 3일	정치	이재명 40.9% 윤석열 39.2%...李, 尹에 첫 추월[리얼미터]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50	서울뉴스통신	1월 3일	정치	이재명 41.0%, 윤석열 37.1%...李, 3주 연속 우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1월 4일	정치	리얼미터 등 6개 여론조사... 이재명 1위		
제20대 대선-자심51	무등일보	1월 4일	1	이재명으로 기울었다... 연말연시 골든크로스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52	디지털타임스	1월 6일	4	안철수 2030 지지율 2위... 처음으로 윤석열 제쳤다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53	한국경제	1월 6일	6	安 2030 지지율, 尹 추월... “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56	목포투데이	1월 12일	4	안철수 급부상, 2030 지지율 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57	일간경북신문	1월 20일	6	뒤집혔다... 尹 36.1 vs 李 34.9%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63	뉴시스 (NEWSIS)	1월 24일	정치	윤석열 37.8%, 이재명 33.6%...李 · 尹, 격차 4.2% 포인트[글로벌리서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2월 3일	정치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한길리서치]		
제20대 대선-자심64	The대한일보	2월 4일	3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 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65	호남매일	2월 4일	3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66	광전매일신문	2월 4일	3	이 5.1%p 급반등 윤 0.5%p 하락... 이, 역전 이, 3040서 강세... 윤, 60세서 과반 지지율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67	문화일보	1월 27일	4	단일화 적합도는 安... 경쟁력은 尹이 앞서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68	헤럴드경제	2월 4일	1	한달만에 재역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72	국제신문	2월 22일	4	유력해진 다자대결 구도...李 비상체제 돌입 총력전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제20대 대선-자심73	조선일보	2월 26일	5	5.6%p 격차가 1.6%p로...李 수도권서 역전, 尹 2030 계속 우세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사례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 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8	경북도민일보	9월 27일	15	개그정치를 막으려면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제20대 대선-자심14	투데이충남	10월 14일	9	대선 판세와 주역 점괘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제20대 대선-자심18	대구신문	10월 12일	22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천기와 미래운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11월 9일	22	제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천운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사례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 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21	중앙일보	12월 1일	35	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공정성 및 형평성	광고
제20대 대선-자심43	한국스포츠경제	12월 23일	1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공정성 및 형평성	광고
		1월 3일	10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제20대 대선-자심58	브릿지경제신문	1월 26일	4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공정성 및 형평성	광고

■ 특정 후보자 관련 홍보물 게재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 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자심5	사건의내막	8월 15일	3	후보 역량·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 통해 국민께 희망 드려야	공정성 및 형평성	일반선거기사

■ 보도량 불균형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 자심3	경인종합일보	7월 21일	1	이재명 "정치가 천직이라 느낀다"	공정성 및 형평성	일반선거기사
		7월 21일	1	이재명 "통통불은 간호 공무원 손, 잊지 않겠다"		
		7월 23일	1	이재명 "임기내 청년 年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7월 23일	1	이재명 "윤석열, 구태 정치인의 전형... 안타깝다"		
		7월 26일	1	이재명 "사학비리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		
		7월 27일	1	이재명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 ·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평 게재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 자심10	중앙신문	7월 15일	14	윤석열 파일 검증 중... 외 19건	공정성 및 형평성	사진게재

■ 후보자 비교 · 평가의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 자심12	헤럴드경제	9월 3일	1	"대선, 결국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전문가 10인 전망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일반선거기사
		9월 3일	3	"李7·李1 vs 尹6·洪2 劉1... 대선 승리는 민주당 우세"		

■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한 인터뷰를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 자심70	뉴스토마토	2월 10일	2	갈팡질팡 서울 2030 "김혜경 갑질 논란 보고 마음 굳혀어요"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인터뷰 및 인용기사

라. 권고

자체심의 안건 중 권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2건(2.7%)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 ·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고문을 게재하거나,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보도하여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조치를 받은 매체는 모두 지역일간지였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 자심1	광전매일신문	7월 14일	11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희화화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8월 4일	11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		

■ 여론조사 보도 기준 위반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 자심39	이데일리	12월 10일	8	한 주 새 5%p 오른 이재명, 윤석열 오차 범위 내 추월... 20대 표심향방 '최대변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여론조사

마. 안내문 송부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 제13조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결정 외에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 송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가 안내문을 송부한 안건은 1건이었다. 특정 출마예정자가 여당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의 기고문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편파적인 표현의 수위가 높지 않으나, 반복될 경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내문 송부를 결정,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사례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제목	위반유형	보도유형
제20대 대선- 자심2	The대한일보	7월 23일	15	2022년 대선 기상도	공정성 및 형평성	칼럼 및 기고 등

3. 매체유형별 분석

자체심의 대상매체 447개 가운데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1건 이상 받은 매체는 총 53개였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11개, 지역 및 기타일간지 31개, 종합주간지 및 지역주간지 각 3개, 뉴스통신 5개였다.

2건 이상 제재조치를 받은 언론사는 17개로 헤럴드경제, The대한일보, 광전매일신문이 각 3건의

구분 매체명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이미지)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투데이충남	1						1				1			
	호남매일		1		1							1			
	호남신문		1		1							1			
	호남제일신문	2		2						1	1				
종합주간지	소계	20	23	7	23	0	1	10	2	3	11	26	2	1	
	사건의내막	1		1								1			
	일요시사	1						1			1				
	주간동아		1		1							1			
	소계	2	1	1	1	0	0	1	0	0	1	2	0	0	
	목포투데이		1		1							1			
	부천신문	1		1							1				
	열린순창	1						1			1				
	소계	2	1	1	1	0	0	1	0	0	2	1	0	0	
	뉴스통신	UPI뉴스		1		1							1		
		뉴스시스 (NEWSIS)		2		2							2		
		서울뉴스통신		1		1							1		
아시아뉴스 통신			1		1							1			
연합뉴스			1		1							1			
	소계	0	6	0	6	0	0	0	0	0	0	6	0	0	
	총 계 (%)	53개 매체	31	42	10	40	1	1	12	9	4	17	49	2	1
73건		(42.5)	(57.5)	(13.7)	(54.8)	(1.4)	(1.4)	(16.4)	(12.3)	(5.5)	(23.3)	(67.1)	(2.7)	(1.4)	

Ⅲ 시정요구 심의 · 의결 현황

제20대 대통령선거 심의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후보자가 시정을 요구한 안건은 모두 12건이었다. 12건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 곳의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5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고 3건, 주의 2건을 의결하였고, 7건은 기각을 결정하였다.

1. 경고

심의위원회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 1건의 경고 조치를 결정하였다.

중앙일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 및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사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시정요구인 측 설명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시정요구인은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1)

심의위원회는 확인된 사실관계와 보도 내용을 비교한 결과, 보도 제목이나 내용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독자나 유권자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를 결정하였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검사가 먼저 들어가 유 씨를 2-3시간 면담하는 등 검찰이 우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의 의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씨가 검사와 면담한 사실이 없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2)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에 시정요구인이 향후 검찰 수사 대상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당사자를 미리 면담했다'는 보도 내용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된 바,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독자나 유권자들이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4일자 1면에 대장동 개발 사업비 일부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해당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시정요구인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시정요구인은 무관한 기사에 자신의 사진을 함께 배치하여 마치 하나의 기사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11)

심의위원회는 두 기사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독자들이 금품 수수 의혹 기사가 시정요구인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기사의 크기와 게재 지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정요구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했다.

이후 피시정요구인(동아일보)은 일반적으로 일간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동일한 지면에 배치하는 편집관행이 존재하므로 해당 기사의 배치가 심의기준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설혹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주의사실 게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원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 위반은 명백하나, 피시정요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고, 재심청구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피시정요구인에게 제재의 이유 등을 설명하고 심의기준 위반을 지적함으로써 공정 보도 촉구의 목적도 일부 달성되었음을 고려하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경고 조치로 변경하였다.

2. 주의

심의위원회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각 1건의 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주로 시정요구인과 관련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의혹의 당사자인 시정요구인의 반론을 충분히 보도하지 않은 경우 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중앙일보는 시정요구인이 시장 재직 당시 진행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자신은 해당 사업과 무관하고, 보도 시 자신의 입장을 전혀 청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3)

심의위원회는 보도에 언급된 의혹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제목 등이 단정적이고, 의혹의 당사자인 시정요구인의 입장이 보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조선일보는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3억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시정요구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이벤트에 불과한 고발장 제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여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고, 보도 내용 또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9)

심의위원회는 고발인과 익명의 취재원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도하였다고는 하나, 보도의 제목 등이 단정적이고, 시정요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 의혹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3. 기각

심의위원회는 12건의 시정요구 가운데 이유 없음이 명백한 7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조선일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씨가 시정요구인의 측근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시정요구인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보도가 비록 의혹제기의 형식이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4)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시정요구도 제기되었다. 시정요구인의 측근이 시정요구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 대법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취지의 사설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설은 전 대법관이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을 비판하고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6)

또 다른 칼럼에서 조선일보가 시정요구인이 자신을 궁지에 빠뜨린 유동규 씨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의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시정요구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유동규 씨가 자신의 측근이라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보도의 일부 표현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칼럼의 특성상 평가적 표현은 보다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7)

시정요구인은 2021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시정요구인 관련 기사 9건을 모아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정요구인은 조선일보가 사실 확인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편파적인 내용의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여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각 9건의 기사가 선거 국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거나, 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수행능력 검증에 관한 것인 점, 후보들 간 보도 건수의 단순 비교만으로 유·불리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시정요구인(조선일보)이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12)

중앙일보는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3억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시정요구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주의 조치를 받은 조선일보와 달리 중앙일보의 보도는 시정요구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해 허위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정요구인 측의 반론이 이미 보도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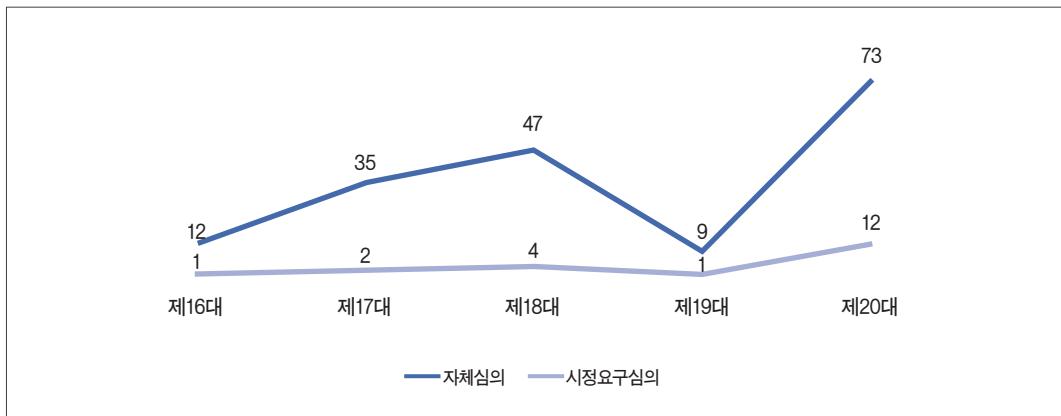
2014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정 업체 관련자가 참여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인은 보도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

르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5)

동아일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만이 공공이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민간이 모든 초과이익을 독식했고, 공공의 관리·감독이 전무해 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시정요구인 간 연관성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허위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장치나 관리·감독 직원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독식했다’ 또는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등의 표현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제20대 대선-시심10)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각 선거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의결해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제16대부터 제20대까지 총 5차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 역대 대통령선거 심의·의결 현황



각 대통령선거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제16대 13건, 17대 37건, 제18대 51건, 제19대 10건 이었고, 제20대는 총 85건으로 역대 대통령선거 심의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했다.

제19대의 경우 안건이 10건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통상 대통령선거 심의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총 272일 동안 운영되는 데 반해, 제19대의 경우 헌법 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60일 만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약 80일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제19대를 제외하면 심의·의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심의의 경우, 제16대 1건, 제17대 2건, 제18대 4건, 제19대 1건이었으나, 제20대에서 크게 증가하여 12건의 시정요구가 접수·처리되었다. 심의위원회는 보도 내용, 시정요구인의 주장, 피시정요구인의 의견진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요구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1. 역대 대통령선거 선거별 심의 · 의결 현황

가.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 2002. 12. 19.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 2002. 8. 21. ~ 2003. 1. 18.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12건과 시정요구심의 1건 도합 13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다.

■ 자체심의

		계 (%)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	광고 제한	외부 기고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지	중앙	2		2				1	1		
	지역	1		1				1			
주간지	종합	6	5	1				1	5		
	지역	2	1	1					2		
월간지		0									
뉴스통신		1		1					1		
계 (%)		12 (100.0)	6 (50.0)	6 (50.0)	0 (0.0)	0 (0.0)	0 (0.0)	0 (0.0)	3 (37.1)	9 (54.3)	0 (0.0)

■ 시정요구심의

간별		처리결과							
		계 (%)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취하	기각	각하
일간지	중앙	0							
	지역	0							
주간지	종합	0							
	지역	0							
월간지		1				1			
뉴스통신		0							
계 (%)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나.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 2007. 12. 19.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 2007. 8. 21. ~ 2008. 1. 18.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35건과 시정요구심의 2건 도합 37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다.

■ 자체심의

		계 (%)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	광고 제한	외부 기고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지	중앙	4	1		3				3	1	
	지역	19	15	4			1		6	11	1
주간지	종합	8	8						3	5	
	지역	2	2						1	1	
월간지		2	2				1			1	
뉴스통신		0									
계 (%)		35 (100.0)	28 (80.0)	4 (11.4)	3 (8.6)	0 (0.0)	2 (5.7)	0 (0.0)	13 (37.1)	19 (54.3)	1 (2.9)

■ 시정요구심의

간별		처리결과							
		계 (%)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취하	기각	각하
일간지	중앙	1		1					
	지역	0							
주간지	종합	1		1					
	지역	0							
월간지		0							
뉴스통신		0							
계 (%)		2 (100.0)	0 (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 2012. 12. 19.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 2012. 4. 22. ~ 2013. 1. 18.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47건과 시정요구심의 4건 도합 51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다.

■ 자체심의

		계 (%)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사실 보도	여론조사 보도	정책 비교	기고 위반	의견 광고	사과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지	중앙	22			6	6		10		2	14	6
	지역	16	5	1	5	1	4		1	3	8	4
주간지	종합	4	3		1					1	3	
	지역	1	1							1		
	특수	1				1					1	
월간지		2	2							1	1	
뉴스통신		1	1									1
계 (%)		47 (100.0)	12 (25.5)	1 (2.1)	12 (25.5)	8 (17.0)	4 (8.5)	10 (21.3)	1 (2.1)	8 (17.0)	27 (57.4)	11 (23.4)

* '사과문 게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 7. 30., 2013헌가8)에 따라 2017. 2. 13.자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제재결정 유형에서 삭제 되었음

■ 시정요구심의

간별		처리결과										
		계 (%)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각하
일간지	중앙	3	1								1	1
	지역	0										
주간지	종합	0										
	지역	0										
월간지		1							1			
뉴스통신		0										
계 (%)		4 (100.0)	1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1 (25.0)	1 (25.0)

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 2017. 5. 9.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 2017. 3. 20. ~ 2017. 6. 8.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9건과 시정요구심의 1건 포함 10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다.

■ 자체심의

		계 (%)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광고 제한	기고 등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지	중앙	2	1		1					1	1
	지역	4	3		1					2	2
주간지	종합	3	1	1	1				2		1
	지역	0									
월간지		0									
뉴스통신		0									
계 (%)		9 (100.0)	5 (55.6)	1 (11.1)	3 (33.3)	0 (0.0)	0 (0.0)	0 (0.0)	2 (22.2)	3 (33.3)	4 (44.4)

■ 시정요구심의

간별		처리결과									
		계 (%)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일간지	중앙	1					1				
	지역	0									
주간지	종합	0									
	지역	0									
월간지		0									
뉴스통신		0									
계 (%)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마.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 2022. 3. 9.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 2021. 7. 11. ~ 2022. 4. 8.

2020년 5월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유형과 보도유형을 구분하고, 일반선거기사 조항을 신설하여 기사유형에 따라 세부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정유형에 '안내문 송부'를 추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 의결한 첫 대통령선거로 자체심의 73건과 시정요구심의 12건 도합 85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 자체심의

간별	계 (%)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이미지)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일간	중앙	18	7	11	1	9	1			7		1	3	14		
	지역	43	20	23	7	23		1	10	2		3	11	26	2	1
주간	종합	3	2	1	1	1			1				1	2		
	지역	3	2	1	1	1			1				2	1		
월간지		0														
뉴스 통신		6		6		6								6		
계 (%)	73 (100.0)	31 (42.5)	42 (57.5)	0 (0.0)	10 (13.7)	40 (54.8)	1 (1.4)	1 (1.4)	12 (16.4)	9 (12.3)	0 (0.0)	4 (5.5)	17 (23.3)	49 (67.1)	2 (2.7)	1 (1.4)

■ 시정요구심의

간별		계 (%)	결정내용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일간지	중앙	12					3	2			7
	지역	0									
주간지	종합	0									
	지역	0									
월간지		0									
뉴스통신		0									
계 (%)		12 (100.0)	0 (0.0)	0 (0.0)	0 (0.0)	0 (0.0)	3 (25.0)	2 (16.7)	0 (0.0)	0 (0.0)	7 (58.3)

2. 역대 시정요구심의 목록

선거명	의결번호	시정요구인	피시정요구인	시정요구취지 (요구사항)	결정
제16대 대선 (2002)	2002-시심1	노무현	월간조선	사과문 게재	주의
제17대 대선 (2007)	2007-시심-1	이명박	경향신문	반론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2007-시심-2	이회창	시사IN	반론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제18대 대선 (2012)	2012대선-37	문재인	문화일보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각하
	2012대선-42		월간조선	정정보도문 게재	취하 (반론보도문 게재)
	2012대선-43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2012대선-46		조선일보	반론보도문 게재	기각
제19대 대선 (2017)	2017대선-시심1	문재인	중앙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경고
제20대 대선 (2022)	제20대 대선-시심1	이재명	중앙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경고
	제20대 대선-시심2		조선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경고
	제20대 대선-시심3		중앙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또는 주의사실 게재	주의
	제20대 대선-시심4		조선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기각
	제20대 대선-시심5		중앙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기각

선거명	의결번호	시정요구인	피시정요구인	시정요구취지 (요구사항)	결정
제20대 대선 (2022)	제20대 대선-시심6	이재명	조선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기각
	제20대 대선-시심7		조선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기각
	제20대 대선-시심8		중앙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기각
	제20대 대선-시심9		조선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
	제20대 대선-시심10		동아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기각
	제20대 대선-시심11		동아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경고
	제20대 대선-시심12		조선일보	경고결정문 게재	기각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결산 좌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에 관한
평가 및 제언

염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1항과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선거기사가 공정성을 담보했는지를 심의하는 데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 특히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기사이다. 공정성 확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이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면, 자유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 위원회로 평가하고 싶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사의 화두는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란 이 두 가지 가치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총 447개 매체(지면매체 435개, 뉴스통신 12개)를 대상으로 총 15번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기사를 심의했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 가치와 더불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따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비교 평가함으로써 선거기사 심의 활동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통시적 평가는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어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1. 선거기사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공정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다. 공정성에 대한 일반 심의기준은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정성 및 형평성, 제5조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6조 정치적 중립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준웅(2013)은 이와 같은 선거기사의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에 모호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웅이 제기한 것처럼 일견 자명하게 보이는 심의대상이 문제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1항이 “사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선거기사가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기사만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보도가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그림으로 표현된 ‘만평’이 심의대상인지 아닌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인물이나 사회를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만평은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징적 예이나, 다른 한편으로 각종 의혹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의 판단에 있어 광의의 개념, 즉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기준으로 만평 또한 심의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을 언론학에서 상당 부분 합의하고 있는 의제설정 이론(agenda setting),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 프레임 효과(framing effect)에 두었다. 주지하다시피, 의제설정 이론은 언론이 중요하다고 다루는 사건, 예를 들어 신문 1면에 나오는 기사는 다른 면에 게재되는 기사보다 독자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된다는 이론이다.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프라이밍 효과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사안을 토대로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프레임 효과는 언론이 같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유권자가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는 언론학에서 상당 부분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양한 경험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언론이 제시하는 것이 비록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선거기사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만평 또한 심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선거기사의 심의기준에 대한 모호성이다. 물론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에는 일반 심의기준이, 제3장에는 세부 심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3조는 심의 기준의 가중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준웅(2013)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심의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선거기사를 실제 심의할 때의 모호성이며, 다른 하나는 과연 국가가 언론에

공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두 가지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모두에서 지속해서 지적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제4조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분리하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성의 경우 내용적 측면에서 그리고 형평성의 경우 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의 측면에서 선거기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렇지만 대개의 심의대상 선거기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공변(共變)하는 경향이 있어 중첩적 개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제5조 객관성 및 사실보도 조항 또한 선거기사가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다루고, 과장·축소하지 않으며,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다룬다 할 수 있을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기사심의 위원회에서 새로이 심의대상이 되었던 만평의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과장으로 인정할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 평가

이 글의 목적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기사 심의 활동을 통시적 관점에서 다루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위해 제언을 하는 데에 있다. 본 장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의결현황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까지이다. 주지하다시피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탄핵에 따라 치러진 선거로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다른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 기간보다 상당히 짧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자체심의 안건과 시정요구심의 안건이다. 자체심의 안건이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 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이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이란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안건이다(언론중재위원회 2013, 11쪽).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시정요구심의 안건보다 자체심의 안건을 많이 다룬다. <표 1>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자체심의 안건은 12건인데 반해,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1건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제17대 35건 대(對) 2건, 제18대 47건 대 4건, 제19대 9건 대 1건이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도 73건 대 12건으로서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되었다.

■ <표 1>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비교

구분	제16대 대선	제17대 대선	제18대 대선	제19대 대선
공정성 및 형평성	6	28	12	5
객관성 및 사실보도	0	0	9	1
여론조사 보도	6	4	12	0
광고 제한	0	3	10	3
후보자 기고	0	0	4	0
총 계	12	35	47	9

출처: 언론중재위원회(2017, 35쪽).

■ <표 2> 결정유형별 의결현황 비교

구분	결정 유형	제16대 대선	제17대 대선	제18대 대선	제19대 대선
자체 심의	사과문 게재	0	0	1	0
	경고결정문 게재	0	2	0	0
	경 고	3	13	8	2
	주 의	9	19	27	3
	권 고	0	1	11	4
	소 계	12	35	47	9
시정 요구 심의	정정보도문 게재	0	0	1	0
	반론보도문 게재	0	2	0	0
	경 고	0	0	0	1
	주 의	1	0	0	0
	권 고	0	0	0	0
	취 하	0	0	1	0
	기 각	0	0	1	0
	각 하	0	0	1	0
	소 계	1	2	4	1
총 계		13	37	51	1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2017, 34쪽).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심의 건수는 상승 추세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제16대 12건, 제17대 35건, 제18대 47건, 제19대 9건 그리고 제20대 73건으로 활동 기간이 짧은 제19대를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기간을 단위로 재계산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경향은 뚜렷하다. 제16대 0.04건(12/272), 제17대 0.14건(39/272), 제18대 0.20건(54/272), 제19대 0.14건(11/81), 제20대 0.31건(85/272)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탄핵 이후 치러진 예외적 선거란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추세

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활동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상은 시정요구심의 안전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으로 인해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제16대 1건, 제17대 2건, 제18대 4건인데 반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12건으로써 대통령 선거마다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다. 따라서 향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심의 안전 증가, 특히 시정요구심의 안전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시정요구심의 안전의 경우,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바로 심의해야 하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정족수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표 3> 제20대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현황: 일반 심의기준

구분		계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간	중앙	18	7	11	0
	지역	43	20	23	0
주간	중앙	3	2	1	0
	지역	3	2	1	0
뉴스통신		6	0	6	0
총계		73	31	42	0

■ <표 4> 제20대 결정유형별 의결현황

구분	결정 유형	계
자체심의	경고결정문 게재	0
	주의사실 게재	4
	경 고	17
	주 의	49
	권 고	2
	안내문 송부	1
	소 계	73
시정요구심의	정정보도문 게재	0
	반론보도문 게재	0
	경 고	3
	주 의	2
	권 고	0
	취 하	0
	기 각	7
	소 계	12
총계		85

〈표 1〉과 〈표 3〉에 제시된 자체심의 위반유형을 볼 때, “공정성 및 형평성” 범주가 여전히 선거기사 심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공정성 및 형평성 범주의 비중은 자체심의 안건 중 제16대 50.0%, 제17대 80.8%, 제18대 25.5%, 제19대 55.6%였다. 제18대를 예외로 볼 때, 공정성 및 형평성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20대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체심의 안건 중 42.5%가 공정성 및 형평성 범주에 해당했다.

“객관성 및 사실 보도” 범주는 대체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성 및 사실 보도 범주는 제16대 0.0%, 제17대 0.0%, 제18대 19.1%, 제19대 11.1%이었다. 다만 제20대 경우 객관성 및 사실 보도 범주가 57.5%이어서 예외적 시기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은 제20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반유형별 범주화가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으로 이루어진 점에 기인한다. 즉 이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보도를 따로 독립된 범주로 설정했지만, 제20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보도 범주를 객관성 및 사실 보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16대부터 제19대까지 자체심의 안건 중 상당수가 여론조사임을 고려할 때, 제20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선거에서도 객관성 및 사실 보도에 대한 심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할 점은 여론조사 보도 관련 심의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계속해서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의 이상의 제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의 안건으로 상당 수준 상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인데 과연 제재에 따른 시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조사에 근거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처럼 같은 위반 유형이 지속해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 수위에 있다고 본다. 〈표 2〉와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제16대부터 제20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자체심의 의결은 주의 제재 결정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제16대 75%, 제17대 54.3%, 제18대 57.4%, 제19대 33.3%, 제20대 67.1%의 결정이 주의로 내려졌다. “주의” 결정 수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겠으나,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재결정 등)에 제시된 것처럼 주의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결정으로 경고, 주의사실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등이 있다. 혹자는 선거기사의 위반 내용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필자의 경험에 근거해 볼 때 이러한 이유 보다는 지속해서 반복되는 위반 유형에 대한 체계적 절차가 미흡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선거기사의 경우, 지속해서 제기되는 위반 유형이란 오차범위 이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떤 후보가 앞섰다 또는 역전했다는 방식의 보도이다. 이와 같은 선거기사는 2002년 이후 계속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행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재 결정 판단에 있어 체

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언론사에 대한 제재 결정을 외부로 공개하는 “게재” 결정은 상당히 드물다. 자체심의 안건 중 게재 결정에 해당하는 사과문 게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때가 유일했으며¹⁾ 그보다 낮은 수준의 결정인 경고결정문 게재 또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2건이 유일했다. 경고 결정 게재보다 낮은 수준의 결정인 주의사실 게재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4건으로 유일했다. 요컨대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낮았고, 그 수준 또한 낮아지고 있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제재인 정정보도문 게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1건으로 유일했으며,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2건으로 유일했다. 대체로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각하 등이 내려졌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하게 경고가 3건, 주의가 2건, 그리고 기각이 7건 있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로 한정시켜 볼 때, 심의 안건 중 지역 일간지에 대한 심의 안건 상정이 두드러졌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일간지 경우 전체 61건의 심의대상 중 중앙지 비중이 29.5%(18/61)인데 반해, 지역지 비중은 70.5%(43/61)이었다. 지역 일간지의 경우, 특정 정당에 치우친 기사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것과 칼럼 및 기고 등에 대한 공정성 관련 심의가 다수 있었다.

■ <표 5> 제20대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현황: 세부 심의기준

간별		계	위반유형					
			일반선거 기사	여론조사 보도	인터뷰인용 및 인용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일간	중앙	18	1	9	1	0	0	7
	지역	43	7	23	0	1	10	2
주간	중앙	3	1	1	0	0	1	0
	지역	3	1	1	0	0	1	0
뉴스통신		6	0	6	0	0	0	0
총계		73	19	40	1	1	12	9

3.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언

통시적 관점에서 평가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활동을 토대로 몇 가지 사항을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제언은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재 결정

1) 제재 결정 중 가장 엄한 의결에 해당하는 사과문 게재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2013 헌가8).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주목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첫째,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 관행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심의가 다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뉴영남매일 2022년 10월 27일자 기사 “홍준표만 이재명 앞섰다... 양자대결 洪 45.1%, 李 40.6%”는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가 앞섰다고 제목을 선택한 경우이다. 주지하다시피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모수가 포함될 수 있는 신뢰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 어딘가에 모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뢰구간이 겹칠 경우, 특정 후보가 앞선다는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제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으로 지속해서 상정되고 있다.

위 보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사 내용에 적시한 바와 같이 “응답률은 6.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text{p}$ 다.”란 의미는 용어의 오용(誤用)은 차치하고²⁾ 95% 신뢰수준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 신뢰구간은 42.0% ~ 48.2%란 것을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 신뢰구간은 37.5% ~ 43.7%이다. 따라서 이 후보의 지지율 모수는 37.5%이거나 43.0%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홍 후보의 지지율 모수가 48.0%이고 이 후보의 지지율 모수가 43.0%라면, 위 보도의 객관성과 사실성은 유지된다. 그러나 홍 후보의 지지율 모수가 42.1%이고, 이 후보의 지지율 모수가 43.0%라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홍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으므로 보도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위반된다. 요컨대 두 후보의 신뢰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떤 후보가 앞선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성과 사실성을 위배하는 보도가 된다. 특히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결과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표본 추출, 면접 방식, 가중치 적용 등에 차이가 있어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21년 12월 24일 주간동아 4~5면에 게재된 “尹, 여론조사 6승 3패... 무능 이미지 고착 시 데드크로스” 보도는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통계학 지식이 대학교 학부 수준의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으로 지속해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편승해 가고자 하는 편승 효과(bandwagon effect)를 고려할 때, 언론의 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높다. 즉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지에 의해 반복적으로 잘못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에게 편승 효과를 일으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따라서 향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행태를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선거기사 형태의 홍보 자료 게재이다. 역대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20대 대통령선

2) 뉴영남일보(<http://www.ymdaily.co.kr/news/article.html?no=62320>, 방문일: 2022년 6월 3일)

거에서도 특정 후보의 보도자료, 정책 토론 제안문, 입장문, 출범식 인사말 전문을 거의 그대로 게재한 안건이 다수 상정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타임즈는 2022년 1월 7일자 3면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이용호 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하였다. <그림 1>에 제시한 것처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이용호 국회의원의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문을 전문 그대로 게재한 것은 후보에 대한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선거기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조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그림 1> 입장문 전문 게재에 따른 주의 결정 사례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와 같은 선거기사 형태의 홍보 자료 게재가 역대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입장을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전달함으로써 마치 그러한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선거기사 형식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언론임에도 분명하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하도록 심의·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즉 심의대상이 과연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여 의결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또한,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시적으로 평가하면서 파악된 지속적 문제점들, 예를 들어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 홍보 자료 게재의 문제점, 그리고 의견 광고 게재의 문제점을 제재 결정 수위의 문제점과 더불어 지적하였다.

글을 마치며 한 가지 멈추지 않은 고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준웅(2013)이 제기한 것처럼, 국가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언론에 공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란 고민이다. 특히 언론은 그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 예를 들어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정성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지는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된 사안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과 같이 언론사 사설을 통한 정치성 표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언론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설에서만큼은 보장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및 정치학과 석사
미국 켄터키주립대 정치학과 박사
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고문헌

이준웅. 2013. “제18대 대선 선심위를 마치며: 선거기사 개념과 심의기준에 관한 소견.”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43-51쪽.
언론중재위원회.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 일 시 2022. 4. 6. (수) 17:00
- 장 소 위원회 6층 회의실
- 참석자
 홍성무 (심의위원장,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조원봉 (부위원장,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김윤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위 위원)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원영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
 김대광 (김대광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는 2022년 4월 6일 결산좌담회를 개최하여 선심위 운영 성과를 최종 평가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면 매체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적용 방법을 고민해야”



김윤영 위원

오랜 시간 방송계에서 일한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쇄 매체를 심의하는 작업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견해에 정도되지 않고 심의기준에 따라 중립적으로 심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검토하면서 방송보다는 지면신문에 실린 선거기사 중에 더욱 공정성이나 형평성, 객관성이 결여된 사례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매체마다 상이한 특성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다만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지는 물론 지방지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론조사 기사 관련해서는 심의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안건별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가 공생할 수 있도록 힘써야”



최영훈 위원

심의위원장님께서 중립적 태도로 회의를 주재해주신 덕분에 이번 선심위가 무사히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심위에서는 여러 법익들이 충돌하는 안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공정성만큼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또한 중요한 법익입니다. 그렇기에 차기 선심위에서는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엄중히 숙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심위 결정에 따른 제재가 언론의 자유를 중대히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가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되어야”



정원영 위원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어두운 바다 위를 밝히는 등대처럼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모두 심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인 태도로 임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봉직하셨던 부위원장님의 식견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선심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덧붙여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얹힌 선거기사 속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



김대광 위원

이번 선심위는 저에게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계셨던 위원님들과 토의하면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익혀나갔습니다. 그 덕에 선거보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입장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의기준을 위반한 안전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인지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가장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일관된 심의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해”



조원봉 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매번 회의를 잘 진행해주신 덕에 약 9개월 간 무탈하게 선심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재보선 및 제8회 지선 선심위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법상 매체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나뉘어 각기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기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세 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의결현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을 되돌아보고 다듬는 작업이 수반되면 좋겠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 가운데 법익들을 조화롭게 해석할 심의기준 개정 필요”



홍성무 심의위원장

제20대 대선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던 만큼 역대 대선 선심위에 비해 의결건수가 자체심의 73건, 시정요구심의 12건으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많은 심의안건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심위 운영 전반에 걸쳐 힘써주신 사무처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심의기준에 명시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따라 심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선거기사와 칼럼, 의견광고 등 보도유형별로 적절한 세부기준을 세워 적용했다는 점을 나름 의미 있는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또 칼럼의 경우 외부필진인지 내부필진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을 달리했습니다. 여론조사 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제목과 본문 중 어디에서 이를 언급했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에 차등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선심위 활동 및 운영성과가 향후 다른 선심위 활동은 물론 언론사의 선거보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심위는 심의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여타 법익과 충돌할 때에는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개정 등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선거기사 심의는 가급적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선심위가 의결해온 다양한 선례들은 이번 선심위에서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의 · 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의결 사례

제2장

시정요구심의 의결 사례

1. 주의사실 게재 사례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자심40
언 론 사	주식회사 세계타임즈(세계타임즈)
심의대상	세계타임즈 1월 7일자 3면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세계타임즈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세계타임즈 3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세계타임즈 2022년 1월 7일자 1면 「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제하 기사의 제목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살피건대 언론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약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공약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 고유의 역할이라 할 것이나, 심의대상기사와 같이 언론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마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소속된 것처럼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을 전문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 유 한편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책토론 제안문 또는 출범식 인사말 전문을 세 차례 반복 게재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21. 12. 8.자 '제20대 대선-자심20' 결정을 통해 '경고' 조치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1월 7일자 3면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세계타임즈

2022년 1월 07일
08면 (국회/정당)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이재명 민
주당 대선
후보의 '탈
모 공약'은
표만 되면
뭐든 다하
는 '이재명
식 포폴리
즘'의 전형
을 보여주
고 있다.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으로 시작된 '이재명 탈모공약'은 이제 '이재명은 심는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마치 모발이식까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 백여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상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8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날 수 밖에 없다.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



제에 대한 급여등재가 더욱 시급하다. 이들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역장이 무너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이재명 후보는 왜 모르는가.

아무리 표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야 되겠는가. 이런 사기성 공약에 속아 한껏 기대를 했던 탈모인들은 '탈모공약'이 대선 이후 없었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허탈해 하겠는가.

당장 문케어를 보라. 모든 의료분야에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급어화할 것처럼 했지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을 상승은 없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성 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이다.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탈모공약',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이재명 기자
(11.6×14.5)cm

〈세계타임즈 2022년 1월 7일자 3면〉



이용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공약’은 표만 되면 뭐든 다 하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으로 시작된 ‘이재명 탈모공약’은 이제 ‘이재명은 심는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마치 모발이식까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상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날 수밖에 없다.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

여등재가 더욱 시급하다. 이들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역장이 무너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이재명 후보는 왜 모르는가.

아무리 표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이런 사기성 공약에 속아 한껏 기대를 했던 탈모인들은 ‘탈모공약’이 대선 이후 없었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허탈해하겠는가.

당장 문케어를 보라. 모든 의료분야에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급여화할 것처럼 했지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을 상승은 없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성 과장광고는 표시광고 법상 처벌 대상이다.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탈모공약’,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세계타임즈

2022년 02월 16일
03면 (국회/정당)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결정 알림

본보는 지난1월 7일자 3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후보의 공약에대한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간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등에관한 규정제4조(공정성및형평성) 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 제2호를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1.8*4.6)cm

<세계타임즈 2022년 2월 16일자 3면>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41
언론사	주식회사 호남제일신문(호남제일신문)
심의대상	호남제일신문 1월 7일자 11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호남제일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호남제일신문 11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 「희귀·중증질환·암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보이지 않나」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살피건대 언론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약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공약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 고유의 역할이라 할 것이나, 심의대상기사와 같이 언론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마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소속된 것처럼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을 전문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21. 10. 6.자 '제20대 대선-자심9' 결정을 통해 '경고' 조치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1월 7일자 11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은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호남제일신문

2022년 1월 7일 07일
11면 (종합)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희귀·중증질환·암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보이지 않나
이용호 의원 “지금이라도 국민 속이는 왜곡 선동 중단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공약'은 표만 되면 뭐든 다하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으로 시작된 '이재명 탈모공약'은 이제 '이재명은 심는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마치 모발이식까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당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800

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날 수 밖에 없다.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등재가 더욱 시급하다.

이들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역장이 무너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이재명 후보는 왜 모르는가.

아무리 표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

서야 되겠는가.

이런 사기성 공약에 속아 한껏 기대를 했던 탈모인들은 '탈모공약'이 대선 이후 없었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허탈해 하겠는가.

당장 문케어를 보라. 모든 의료분야에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급여화할 것처럼 했지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을 상승은 없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성 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이다.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탈모공약',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21.0×9.6)cm

<호남제일신문 2022년 1월 7일자 11면>

보도내용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희귀·중증질환·암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보이지 않나
이용호 의원 “지금이라도 국민 속이는
왜곡 선동 중단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공약'은 표만 되면 뭐든 다 하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으로 시작된 '이재명 탈모공약'은 이제 '이재명은 심는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마치 모발이식까지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상 1모당 3,000원 정도, 1회 시술비용이 7~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모발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가재정은 거덜 날 수 밖에 없다.

탈모약 건보 적용보다 중증·희귀환자나 암 환자에게 필요한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 등재가 더욱 시급하다.

이들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억장이 무너진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이재명 후보는 왜 모르는가.

아무리 표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국

민을 현혹하는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공약을 내세워야 되겠는가.

이런 사기성 공약에 속아 한껏 기대를 했던 탈모인들은 '탈모공약'이 대선 이후 없었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허탈해 하겠는가.

당장 문케어를 보라. 모든 의료분야에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급여화할 것처럼 했지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을 상승은 없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성 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이다.

허위성 과장광고 같은 '탈모공약',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결정 후 보도문

호남제일신문

2022년 01월 27일
11면 (종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지난 1월 7일자 11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공약' 허위성 과장광고 같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3.9*6.9)cm

<호남제일신문 2022년 1월 27일자 11면>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60
언론사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심의대상	중앙일보 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하의 광고
주 문	1.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과 본문을 통상적인 ‘알림’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권교체와 정권유지를 각각 주장하는 해당 후보자의 자질과 주요 공약 등을 비교·평가한 표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2.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제1항에 입각하여,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표현물의 배부, 살포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2012 헌바391(병합) 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심의대상광고의 내용과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광고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통상적인 의견광고의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타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심의대상광고가 각 후보자의 공약이나 관련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후보자의 성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후보자에 관한 것인지를 누구든지 쉽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이 유 다. 한편, 심의대상광고가 자유민주당의 의회에 의하여 게재된 바, 「정당법」 제 37조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심의대상 광고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따라서 심의대상광고의 게재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3. 제재조치의 수위에 대한 판단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가 배임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처럼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21. 12. 8.자 '제20대 대선-자심21' 결정을 통해 '주의' 조치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동일한 정당의 불공정한 의견광고를 게재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보다 엄중하다. 또한 심의대상광고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이에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권교체

자유시장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나라!

정권유지

국민을 갈라치고 끼리끼리 이권 나눠먹는 나라!

[illegible]

'문재인 증북좌파 정권 혁명!'

당원 가입신청 : ☎ 02-717-1948,
010-3620-5142(문자)

자유민주당

대표 : 고영주 변호사

이 광고는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4-5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0.25 ± 0.11 cm

〈중앙일보 2022년 1월 26일자 31면〉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재심2

{원결정 제20대 대선-자심60}

재심청구인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재심청구대상 중앙일보 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하의 광고

주 문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제20대 대선-자심60 결정과 관련하여 주의적으로 '주의사실 기재' 취소를, 예
비적으로 '경고'로의 경정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① 이 사건 심의대상광고가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툼이 있고, ② 심의대상광고의 광고주인 특정 정당의 광고를 타 언론사의 경우도 여러 차례 게재한 바 있음에도 재심청구인만 '주지사실 게재'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유 형평에 맞지 않으며,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021. 12. 8.자 '제20대 대선-자심21' 결정에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어 원심 결정시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의' 조치의 다음 조치인 '경고' 조치를 건너 뛰어 '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내린 것은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원심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였다.

2.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

가. 심의대상광고에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권교체와 정권유지를 주장하는 특정 후보자의 자질과 주요 공약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평가한 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해당 후보자의 성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후보자에 관한 것인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의 직접적인 적시 여부가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을 인정함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심의대상광고는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후보는 우호적으로, 정권유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나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93조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였음이 틀림없다.

3. 제재조치의 수위에 대한 판단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만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고, 정당 광고의 단순 게재 사실 또는 게재 횟수를 심의·의결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심의대상광고의 광고주인 자유민주당의 광고를 몇 차례나 게재했는지는 선거기사심의에 있어서 하등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 이 유 나. 재심청구인이 제20대 대선-자심60에서 주의사실 게재결정을 받은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최소 3,318억원 배임의 공범”」 제하의 광고)를 게재함에 따라 ‘제20대 대선-자심21’ 결정을 통해 ‘주의’ 조치를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보다 엄중했기 때문이다.
- 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에 근거한 제재조치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불법성에 상응하는 수위에서 적절히 결정될 뿐, 반드시 순차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기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바, 심의대상광고의 경우 선거일을 40여 일 앞두고 게재되었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한 것이다.

4. 결론

이와 같이 위원회의 제20대 대선-자심60 결정은 정당하고, 해당 결정 이후 이를 파기하거나 변경해야 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The JoongAng

2022년 03월 03일
23면 (오피니언)**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8.6*5.9)cm

〈중앙일보 2022년 3월 3일자 23면〉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71
언론사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전북중앙신문)
심의대상	전북중앙신문 2월 21일자 15면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전북중앙신문 오피니언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전북선택 중요해)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인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로 작성한 기고문을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고문(2월 21일자 15면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신영대

(국회의원(대안민주당) 군산)

3주간의 20대 대선 본 선거운동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선거운동 초반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가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 주요 도시들을 나눠 방문했다.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예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의 역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들에서 전북도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해왔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국 최고 지지를 보내며 전북발전을 이끌고, 탄핵당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북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할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과거 군부독재와 같은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전북선택 중요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을 공언했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5년차에도 과반에 육박하는 국정지지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허물러에 비유하고 5년짜리 정권이 법 없이 날뛰는 망언을 일삼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역행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란 사실이 명약관화한 이유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마음대로 대통령 육조차할 수 없을지 모른다. 지난 보수정권을 능가하는 정치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만지컬이식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진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동안 전북은 큰 진전을 이뤘다. 심수 년째 정세대였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돋움하며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 신산열으로써 탄소 소재 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번 정부에서 전북지역 출신 장·차관이 수십여명 배출되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전북의 저력을 투표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전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전북도민들은 경선에서 흔들리는 이재명 후보를 확고하게 밀어주며 호남경선 승리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전북에 각별함을 표시하며 대통령 후보

로 처음으로 전북을 2박 3일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바 있다. 전주, 익산, 부안, 남원 등 전북 곳곳을 누비며 전북에 대한 비전도 발표했다. 이번 본 선거운동 기간 방문해서는 한바 더 나아가 소외된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라는 대전환의 발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북도약 기회로

하지만 전북도민들의 선택은 지엄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열화와 같은 선원을 보낸 것과 달리 2016년 20대 총선에는 민주당에 따른 회초리를 들었었다.

오차범위 내에서 엮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초집전 선거일수록 전북의 역할과 가치의 빛이 난다. 전북의 선택이 20대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발전을 스스로 만들었던 전북도민이 20대 대선에서도 전북발전을 약속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전북 도약의 새로운 디딤판을 마련할 때다.

(21 >21 50cm)

<전북중앙신문 2022년 2월 21일자 15면>



보도내용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3주간의 20대 대선 본 선거운동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선거운동 초반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가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 주요 도시들을 나눠 방문했다.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예전에 미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전북의 역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들에서 전북도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해왔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국 최고 지지를 보내며 전북발전을 이끌고, 탄핵당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북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할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과거 군부 독재와 같은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전북선택 중요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을 공언했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5년 차에도 과반에 육박하는 국정지지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5년짜리 정권이 법 없이 날뛰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에 역행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란 사실이 명약관화한 이유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마음대로 대통령 욕조차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지난 보수 정권을 능가하는 정치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진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간 전북은 큰 진전을 이뤘다. 십수 년째 정체돼있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돋움하며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 신산업으로서 탄소 소재 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번 정부에서 전북 출신 장·차관이 수십여 명 배출되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전북의 저력을 투표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전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전북도민들은 경선에서 흔들리는 이재명 후보를 화끈하게 밀어주며 호남경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전북에 각별함을 표시하며 대통령 후보로는 처음으로 전북을 2박 3일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바 있다. 전주, 익산, 부안, 남원 등 전북 곳곳을 누비며 전북에 대한 비전도 발표했다. 이번 본 선거운동 기간 방문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외된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라는 대전환의 발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북도약 기회로

하지만 전북도민들의 선택은 지엄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 것과 달리 2016년 20대 총선에는 민주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었다.

오차범위 내에서 엇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초접전 선거일수록 전북의 역할과 가치는 빛이 난다. 전북의 선택이 20대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발전을 스스로 만들었던 전북도민이 20대 대선에서도 전북발전을 약속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전북 도약의 새로운 디딤판을 마련할 때다.

**전북중앙신문**2022년 03월 11일
10면 (오피니언)**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고문(2월 21일자 15면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0.5*6.1)cm

〈전북중앙신문 2022년 3월 11일자 10면〉



전주 3040세대 815명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3040세대들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8월15일을 맞이하여 전주에서 815명의 청년들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공정사회, 공정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3040세대 815명은 전주에서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공정사회 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주사회 대개혁의 길을 만들고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개최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동세상’과 ‘억강부약(抑強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의 정신’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사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군 무명지도자가 안치된 전주 녹두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김개남 장군이 처형된 초록바위로 이동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번 선언은 ‘더불어 함께 잘 살자(대동세상 구현)’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시대가 흐른 2021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청년 주거빈곤, 청년 소득빈곤, 부동산문제,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진출 장벽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는 선언식”으로써 이재

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등을 적극 지지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청년 석패율제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들도 제안하였다.

지지 선언문에는 “이재명 후보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로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선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들 815명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지향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호남이기에 차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고 대동세상을 만들어갈 것임을 확신하며 호남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동학농민혁명처럼 전국의 모든 3040세대들이 함께 지지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문]

우리 3040세대는 정권교체와 사회제도개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탄생을 지켜보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하였습니다. 여전히 30대와 40대의 40%이상이 집권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민주화운동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지지하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가치와 개혁을 존중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깊어져야 할 경제적, 사

회적 무게는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자산불평등을 만들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양산했고 코로나19 팬데믹사태는 거대 자본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며 ‘각자도생’으로 몰린 청년들은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 청년 실업 문제 등 3040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든 YOLO, 우리는 live once가 아니라 live well을 원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공생을 원합니다.

우리 3040세대는 불공정과 사회적불평등이 개선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더 유능하고 공정한 국가지도자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8월 15일, 815명이 한 뜻을 모아 공정사회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주사회대개혁의 길을 만드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지와 뜻을 더 널리 알리고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가 남아있는 녹두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녹두관은 김개남 장군이 처형되신 초록바위 곤지산에 위치해 있으며 무명동학농민지도자가 안치된 곳입니다.

우리 815명은 1894년 ‘함께 잘살자는 대동세상 구현’을 위해 앞장섰던 동학농민군의 합성을 가슴속에 기억하며 청년 주거빈곤, 청년 소득빈곤, 부동산문제,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진출 장벽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합니다.

그 실현을 위하여 공정사회, 공정국가 정책

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더 많은 3040세대의 정치진출과 정치개혁을 위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 또는 폐지와 청년석패율제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재명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원칙과 강한 추진력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적인 가치와 지향에만 몰입하지 않고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행동적 실천이야말로 한국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력 있는 후보자로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지난 8월 1일 전주 방문 시 이재명 후보는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이라는 정치적 지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같다 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호남이며 이재명후보 정신의 본향은 분명 호남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차별 없이 지역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억울함이 없이 다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전주에서의 지지선언에 이어서 전국의 모든 3040세대들이 사회대개혁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재명 후보 지지운동에 들불처럼 일어나 앞장서기를 호소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3040세대 815명 일동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6

언론사

주식회사 경북신문사(경북신문)

심의대상

경북신문 8월 2일자 18면 「윤석열, 인천상륙작전2」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외부 기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신문

특별기고

30인1년 발행 18면 (오려나온)

윤석열, 인천상륙작전2



최성덕

윤서로 중앙회 회장·공학박사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가 큰 사고(?)를 쳤다. 국민의 힘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전격 입당하자 모두들 혀를 찰란다. 호박집에 불 난 것 마냥 아당법식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총격의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여당의 총격은 도를 넘고 있다.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 거짓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독재자 후예의 품에 안겼다”고 독심을 퍼붓고 있다. 윤 후보의 국민의 힘 입당은 성공확률 5000분의 1이라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원수를 연상하게 한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인천상륙작전2성공에 문 정권과 여당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은 맥아더 원수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혼란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김일성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사실 좌파 쪽에서는 맥아더 원수를 욕하지만 그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 한 지도자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들이 음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앞이 보이지 않는 땅과 지름길 없애 불세대의 윤석열이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한국 정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정권만 인천상륙, 그의 결정은 정말로 통쾌하다. 이는 국운이 아직도 국민의 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후자들은 중도보수들의 지지는 물론 건너가서 자기 대선은 실패한다고 낙담하는 이들도 많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번 윤 후보의 결행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랍했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민정당

에 들어가서 자기 정치를 한 것과 다름없다.

범을 잡으려면 범 굴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번에 윤 후보가 조건 없이 국민의 힘에 전격 입당한 것은 원으로 박수를 받을 만하다. 대권후보로 낙점받으면 그때 가서 자기 정치를 하면 된다.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국민의 힘을 대수솔하면 집 나갔던 토끼들은 저절로 돌아 올 것이다. 이번 윤 후보의 결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사실 국민의 힘은 이상한 당이다. 아들을 낳지 못해 대(代)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여야 하는 집에서는 양자를 사람에게 온갖 호(好) 조건을 제시하고 잘 보아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정당의 생명은 정권 창출이다. 정권 창출을 하지 못

하면 시체다. 즉, 감시들이다. 하지만, 대통령감이 없어 바깥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양자 들여야 할 국민의 힘이 온갖 배짱을 부리고 큰 소리치면서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는 것을 보고 상식이 있는 당원·국민들의 심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사내 대장부답게 양자의 조건은 하나도 없다. 대를 이어주겠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경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얼마나 당당한가. 이것이 정의·공정·상식의 철학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감동하고 열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국민의 마지막 선택이다. 윤 후보를 흔들지 마라. 흔들면 민을 나라가 흔들린다. 문 정권에서는 이러한 인물을 배출하였으면 감동하고 밀어주어야지 왜 못살게 구는가. 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을어요”라는 노래와 같이 윤 후보 편에는 양천하게 많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지고 있다. 또한 시은2를 준비하고 있는 윤서로(윤석열을 사탕하는 모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윤 후보는 혼자만 아니다.

국민 모두는 윤 후보야말로 국민이 원해서 나온 인물임을 주목하고 힘을 실어주자. 한국정치 역사를 새롭게 쓰고 나라를 구할 인천상륙작전2는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는 국운이 아직도 국민 편에 남아 있다고 알리는 전령사이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123 (H17.9cm)

<경북신문 2021년 8월 2일자 18면>

윤석열, 인천상륙작전2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가 큰 사고(?)를 쳤다. 국민의 힘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전격 입당하자 모두들 허를 찔렸다고 호떡집에 불 난 것 마냥 야단법석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충격의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여당의 충격은 도를 넘고 있다.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정치, 거지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독재자 후예의 품에 안겼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 윤 후보의 국민의 힘 입당은 성공확률 5000분의 1이라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원수를 연상하게 한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인천상륙작전2 성공에 문 정권과 여당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은 맥아더 원수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혼줄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김일성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사실 좌파 쪽에서는 맥아더 원수를 욕하지만 그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한 지도자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들이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망국의 지름길 앞에 불세출의 윤석열이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한국 정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정치관 인천상륙, 그의 결행은 정말로 통쾌하다. 이는 국운이 아직도 국민의 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혹자들은 중도 보수들의 지지는 물 건너가서 차기 대선은 실패한다고 낙담하는 이들도 많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번 윤 후

보의 결행은 김영삼 대통령이 야합했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민자당에 들어가서 자기 정치를 한 것과 다름없다.

범을 잡으려면 범 굴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번에 윤 후보가 조건 없이 국민의 힘에 전격 입당한 것은 참으로 박수를 받을 만하다. 대권후보로 낙점 받으면 그때 가서 자기 정치를 하면 된다.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국민의 힘을 대수술하면 집 나갔던 토끼들은 저절로 돌아 올 것이다. 이번 윤 후보의 결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사실 국민의 힘은 이상한 당이다. 아들을 낳지 못해 대(代)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여야 하는 집에서는 양자 될 사람에게 온갖 호(好) 조건을 제시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정당의 생명은 정권 창출이다. 정권 창출을 하지 못하면 시체다. 즉, 강시들이다. 하지만, 대통령감이 없어 바깥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양자 들여야 할 국민의 힘이 온갖 배짱을 부리고 큰 소리치면서 윤석열 후보를 겁박하는 것을 보고 상식이 있는 당인가 귀를 의심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사내대장부답게 양자의 조건은 하나도 없다. 대를 이어주겠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경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얼마나 당당한가. 이것이 정의 · 공정 · 상식의 철학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감동하고 열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국민의 마지막 선택지다. 윤 후보를 흔들지 마라. 흔들는 만큼 나라가 흔들린다. 문 정권에서는 이만한 인물을 배출하였으면 감동하고 밀어주어야지 왜 못살게 구는가.

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노래와 같이 윤 후보 곁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다. 또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윤 후보는 혼자가 아니다.

국민 모두는 윤 후보야말로 국민이 원해서 나온 인물임을 주목하고 힘을 실어주자. 한국 정치 역사를 새롭게 쓰고 나라를 구할 인천상륙작전²는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는 국운이 아직도 국민 편에 남아 있다고 알리는 전령사이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7
언론사	주식회사 일요시사신문사(일요시사)
심의대상	일요시사 7월 25일자 제1333호 5면 「홍준표에게 기회를!」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외부 기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요시사 2021년 7월 25일자 5면〉



홍준표에게 기회를!

조선 후기 문신인 윤기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하지 말아야 할 금기를 제시해 후손들로 하여금 화를 면하고 참된 사대부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남긴 글인 ‘집안의 금계(家禁)’ 중 일부를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한 곳에 오래 살다보면 그 곳의 이점은 잊고 폐단만 자꾸 눈에 띄기 마련이다. 이리므로 어디 어디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너를 버리고 저 낙토로 가리라.(逝將去汝 適彼樂土)’하는 마음이 들어 고대 결행해 떠나간다. 하지만 옮겨가고 나면 반드시 어딘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리저리 찾아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약간의 가산과 집기를 남김없이 모조리 탕진하고 생계는 끝내 여유롭지 못하며, 필경에는 파산하고 낭패를 보아 다시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내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췌대가 없어 혹 여기보다 저기가 나을까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천하에는 살 수 없는 곳도 없고, 또한 폐단이 전혀 없는 곳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짓이다.』

상기 글을 상세하게 살피면 흡사 작금에 국민의힘 아니, 속칭 보수 세력들의 췌대 없는 행동에 일침을 가하는 듯 보인다. 가까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멀리는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경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다. 그를 살피면 이 나라 보수 세력들은 심지어 ‘수척하고 초라한 모

습으로 여기 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것만 찾아다닌다’는 의미를 지닌 상가지구(喪家之狗, 상갓집 개)를 연상시킬 정도다.

각설하고, 2주 전 <일요시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홍 의원에게 지고 있는 부채, 그에 대한 적극적 거부 세력의 미미함, 그리고 재도전의 이점이라는 세 가지 세세한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는 본질적 이유 두 가지 들겠다. 먼저 한 집안의 대표자는 그 집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대목,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다. 홍 의원은 필자가 신한국당 중앙 사무처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1996년 입당한 이후 불청객의 등장으로 잠시 집을 비운 적은 있었으나 국민의힘과 동고동락했다. 짧지 않은 기간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에 머물렀던 필자가 지난 시간을 회고해보고 또 현재 국민의힘 구성원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건대 홍 의원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그가 언급한, 자신이 국민의힘의 주인이라는 말처럼 그곳 주인은 홍 의원이다.

다음은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중 한 사람으로 결정되리라 예상된다. 필자는 역선택의 함정으로 인해 이 지사가 될 확률이 더 크다 판단한다.

여하튼 그 두 사람 중 누가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홍 의원의 승리가 예상된다. 후보로 결정되면 곧바로 문재인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리라 예견되는 이 지사는 개인 역량으로 살필 때 모든 면에서 홍 의원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이

전 총리의 경우 차기 대선의 중대 변수인 지역 주의의 뒷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돼있다.

다시 부연한다. 정치 특히 한 국가의 지도자는 평생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 땀따라 류의 몫

이 아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옳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상갓집 개처럼 추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집적대지 말고 그 곳의 주인인 홍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9
언론사	주식회사 호남제일신문(호남제일신문)
심의대상	호남제일신문 9월 10일자 11면 「공정한 세상」과 「지방분권 실현」 위한 익산 시민 8,336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한 세상’과 ‘지방분권 실현’ 위한

익산시민 8,336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익산시민 8,336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호남권의 한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및 뿌리산업 약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날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가 지연된 형편이지만, 미흡한 국가 지원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들은 국회의원 지역구마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함께, 인구가 불리는 수도권은 반대 대표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과소대표 되는 차별적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농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호남자본으로 인하여,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전북 소외로 인해 지역발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이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균형성장을 가장 선두에서 외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고 지역민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과 강원-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을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는 소외된 약자와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현장행정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과 청년, 지역의 서민들이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앞서 실천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시장실 CCTV 설치를 통한 투명 행정 실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내버스 무료 Wi-Fi 설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다 잡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산후조리비와 무상교복 지원,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수료 CCTV 설치, 재난기본소득 최초 시행, 금융약자에 대한 기본대출, 불법 사금융 근절, 계곡 불법사냥물 철거, 어린이 건강과일 지급,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는 등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했습니다.

전라북도도 인구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인구 과소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익산시 인구는 28만이 무너져 호남 3대 도시의 위상도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차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된 기본국가를 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전복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정치인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부터 경기도지사에 이르기까지 힘있고 소외된 약자를 위해 초지일관 노력해왔으며, 역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 8336명은 노동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참된 행정이 이재명, 명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후위기 대응, 복지확충과 경제작기본권이 보장되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분배와 복지강화로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지난 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별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시오.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국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1.09.10)



‘공정한 세상’과 ‘지방분권 실현’ 위한

익산시민 8,336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익산시민 8,336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호남선의 한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및 뿌리산업 약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날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가 시급한 형편이지만, 미흡한 국가 지원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들은 국회의원 지역구마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함께,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은 과대 대표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과소대표 되는 차별적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농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호남차별로 인하여,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전북 소외로 인해 지역발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이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균형성장을 가장 선두에서 외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고 지역민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과 강원-호남을 연결하는 강호 축을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는 소외된 약자와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현장행정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과 청년, 지역의 서민들이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앞서 실천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시장실 CCTV 설치를 통한 투명행정 실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시내버스 무료 Wi-Fi설치,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다 잡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산후조리비와 무상 교복 지원,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술실 CCTV 설치, 재난기본소득 최초 시행, 금융약자에 대한 기본대출, 불법 사금융 근절,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어린이 건강과일 지급,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는 등 공약 이행을 96%를 달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인구 과소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익산시 인구는 28만이 무너져 호남 3대 도시의 위상도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된 기본국가를 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전북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정치인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에 이르기까지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위해 초지일관 노력해왔으며, 역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 8336명은 노동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청렴한 행정가 이재명, 명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기득권 세

력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후위기 대응, 복지확충과 경제 적기본권이 보장되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분배와 복지강화로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지난 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별 선거인단 투표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요.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11
언론사	주식회사 중앙신문(중앙신문)
심의대상	중앙신문 9월 3일자 2면 「홍준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제목을 사용하였고,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특정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앙신문

2021년 09월 03일
02면 (종합)

홍준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

지난달 조사때보다 무려 7%p 상승

윤석열 후보, 3%p ▲ '그레도 1위'

진보 이재명 후보 31% 여전히 1위

보수 윤석열 후보 7% 앞서 1위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4개 여론조사기관, 1012명 조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말 조사 때보다 무려 7%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9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홍 후보는 8월 3주차 조사보다 7%p 오른 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22%로 1위를 기록했지만, 8월 3주 때와 비교하면 3%p가 하락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10%로 3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진보진영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로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이낙연 후보는 변함없는 16% 대를 유지해 위치변동이 없었고, 박용진·심상정·정세균·추미애 후보는 각각 3%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33%) ▲윤석열 후보(24%) ▲이낙연 후보(7%) ▲홍준표 후보(5%) 순으로 나타나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42%에 이어 윤 후보 35%를 앞서 2주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38%, 윤 후보는 35%를 지지율을 보여 이 후보가 8월 4주차 조사 대비 6%p 상승

하며 윤 전 총장을 추월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대답이 43%,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답은 46%, 모름·무응답 1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1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상대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1%(총 3734명과 통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포인트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남주기자
(22.5×9.6cm)

<중앙신문 2021년 9월 3일자 2면>

홍준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

지난달 조사 때보다 무려 7%p 상승
윤석열 후보, 3%p↓ ‘그래도 1위’
진보 이재명 후보 31% 여전히 1위
보수 윤석열 후보 7% 앞서 1위권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
4개 여론조사기관, 1012여명 조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말 조사 때보다 무려 7%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9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홍 후보는 8월 3주차 조사보다 7%p 오른 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22%로 1위를 기록했지만, 8월 3주 때와 비교하면 3%p가 하락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10%로 3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진보진영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로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이낙연 후보는 변함없는 16% 대를 유지해 위치변동이

없었고, 박용진·심상정·정세균·추미애 후보는 각각 3%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33%) ▲윤석열 후보(24%) ▲이낙연 후보(7%) ▲홍준표 후보(5%) 순으로 나타나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 42%에 이어 윤 후보 35%를 앞서 2주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38%, 윤 후보는 35%를 지지율을 보여 이 후보가 8월 4주차 조사 대비 6%p 상승하며 윤 전 총장을 추월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대답이 43%,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답은 46%, 모름·무응답 1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1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상대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1%(총 3734명과 통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13
언론사	주식회사 광전매일신문(광전매일신문)
심의대상	광전매일신문 10월 27일자 11면 「윤석열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은퇴 지지서명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전매일신문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지 않았다. 값비싼 피가 댓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끊임 없는 망발을 일삼아온 윤석열이 급기야 전두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불꽃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한 날, 광주에 대한 사과를 자신의 개새끼에게 쥐버렸다.

윤석열에게 우리 광주시민은 게, 돼지보다 못한 것이다. 암울했던 전두환 통치 시절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학우들을 뒤로하고 고시촌 뒷골목에서 어슬렁거리며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다, 천신만고 끝에 불잡은 검찰이라는 권력의 끈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을 넘보는 자리까지 왔으니, 그가 보여준 천박한 역사 인식과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동네 뜰마니 수준의 사내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치지도자로서 자질이 함람미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윤석열을 대권후보경선에 참여시키고 있는 국민의 힘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토착왜구를 옹호

칼럼

조영무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윤석열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Barack Obama의 말이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서야, 권력이란 속성은 꼬리를 내린다.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였을 때, 그 나라 백성이 받는 고통은 항상 우려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바로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험난한 미래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남의 불행은 자신의 불행으로 똑같이 인식할때에 이루어진다. 눈과 발을 걸던 쟁기를 녹여 만든 칼과 죽창으로 썩은 조정과 그 관료 그리고 조총으로 무장한 외세에 맞선 동학의 정신으로 이 일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 우리 모두 윤석열을 은퇴시키기 위한 지지서명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4.1*11.8)cm

〈광전매일신문 2021년 10월 27일자 11면〉

윤석열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지 않았다. 값비싼 피가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끊임없는 망발을 일삼아온 윤석열이 급기야 전두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한 날, 광주에 대한 사과를 자신의 개새끼에게 줘버렸다.

윤석열에게 우리 광주시민은 개, 돼지보다 못한 것이다. 암울했던 전두환 통치시절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학우들을 뒤로하고 고시촌 뒷골목에서 어슬렁거리며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다, 천신만고 끝에 붙잡은 검찰이라는 권력의 끈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을 넘보는 자리까지 왔으나, 그가 보여준 천박한 역사인식과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동네 툄마니 수준의 사내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치지도자로서 자질이 함량미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윤석열을 대권후보경선에 참여시키고 있는 국민의 힘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토착왜구를 옹호하고 재벌의 뒤흔다꺼리하는 정당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없어져야 할 정당과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품에 안겨있는 황색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권력

을 찬탈하고자 젊고 잘생긴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갖은 교언영색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윤석열은 이러한 거대한 기득권 플랫폼으로 성장한 권력찬탈세력들에 편승하여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 못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 재벌과 외세의 먹잇감으로 넘겨주고, 자신은 십상시들보다 더한 아부쟁이들과 놀아날 사악한 통치만 바라고 있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역사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내 몸에 오물 묻지 않기를 바랄수는 없는 것이다. “권력은 싸우지 않고서는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는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말이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서야, 권력이란 속성은 꼬리를 내린다.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였을 때, 그 나라 백성이 받는 고통은 항상 우려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바로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험난한 미래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남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똑같이 인식할 때에 이루어진다. 논과 밭을 갈던 쟁기를 녹여 만든 칼과 죽창으로 썩은 조정과 그 관료 그리고 조총으로 무장한 외세에 맞선 동학의 정신으로 이 일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 우리 모두 윤석열을 은퇴시키기 위한 지지서명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19
언론사	부천신문
심의대상	부천신문 11월 11일자 3면 「부천시을 서영석, 윤석열 후보선출에 ‘공정과 상식’의 재건...」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지역 당협위원장이나 당내 경선 결과를 우호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천신문
정치
제1354호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3

부천시을 서영석, 윤석열 후보선출에 ‘공정과 상식’의 재건...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입장문 발표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text continues)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영석입니다. 먼저, 저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당협위원과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당협위원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협위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지지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내년에 실시되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간의 지방의 유권자와 정치적 권력에서 벗어난 후, 불충과 한, 보충을 한 후 후보의 역량은 정치 신인으로서는 손수 힘으로, 그보다는 후의 정치인 사색과 열정에

오로지 일관된 법치를 바로잡겠다는 후보의 열정에 대한 당협위원과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진정성에 대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국민의힘’ 윤석열 당협위원장 후보의 결정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과 상식의 재건은 물론, 윤석열 정부 국민과의 무한과 무한, 무한, 무한을 위한 승리를 위한 헌신의 열정과 상향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치 과정에서 사익과 갈등을 뛰어넘고, 대한민국과 국민과 재건을 위한 국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충성을 잊지 않고 전 당협위원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진행하기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08년 일교에 걸친 코로나19가 아직도 국민과 생명의 재산의 훼손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탄과 생명의 실종에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외환위기시절의 파도 누적과 장기적으로 지친 국민

을 위한 분명한 등대 역할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려 하는 막중한 책임과 당과 당협위원의 책입니다.

이제, 그 지방의 사익을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이끌라는 당협위원의 의향으로, 당협위원과 함께 같이 가슴에 사기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그 날까지 재의 당협위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협위원과 함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정권 교체에 위한 대선 승리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현정부를 찾아 더욱 철저한 가만하성으로 건강취사자를 가만히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윤석열 당협위원장 정무현 부천시을, ‘부천정치’ 서영석

연락처 010-1234-5678

〈부천신문 2021년 11월 11일자 3면〉



부천시을 서영석, 윤석열 후보선출에 ‘공정과 상식’의 재건…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입장문 발표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에 대해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이 8일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영석입니다.

먼저, 저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당원들과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당협위원장으로서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원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내년에 실시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지난 10번의 토론과 정치적 행보에서 빚어진 호·불호와 찬·반을 통한 윤 후보의 역정은 정치 신인으로서의 순수함으로, 그보다는 후보의 진지한 자세와 열정이, 오로지 잘못된 법치를 바로잡겠다는 후보의 열망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의 진정성에 대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금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결정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의 재건은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무능과 무법, 무치

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혁신을 위한 민심의 열망과 성원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시비와 갈등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구국과 재건을 위한 국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전 당원들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50여 일간에 걸친 코로나 19가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훼손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탄과 절망의 질곡에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료 관계자들의 피로 누적과 힘겨움으로 지친 국민을 위한 분명한 등대 역할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당과 당원들의 몫입니다.

이제, 그 희망의 시작을 윤석열 후보가 감당해달라는 당원과 국민의 여망으로, 당원들과 함께 깊이 가슴에 새기고 대통령으로 선택받는 그날까지 저와 당원들은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 승리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환절기를 맞아 더욱 철저한 개인위생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윤석열 국민캠프 정무특보
부천의힘, ‘부천청지기’ 서영석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20
언론사	주식회사 세계타임즈(세계타임즈)
심의대상	세계타임즈 11월 26일자 2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3자 정책토론 제안」, 11월 29일자 3면 「심상정 대통령 후보, 청년정의당 출범식 인사말」, 12월 6일자 2면 「국가혁명당, 여론조사 지지도 3위,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제공한 정책토론 제안문이나 입장문, 출범식 인사말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계타임즈

2021년 11월 26일
32면 (종합)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3자 정책토론 제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25일 오전, "지난 22일 김영삼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예비후보군에서 이제는 3자 대통령 후보 구도로 굳어질 허경영 대통령 후보 본인과 정책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허경영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토론회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님은 취임후 100일 안에 50조원을 투자하여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님은 1인당 30~5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였습니다.

두 후보님 모두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님은 자영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또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좋지만, 실상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허경영은 지난 총선에 출마해 코로나로 인해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허무맹랑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현재 2021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블루로 인해 자살율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철에선 코로나가 안걸리고 영업장에서만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빨리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고, 지금이라도 18세 이상 1억씩을 주셔서, 2천조의 가계부채를 없애고 그 빚을 국가가 떠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는 가계부채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고작 45%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일본은 정부부채가 235%이고 미국은 128% 나 됩니다.

프랑스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지원금으로 8만 2천유로 (1억 1300만원)을 지급했고 일본 또한 1770만엔 (1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24만 5천 달러(2억 8500만원)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허경영의 정책이 아직도 허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에 여야가 따로될 수 없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기자

(20.3*15.1)cm

〈세계타임즈 2021년 11월 26일자 2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3자 정책토론 제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25일 오전, “지난 22일 김영삼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예비후보군에서 이제는 3자 대통령 후보 구도로 굳혀질 허경영 대통령 후보 본인과 정책토론 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허경영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님은 취임후 100일 안에 50조원을 투자하여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님은 1인당 30~5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줘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였습니다.

두 후보님 모두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님은 자영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또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좋지만, 실상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허경영은 지난 총선에 출마해 코로나로 인해 돈 때문에 힘들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긴

급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허무맹랑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현재 2021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블루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철에선 코로나가 안걸리고 영업장에서만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빨리 위드코로나로 전향하고, 지금이라도 18세 이상 1억씩을 줘서, 2천조의 가계부채를 없애고 그 빚을 국가가 떠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는 가계부채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고작 45%입니다.

반면에 옆 나라 일본은 정부부채가 235%이고 미국은 128%나 됩니다.

프랑스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지원금으로 8만 2천유로 (1억 1300만원)을 지급했고 일본 또한 1770만엔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24만 5천달러(2억 8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허경영의 정책이 아직도 허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세계타임즈

2021년 11월 29일
03면 (국회/영양)

심상정 대통령 후보, 청년정의당 선대위 출범식 인사말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네요. 먼저, 우리 청년정의당 선대위 출범 축하드리고

요 오늘 이 선대위 출범하기까지 애 많이 쓰신 우리 강민진 대표님, 또 여러 제안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대선 D-100이거든요. 그 전날 청년정의당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은 '심상정으로의 정권교체' 100일 승리를 청년정의당이 주도하겠단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모든 후보들이 지금 2030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030이 결정

할 거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34년간의 양당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청년들이고, 빼앗긴 청년들의 미래를 되찾는 것이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다. (양당 후보가) 대충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봐주실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물러 섰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러분 함께 외쳐 봅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요즘 세계의 석학들이 이 시대를 '위대한 리셋 시대'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듯이,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산업, 경제, 개인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2030에게 '전환'의 시대'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이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를 만나야 시대교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변화는 유력한 정치인들, 후보들 허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직된 시민의 힘, 우리 청년들의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86세대. 이분들도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펼쳐 일어나서 독재와 노동탄압에, 그리고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격렬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2030세대가 기성세대들이 대상화시키고,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MZ세대란 딱지를 단호히 떼어버리고, 대한민국의 100년의 기준을 세우는 '위대한 리부트' 세대, 전환의 세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상상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대학을 가도 학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등록금만 파박파박 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은 일자

리가 없어서 집에서 시간을 죽여야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학교에 못 가니까 사실상 생활의 전부를 빼앗긴 겁니다.

저대 양당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청년들의 확장실업률이 최고 2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4명 중의 1명이 사실상 실업입니다. 연간 840만 원 이상 되는 월세에 대해서는 임 보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집부자들 연간 270만 원 총부세는 깎아주는 데 월안이 되어 있다면서 답답했습니다. 삼복력 근절하겠다고 말로는 떠돌아 대면서,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가는 우리 여성들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280석입니다. 이 양당이 가진 의석이, 이 280석은 이 대한민국을 280년이라고 치고도 남을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대책도, 개선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열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요?

이영진 기자

(02-9-12-11cm)

<세계타임즈 2021년 11월 29일자 3면>



보도내용

심상정 대통령 후보, 청년정의당 선대위 출범식 인사말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네요. 먼저, 우리 청년정의당 선대위 출범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선대위 출범하기까지 애 많이 쓰신 우리 강민진 대표님, 또 여러 제안을 했을 텐데, 그 제안을 선뜻 수용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대선 D-100이거든요. 그 전날 청년정의당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은 '심상정으로의 정권교체' 100일 승리를 청년정의당이 주도하겠단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모든 후보들이 지금 2030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030이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34년간의 양당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청년들이고, 빼앗긴 청년들의 미래를 되찾는 것이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다. (양당 후보가) 대충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봐주실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물러 섰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여러분 함께 외쳐 봅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요즘 세계의 석학들이 이 시대를 '위대한 리셋 시대'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듯이,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산업, 경제, 개인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2030에

게 ‘전환의 세대’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이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를 만나야 시대교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변화는 유력한 정치인들, 후보들 허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직된 시민의 힘, 우리 청년들의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86세대. 이분들도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펼쳐 일어나서 독재와 노동탄압에, 그리고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격렬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2030세대가 기성세대들이 대상화 시키고,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MZ세대란 딱지를 단호히 떼어버리고, 대한민국의 100년 기준을 세우는 ‘위대한 리부트 세대, 전환의 세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상실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대

학을 가도 학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등록금만 따박따박 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시간을 죽여야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학교에 못가니까 사실상 생활의 전부를 빼앗긴 겁니다.

거대 양당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청년들의 확장실업률이 최고 27%가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4명 중의 1명이 사실상 실업입니다. 연간 840만 원 이상 되는 월세에 대해서는 입 뺄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집부자들 연간 270만 원 중부세는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어 앞다투서 담합했습니다. 성폭력 근절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면서,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가는 우리 여성들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280석입니다. 이 양당이 가진 의석. 이 280석은 이 대한민국을 280번이나 고치고도 남을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대책도, 개선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계타임즈

2021년 12월 06일
(연면 (종합))

국가혁명당, 여론조사 지지도 3위,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 즉각 중단하라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위로 안철수, 심상정 등을 제치고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와 3자 대결 구도를 굳히고 있으며 특히, 20~30 연령층에서 양당 후보를 위협하자 '허경영 죽이기' 각종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

허경영 후보를 음해하는 공작 정치는 공정선거를 심각히 위협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12월 4일 11시 45분부터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



경영 '죽이기'는 공중파 방송의 공공성을 역행하고, 국민 지지도 3위로 치솟고 있는 허 후보에

대한 불공정 방영에 대하여 '정정보도·재방영 금지'를 요구한다.

허경영은 많은 정치인들을 통틀어 세금을 최고 고액을 납부하고 있고 여·야 거대정당의 두 후보에 비하면, 너무 투명해서 속이 다 비칠 정도이다. 대장동을 비롯한 여·야 후보들의 끊임없는 의혹들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프로는 취재/보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묻고 싶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허경영 대선 후보 죽이기 등, 각종 음모를 선거법 위반으로 발본색원하기를 촉구한다.

이재봉 기자

(20.3*13.2cm)

〈세계타임즈 2021년 12월 6일자 2면〉



보도내용

국가혁명당, 여론조사 지지도 3위, 허경영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 즉각 중단하라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위로 안철수, 심상정 등을 제치고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와 3자 대결 구도를 굳히고 있으며 특히, 20~30 연령층에서 양당 후보를 위협하자 '허경영 죽이기' 각종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

허경영 후보를 음해하는 공작정치는 공정선거를 심각히 위협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12월 4일 11시 45분부터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경영 죽이기'는 공중파 방송의 공공성을 역행하고, 국민 지지도 3위로 치솟고 있는 허 후보에 대한 불공정 방영에 대하여 '정정보도·재방영 금지'를 요구한다.

허경영은 많은 정치인들을 통틀어 세금을 최고 고액을 납부하고 있고 여·야 거대정당의 두 후보에 비하면, 너무 투명해서 속이 다 비칠 정도이다. 대장동을 비롯한 여·야 후보들의 끊임없는 의혹들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는 취재/보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묻고 싶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허경영 대선 후보 죽이기 등, 각종 음모를 선거법 위반으로 발본색원하기를 촉구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27
언론사	주식회사 열린순창(열린순창)
심의대상	열린순창 12월 1일자 23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생각하며」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원경으로 본 세상 —

내년 대선(大選)과 지선(地選)을 생각하며 표(票)를 찍는 당신은 올바른 유권자입니까?

김인성 사무이사(가천대학교총장)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해다. 대선은 3월9일, 지선은 6월 1일 실시한다. 유권자가 반박하는 대선은 아니냐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숙명이다. 지선은 지방선거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할까

마련 없이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성남 시장 재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단 한 번의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 원외인사가 대선후보가 된 것은 특별한 행운을 베풀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계이기도 했다. 총선거에서 무려 3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는데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 더 이상 더민주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증의 발로였다. 그래서 이재명은 당내 열세를 알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여겼었다.

이재명은 다른 후보들과 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거기에 남아있는 대통령 후보들과 견주어 봤을 때 능력면에서 단연 최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다. 연설 한자도 한 마디가 부족하다. 공금이라도 유류에서 잠깐이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의 이러한 유년시절은 생략한다. 겸정고시를 거쳐 집학생으로 법대를 진학해 사법고시를 통과해 연수원 생제로는 검판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인권변호사를 택한 것에 주목한다. 그 길을 계속 걸어왔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되었고, 도지사가 되었고, 대통령에 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인 이상 일신상의 명예도 얻을 수 없었지만 그의 핵심은 불공정을 바꾸어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大同世)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 윤석열은 자격이 되는가. 그런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님 형)한테 물어 보면 된다. 한마디로 완전 자격이다. 무식한 발언만 줄줄이 쏟아내고 써온 원고나 읽는 그런 후보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재명이 역대 최고의 후보라면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후보다. 평생 결사로 검찰총장으로 살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엄청난 특혜를 눈감아주고, 본연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을 바친 사람이 대통령에 된다는 것이 온당하기. 이것은 그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가장 맞지 않는다. 그런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공정과 상식을 포장

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 심재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으니 지켜보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누가 되어야 할까

군수는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개인과 몇몇 특정집단 지지자들의 살리를 챙기는 것보다 공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군수는 적지 않은 권력의 자리다. 공적인 자리를 위해 입후보하고 당선이 됐으면 공적인 책무를 다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예초부터 그런 자리를 생각지도 말라. 그러면 후보가 흔들리면서 변질되니 골치자 후보를 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접어들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비극이 아니 처음부터 각별한 사명감을 소유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반문해야 한다.

의원은 지역발전형 의원이 되어야 한다. 답은 현상과 현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지역에 사는 사람과 절교를 맺는 마음으로 활동해야 한다. 부단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써지 않는다. 그곳에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대안도 나온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역 사람들에겐 팔자 선인, 여원의 생명도 총리들을 기어해야 한다. 답을 떠나 할 말은 해야 한다. 군수 군 의원 전체가 민주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죽은 의원이다. 그 권과 이익은 작은 어항가. 임기 마지막 대모양 문제가 순정을 휩쓸지 않는다.

표를 행사하는 당신은 올바른 유권자인가

무표권이 있는 유권자인 당신은 후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후보를 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기준에 맞는 후보를 찍는가.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찍는가. 선거일을 지키며 양심적인 후보를 선택하는가. 온 불투를 건네는 사람을 찍는가. 계약이나 인연이나 없이 어찌어찌한 권력을 위임하면서 대통령과 도지사와 군수와 의원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선택하는가.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나라의 운명을 가려야 한다.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한다. 의원, 군수, 도지사, 대통령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으로 자격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행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암히 없다. 후대에게도 미래는 없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듯이 우리 유권자도 한 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대한민국의 선거가 속제가 될 것이다.

<열린순창 2021년 12월 1일자 23면>



내년 대선(大選과) 지선(地選)을 생각하며

표(票)를 찍는 당신은 올바른 유권자입니까?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해다. 대선은 3월 9일, 지선은 6월 1일 실시한다.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은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요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할까

미련 없이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성남시장 재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단 한 번의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 원외인사가 대선후보가 된 것은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기도 했다. 총선거에서 무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는데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 더 이상 더민주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다는 반감의 발로였다. 그래서 이재명은 당내 열세를 일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역전시켰다.

이재명은 다른 후보들과 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대통령 후보들과 견주어봤을 때 능력 면에서 단연 최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다. 연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다.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잠깐이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의 어려운 유년시절은 생략한다. 검정고시를 거쳐 장학생으로 법대를 진학해 사법고시를 통과해 연수원 성적으로는 검판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인권변호사를 택한 것에 주목한다. 그 길을 계속 걸어왔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되었고, 도지사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인 이상 일신상의 명예도 없을 수 없겠지만 그의 핵심은 불공정을 바꾸어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 윤석열은 자격이 되는가. 그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님 혐의)한테 물어보면 된다. 한마디로 완전 자격미달이다. 무식한 발언만 줄줄이 쏟아내고 써준 원고나 읽는 그런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재명이 역대 최고의 후보라면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후보다. 평생 검사로 검찰총장으로 살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의 엄청난 특혜를 눈감아주고, 본인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봐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온당한가. 이것은 그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가장 맞지 않다. 그런데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공정과 상식을 포장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으니 지켜보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누가 되어야 할까

군수는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개인과 몇몇 특정집단 지지자들의 실리를 챙기는 것보다 공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군수는 작지 않은 권력의 자리다. 공적인 자리를 위해 입후보하고 당선이 됐으면 공적인 책무를 다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애초부터 그런 자리를 생각지도 말라. 그런데 초심이 흔들리면서 변질되니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접어든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비극이니 처음부터 각별한 사명감을 소유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반문해야 한다.

의원은 지역밀착형 의원이 되어야 한다. 답은 현장과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지역에 사는 사람과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활동해야 한다. 부단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썩지 않는다. 그곳에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대안도 나온다.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역 사람들에게 떨어진 순간, 의원의 생명도 종료됨을 기억해야 한다. 당을 떠나 할 말은 해야 한다. 군수 군 의원 전체가 민주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죽은 의원이다. 그 결과 이곳 순창은 어떤가. 임기 마지막 대모암 문제가 순창을 휩쓸지 않은가.

표를 행사하는 당신은 올바른 유권자인가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인 당신은 후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후보를 알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기준에 맞는 후보를 찍는가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찍는가, 선거법을 지키며 양심적인 후보를 선택하는가, 돈 봉투를 건네는 사람을 찍는가, 계약서나 인감하나 없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위임하면서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와 의원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선택하는가.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짐을 기억해야 한다.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한다. 의원, 군수, 도지사, 대통령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으로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데 하찮게 행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없다. 후대에게도 미래는 없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듯이 우리 유권자도 한 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대한민국의 선거가 축제가 될 것이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42
언론사	주식회사 뉴영남매일(뉴영남매일)
심의대상	뉴영남매일 1월 7일자 15면 「윤석열의 출탄동시(啐啄同時)」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외부 필진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최성덕



최성덕
윤석열 후보의
공약박사

신묘한 것이 자연의 이치다. 공짜란 것이 없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폭을 매달다가 도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뒤를은 어떤가. 심중팔구 패가망신이다. 시련과 고난이 없이 얻어진 것은 가치가 없다.

"처음 윤석열로 들어가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포효는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정조의 울림 아닐까. 병아리가 부화 되는 시간은 21일이 소요된다. 어미닭은 21일 간 달걀을 품는다. 처음 일주일간은 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생사를 건다. 어떠한 천재이 행방을 하더라도 공짜하지 않는다.

어미닭은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에 나오려고 껍질을 깨는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린다. 먼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어미닭은 껍질을 깨준다. 이것을 출타동시(啄卵同時)라 한다.

어미닭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기 전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린다. 그 이유는 병아리가 스스로 나오려고 껍질을 깨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도 어머니 나오게 하면 쉽게 세상을 본 병아리는 면역력이 약해 곧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닭과 병아리 새끼와의 약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구할

영웅이 태어나는데도 출타동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이란 달 같은 은 국민들이 2년 동안이나 품어왔다. 그 동안 무수한 방해물이 나타났으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어떤 때가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윤석열 후보의 "처음 윤석열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고 어미닭에게 보내는 신호와 다름없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출타동시를 선언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미닭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영웅의 서막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한 소식이 들릴 때 윤 후보가 출타동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바로 국민과 윤석열 후보와의 출타동시다. 이것은 윤석열을 아끼는 애국시민들의 뜻이다. 이제 국민들은 병아리 암수감별법과 유정란 감별법만 터득하면 된다. 일반 사람들은 유정란과 무정란의 식별을 잘하지 못한다. 알을 깨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배아가 크고 흐릿한 것은 유정란이고 배아가 아주 작고 흰색이 진한 경우가 무정란이다. 그리고 알을 알일이 깨어놔야 안다면 어느 천 년에 병아리 한 마리라도 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달걀이 외형적으로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껍질 색이 흐리고 크기가 작다. 알을 낳지 못하는 무정란은 용도폐기다. 현재 유력 대권후보 중 누가 유정란이고 무정란에 해당하는지 금방 식별할 방법이 있다. 인격, 품격, 살아온 역경, 비전, 무게감, 역사와식, 인생철학, 약속이행, 말 뒤집기, 거짓말 능력 등으로 비교해 보면 금방 식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향후 100년의 국운을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

오고 있다.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제 2 김대업을 수없이 앞세워 윤 후보의 배우자 신상 털기에 여념이 없지만 인과응보가 닥쳐 줄 것이라 믿는다. 생사할 잡으면 천벌을 받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대통령은 하늘의 정자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지존의 자라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도 신문사에 칼럼을 통해 예언(?) 한 바 있다.

지난해 경찰과 시민들이 오리를 호위(?)한 기사가 시중의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어미오리와 새끼오리 12마리가 차도를 건너 냇가로 가는 광경을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천적을 피해 아파트 베란다에 알을 낳고 부화한 오리새끼들이 어사할 날이 다가오자 어미오리는 절대로 거들어 주지 않고 그 높은 곳에 있는 새끼들이 뛰어내려 따라 올 것을 강권(?) 했다.

죽음의 공포와 멸마가 날 정도의 높은 곳에 있는 새끼들은 선뜻 용기를 내어 뛰어내리기를 망설이자 어미새의 호통소리에 놀란 새끼들은 우렁차와 왔다. 그런데 그 중 용기있는 새끼 한 마리가 사육생(死生)의 마음으로 뛰어내려자 나머지 새끼들도 낙하해서 어미의 품으로 돌아와 종중결집으로 차도를 건너는 광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도 남을 일이다.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미오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는데서도 한 번 더 뛰어내려라고 하는 백학간 두 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용기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 길을 결정했다. 이것은 국민의 품으로 오라는 국민의 함성에 답을 한 것이다. 정말 잘했다고 박수 치고 싶다. 초심을 잃은 감지자 행보에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열성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이다.

필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일명 대구 팔공산 지킴이라고 부르는 채 모 회장이 있는데 이 분은 96세의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 지난해 5월 초순에 자신의 장모님이 98세인데 폐가 다 녹아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집에서 간호한다고 했다. 이승과 저승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부 장모님의 소원은 "윤 총장에게 투표를 하고 돌아가시겠다. 꼭 윤 총장이 대통령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 뿐이다. 그 전에는 연라대왕의 호출이 있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죽은 듯이 계시다가도 TV에 윤 총장 말이 나오면 눈을 떠서 쳐다보고 마음을 자시지 않으면 윤 총장 이야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드신다고 하였다. 얼마 전 장모님이 돌아가셨는지를 물으니까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말밖에 저승사자의 호출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윤 후보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확신이 더 들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할머니까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데 윤 후보에게 두려움이 무엇이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저주를 떠나겠다. 5% 정도가 예언한 말나니 같은 정권교체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준석은 국민의 배신자로 대역적이란 단언한다. 마구잡이 한 두 마리가 온 나라를 흠뻑물로 만들고 있는데 마구잡이의 목효악은 메기다.

온 국민이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하자. 모두가 윤핵관이 되면 정와공정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리라 확신한다. 우리 모두 윤석열의 출타동시(啄卵同時)에 동참하면 어떨까.

(24.0x24.0cm)

윤석열의 출타동시(啄卵同時)



윤석열의 줄탁동시(啍啄同時)

신묘한 것이 자연의 이치다. 공짜란 것이 없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목을 매달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뒤끝은 어떤가. 심중팔구 패가망신이다. 시련과 고난이 없이 얻어진 것은 가치가 없다.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포효는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정조의 울림 아닐까. 병아리의 일생은 참으로 재미있다. 병아리가 부화 되는 시간은 21일이 소요된다. 어미닭은 21일 간 달걀을 품는다. 처음 일주일간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생사를 건다. 어떠한 천적이 훼방을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는다.

어미닭은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려고 껍질을 깨는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린다. 먼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어미닭은 껍질을 깨준다. 이것을 줄탁동시(啍啄同時)라 한다.

어미닭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기 전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린다. 그 이유는 병아리가 스스로 나오려고 껍질을 깨는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어미가 나오게 하면 쉽게 세상을 본 병아리는 면역력이 약해 곧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닭과 병아리 새끼와의 약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구할 영웅이 태어나는 데도 줄탁동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이란 달걀은 온 국민들이 2년 동안이나 품어왔다. 그 동안 무수한 방해물이 나타났으나 이 모

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 때가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윤석열 후보의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고 어미닭에게 보내는 신호와 다름없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홀로서기를 선언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미닭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영웅의 서막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한 소식이 들릴 때 윤 후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바로 국민과 윤석열 후보와의 줄탁동시다. 이것은 윤석열을 아끼는 애국시민들의 몫이다. 이제 국민들은 병아리 암수감별법과 유·무정란 감별법만 터득하면 된다. 일반 사람들은 유정란과 무정란의 식별을 잘하지 못한다. 알을 깨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배아가 크고 흐릿한 것은 유정란이고 배아가 아주 작고 흰색이 진한 경우가 무정란이다. 그리고 알을 일일이 깨어봐야 안다면 어느 천 년에 병아리 한 마리라도 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달걀이 외형적으로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껍질 색이 흐리고 크기가 작다. 알을 낳지 못하는 무정란은 용도폐기다. 현재 유력 대권후보 중 누가 유정란이고 무정란에 해당하는지 금방 식별할 방법이 있다. 인격, 품격, 살아온 역정, 비전, 무게감, 역사의식, 인생철학, 약속이행, 말 뒤집기, 거짓말 능력 등으로 비교해 보면 금방 식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향후 100년의 국운을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제2 김대업을 수없이 앞세워 윤 후보의 배우

자 신상 털기에 여념이 없지만 인과응보가 답해 줄 것이라 믿는다. 생사람 잡으면 천벌을 받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대통령은 하늘의 짐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지존의 자리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3일 모 신문에 칼럼을 통해 예언(?) 한 바 있다.

지난해 경찰과 시민들이 오리를 호위(?)한 기사가 시중의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어미오리와 새끼오리 12마리가 차도를 건너 냇가로 가는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천적을 피해 아파트 베란다에 알을 낳고 부화한 오리새끼들이 이사할 날이 다가오자 어미오리는 절대로 거들어주지 않고 그 높은 곳에 있는 새끼들이 뛰어내려 따라 올 것을 강권(?) 했다.

죽음의 공포와 멀미가 날 정도의 높은 곳에 있는 새끼들은 선뜻 용기를 내어 뛰어내리기를 망설이자 어미새의 호통소리에 놀란 새끼들은 우왕좌왕 했다. 그런데 그 중 용기있는 새끼 한 마리가 사즉생(死卽生)의 마음으로 뛰어내리자 나머지 새끼들도 낙하해서 어미의 품으로 돌아와 쫙쫙걸음으로 차도를 건너는 광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도 남을 일이다.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미오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는데서도 한 번 더 뛰어내리라고 하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용기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 길을 결정했다. 이것은 국민의 품으로 오라는 국민의 함성에 답을 한 것이다. 정말 잘했다고 박수 치고 싶다. 초심을 잃은 갈지자 행보에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일성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필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일명 대구 팔공산 지킴이라고 부르는 채 모 회장이 있는데 이 분은 99세의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 지난해 5월 초순에 자신의 장모님이 98세인데 폐가 다 녹아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집에서 간호한다고 했다. 이승과 저승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시한부 장모님의 소원은 “윤 총장에게 투표를 하고 돌아가시겠다. 꼭 윤 총장이 대통령 되는 것을 보고 죽는 것 뿐이다. 그 전에는 염라대왕의 호출이 있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죽은 듯이 계시다가도 TV에 윤 총장 말이 나오면 눈을 떠서 쳐다보고 미음을 자시지 않으면 윤 총장 이야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드신다고 하였다. 얼마 전 장모님이 돌아가셨는지를 물으니까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말씀에 저승사자의 호출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윤 후보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확신이 더 들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할머니까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데 윤 후보에게 두려움이 무엇이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지구를 떠나겠다. 5% 진다고 예언한 망나니 같은 정권교체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준석은 국민의 배신자요 대역적이라 단언한다. 미꾸라지 한 두 마리가 온 나라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데 미꾸라지의 특효약은 메기다.

온 국민이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하자. 모두가 윤핵관이 되면 정의·공정·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리라 확신한다. 우리 모두 윤석열의 줄타동시(碎啄同時)에 동참하면 어떨까.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44

언론사

주식회사 국제신문(국제신문)

심의대상

국제신문 1월 7일자 18면 「윤석열 후보 승리의 마지막 선택은?」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제신문

한효섭 칼럼



한정화연구소의설의의 회장 제12회 국회의원회장 추경환영고등학교 졸업

대한민국의 흥부와 국민의 생존권이 담긴 추경환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야의 치열한 경쟁과 상대 당 후보에 대한 후세선언과 윤석열의 중장요인이 남부하고 있다. 정권이 상실되고 포퓰리즘(populism)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안갯길인 것이다.

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에 대한 선거 방법을 오랜 경험과 한국교육이 중요하고 분석하여 한효섭칼럼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정권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전략은 필자의 한국교육이 중요하고 분석하여 한효섭칼럼으로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 승리의 마지막 선택은?

단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흥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공약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국민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과 관련한 더 많은 것이 있다. 유리의 한쪽은 미래보다 현재, 국가보다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 두드러지고 그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와 자정 보시니, 전보시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하는 후보나 국민의힘 당내자나 관계자 혹은 지지자들이 행하는 언어나 행동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후보의 지도력과 능력도 평가받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보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아직도 흔들 놓아놓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최소한 아니더라도 자신, 가족이 아닌 차세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고갈될 수 있다. 즉,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제12회 국회의원회장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야권 후보의 득표 분산으로 필선 투표가 없는 민주주의 행정에 따라 또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나라의 대표성이 없는 대통령을 나라를 채워주는 것과 관련한 더 많은 것이 있다. 유리의 한쪽은 미래보다 현재, 국가보다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 두드러지고 그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기득권과 정치권의 욕심으로 필선 투표를 앞세운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양극과 대립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캠프로 구성하여 그만의 강력한 참모습과 지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내의 이견투표로 낙선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신과 방법을 앞세워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열광하고 지지했던 강점을 되살리는 강렬한 리더십의 발휘에 있다.

사실은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 이윤석 대

표와 김준연 선거대책본부장은 필선 투표에 비하지 않는다 고 본다. 그러하다면 윤석열 후보는 과감하게 선대위를 해체하고 상임선대위 위원장직을 사퇴한 국민의힘 이윤석 대표에게 적 이상 연인하치 말아야 한다. 당 대표 경선에 자신으로 낙선한 나경원 의원과 주요 명 의원을 중심으로 또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원희룡 지사와 장기호 후보 등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구성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 이재현 후보로 재편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의 국민 의의원으로 재편하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캠프로 구성하여

합을 발휘해야 한다. 새 끝은 정치권과 조만간 흔들리지 말고 당파를 고수하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단 강렬한 윤석열 후보의 필요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진정한 지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난번 국제신문 한효섭칼럼(2021.12.30)에서도 조만간 바 있기

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경희 여사님의 존재는 여사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사님이 남편을 사랑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대변권을 대인다면 어떤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고 확실하다. 그다음의 문제는 대통령 선거 후에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면 국내에서 사실 많이 보면 그 길이 보이는 길고도 어려운 항쟁을 선거전략이 윤석열 후보 측근과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 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애국시민을 위해서 필자의 생각을 조만간 본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85%에 달하는 한효섭이윤석열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85%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대이윤석의 분석으로 조국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80%를 차지하는 필자로서 여야 후보들이 비례와 비례없이 경쟁할 때에 윤석열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부산 현업인 한효섭.

YouTube 한효섭 TV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효섭 TV에서는 유익한 내용으로 보실바랍니다. 부산 현업인 한효섭

한글음파이름학

한글음파이름학에서 개발한 사들음

프로야구선수 개명한 최 NC 야구선수 손 아섭

후배야구선수	강로한
후배야구선수	나규안
SSG야구선수	한효섭
SSG야구선수	오태곤
SSG야구선수	이도겸
최정현	박태준
KBO위원장	김정남
롯데기독교	황동채
부산아이파크	김재현 외 다수

요즘 많이 힘드세요! = 무엇여는 물어보세요!

상담 예약: 웹장서목박사 010-2941-6766

한글음파이름학의 한효섭칼럼장서목박사

〈국제신문 2022년 1월 7일자 18면〉



윤석열 후보의 승리의 마지막 선택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경쟁과 상대 당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음해와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있다. 정책이 실종되고 포퓰리즘(populism)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승리에 대한 선거 방향을 오랜 경험과 한글음과 이름학으로 분석하여 한효섭칼럼으로 설명한 바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전략은 필자가 한글음과 이름학으로 분석한 결과대로 실천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제1야당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전략의 대응단이 없는 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공약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공약과 실천에 더 현혹되기 쉽다. 유권자의 선택은 미래보다 현재, 국가보다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투표하고 그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와 자칭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하는 후보나 국민의힘 당직자나 관계자 혹은 지지자들이 행하는 언어와 행동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후보의 지도력과 능

력도 평가절하되고 있기에 국민의힘보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마저도 등을 돌리거나 망설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꿈마저 상실할 수 있다. 즉,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후보를 포기하든지 타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야권 후보의 득표 분산으로 결선 투표가 없는 민주주의 맹점에 따라 또다시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나라의 대표성이 없는 대통령은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편 가르기와 집단 이기주의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되고 국민은 갈기갈기 찢겨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기득권과 정치꾼의 욕심으로 결선 투표를 없애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망국과 패망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캠프로 구성하여 그만의 강직한 참모습과 지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내의 이전 투구로 낙선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방법을 말한다면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열광하고 지지했던 강점을 되살리는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에 있다.

사람은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

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총괄위원장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하다면 윤석열 후보는 과감하게 선대위를 해체하고 상임선대위 위원장직을 사퇴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당 대표 경선에 차선으로 낙선한 나경원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중심으로 또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원희룡 지사와 장기표 후보 등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구성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으로 재편하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캠프로 구성하여 힘을 발휘해야 한다. 때 묻은 정치권의 조언에 흔들리지 말고 당락을 고사하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위했던 강직한 윤석열 후보의 참모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진정한 지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난번 국제신문 한효섭칼럼(2021.

12.30.)에서 조언한 바 있지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님의 문제는 여사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사님이 남편을 사랑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대결단을 내린다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고 확신한다. 그다음의 문제는 대통령 선거 후에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먼 곳에서 사심 없이 보면 그 길이 보이는데 쉽고도 어려운 평범한 선거전략이 윤석열 후보 측근과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애국시민을 위하여 필자의 생각을 조언해 본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85%에 달하는 한글음파이름학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85%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태어나면서 뱃속 깊이 조국과 민족만을 외치며 80을 바라보는 필자로서 여야 후보들이 비난과 비방없이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54
언론사	주식회사 새만금일보(새만금일보)
심의대상	새만금일보 1월 10일자 11면 「마스크에 감춘 이재명의 실체를 벗기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특정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도서를 소개하면서, 별도의 근거 제시나 설명 없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출판서 서평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안/내**

마스크에 감춘 이재명의 실체를 벗기다

지우출판 <굿바이, 이재명>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책

사람이 갖는 집착은 참 무섭다. 누군가를 향해 일단 의심은 품게 되면 처음에는 '절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럴 리가 없지'로 살짝 마음을 쓴다.

그러다가 '혹시 그럴 수도'하는 셋길로 빠지는가 싶다 하면 어느새 '아니, 분명히 그래, 분명히 그럴 걸'로 확신 쪽에 무게를 둔다. 아니, 아예 그쪽으로 몰아붙여 버린다.

대선 후보 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 속엔 이런 그림자가 있다.

"세상 모든 존경보다 값진 것은 아들·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던 소박한 꿈을 가졌던 가정을 향해 권력자 이재명의 지속적인 '거짓말'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사람들을 집착하게 했다.

주문을 걸 듯 '아니지, 그럴리가, 혹시? 아니 분명히!'라고 하며 어느 순간 스스로를 집착에 사로잡히게 했을 터였다.

그렇게 권력이 휘두른 거대한 거짓말은 단순치가 않았다. 거짓말에 의한 한 사람의 억울함은 그 개인의 삶만 왜곡하고 매장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함께하는 또 다른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도 왜곡되고 매장당한 일이 다반사였다.

권력이 휘두른 한 개인에 대한 삶의 왜곡과 매장시킴은 실로 참혹하고 끔찍했다.

조리돌림과 명석말이에서 끝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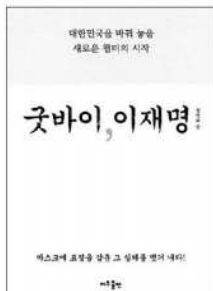
권력 앞에 줄을 선 군중들의 집착 심리를 이용해 타겟이 된 개인을 극한의 코너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끝내 한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왔다.

권력자와 그 앞에 줄을 선 이들은 그렇게 공범자가 됐다.

겨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라, 그것이 진실이다!

사건의 시작은 회계사였던 이재선이 성남시에 민원 글을 올리면서부터였다. 온갖 협박을 받았다. 협박에서 그친 것이 아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됐다.

패륜자로 몰렸고 정신병자로 몰렸다.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



리로 진행됐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처럼.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쫓긴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권력자의 욕망은 더더욱 거셌다.

이재선이 사실을 알리면 알릴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휘돌았다.

급기야 40여일간 정신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 지난한 싸움은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거짓으로 잠멸된다.

그리고 그 거짓의 중심에 여권 대선 후보 그가 서 있다.

이 책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 복잡하게 배배 꼬아 놓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 진실을 찾아서 그 위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록이다.

다만 한사람의 억울함과 그 개인의 삶이 왜곡되고 매장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이 결코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으로 사회가 어떻게 위험했는지를 알려 주며 위험한 것을 풀어내고자 했다.

그러한 의미로 배우 김부선의 변호사로 유명한 판사 출신의 장영하 변호사는 이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쓰기 시작했다.

단테의 신곡처럼 화려한 꽃밭 어느 틈새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현실을 가장 리얼하게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이인형 기자

(11.8×30.5cm)



마스크에 감춘 이재명의 실체를 벗기다

지우출판 <굿바이, 이재명>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책

사람이 갖는 집착은 참 무섭다. 누군가를 향해 일단 의심을 품게 되면 처음에는 ‘절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럴 리가 없지’로 살짝 마음을 튼다.

그러다가 ‘혹시 그럴 수도……’하는 셋길로 빠지는가 싶다 하면 어느 새 ‘아니, 분명히 그래. 분명히 그럴 걸!’로 확신 쪽에 무게를 둔다. 아니, 아예 그쪽으로 몰아붙여 버린다.

대선 후보 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 쏠림이 그러했다.

“세상 모든 존경보다 값진 것은 아들·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던 소박한 꿈을 가졌던 가장을 향해 권력자 이재명의 지속적인 ‘거짓말’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사람들을 집착하게 했다.

주문을 걸 듯 ‘아니지, 그럴 리가, 혹시? 아니 분명히!’라고 하며 어느 순간 스스로를 집착에 사로잡히게 했을 터였다.

그렇게 권력이 휘두른 거둬들인 거짓말은 단 순치가 않았다.

거짓말에 의한 한 사람의 억울함은 그 개인의 삶만 왜곡하고 매장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함께하는 또 다른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도 왜곡되고 매장당한 일이 다반사였다.

권력이 휘두른 한 개인에 대한 삶의 왜곡과 매장시킴은 실로 참혹하고 끔찍했다.

조리돌림과 멍석말이에서 끝나지 않았다. 권력 앞에 줄을 선 군중들의 집착 심리를 이용해 타깃이 된 개인을 극한의 코너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왔다.

권력자와 그 앞에 줄을 선 이들은 그렇게 공범자가 되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라, 그것이 진실이다!

사건의 시작은 회계사였던 이재선이 성남시에 민원 글을 올리면서부터였다. 온갖 협박을 받았다. 협박에서 그친 것이 아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었다.

패륜아로 몰렸고 정신병자로 몰렸다.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처럼.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꽃힌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권력자의 욕점은 더더욱 거셌다.

이재선이 사실을 알리면 알릴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휘둘렸다.

급기야 40여 일간 정신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 지난한 싸움은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거짓으로 점철된다.

그리고 그 거짓의 중심에 여권 대선 후보 그 가 서 있다.

이 책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

말을 보태 복잡하게 배배 꼬아 놓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 진실을 찾아서 그 위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록이다.

다만 한 사람의 억울함과 그 개인의 삶이 왜곡되고 매장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이 결코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으로 사회가 어떻게 뒤엉켰는지를 알려 주며, 뒤엉킨 것

을 풀어내고자 했다.

그러한 의미로 배우 김부선의 변호사로 유명한 판사 출신의 장영하 변호사는 이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쓰기 시작했다. 단테의 신곡처럼 화려한 꽃밭 어느 틈새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을지 아무로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현실을 가장 리얼하게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55

언론사

부산일보 주식회사(부산일보)

심의대상

부산일보 1월 18일자 16면 「“자유진영 대선후보단일화를 촉구한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를 유도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일보

성명서

“자유진영 대선후보단일화를 촉구한다”

1. 문제인정권의 실정들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문제인정권의 실정은 너무나도 많아 그 모든 것을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정권은 사회주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정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정부재정을 확대하여 불거져서 개인과 자유와 기업의 정치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대표로인 실정들을 몇 가지인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지담금에 급격한 인상 둘째, 세금으로 지금과는 정반대로인 실정적인 생산상황과는 무관한 공공공과금의 증가, 셋째, 시장의 수요와 판매되는 불동산물, 넷째, 코로나에 대한 경제정책, 다섯째, 가장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의 폐쇄, 여섯째, 북한에 대한 무방비, 일곱째, 미국과 일본을 멀리 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는 외교노선 통일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수많은 실정들이 있으나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정권은 더 이상 자처하지는 안 될 정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이재명정권이 등장한다면?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실정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타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집권한다면 -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 대한민국은 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해 버릴 것입니다. 몇 가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산자에게 재금환이 될지 것입니다. 국민들 1 대 100이 넘는 재금환과 보기는 부자재가 주지하면 재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을 강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눈치 채는 기업들은 재산을 정리하여 외국으로 도피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둘째, 대입선거 사실상 국유화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가산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권인사를 파견하고 노동조합이 정권에 참여하여 정경파괴를 추구하게 되어 세계경제에서 대입선거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노조분규가 이어져 조금 소일될 것입니다.

셋째, 반대로, 복지정책에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더욱 의존할 것입니다. 가산자가 해외로 빠져 나가 대입선거에 의존해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재금을 누가 언제 배분할 것인지가 정부의 제1과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반대로, 정부의 원안이 더욱 커지면서 재금환을 커버한 원안자들이 실지 지를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대리인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이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북한은 핵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정권의 핵심으로 등장한 주지하는 북한에 더욱 굴종적 자세를 보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의 외교 분야를 북한의 토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예측해 보았지만 이 외에도 더 엄청난 실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몇몇 인사들

이러한 실정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욱으로 멀어질 것입니다. 배후수령자가 북한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는 자유진영의 후보가 반드시 우리들이 정권교체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진영내에도 정권교체라는 걸림돌이라는 파장을 일으키는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유와 공정에 걸림돌이 내부에서 출몰을 해대는 인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인사들로는 **이준석, 홍준표, 장규태, 조원진, 김경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은 국민의당 대표로 취임한 날에는 31.3%의 높은지지를 대변하면서 정권교체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어느 정도 기대하였는데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정권교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국민의당 원내총무로서 원내총무로서의 임무를 다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주는 훌륭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 정권교체를 가장 큰 장애물 보이기까지 정권교체를 위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규태**는 자유진영내에서 역사와 더불어 대한국의 수호를 높여주는 상당한 기여를 한 공로는 있으나, 정당한 정권을 받아 정당한 후보를 교체하라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선거보이코드를 하고도 진을 물고 있습니다. **조원진**은 박근혜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정권을 지키고 온건한 정권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정당한 지위를 부여한 인물입니다. 국민의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정권교체를 위하여 적극적인 입장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태**는 국민혁명군의 대원후보로 정당한 이후에 내부적인 문제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완충할 것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현재의 입장을 바꾸어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의 대의를 동참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를 말할 수 없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을 중심으로 저들은 중직으로 있는대 여기 자유진영은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승리를 위한 협력과 고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문헌 : 1. 정치인사상 2. 정치인사상 3. 정치인사상 4. 정치인사상 5. 정치인사상 6. 정치인사상 7. 정치인사상 8. 정치인사상 9. 정치인사상 10. 정치인사상 11. 정치인사상 12. 정치인사상 13. 정치인사상 14. 정치인사상 15. 정치인사상 16. 정치인사상 17. 정치인사상 18. 정치인사상 19. 정치인사상 20. 정치인사상 21. 정치인사상 22. 정치인사상 23. 정치인사상 24. 정치인사상 25. 정치인사상 26. 정치인사상 27. 정치인사상 28. 정치인사상 29. 정치인사상 30. 정치인사상 31. 정치인사상 32. 정치인사상 33. 정치인사상 34. 정치인사상 35. 정치인사상 36. 정치인사상 37. 정치인사상 38. 정치인사상 39. 정치인사상 40. 정치인사상 41. 정치인사상 42. 정치인사상 43. 정치인사상 44. 정치인사상 45. 정치인사상 46. 정치인사상 47. 정치인사상 48. 정치인사상 49. 정치인사상 50. 정치인사상 51. 정치인사상 52. 정치인사상 53. 정치인사상 54. 정치인사상 55. 정치인사상 56. 정치인사상 57. 정치인사상 58. 정치인사상 59. 정치인사상 60. 정치인사상 61. 정치인사상 62. 정치인사상 63. 정치인사상 64. 정치인사상 65. 정치인사상 66. 정치인사상 67. 정치인사상 68. 정치인사상 69. 정치인사상 70. 정치인사상 71. 정치인사상 72. 정치인사상 73. 정치인사상 74. 정치인사상 75. 정치인사상 76. 정치인사상 77. 정치인사상 78. 정치인사상 79. 정치인사상 80. 정치인사상 81. 정치인사상 82. 정치인사상 83. 정치인사상 84. 정치인사상 85. 정치인사상 86. 정치인사상 87. 정치인사상 88. 정치인사상 89. 정치인사상 90. 정치인사상 91. 정치인사상 92. 정치인사상 93. 정치인사상 94. 정치인사상 95. 정치인사상 96. 정치인사상 97. 정치인사상 98. 정치인사상 99. 정치인사상 100. 정치인사상 101. 정치인사상 102. 정치인사상 103. 정치인사상 104. 정치인사상 105. 정치인사상 106. 정치인사상 107. 정치인사상 108. 정치인사상 109. 정치인사상 110. 정치인사상 111. 정치인사상 112. 정치인사상 113. 정치인사상 114. 정치인사상 115. 정치인사상 116. 정치인사상 117. 정치인사상 118. 정치인사상 119. 정치인사상 120. 정치인사상 121. 정치인사상 122. 정치인사상 123. 정치인사상 124. 정치인사상 125. 정치인사상 126. 정치인사상 127. 정치인사상 128. 정치인사상 129. 정치인사상 130. 정치인사상 131. 정치인사상 132. 정치인사상 133. 정치인사상 134. 정치인사상 135. 정치인사상 136. 정치인사상 137. 정치인사상 138. 정치인사상 139. 정치인사상 140. 정치인사상 141. 정치인사상 142. 정치인사상 143. 정치인사상 144. 정치인사상 145. 정치인사상 146. 정치인사상 147. 정치인사상 148. 정치인사상 149. 정치인사상 150. 정치인사상 151. 정치인사상 152. 정치인사상 153. 정치인사상 154. 정치인사상 155. 정치인사상 156. 정치인사상 157. 정치인사상 158. 정치인사상 159. 정치인사상 160. 정치인사상 161. 정치인사상 162. 정치인사상 163. 정치인사상 164. 정치인사상 165. 정치인사상 166. 정치인사상 167. 정치인사상 168. 정치인사상 169. 정치인사상 170. 정치인사상 171. 정치인사상 172. 정치인사상 173. 정치인사상 174. 정치인사상 175. 정치인사상 176. 정치인사상 177. 정치인사상 178. 정치인사상 179. 정치인사상 180. 정치인사상 181. 정치인사상 182. 정치인사상 183. 정치인사상 184. 정치인사상 185. 정치인사상 186. 정치인사상 187. 정치인사상 188. 정치인사상 189. 정치인사상 190. 정치인사상 191. 정치인사상 192. 정치인사상 193. 정치인사상 194. 정치인사상 195. 정치인사상 196. 정치인사상 197. 정치인사상 198. 정치인사상 199. 정치인사상 200. 정치인사상 201. 정치인사상 202. 정치인사상 203. 정치인사상 204. 정치인사상 205. 정치인사상 206. 정치인사상 207. 정치인사상 208. 정치인사상 209. 정치인사상 210. 정치인사상 211. 정치인사상 212. 정치인사상 213. 정치인사상 214. 정치인사상 215. 정치인사상 216. 정치인사상 217. 정치인사상 218. 정치인사상 219. 정치인사상 220. 정치인사상 221. 정치인사상 222. 정치인사상 223. 정치인사상 224. 정치인사상 225. 정치인사상 226. 정치인사상 227. 정치인사상 228. 정치인사상 229. 정치인사상 230. 정치인사상 231. 정치인사상 232. 정치인사상 233. 정치인사상 234. 정치인사상 235. 정치인사상 236. 정치인사상 237. 정치인사상 238. 정치인사상 239. 정치인사상 240. 정치인사상 241. 정치인사상 242. 정치인사상 243. 정치인사상 244. 정치인사상 245. 정치인사상 246. 정치인사상 247. 정치인사상 248. 정치인사상 249. 정치인사상 250. 정치인사상 251. 정치인사상 252. 정치인사상 253. 정치인사상 254. 정치인사상 255. 정치인사상 256. 정치인사상 257. 정치인사상 258. 정치인사상 259. 정치인사상 260. 정치인사상 261. 정치인사상 262. 정치인사상 263. 정치인사상 264. 정치인사상 265. 정치인사상 266. 정치인사상 267. 정치인사상 268. 정치인사상 269. 정치인사상 270. 정치인사상 271. 정치인사상 272. 정치인사상 273. 정치인사상 274. 정치인사상 275. 정치인사상 276. 정치인사상 277. 정치인사상 278. 정치인사상 279. 정치인사상 280. 정치인사상 281. 정치인사상 282. 정치인사상 283. 정치인사상 284. 정치인사상 285. 정치인사상 286. 정치인사상 287. 정치인사상 288. 정치인사상 289. 정치인사상 290. 정치인사상 291. 정치인사상 292. 정치인사상 293. 정치인사상 294. 정치인사상 295. 정치인사상 296. 정치인사상 297. 정치인사상 298. 정치인사상 299. 정치인사상 300. 정치인사상 301. 정치인사상 302. 정치인사상 303. 정치인사상 304. 정치인사상 305. 정치인사상 306. 정치인사상 307. 정치인사상 308. 정치인사상 309. 정치인사상 310. 정치인사상 311. 정치인사상 312. 정치인사상 313. 정치인사상 314. 정치인사상 315. 정치인사상 316. 정치인사상 317. 정치인사상 318. 정치인사상 319. 정치인사상 320. 정치인사상 321. 정치인사상 322. 정치인사상 323. 정치인사상 324. 정치인사상 325. 정치인사상 326. 정치인사상 327. 정치인사상 328. 정치인사상 329. 정치인사상 330. 정치인사상 331. 정치인사상 332. 정치인사상 333. 정치인사상 334. 정치인사상 335. 정치인사상 336. 정치인사상 337. 정치인사상 338. 정치인사상 339. 정치인사상 340. 정치인사상 341. 정치인사상 342. 정치인사상 343. 정치인사상 344. 정치인사상 345. 정치인사상 346. 정치인사상 347. 정치인사상 348. 정치인사상 349. 정치인사상 350. 정치인사상 351. 정치인사상 352. 정치인사상 353. 정치인사상 354. 정치인사상 355. 정치인사상 356. 정치인사상 357. 정치인사상 358. 정치인사상 359. 정치인사상 360. 정치인사상 361. 정치인사상 362. 정치인사상 363. 정치인사상 364. 정치인사상 365. 정치인사상 366. 정치인사상 367. 정치인사상 368. 정치인사상 369. 정치인사상 370. 정치인사상 371. 정치인사상 372. 정치인사상 373. 정치인사상 374. 정치인사상 375. 정치인사상 376. 정치인사상 377. 정치인사상 378. 정치인사상 379. 정치인사상 380. 정치인사상 381. 정치인사상 382. 정치인사상 383. 정치인사상 384. 정치인사상 385. 정치인사상 386. 정치인사상 387. 정치인사상 388. 정치인사상 389. 정치인사상 390. 정치인사상 391. 정치인사상 392. 정치인사상 393. 정치인사상 394. 정치인사상 395. 정치인사상 396. 정치인사상 397. 정치인사상 398. 정치인사상 399. 정치인사상 400. 정치인사상 401. 정치인사상 402. 정치인사상 403. 정치인사상 404. 정치인사상 405. 정치인사상 406. 정치인사상 407. 정치인사상 408. 정치인사상 409. 정치인사상 410. 정치인사상 411. 정치인사상 412. 정치인사상 413. 정치인사상 414. 정치인사상 415. 정치인사상 416. 정치인사상 417. 정치인사상 418. 정치인사상 419. 정치인사상 420. 정치인사상 421. 정치인사상 422. 정치인사상 423. 정치인사상 424. 정치인사상 425. 정치인사상 426. 정치인사상 427. 정치인사상 428. 정치인사상 429. 정치인사상 430. 정치인사상 431. 정치인사상 432. 정치인사상 433. 정치인사상 434. 정치인사상 435. 정치인사상 436. 정치인사상 437. 정치인사상 438. 정치인사상 439. 정치인사상 440. 정치인사상 441. 정치인사상 442. 정치인사상 443. 정치인사상 444. 정치인사상 445. 정치인사상 446. 정치인사상 447. 정치인사상 448. 정치인사상 449. 정치인사상 450. 정치인사상 451. 정치인사상 452. 정치인사상 453. 정치인사상 454. 정치인사상 455. 정치인사상 456. 정치인사상 457. 정치인사상 458. 정치인사상 459. 정치인사상 460. 정치인사상 461. 정치인사상 462. 정치인사상 463. 정치인사상 464. 정치인사상 465. 정치인사상 466. 정치인사상 467. 정치인사상 468. 정치인사상 469. 정치인사상 470. 정치인사상 471. 정치인사상 472. 정치인사상 473. 정치인사상 474. 정치인사상 475. 정치인사상 476. 정치인사상 477. 정치인사상 478. 정치인사상 479. 정치인사상 480. 정치인사상 481. 정치인사상 482. 정치인사상 483. 정치인사상 484. 정치인사상 485. 정치인사상 486. 정치인사상 487. 정치인사상 488. 정치인사상 489. 정치인사상 490. 정치인사상 491. 정치인사상 492. 정치인사상 493. 정치인사상 494. 정치인사상 495. 정치인사상 496. 정치인사상 497. 정치인사상 498. 정치인사상 499. 정치인사상 500. 정치인사상 501. 정치인사상 502. 정치인사상 503. 정치인사상 504. 정치인사상 505. 정치인사상 506. 정치인사상 507. 정치인사상 508. 정치인사상 509. 정치인사상 510. 정치인사상 511. 정치인사상 512. 정치인사상 513. 정치인사상 514. 정치인사상 515. 정치인사상 516. 정치인사상 517. 정치인사상 518. 정치인사상 519. 정치인사상 520. 정치인사상 521. 정치인사상 522. 정치인사상 523. 정치인사상 524. 정치인사상 525. 정치인사상 526. 정치인사상 527. 정치인사상 528. 정치인사상 529. 정치인사상 530. 정치인사상 531. 정치인사상 532. 정치인사상 533. 정치인사상 534. 정치인사상 535. 정치인사상 536. 정치인사상 537. 정치인사상 538. 정치인사상 539. 정치인사상 540. 정치인사상 541. 정치인사상 542. 정치인사상 543. 정치인사상 544. 정치인사상 545. 정치인사상 546. 정치인사상 547. 정치인사상 548. 정치인사상 549. 정치인사상 550. 정치인사상 551. 정치인사상 552. 정치인사상 553. 정치인사상 554. 정치인사상 555. 정치인사상 556. 정치인사상 557. 정치인사상 558. 정치인사상 559. 정치인사상 560. 정치인사상 561. 정치인사상 562. 정치인사상 563. 정치인사상 564. 정치인사상 565. 정치인사상 566. 정치인사상 567. 정치인사상 568. 정치인사상 569. 정치인사상 570. 정치인사상 571. 정치인사상 572. 정치인사상 573. 정치인사상 574. 정치인사상 575. 정치인사상 576. 정치인사상 577. 정치인사상 578. 정치인사상 579. 정치인사상 580. 정치인사상 581. 정치인사상 582. 정치인사상 583. 정치인사상 584. 정치인사상 585. 정치인사상 586. 정치인사상 587. 정치인사상 588. 정치인사상 589. 정치인사상 590. 정치인사상 591. 정치인사상 592. 정치인사상 593. 정치인사상 594. 정치인사상 595. 정치인사상 596. 정치인사상 597. 정치인사상 598. 정치인사상 599. 정치인사상 600. 정치인사상 601. 정치인사상 602. 정치인사상 603. 정치인사상 604. 정치인사상 605. 정치인사상 606. 정치인사상 607. 정치인사상 608. 정치인사상 609. 정치인사상 610. 정치인사상 611. 정치인사상 612. 정치인사상 613. 정치인사상 614. 정치인사상 615. 정치인사상 616. 정치인사상 617. 정치인사상 618. 정치인사상 619. 정치인사상 620. 정치인사상 621. 정치인사상 622. 정치인사상 623. 정치인사상 624. 정치인사상 625. 정치인사상 626. 정치인사상 627. 정치인사상 628. 정치인사상 629. 정치인사상 630. 정치인사상 631. 정치인사상 632. 정치인사상 633. 정치인사상 634. 정치인사상 635. 정치인사상 636. 정치인사상 637. 정치인사상 638. 정치인사상 639. 정치인사상 640. 정치인사상 641. 정치인사상 642. 정치인사상 643. 정치인사상 644. 정치인사상 645. 정치인사상 646. 정치인사상 647. 정치인사상 648. 정치인사상 649. 정치인사상 650. 정치인사상 651. 정치인사상 652. 정치인사상 653. 정치인사상 654. 정치인사상 655. 정치인사상 656. 정치인사상 657. 정치인사상 658. 정치인사상 659. 정치인사상 660. 정치인사상 661. 정치인사상 662. 정치인사상 663. 정치인사상 664. 정치인사상 665. 정치인사상 666. 정치인사상 667. 정치인사상 668. 정치인사상 669. 정치인사상 670. 정치인사상 671. 정치인사상 672. 정치인사상 673. 정치인사상 674. 정치인사상 675. 정치인사상 676. 정치인사상 677. 정치인사상 678. 정치인사상 679. 정치인사상 680. 정치인사상 681. 정치인사상 682. 정치인사상 683. 정치인사상 684. 정치인사상 685. 정치인사상 686. 정치인사상 687. 정치인사상 688. 정치인사상 689. 정치인사상 690. 정치인사상 691. 정치인사상 692. 정치인사상 693. 정치인사상 694. 정치인사상 695. 정치인사상 696. 정치인사상 697. 정치인사상 698. 정치인사상 699. 정치인사상 700. 정치인사상 701. 정치인사상 702. 정치인사상 703. 정치인사상 704. 정치인사상 705. 정치인사상 706. 정치인사상 707. 정치인사상 708. 정치인사상 709. 정치인사상 710. 정치인사상 711. 정치인사상 712. 정치인사상 713. 정치인사상 714. 정치인사상 715. 정치인사상 716. 정치인사상 717. 정치인사상 718. 정치인사상 719. 정치인사상 720. 정치인사상 721. 정치인사상 722. 정치인사상 723. 정치인사상 724. 정치인사상 725. 정치인사상 726. 정치인사상 727. 정치인사상 728. 정치인사상 729. 정치인사상 730. 정치인사상 731. 정치인사상 732. 정치인사상 733. 정치인사상 734. 정치인사상 735. 정치인사상 736. 정치인사상 737. 정치인사상 738. 정치인사상 739. 정치인사상 740. 정치인사상 741. 정치인사상 742. 정치인사상 743. 정치인사상 744. 정치인사상 745. 정치인사상 746. 정치인사상 747. 정치인사상 748. 정치인사상 749. 정치인사상 750. 정치인사상 751. 정치인사상 752. 정치인사상 753. 정치인사상 754. 정치인사상 755. 정치인사상 756. 정치인사상 757. 정치인사상 758. 정치인사상 759. 정치인사상 760. 정치인사상 761. 정치인사상 762. 정치인사상 763. 정치인사상 764. 정치인사상 765. 정치인사상 766. 정치인사상 767. 정치인사상 768. 정치인사상 769. 정치인사상 770. 정치인사상 771. 정치인사상 772. 정치인사상 773. 정치인사상 774. 정치인사상 775. 정치인사상 776. 정치인사상 777. 정치인사상 778. 정치인사상 779. 정치인사상 780. 정치인사상 781. 정치인사상 782. 정치인사상 783. 정치인사상 784. 정치인사상 785. 정치인사상 786. 정치인사상 787. 정치인사상 788. 정치인사상 789. 정치인사상 790. 정치인사상 791. 정치인사상 792. 정치인사상 793. 정치인사상 794. 정치인사상 795. 정치인사상 796. 정치인사상 797. 정치인사상 798. 정치인사상 799. 정치인사상 800. 정치인사상 801. 정치인사상 802. 정치인사상 803. 정치인사상 804. 정치인사상 805. 정치인사상 806. 정치인사상 807. 정치인사상 808. 정치인사상 809. 정치인사상 810. 정치인사상 811. 정치인사상 812. 정치인사상 813. 정치인사상 814. 정치인사상 815. 정치인사상 816. 정치인사상 817. 정치인사상 818. 정치인사상 819. 정치인사상 820. 정치인사상 821. 정치인사상 822. 정치인사상 823. 정치인사상 824. 정치인사상 825. 정치인사상 826. 정치인사상 827. 정치인사상 828. 정치인사상 829. 정치인사상 830. 정치인사상 831. 정치인사상 832. 정치인사상 833. 정치인사상 834. 정치인사상 835. 정치인사상 836. 정치인사상 837. 정치인사상 838. 정치인사상 839. 정치인사상 840. 정치인사상 841. 정치인사상 842. 정치인사상 843. 정치인사상 844. 정치인사상 845. 정치인사상 846. 정치인사상 847. 정치인사상 848. 정치인사상 849. 정치인사상 850. 정치인사상 851. 정치인사상 852. 정치인사상 853. 정치인사상 854. 정치인사상 855. 정치인사상 856. 정치인사상 857. 정치인사상 858. 정치인사상 859. 정치인사상 860. 정치인사상 861. 정치인사상 862. 정치인사상 863. 정치인사상 864. 정치인사상 865. 정치인사상 866. 정치인사상 867. 정치인사상 868. 정치인사상 869. 정치인사상 870. 정치인사상 871. 정치인사상 872. 정치인사상 873. 정치인사상 874. 정치인사상 875. 정치인사상 876. 정치인사상 877. 정치인사상 878. 정치인사상 879. 정치인사상 880. 정치인사상 881. 정치인사상 882. 정치인사상 883. 정치인사상 884. 정치인사상 885. 정치인사상 886. 정치인사상 887. 정치인사상 888. 정치인사상 889. 정치인사상 890. 정치인사상 891. 정치인사상 892. 정치인사상 893. 정치인사상 894. 정치인사상 895. 정치인사상 896. 정치인사상 897. 정치인사상 898. 정치인사상 899. 정치인사상 900. 정치인사상 901. 정치인사상 902. 정치인사상 903. 정치인사상 904. 정치인사상 905. 정치인사상 906. 정치인사상 907. 정치인사상 908. 정치인사상 909. 정치인사상 910. 정치인사상 911. 정치인사상 912. 정치인사상 913. 정치인사상 914. 정치인사상 915. 정치인사상 916. 정치인사상 917. 정치인사상 918. 정치인사상 919. 정치인사상 920. 정치인사상 921. 정치인사상 922. 정치인사상 923. 정치인사상 924. 정치인사상 925. 정치인사상 926. 정치인사상 927. 정치인사상 928. 정치인사상 929. 정치인사상 930. 정치인사상 931. 정치인사상 932. 정치인사상 933. 정치인사상 934. 정치인사상 935. 정치인사상 936. 정치인사상 937. 정치인사상 938. 정치인사상 939. 정치인사상 940. 정치인사상 941. 정치인사상 942. 정치인사상 943. 정치인사상 944. 정치인사상 945. 정치인사상 946. 정치인사상 947. 정치인사상 948. 정치인사상 949. 정치인사상 950. 정치인사상 951. 정치인사상 952. 정치인사상 953. 정치인사상 954. 정치인사상 955. 정치인사상 956. 정치인사상 957. 정치인사상 958. 정치인사상 959. 정치인사상 960. 정치인사상 961. 정치인사상 962. 정치인사상 963. 정치인사상 964. 정치인사상 965. 정치인사상 966. 정치인사상 967. 정치인사상 968. 정치인사상 969. 정치인사상 970. 정치인사상 971. 정치인사상 972. 정치인사상 973. 정치인사상 974. 정치인사상 975. 정치인사상 976. 정치인사상 977. 정치인사상 978. 정치인사상 979. 정치인사상 980. 정치인사상 981. 정치인사상 982. 정치인사상 983. 정치인사상 984. 정치인사상 985. 정치인사상 986. 정치인사상 987. 정치인사상 988. 정치인사상 989. 정치인사상 990. 정치인사상 991. 정치인사상 992. 정치인사상 993. 정치인사상 994. 정치인사상 995. 정치인사상 996. 정치인사상 997. 정치인사상 998. 정치인사상 999. 정치인사상 1000. 정치인사상 1001. 정치인사상 1002. 정치인사상 1003. 정치인사상 1004. 정치인사상 1005. 정치인사상 1006. 정치인사상 1007. 정치인사상 1008. 정치인사상 1009. 정치인사상 1010. 정치인사상 1011. 정치인사상 1012. 정치인사상 1013. 정치인사상 1014. 정치인사상 1015. 정치인사상 1016. 정치인사상 1017. 정치인사상 1018. 정치인사상 1019. 정치인사상 1020. 정치인사상 1021. 정치인사상 1022. 정치인사상 1023. 정치인사상 1024. 정치인사상 1025. 정치인사상 1026. 정치인사상 1027. 정치인사상 1028. 정치인사상 1029. 정치인사상 1030. 정치인사상 1031. 정치인사상 1032. 정치인사상 1033. 정치인사상 1034. 정치인사상 1035. 정치인사상 1036. 정치인사상 1037. 정치인사상 1038. 정치인사상 1039. 정치인사상 1040. 정치인사상 1041. 정치인사상 1042. 정치인사상 1043. 정치인사상 1044. 정치인사상 1045. 정치인사상 1046. 정치인사상 1047. 정치인사상 1048. 정치인사상 1049. 정치인사상 1050. 정치인사상 1051. 정치인사상 1052. 정치인사상 1053. 정치인사상 1054. 정치인사상 1055. 정치인사상 1056. 정치인사상 1057. 정치인사상 1058. 정치인사상 1059. 정치인사상 1060. 정치인사상 1061. 정치인사상 1062. 정치인사상 1063. 정치인사상 1064. 정치인사상 1065. 정치인사상 1066. 정치인사상 1067. 정치인사상 1068. 정치인사상 1069. 정치인사상 1070. 정치인사상 1071. 정치인사상 1072. 정치인사상 1073. 정치인사상 1074. 정치인사상 1075. 정치인사상 1076. 정치인사상 1077. 정치인사상 1078. 정치인사상 1079. 정치인사상 1080. 정치인사상 1081. 정치인사상 1082. 정치인사상 1083. 정치인사상 1084. 정치인사상 1085. 정치인사상 1086. 정치인사상 1087. 정치인사상 1088. 정치인사상 1089. 정치인사상 1090. 정치

“자유진영 대선후보단일화를 촉구한다”

1. 문재인정권의 실정들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문재인정권의 실정은 너무나도 많아 그 모든 것을 나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정권은 사회주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정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온갖 분야에서 정부개입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들을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둘째, 세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지원과 실질적인 생산성향상과는 무관한 공공일자리의 증가. 셋째, 시장의 수요와 반대되는 부동산정책,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정치방역, 다섯째, 가장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의 폐쇄. 여섯째, 북한핵에 대한 무방비. 일곱째,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에 매달리는 외교노선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수많은 실정들이 있으나 이 점만 하더라도 이 정권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정권인 것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2. 이재명정권이 등장한다면?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실정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망가졌는데 또다시 그들이 집권한다면 -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해 버릴

것입니다. 몇 가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진자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을 1대 9로 나누어 1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부자에게 무자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을 강탈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눈치 빠른 가진자는 재산을 정리하여 외국으로 도피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폭망해 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이 사실상 국유화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국선이사를 파견하고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세계 시장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대기업은 노조천국이 되어 차츰 소멸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더욱 매달릴 것입니다. 가진자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대기업이 노조천국이 되면서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금을 누가 먼저 배분받을 것인가 생존의 제1조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부의 권한이 더욱 커지면서 배급권력을 거머쥔 완장찬이들이 설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대리인들이 권력을 행세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북한은 핵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정권의 핵심부로 등장한 주사파는 북한에 더욱 굴종적 자세를 보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와 외교 분야를 북한의 뜻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만 이 외에도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몇몇 인사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나 북한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는 자유진영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진영내에서도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힘모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은 차이와 흠결에 집착하여 내부에서 총질을 해대는 일부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사들로는 이준석, 홍준표, 정규재, 조원진, 김경재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는 20,30의 젊은이들을 대변하면서 정권교체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어느 정도 기대하였는데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정권교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윤석열후보와 접전을 이루면서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이후 경선불복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면서 정권교체를 위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재는 자유진영내에서 역사와 이념에 대한 학습의 수준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공로는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된 후보를 교체하라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선거보이코트를 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원진은 박근혜대통령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정권과 치열하게 투쟁한 점은 높이 인정되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대선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염원에도 맞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재는 국민혁명당의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내부적인 문제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완주할 것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현재의 입장을 바꾸어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의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자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저들은 뭉치고 있는데 여기 자유진영은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적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 우리의 결의

첫째,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집단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로 변할 것임을 예측한다.

둘째,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익이 소멸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예측한다.

셋째,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자유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넷째, 자유진영에 속한 모든 이들은 현재의

작은 차이와 흠결을 문제삼기보다는 정권교체를 위한 대동단결을 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다섯째, 이준석, 홍준표, 정규재, 조원진, 김경재 등은 자유진영인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승리를 위한 전략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고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고성국TV 등 정권교체를 원하는 자유진영의 유튜브방송들은 개별 활동에만 그치

지 말고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동회견 및 오프라인 조직구축 등 자유진영의 승리를 위한 연대활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윤석열후보와 안철수후보를 비롯한 자유진영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지 말고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8일

자유시민부산연합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59

언론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의대상

조선일보 1월 26일자 35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주요 공약 등을 비교·평가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심의대상광고가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했거나 직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관련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심의대상광고의 내용과 표현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적인 의견광고의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타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고 있는 바,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022년 1월 26일
제35면 (15면121)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권교체 자유시장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나라!

- 외교권력의 분립과 탄압, 원천과 무능에 맞서 차은 대통령이 법치와 공정, 자유와 용재, 전문가 국정운영으로 자유와 장의를 활짝 꽃 피우는 나라,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의한 대국 평화
- 시장을 존중한 주재 100만호 공급정책, 민간 영세과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달년 1주제에 대한 영도세·재산세 완화 총합부담선제 전면 재검토 등 부동산정책 정상화, 부동산 거래도 시장 자율
- 말한전 부상을 국민에 떠넘긴 전직로 인사 백지화, 한글 뿌리가 아닌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보태펀드 확대로 청년과 여성 창업자 지원, 중부권 최강단 연구개발 투입단지, 역동적 성장, 따뜻한 복지
- 범죄 사실에 얽을 뿐 아니라 최고권력을 상대로 공판과 상식을 관철시킨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 부인제 대한 여론의 의혹선동에 오히려 2000여명의 지지가 오르는 후30가 대통령인 나라.
-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필요로 경직하는 사이집단의 수단,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보 사회적 양성평등 정책 지향하고 육아휴직 확대.
- 소와 대국 갈등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방어력에 평화, 북한의 핵·미사일 한 발에 국민 수백만명이 희생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집 제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당당한 외교와 끈끈한 안보의 한미동맹을 재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대화와 협력 가능.

정권유지 국민을 갈라치고 끼리끼리 이권 나눠먹는 나라!

- ▷ 국보보유세, 용사정 해가자 등으로 국민 생활과 시민사회를 통해·악랄, 가족과 이웃에 대한 배려적 약탈과 상술적인 거짓말, 국가 권력 남용 일상화, 참치난 미남에 의한 거지거리 이권 사죄
- ▷ 부동산 국제 남벌로 가세를 폭등시켜 국민간의 자산소득 불균형 극대화, 국보보유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공시지가 폭등 등의 세금폭탄으로 일차리 농촌 가업을 폐하시, 국민은 갈라치기.
- ▷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300만원이나 되는 생활 마련 위해 국보보유세, 탄소세 등 부과, 스티스에서는 국민이 거부한 단속 과두지 경제 사형,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경제주체의 경제정책
- ▷ 전과 4범(무고 및 공무원 사형, 도교로통범(원)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명령에 공동불순 손상, 선거법 위반)에 가족에 대한 배려적 약탈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
- ▷ 여성가족부를 생활용가족부 등으로 개칭 공약했으나 여론 과반이 제지 찬성(1,20~11만명미만), 월남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공약했으나 2000여명 60%가 반대(1,18~19 수리리서치)
- ▷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등 대한민국을 과장한 핵무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과 원일이 되어 강한 안보문자를 관행관하러 오는 나라, 우리만 무장해제만 '비난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속, 총련원전으로 미군참수물 선동, 대국 대중 갈취하고 자국.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정당입니다.
당헌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규약: 1. 당헌 2. 당규 3. 당원 4. 당원 5. 당원 6. 당원 7. 당원 8. 당원 9. 당원 10. 당원 11. 당원 12. 당원 13. 당원 14. 당원 15. 당원 16. 당원 17. 당원 18. 당원 19. 당원 20. 당원 21. 당원 22. 당원 23. 당원 24. 당원 25. 당원 26. 당원 27. 당원 28. 당원 29. 당원 30. 당원 31. 당원 32. 당원 33. 당원 34. 당원 35. 당원 36. 당원 37. 당원 38. 당원 39. 당원 40. 당원 41. 당원 42. 당원 43. 당원 44. 당원 45. 당원 46. 당원 47. 당원 48. 당원 49. 당원 50. 당원 51. 당원 52. 당원 53. 당원 54. 당원 55. 당원 56. 당원 57. 당원 58. 당원 59. 당원 60. 당원 61. 당원 62. 당원 63. 당원 64. 당원 65. 당원 66. 당원 67. 당원 68. 당원 69. 당원 70. 당원 71. 당원 72. 당원 73. 당원 74. 당원 75. 당원 76. 당원 77. 당원 78. 당원 79. 당원 80. 당원 81. 당원 82. 당원 83. 당원 84. 당원 85. 당원 86. 당원 87. 당원 88. 당원 89. 당원 90. 당원 91. 당원 92. 당원 93. 당원 94. 당원 95. 당원 96. 당원 97. 당원 98. 당원 99. 당원 100. 당원 101. 당원 102. 당원 103. 당원 104. 당원 105. 당원 106. 당원 107. 당원 108. 당원 109. 당원 110. 당원 111. 당원 112. 당원 113. 당원 114. 당원 115. 당원 116. 당원 117. 당원 118. 당원 119. 당원 120. 당원 121. 당원 122. 당원 123. 당원 124. 당원 125. 당원 126. 당원 127. 당원 128. 당원 129. 당원 130. 당원 131. 당원 132. 당원 133. 당원 134. 당원 135. 당원 136. 당원 137. 당원 138. 당원 139. 당원 140. 당원 141. 당원 142. 당원 143. 당원 144. 당원 145. 당원 146. 당원 147. 당원 148. 당원 149. 당원 150. 당원 151. 당원 152. 당원 153. 당원 154. 당원 155. 당원 156. 당원 157. 당원 158. 당원 159. 당원 160. 당원 161. 당원 162. 당원 163. 당원 164. 당원 165. 당원 166. 당원 167. 당원 168. 당원 169. 당원 170. 당원 171. 당원 172. 당원 173. 당원 174. 당원 175. 당원 176. 당원 177. 당원 178. 당원 179. 당원 180. 당원 181. 당원 182. 당원 183. 당원 184. 당원 185. 당원 186. 당원 187. 당원 188. 당원 189. 당원 190. 당원 191. 당원 192. 당원 193. 당원 194. 당원 195. 당원 196. 당원 197. 당원 198. 당원 199. 당원 200. 당원 201. 당원 202. 당원 203. 당원 204. 당원 205. 당원 206. 당원 207. 당원 208. 당원 209. 당원 210. 당원 211. 당원 212. 당원 213. 당원 214. 당원 215. 당원 216. 당원 217. 당원 218. 당원 219. 당원 220. 당원 221. 당원 222. 당원 223. 당원 224. 당원 225. 당원 226. 당원 227. 당원 228. 당원 229. 당원 230. 당원 231. 당원 232. 당원 233. 당원 234. 당원 235. 당원 236. 당원 237. 당원 238. 당원 239. 당원 240. 당원 241. 당원 242. 당원 243. 당원 244. 당원 245. 당원 246. 당원 247. 당원 248. 당원 249. 당원 250. 당원 251. 당원 252. 당원 253. 당원 254. 당원 255. 당원 256. 당원 257. 당원 258. 당원 259. 당원 260. 당원 261. 당원 262. 당원 263. 당원 264. 당원 265. 당원 266. 당원 267. 당원 268. 당원 269. 당원 270. 당원 271. 당원 272. 당원 273. 당원 274. 당원 275. 당원 276. 당원 277. 당원 278. 당원 279. 당원 280. 당원 281. 당원 282. 당원 283. 당원 284. 당원 285. 당원 286. 당원 287. 당원 288. 당원 289. 당원 290. 당원 291. 당원 292. 당원 293. 당원 294. 당원 295. 당원 296. 당원 297. 당원 298. 당원 299. 당원 300. 당원 301. 당원 302. 당원 303. 당원 304. 당원 305. 당원 306. 당원 307. 당원 308. 당원 309. 당원 310. 당원 311. 당원 312. 당원 313. 당원 314. 당원 315. 당원 316. 당원 317. 당원 318. 당원 319. 당원 320. 당원 321. 당원 322. 당원 323. 당원 324. 당원 325. 당원 326. 당원 327. 당원 328. 당원 329. 당원 330. 당원 331. 당원 332. 당원 333. 당원 334. 당원 335. 당원 336. 당원 337. 당원 338. 당원 339. 당원 340. 당원 341. 당원 342. 당원 343. 당원 344. 당원 345. 당원 346. 당원 347. 당원 348. 당원 349. 당원 350. 당원 351. 당원 352. 당원 353. 당원 354. 당원 355. 당원 356. 당원 357. 당원 358. 당원 359. 당원 360. 당원 361. 당원 362. 당원 363. 당원 364. 당원 365. 당원 366. 당원 367. 당원 368. 당원 369. 당원 370. 당원 371. 당원 372. 당원 373. 당원 374. 당원 375. 당원 376. 당원 377. 당원 378. 당원 379. 당원 380. 당원 381. 당원 382. 당원 383. 당원 384. 당원 385. 당원 386. 당원 387. 당원 388. 당원 389. 당원 390. 당원 391. 당원 392. 당원 393. 당원 394. 당원 395. 당원 396. 당원 397. 당원 398. 당원 399. 당원 400. 당원 401. 당원 402. 당원 403. 당원 404. 당원 405. 당원 406. 당원 407. 당원 408. 당원 409. 당원 410. 당원 411. 당원 412. 당원 413. 당원 414. 당원 415. 당원 416. 당원 417. 당원 418. 당원 419. 당원 420. 당원 421. 당원 422. 당원 423. 당원 424. 당원 425. 당원 426. 당원 427. 당원 428. 당원 429. 당원 430. 당원 431. 당원 432. 당원 433. 당원 434. 당원 435. 당원 436. 당원 437. 당원 438. 당원 439. 당원 440. 당원 441. 당원 442. 당원 443. 당원 444. 당원 445. 당원 446. 당원 447. 당원 448. 당원 449. 당원 450. 당원 451. 당원 452. 당원 453. 당원 454. 당원 455. 당원 456. 당원 457. 당원 458. 당원 459. 당원 460. 당원 461. 당원 462. 당원 463. 당원 464. 당원 465. 당원 466. 당원 467. 당원 468. 당원 469. 당원 470. 당원 471. 당원 472. 당원 473. 당원 474. 당원 475. 당원 476. 당원 477. 당원 478. 당원 479. 당원 480. 당원 481. 당원 482. 당원 483. 당원 484. 당원 485. 당원 486. 당원 487. 당원 488. 당원 489. 당원 490. 당원 491. 당원 492. 당원 493. 당원 494. 당원 495. 당원 496. 당원 497. 당원 498. 당원 499. 당원 500. 당원 501. 당원 502. 당원 503. 당원 504. 당원 505. 당원 506. 당원 507. 당원 508. 당원 509. 당원 510. 당원 511. 당원 512. 당원 513. 당원 514. 당원 515. 당원 516. 당원 517. 당원 518. 당원 519. 당원 520. 당원 521. 당원 522. 당원 523. 당원 524. 당원 525. 당원 526. 당원 527. 당원 528. 당원 529. 당원 530. 당원 531. 당원 532. 당원 533. 당원 534. 당원 535. 당원 536. 당원 537. 당원 538. 당원 539. 당원 540. 당원 541. 당원 542. 당원 543. 당원 544. 당원 545. 당원 546. 당원 547. 당원 548. 당원 549. 당원 550. 당원 551. 당원 552. 당원 553. 당원 554. 당원 555. 당원 556. 당원 557. 당원 558. 당원 559. 당원 560. 당원 561. 당원 562. 당원 563. 당원 564. 당원 565. 당원 566. 당원 567. 당원 568. 당원 569. 당원 570. 당원 571. 당원 572. 당원 573. 당원 574. 당원 575. 당원 576. 당원 577. 당원 578. 당원 579. 당원 580. 당원 581. 당원 582. 당원 583. 당원 584. 당원 585. 당원 586. 당원 587. 당원 588. 당원 589. 당원 590. 당원 591. 당원 592. 당원 593. 당원 594. 당원 595. 당원 596. 당원 597. 당원 598. 당원 599. 당원 600. 당원 601. 당원 602. 당원 603. 당원 604. 당원 605. 당원 606. 당원 607. 당원 608. 당원 609. 당원 610. 당원 611. 당원 612. 당원 613. 당원 614. 당원 615. 당원 616. 당원 617. 당원 618. 당원 619. 당원 620. 당원 621. 당원 622. 당원 623. 당원 624. 당원 625. 당원 626. 당원 627. 당원 628. 당원 629. 당원 630. 당원 631. 당원 632. 당원 633. 당원 634. 당원 635. 당원 636. 당원 637. 당원 638. 당원 639. 당원 640. 당원 641. 당원 642. 당원 643. 당원 644. 당원 645. 당원 646. 당원 647. 당원 648. 당원 649. 당원 650. 당원 651. 당원 652. 당원 653. 당원 654. 당원 655. 당원 656. 당원 657. 당원 658. 당원 659. 당원 660. 당원 661. 당원 662. 당원 663. 당원 664. 당원 665. 당원 666. 당원 667. 당원 668. 당원 669. 당원 670. 당원 671. 당원 672. 당원 673. 당원 674. 당원 675. 당원 676. 당원 677. 당원 678. 당원 679. 당원 680. 당원 681. 당원 682. 당원 683. 당원 684. 당원 685. 당원 686. 당원 687. 당원 688. 당원 689. 당원 690. 당원 691. 당원 692. 당원 693. 당원 694. 당원 695. 당원 696. 당원 697. 당원 698. 당원 699. 당원 700. 당원 701. 당원 702. 당원 703. 당원 704. 당원 705. 당원 706. 당원 707. 당원 708. 당원 709. 당원 710. 당원 711. 당원 712. 당원 713. 당원 714. 당원 715. 당원 716. 당원 717. 당원 718. 당원 719. 당원 720. 당원 721. 당원 722. 당원 723. 당원 724. 당원 725. 당원 726. 당원 727. 당원 728. 당원 729. 당원 730. 당원 731. 당원 732. 당원 733. 당원 734. 당원 735. 당원 736. 당원 737. 당원 738. 당원 739. 당원 740. 당원 741. 당원 742. 당원 743. 당원 744. 당원 745. 당원 746. 당원 747. 당원 748. 당원 749. 당원 750. 당원 751. 당원 752. 당원 753. 당원 754. 당원 755. 당원 756. 당원 757. 당원 758. 당원 759. 당원 760. 당원 761. 당원 762. 당원 763. 당원 764. 당원 765. 당원 766. 당원 767. 당원 768. 당원 769. 당원 770. 당원 771. 당원 772. 당원 773. 당원 774. 당원 775. 당원 776. 당원 777. 당원 778. 당원 779. 당원 780. 당원 781. 당원 782. 당원 783. 당원 784. 당원 785. 당원 786. 당원 787. 당원 788. 당원 789. 당원 790. 당원 791. 당원 792. 당원 793. 당원 794. 당원 795. 당원 796. 당원 797. 당원 798. 당원 799. 당원 800. 당원 801. 당원 802. 당원 803. 당원 804. 당원 805. 당원 806. 당원 807. 당원 808. 당원 809. 당원 810. 당원 811. 당원 812. 당원 813. 당원 814. 당원 815. 당원 816. 당원 817. 당원 818. 당원 819. 당원 820. 당원 821. 당원 822. 당원 823. 당원 824. 당원 825. 당원 826. 당원 827. 당원 828. 당원 829. 당원 830. 당원 831. 당원 832. 당원 833. 당원 834. 당원 835. 당원 836. 당원 837. 당원 838. 당원 839. 당원 840. 당원 841. 당원 842. 당원 843. 당원 844. 당원 845. 당원 846. 당원 847. 당원 848. 당원 849. 당원 850. 당원 851. 당원 852. 당원 853. 당원 854. 당원 855. 당원 856. 당원 857. 당원 858. 당원 859. 당원 860. 당원 861. 당원 862. 당원 863. 당원 864. 당원 865. 당원 866. 당원 867. 당원 868. 당원 869. 당원 870. 당원 871. 당원 872. 당원 873. 당원 874. 당원 875. 당원 876. 당원 877. 당원 878. 당원 879. 당원 880. 당원 881. 당원 882. 당원 883. 당원 884. 당원 885. 당원 886. 당원 887. 당원 888. 당원 889. 당원 890. 당원 891. 당원 892. 당원 893. 당원 894. 당원 895. 당원 896. 당원 897. 당원 898. 당원 899. 당원 900. 당원 901. 당원 902. 당원 903. 당원 904. 당원 905. 당원 906. 당원 907. 당원 908. 당원 909. 당원 910. 당원 911. 당원 912. 당원 913. 당원 914. 당원 915. 당원 916. 당원 917. 당원 918. 당원 919. 당원 920. 당원 921. 당원 922. 당원 923. 당원 924. 당원 925. 당원 926. 당원 927. 당원 928. 당원 929. 당원 930. 당원 931. 당원 932. 당원 933. 당원 934. 당원 935. 당원 936. 당원 937. 당원 938. 당원 939. 당원 940. 당원 941. 당원 942. 당원 943. 당원 944. 당원 945. 당원 946. 당원 947. 당원 948. 당원 949. 당원 950. 당원 951. 당원 952. 당원 953. 당원 954. 당원 955. 당원 956. 당원 957. 당원 958. 당원 959. 당원 960. 당원 961. 당원 962. 당원 963. 당원 964. 당원 965. 당원 966. 당원 967. 당원 968. 당원 969. 당원 970. 당원 971. 당원 972. 당원 973. 당원 974. 당원 975. 당원 976. 당원 977. 당원 978. 당원 979. 당원 980. 당원 981. 당원 982. 당원 983. 당원 984. 당원 985. 당원 986. 당원 987. 당원 988. 당원 989. 당원 990. 당원 991. 당원 992. 당원 993. 당원 994. 당원 995. 당원 996. 당원 997. 당원 998. 당원 999. 당원 1000. 당원 1001. 당원 1002. 당원 1003. 당원 1004. 당원 1005. 당원 1006. 당원 1007. 당원 1008. 당원 1009. 당원 1010. 당원 1011. 당원 1012. 당원 1013. 당원 1014. 당원 1015. 당원 1016. 당원 1017. 당원 1018. 당원 1019. 당원 1020. 당원 1021. 당원 1022. 당원 1023. 당원 1024. 당원 1025. 당원 1026. 당원 1027. 당원 1028. 당원 1029. 당원 1030. 당원 1031. 당원 1032. 당원 1033. 당원 1034. 당원 1035. 당원 1036. 당원 1037. 당원 1038. 당원 1039. 당원 1040. 당원 1041. 당원 1042. 당원 1043. 당원 1044. 당원 1045. 당원 1046. 당원 1047. 당원 1048. 당원 1049. 당원 1050. 당원 1051. 당원 1052. 당원 1053. 당원 1054. 당원 1055. 당원 1056. 당원 1057. 당원 1058. 당원 1059. 당원 1060. 당원 1061. 당원 1062. 당원 1063. 당원 1064. 당원 1065. 당원 1066. 당원 1067. 당원 1068. 당원 1069. 당원 1070. 당원 1071. 당원 1072. 당원 1073. 당원 1074. 당원 1075. 당원 1076. 당원 1077. 당원 1078. 당원 1079. 당원 1080. 당원 1081. 당원 1082. 당원 1083. 당원 1084. 당원 1085. 당원 1086. 당원 1087. 당원 1088. 당원 1089. 당원 1090. 당원 1091. 당원 1092. 당원 1093. 당원 1094. 당원 1095. 당원 1096. 당원 1097. 당원 1098. 당원 1099. 당원 1100. 당원 1101. 당원 1102. 당원 1103. 당원 1104. 당원 1105. 당원 1106. 당원 1107. 당원 1108. 당원 1109. 당원 1110. 당원 1111. 당원 1112. 당원 1113. 당원 1114. 당원 1115. 당원 1116. 당원 1117. 당원 1118. 당원 1119. 당원 1120. 당원 1121. 당원 1122. 당원 1123. 당원 1124. 당원 1125. 당원 1126. 당원 1127. 당원 1128. 당원 1129. 당원 1130. 당원 1131. 당원 1132. 당원 1133. 당원 1134. 당원 1135. 당원 1136. 당원 1137. 당원 1138. 당원 1139. 당원 1140. 당원 1141. 당원 1142. 당원 1143. 당원 1144. 당원 1145. 당원 1146. 당원 1147. 당원 1148. 당원 1149. 당원 1150. 당원 1151. 당원 1152. 당원 1153. 당원 1154. 당원 1155. 당원 1156. 당원 1157. 당원 1158. 당원 1159. 당원 1160. 당원 1161. 당원 1162. 당원 1163. 당원 1164. 당원 1165. 당원 1166. 당원 1167. 당원 1168. 당원 1169. 당원 1170. 당원 1171. 당원 1172. 당원 1173. 당원 1174. 당원 1175. 당원 1176. 당원 1177. 당원 1178. 당원 1179. 당원 1180. 당원 1181. 당원 1182. 당원 1183. 당원 1184. 당원 1185. 당원 1186. 당원 1187. 당원 1188. 당원 1189. 당원 1190. 당원 1191. 당원 1192. 당원 1193. 당원 1194. 당원 1195. 당원 1196. 당원 1197. 당원 1198. 당원 1199. 당원 1200. 당원 1201. 당원 1202. 당원 1203. 당원 1204. 당원 1205. 당원 1206. 당원 1207. 당원 1208. 당원 1209. 당원 1210. 당원 1211. 당원 1212. 당원 1213. 당원 1214. 당원 1215. 당원 1216. 당원 1217. 당원 1218. 당원 1219. 당원 1220. 당원 1221. 당원 1222. 당원 1223. 당원 1224. 당원 1225. 당원 1226. 당원 1227. 당원 1228. 당원 1229. 당원 1230. 당원 1231. 당원 1232. 당원 1233. 당원 1234. 당원 1235. 당원 1236. 당원 1237. 당원 1238. 당원 1239. 당원 1240. 당원 1241. 당원 1242. 당원 1243. 당원 1244. 당원 1245. 당원 1246. 당원 1247. 당원 1248. 당원 1249. 당원 1250. 당원 1251. 당원 1252. 당원 1253. 당원 1254. 당원 1255. 당원 1256. 당원 1257. 당원 1258. 당원 1259. 당원 1260. 당원 1261. 당원 1262. 당원 1263. 당원 1264. 당원 1265. 당원 1266. 당원 1267. 당원 1268. 당원 1269. 당원 1270. 당원 1271. 당원 1272. 당원 1273. 당원 1274. 당원 1275. 당원 1276. 당원 1277. 당원 1278. 당원 1279. 당원 1280. 당원 1281. 당원 1282. 당원 1283. 당원 1284. 당원 1285. 당원 1286. 당원 1287. 당원 1288. 당원 1289. 당원 1290. 당원 1291. 당원 1292. 당원 1293. 당원 1294. 당원 1295. 당원 1296. 당원 1297. 당원 1298. 당원 1299. 당원 1300. 당원 1301. 당원 1302. 당원 1303. 당원 1304. 당원 1305. 당원 1306. 당원 1307. 당원 1308. 당원 1309. 당원 1310. 당원 1311. 당원 1312. 당원 1313. 당원 1314. 당원 1315. 당원 1316. 당원 1317. 당원 1318. 당원 1319. 당원 1320. 당원 1321. 당원 1322. 당원 1323. 당원 1324. 당원 1325. 당원 1326. 당원 1327. 당원 1328. 당원 1329. 당원 1330. 당원 1331. 당원 1332. 당원 1333. 당원 1334. 당원 1335. 당원 1336. 당원 1337. 당원 1338. 당원 1339. 당원 1340. 당원 1341. 당원 1342. 당원 1343. 당원 1344. 당원 1345. 당원 1346. 당원 1347. 당원 1348. 당원 1349. 당원 1350. 당원 1351. 당원 1352. 당원 1353. 당원 1354. 당원 1355. 당원 1356. 당원 1357. 당원 1358. 당원 1359. 당원 1360. 당원 1361. 당원 1362. 당원 1363. 당원 1364. 당원 1365. 당원 1366. 당원 1367. 당원 1368. 당원 1369. 당원 1370. 당원 1371. 당원 1372. 당원 1373. 당원 1374. 당원 1375. 당원 1376. 당원 1377. 당원 1378. 당원 1379. 당원 1380. 당원 1381. 당원 1382. 당원 1383. 당원 1384. 당원 1385. 당원 1386. 당원 1387. 당원 1388. 당원 1389. 당원 1390. 당원 1391. 당원 1392. 당원 1393. 당원 1394. 당원 1395. 당원 1396. 당원 1397. 당원 1398. 당원 1399. 당원 1400. 당원 1401. 당원 1402. 당원 1403. 당원 1404. 당원 1405. 당원 1406. 당원 1407. 당원 1408. 당원 1409. 당원 1410. 당원 1411. 당원 1412. 당원 1413. 당원 1414. 당원 1415. 당원 1416. 당원 1417. 당원 1418. 당원 1419. 당원 1420. 당원 1421. 당원 1422. 당원 1423. 당원 1424. 당원 1425. 당원 1426. 당원 1427. 당원 1428. 당원 1429. 당원 1430. 당원 1431. 당원 1432. 당원 1433. 당원 1434. 당원 1435. 당원 1436. 당원 1437. 당원 1438. 당원 1439. 당원 1440. 당원 1441. 당원 1442. 당원 1443. 당원 1444. 당원 1445. 당원 1446. 당원 1447. 당원 1448. 당원 1449. 당원 1450. 당원 1451. 당원 1452. 당원 1453. 당원 1454. 당원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62

언론사

주식회사 문화일보(문화일보)

심의대상

문화일보 1월 26일자 31면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주요 공약 등을 비교·평가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심의대상광고가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했거나 직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관련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심의대상광고의 내용과 표현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적인 의견광고의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타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고 있는 바,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제1항,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화일보

2022년 1월 26일
당첨 (제20대 대선)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권교체 자유시장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나라!

정권유지 국민을 갈라치고 끼리끼리 이권 나눠먹는 나라!

○ 최고권력의 분할과 분할, 권한과 무능에 맞서 빠른 대통령령이 발효와 공경, 자유와 통제, 권한과 국정운영으로 자유와 상충을 할까? 아니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의한 영속 평화	자유·공정 전사	대통령의 자격	전과 4범	▷ 국보보유세, 중세종 학자금 등으로 국민 생활과 지인사회를 통해, 여당, 가족과 이웃에 대한 폭력적 박탈과 상업적인 자정할, 국가 권력 남용 일삼는, 철저한 이념에 의한 괴뢰정치 이권 사회
○ 시장을 존중할 주체 100만호 공공주택, 민간 영세와 대기업·계정장을 위한 달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재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부동산 거래도 시장 자유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	부동산 대장동 사건	배우자 보통리금	▷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을 폭등시켜 국민들의 자산소득 불공평 확대, 국보보유세와 기본소득 보지도 도입, 공시지가 폭등 등의 세금폭탄으로 일파의 황혼 기업은 폐사, 국민은 갈라지기
○ 영원한 부강을 국민에 베풀기 전까지 인종 배척, 현금 루터가 아닌 아라는 계승 유산 지원, 모태펀드 확대도 장인과 여성 장남이 지원, 공무원 퇴직금 연구개발 장담단기, 역동적 성장, 다양한 복지	역동적 성장	경제와 기본소득	국민 용돈	▷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500원이나 되는 개인 위해 국보보유세, 반세기 등 부와,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거부한 단는 과수기 정책 시행, 국가가 없이는 기업하는 정책수익적 경제정책
○ 별다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최고권력을 상대로 공판과 상식을 관철시킨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 부인해 대한 여론의 의혹전등에 오직 2030대생의 지지가 오히려 후보가 대통령인 나라.	공정·공리	도덕성	새한 국민	▷ 전과 4범(무고 및 불무한 사실, 도교로통행위한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에 동종살인 존상, 선거법 위반)에다 가족에 대해 세습적 직업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
○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필요로 정치하는 사익집단의 수단,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서정해 양성평등 정책 지향하고 육아로지 확대.	양성평등 정책	여성 청년 정책	2030세대 정책	▷ 여성가족부를 장래여성가족부 등으로 개정 공약했으나 여당 파당이 폐지 찬성(1,300~11차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공약했으나 2030세대 40%가 반대(1,18~19 우러리서적)
○ 소와 대륙 공중에 떠난 정국이 아니라 강력한 장미에게 정권, 국민의 복·미시일 한 번에 국민 수백만명이 희생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기 위해 일 제인 용 비롯한 한국형 3층 제제 구축.	강한 한미동맹	보통 안보 외교	유권자 선택	▷ 국호를 미시일 시절 등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과 북한이 되어 강한 안보문제를 전방위하고 있는 나라, 유대인 무장해산한 '한민도' 광복교로세스 전 계승, 통헌헌원으로 비문물수를 선동, 대륙 세습을 중용지로 귀속.

『문재인 총독죄와 원형 복원』
발행 기한 2022년 1월 26일 17:00~18:00
010-3620-5142(유선)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최 대표: 최영준 변호사 010-422-1111
최 대표: 최영준 변호사 010-422-1111
최 대표: 최영준 변호사 010-422-1111

OK-114-7em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69
언론사	경북도민일보 주식회사(경북도민일보)
심의대상	경북도민일보 2월 8일자 15면 「말(言)의 오염」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대를 유도하는 취지의 외부 필진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도민일보

2022년 2월 8일
15면 (호파니만)

말(言)의 오염

寄稿



김종호
호서대 교수
법학박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우리말과 글이 요즈음처럼 오염된 적이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들이 너무 거칠어졌다. 거센 소리, 된 소리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극적으로 알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 스마트폰 영향으로 표기법 또한 과장하며 외국이나 우리말 할 것 없이 축약어 되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대별로 즐겨 쓰는 단어들은 세대 간의 소통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표기법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대선 정국에 여당 후보의 혐수욕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실 욕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과 정치 그런 생각을 받

으로 내뱉는 후보의 천박한 인성도 문제다. 물론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보면 분노와 증오와 공포의 표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후보의 혐수욕설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정점을 담고 있다.

첫째,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가족 그것도 자신보다 뒷사람인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증오 섞인 욕설을 내뱉었다는 점, 그러한 연상의 반복성, 또 상대한테 사용한 단어가 갖는 증오와 인격탄산의 함의, 여성에 대한 비하의 정도가 정신적 살인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둘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법률가라는 점이다. 아주 실성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국회의 욕설을 할 지게 할 수 있는지 살이 떨린다. 애당초 법조인의 윤리를 강 그리 무시한 발언이다. 하기사 그의 저주 섞인 폭언은 호모 포비아(homophobia)들이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연사이다.

셋째, 이런 수준의 욕설은 폭력적인 표현으로서 분노, 공포, 미움을 퍼붓는 싸움할 때나 쓰는 이끈파 파이팅 워드(fighting words)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이런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한

마디로 인격파탄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성이 형성되기까지의 유아기와 청소년기 때 그가 받은 가정교육이 어땠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악의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과박한 인성의 소유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됐을 때 정적이나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발원 증오의 배설은 상상하기도 싫다.

현대 문명국가의 법은 공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행한 연설 등 다양한 언어 표현이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 그 출신이나 민족, 국민, 인종, 성별 또는 특정 종교의 소속 유무를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적인 연설로 명예를 손상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후보의 욕설은 상대방을 공격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그 증상이 혐오스러우며 강렬하고 분명하게 적의가 결합된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한 욕설을 직접 들은 행수의 입장에서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보는 자신의 욕설을 단순히 경솔한 발언이니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욕설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지만 그

면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인륜과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버린 그의 욕설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면책될 수 없다.

기본권을 침해했고 선명한 폭력과 공공 도덕의 한계를 벗어난 그의 욕설은 오히려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그의 욕설은 하찮은 단순한 메시지일 수 있었으나 그것 자체가 언어폭력인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증폭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은 위험성을 가진 행위이다. 폭력의 일부로서 설명되어야 마땅하다. 행수의 대응에서도 나왔지만 그의 발언은 타인의 심신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미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 행수는 공포감에서 비롯된 투근거림, 호흡곤란, 악몽, PTSD, 과도한 정신적 긴장, 정신이상에 이르기까지 생리적 증상과 감정적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여성 혐오와 증오에 가득 찬 그의 욕설이 유권자들의 엄청난 반발과 개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선거전에 이후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도덕적 책무에 해당된다. 이런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모두가 공범자일 뿐이다.

(24-218-35cm)



말(言)의 오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우리말과 글이 요즘처럼 오염된 적이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들이 너무 거칠어 졌다. 거센 소리, 된 소리 등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국적도 알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 스마트폰 영향으로 표기법 또한 괴상하며 외국어나 우리말 할 것 없이 축약이 되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대별로 즐겨 쓰는 단어들은 세대 간의 소통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표기법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대선 정국에 여당 후보의 형수욕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실 욕설이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정작 그런 생각을 밖으로 내뱉는 후보의 천박한 인성도 문제다. 물론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보면 분노와 증오와 공포의 표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후보의 형수욕설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가족 그것도 자신보다 윗사람인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증오 섞인 욕설을 내뱉었다는 점, 그러한 언사의 반복성, 또 상대방에 사용한 단어가 갖는 증오와 인격말살의 함의, 여성에 대한 비하의 정도가 정신적 살인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둘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법률가라는 점이다. 아주 실성한 사

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극한의 욕설을 참 지게 할 수 있는지 살이 떨린다. 애당초 법조인의 윤리를 깡그리 무시한 발언이다. 하기사 그의 저주 섞인 폭언은 호모 포비안(homophobic) 들이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언사이다.

셋째, 이런 수준의 욕설은 폭력적인 표현으로서 분노, 공포, 미움을 퍼붓는 싸움할 때나 쓰는 이른바 파이팅 워드(fighting words)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이런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한마디로 인격파탄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성이 형성되기까지의 유아기와 청소년기 때 그가 받은 가정교육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악의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괴악한 인성의 소유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됐을 때 정적이나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벌일 증오의 배설은 상상하기도 싫다.

현대 문명국가의 법은 공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행한 연설 등 다양한 언어표현이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서 그 출신이나 민족, 국민, 인종, 성별 또는 특정 종교의 소속 유무를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로 명예를 손상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후보의 욕설은 상대방을 공격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그 증상이 혐오스러우며 강렬하고 분명하게 적의가 결합된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한 욕설을 직접 들은 형수의 입장에서는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보는 자신의 욕설을 단순히 경솔한 발언이니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

하는 모양이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시 욕설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인륜과 인간의 존엄성을 뒤흔개 버린 그의 욕설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면책될 수 없다.

기본권을 침해했고 선량한 풍속과 공공 도덕의 한계를 벗어난 그의 욕설은 오히려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그의 욕설은 하찮은 단순한 메시지 일 수 있겠으나 그것 자체가 언어폭력인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은 위험성을 가진 행위이다. 폭력의 일부로서 설명되어야 마땅하

다. 형수의 대응에서도 나왔지만 그의 발언은 타인의 심신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미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 형수는 공포감에서 비롯된 두근거림, 호흡곤란, 악몽, PTSD, 과도한 정신적 긴장, 정신이상에 이르기까지 생리적 증상과 감정적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여성 혐오와 증오에 가득 찬 그의 욕설이 유권자들의 엄청난 반발과 개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선거에서 후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도덕적 책무에 해당된다. 이런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모두가 공범자일 뿐이다.

3. 주의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3
언론사	종합일보 주식회사(경인종합일보)
심의대상	경인종합일보 7월 21일자 1면 「이재명 “정치가 천직이라 느낀다”」, 7월 21일자 1면 「이재명 “통통 불은 간호 공무원 손, 잊지 않겠다”」, 7월 23일자 1면 「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7월 23일자 1면 「이재명 “윤석열, 구태 정치인의 전형...안타깝다”」, 7월 26일자 1면 「이재명 “사학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 7월 27일자 1면 「이재명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예정인 현직 지자체장의 주요 공약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만을 1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각 보도함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2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재명 “정치가 천직이라 느낀다”

20일 후원금 22억원 돌파... 소액 기부자가 95.7%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원금이 22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 지사는 “보내 주신 소망에 최선을 다해 부응하는 것이 제가 반드시 다해야 할 소임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제가 지구를 구할 영웅은 못되지만 주어진 힘을 방기하거나 남용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시국에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다. 그만큼 절박하니 잘하라는 무거운 뜻으로 듣고 있다”며 “사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권력을 누리 고자 하면 한없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으면 꽤 고달픈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같이 후광도 계 파도 없는 정치인이면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이라며 “좋은 삶든 변화를 만들려는 정치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치가 제 천직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바로 같은 길을 걷는 동지를 발견할 때”라며 “컴컴한 어둠에서 빛을 만난 듯 가슴이 뛰고 힘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택시기사님의 10만원, 건설 노동자의 5만 원, 주부의 5만 원. 제발 좀 잘해달라고 따끔하게 호소하신 분도 많다”며 “어느 하나 허투루 들을 말씀이 없다. 22억이라는 큰 돈 안에 주권자의 간단치 않은 기대와 염원이 모두 담겨있는 셈”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왜들 그렇게 금액이 적다고는 죄송해 하시는지 이 글을 빌려 애절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기자/jonghapnews.com

(11.3*12.4)cm



이재명 “정치가 천직이라 느낀다”

20일 후원금 22억 원 돌파...

소액 기부자가 95.7%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원금이 22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 지사는 “보내주신 소망에 최선을 다해 부응하는 것이 제가 반드시 다해야 할 소임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제가 지구를 구할 영웅은 못되지만 주어진 힘을 방기하거나 남용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시국에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다. 그만큼 절박하니 잘하라는 무거운 뜻으로 듣고 있다”며 “사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권력을 누

리고자 하면 한없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으면 꽤 고달픈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같이 후광도 계파도 없는 정치인이라면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이라며 “좋은 삶은 변화를 만들려는 정치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치가 제 천직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바로 같은 길을 걷는 동지를 발견할 때”라며 “검검한 어둠에서 빛을 만난 듯 가슴이 뛰고 힘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택시기사님의 10만원, 건설 노동자의 5만 원, 주부의 5만 원. 제발 좀 잘해달라고 따끔하게 호소하신 분도 많다”며 “어느 하나 허투루 들을 말씀이 없다. 22억이라는 큰돈 안에 주권자의 간단치 않은 기대와 염원이 모두 담겨있는 셈”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왜들 그렇게 금액이 적다고는 죄송해 하시는지, 이 글을 빌려 애절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통통 불은 간호 공무원 손, 잊지 않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SNS에 통통 불은 간호직 공무원의 손 사진을 첨부해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폭염에 땀으로 흥건히 젖은 방역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고생하고 있을 의료진과 공무원들 생각에 마음이 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임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이 자랑스럽고 그 무거운 임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안할 따름”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 6개월째다. 유례없는 위기가 닥치고, 그동안 술한 고비가 있었지만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잘 헤쳐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의 불편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국민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해온 일선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성과는 그 모든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총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들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긴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 모든 이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통 불은 손가락에 담긴 그 마음 잊지 않겠다”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충분한 보답이 이뤄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기자 / jonghapnews.com

(11.3*11.9)cm



이재명 “통통 불은 간호 공무원 손, 잊지 않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SNS에 통통 불은 간호직 공무원의 손 사진을 첨부해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폭염에 땀으로 흥건히 젖은 방역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고생하고 있을 의료진과 공무원들 생각에 마음이 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임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이 자랑스럽고, 그 무거운 임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안할 따름”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 6개월째다. 유례없는 위기가 닥치고, 그동안 술한 고

비가 있었지만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잘 헤쳐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의 불편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국민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해온 일선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성과는 그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총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들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긴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 모든 이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통 불은 손가락에 담긴 그 마음 잊지 않겠다”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충분한 보답이 이뤄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로 재원 확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증세 동반’은 국민 동의 후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국민에게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본생계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의 절반, 자연 현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내 지급이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병행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

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골등 지급하려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

도록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

에 따라 분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되고 일부는 불가상순에 의한 국민들에 골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와 중립적 국민적 합의의 필요가 언급되면서 지지자 정파에서는 일관적인 기본소득 확립에 도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체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야 가능하다”며 “현행 저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0여년 전 박정호 장관에서 불관용하게 만들어진 대표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제도로 발전했는데 어떻게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경인종합일보 2021년 7월 23일자 1면

〈경인종합일보 2021년 7월 23일자 1면〉

보도내용

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로 재원 확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증세 동반’은 국민 동의 후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

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

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제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인종합일보

이재명 “윤석열, 구태 정치인의 전형… 안타깝다”

2021년 7월 23일
아면 (출판)이재명
49분

<윤석열 후보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발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본인 말씀대로 ‘정치 경험’이 없고, 공부를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의혹과 발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공직윤리의식의 싹을 틔웁니다.

삼부토건 접대 의혹, 윤우진 전 서장 중언 등은 전형적인 유착관계를 보여줍니다. 조남욱 전 회장과 식사, 골프, 명절선물 등이 통상적이었다는 해명은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윤 후보가 강조해 온 청렴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는지요, 26년간 이런 공직윤리를 가지고 검사 생활을 해온 것인지요.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주의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은 구태 정치인의 전형이라며 “정치인이란 대통령 후보라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그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분열의 정치라는 ‘구태정치’를 먼저 배워버린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한준 기자 / janghapnews.com
G34 1*10.5cm

<경인종합일보 2021년 7월 23일자 1면>

보도내용

이재명 “윤석열, 구태 정치인의 전형… 안타깝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야권 대선 주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정치를 하시겠다니, 대통령이 되시겠다니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정치를 하시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발언 내용이 충격적이다. 본인 말씀대로 ‘정치 경험’이 없고, 공부를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의혹과 발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부토건 접대 의혹, 윤우진 전 서장 중언 등은 전형적인 유착관계를 보여준다. 조남욱 전 회장과 식사, 골프, 명절선물 등이 통상적이었다는 해명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윤 후보가 강조해 온 청렴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는가. 26년간 이런 공직윤리를 가지고 검사 생활을 해온 것인가.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말실수로 넘기기엔 그 인식이 너무 위험하다. 국민의 대리인이 되겠다고 나섰다면 고용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도 함께 살피야 한다”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기업에 차별이 존재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구-민란’ 발언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역주의에 편

승해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은 구태 정치인의 전형”이라며 “정치인이라면, 대통령 후보라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그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분열의 정치라는 ‘구태정치’를 먼저 배워버린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인중앙일보
2021년 7월 26일
01면 (종합)

이재명 “사학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

“노무현식 사학개혁, 용기와 결단으로 끝내 해결할 것”



이재명
2시간 · 4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사학 개혁은 민주정부의 발자취가 담긴 개혁,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개혁이다’라며 “4기 민주정부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더 멀리,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공정채용’ 개혁에 나섰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의 전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8억 원이 오갔고 미리 문제나 답을 건네받은 13명만 합격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제 밀실채용 하지 말고 공정하게 채용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것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아무리 ‘공정’을 외쳐봐야 소용없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립학교 공정채용 협약’은 채용의 전 과정, 1차 서류부터 면접, 수업 실기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이다”라며 “이제 밀실채용 하지 말고 공정하게 채용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가득권의 거센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 그러나 기득권 반발로 스리슬쩍 넘어가는 문제, 용기와 결단으로 끝내 해결하는 것이 이재명식 개혁”이라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다.

경정자 기자 / jongha@news.com

<당신의 발자취 따라, 사학 개혁, 이재명은 합니다>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공정채용’ 개혁에 나섰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의 전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8억 원이 오갔고 미리 문제나 답을 건네받은 13명만 합격했습니다.

자코지국한 사학 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입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어떤 것을 방지하면서 아무리 ‘공정’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사립학교 공정채용 협약’은 채용의 전 과정, 1차 서류부터, 면접, 수업 실기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밀실채용 하지 말고 공정하게 채용하자 것입니다.

사학 개혁은 민주정부의 발자취가 담긴 개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개혁입니다. 4기 민주정부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더 멀리,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경인중앙일보 2021년 7월 26일자 1면>

보도내용

이재명 “사학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

“노무현식 사학개혁, 용기와 결단으로 끝내 해결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사학 개혁은 민주정부의 발자취가 담긴 개혁,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개혁이다”라며 “4기 민주정부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더 멀리,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서 “경기도에서 ‘사립학교 공정채용’ 개혁에 나섰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사건의 전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18억 원이 오갔고 미리 문제나 답을 건네받은 13명만 합격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 지사는 “이것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아무리 ‘공정’을 외쳐봐야 소용없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립학교 공정채용 협약’은 채용의 전 과정, 1차 서류부터 면접, 수업 실기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식이다”며 “이제 밀실채용 하지 말고 공정하게 채용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 그러나 기득권 반발로 스리슬쩍 넘어가는

문제, 용기와 결단으로 끝끝내 해결하는 것이 이재명식 개혁”이라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다.

경인종합일보

이재명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 간곡히 요청”
“전진 위한 양보 아닌 개혁 의지 후퇴”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에 대해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 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은 늘 국정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라며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빛을 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 잡고 민주당에 투표했고 지

지를 호소해주신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지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님들께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한준 기자/janghnews.com
(24.1~10.0cm)

<경인종합일보 2021년 7월 27일자 1면>

☞ 보도내용

이재명 “법사위 포기할 이유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 간곡히 요청”
“전진 위한 양보 아닌 개혁 의지 후퇴”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에 대해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

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 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일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은 늘 국정

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라며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정도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빛을 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더 커질수록 한국사회의 개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들 손 잡고 민주당에 투표했고 지지를 호소해주신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구 체계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것인데, 상정보류 등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처럼 불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님들께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5
연론사	주식회사 팬그리고자유(사건의내막)
심의대상	사건의내막 제1140호 8월 15일자 3면 「후보 역량·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 통해 국민께 희망 드려야」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긴급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회견문 전문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기자회견문 등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중도선언문(번역)

후보 역량·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 통해 국민께 희망 드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8월8일 기자회견을 통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아래는 이 회견문의 전문이다. (번역자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우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광풍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우리 당 상임고문단에서 당 지도부를 만나 네거티브 광풍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전하시면서 정책 경쟁으로 국민께 감동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집안싸움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무엇보다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7정보결심거 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희망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경선보다 중요한 본선 승리를 위해 네거티브 공세에도 반격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흑색선전에 가까운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서 진심에 기초한 분례 제

**민주당 대선 경선 목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있는 민주당 창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인 이름 앞에 늘 한뼘 한마음”**

기를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 보시기에 불완전하신 것 같습니다. 당원들중지 여러분! 민주당 대선 경선의 목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당 창출입니다. 이 정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경선은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민생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후보의 역량과 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모든 후보와 당원들이 단단한 월팀이 되어 본선 승리를 일궈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은 원팀 정신의 보편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우리는 다시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인 이름 앞에 늘 한뼘 한마음이었습니다.

자부터 나서겠습니다. 동지에게 상처를 주고 당에 실망을 키우는 네거티브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여 당과 후보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 당 후보님들께 캠프 상황실장 등 직렬한 수준의 상시 소통채널 구성을 제안합니다. 후보 간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론이 아닌 캠프 간 소통채널에서

먼저 확인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타 후보 측이 소통채널 개설에 응하지 않더라도 저와 관련된 어떤 의문도 우리 캠프 상황실장에게 질의하면 모두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이나 의혹제기를 범하지 하위사실 유포는 민주당의를 훼손하는 중대행위이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재명은 하였습니다.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4기 민주당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단께 끝까지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내막 2021년 8월 15일자 3면>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중단선언문 <전문>

후보 역량 · 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 통해 국민께 희망 드려야

민주당 대선 경선 목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잇는 민주정부 창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름 앞에 늘 한뜻 한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8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아래는 이 회견문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입니다. 우리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
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우리 당 상임고문단께서 당 지도
부를 만나 네거티브 공방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전하시면서 정책 경쟁으로 국민께 감동을 드
려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
민들께서도 실망감을 비치고 계십니다. 지역
순회 중에 “민주당이 집안싸움 너무 심하게 한
다”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국민
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후보
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송
구합니다.

무엇보다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
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
을 되돌리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새 희망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경선보다
중요한 본선 승리를 위해 네거티브 공세에도
반격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흑색선전에 가
까운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조치로서 진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를 했
지만 이마저도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당 대선 경선의 목표
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
주정부 창출입니다. 이 점은 누구도 이견이 없
을 것입니다. 경선은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다시 맡겨
도 좋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어야 합
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민생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후보의 역량과 정책에 대한 치열한
상호검증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
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모든 후보와
당원들이 단단한 원팀이 되어 본선 승리를 일
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은 원팀 정신의 모범
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자 저를 비롯한 경선 후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로 하나
가 되었고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도 문재인
후보로 뭉쳤습니다.

저는 선거법 제약을 받는 성남시장 신분이
라서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이재명 캠프 구성
원 모두 선대위에 합류했고, 제 아내도 김정숙
여사님을 모시고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최

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름 앞에 늘 한뜻한마음이었습니다.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동지에게 상처를 주고 당에 실망을 키우는 네거티브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당과 후보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 당 후보님께 캠프 상황실장 등 적절한 수준의 상시 소통채널 구성을 제안합니다. 후보 간의 신상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론이 아닌 캠프 간 소통채널에서 먼저 확인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타후보 측이 소통채널 개설에 응하지 않더라도 저와 관련된 어떤 의문도 우리 캠프 상황실장에게 질의하면 모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이나 의혹제기를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행위이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없이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답게 끝까지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8

언론사

경북도민일보 주식회사(경북도민일보)

심의대상

경북도민일보 9월 27일자 15면 「개그정치를 막으려면」 제하의 기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만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거나,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외부 기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도민일보

2021년 9월 27일
15면 (보좌기2인)

개그정치를 막으려면

寄稿



김상진
세경대학교
법학박사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없이 "그렇다"라고 답한다.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고 다시 묻는다면 답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필자의 답은 주사와 세력에 또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전의 정채성이 자유민주주의와 건강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위선, 그리고 독선을 배격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동안 보수정당의 지리멸렬로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1대 총선 등 선거에서 연패하면서 좌파 20년 집권, 영구집권은 나올 정도로 야권에 기

재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좌파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조국사건은 정국의 변곡점이었다. 집권세력은 조국수호로 맞섰다.

그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윤석열 검찰을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 압박, 압박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불법행위를 수사하였다.

그 결과 드루킹과 경남지사의 불법선거가 밝혀졌고, 충남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여비서 성추문 사건으로 민주당 좌파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미애와 박법계로 이어진 전횡적 법무부장관의 독선은 검찰을 정권의 주구(走狗)로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자유우파, 보수진영의 단결과 중도층의 우클릭, 일부 좌파진보 인사들의 이탈로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지금 대선 후보 경선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느닷없이 조국수사 과잉을 문제 삼는 홍준표 후보는 대체 무슨 이유인가? 민주당정권에서 그렇게도 조국수사를 방해했던 데 민

주당 사람이란 말인가? 어이없게도 더욱 아닌 야권 대선후보가 야권 주장을 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는 더 나아가 집권시 민주당인사를 국무총리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국민의 힘 대선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노리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한 윤석열 후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상징으로 비치는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본선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여겨서인지 일방적으로 지지를 몰아주는 것이다. 마침내 국민의 힘 경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하는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언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개그이다. 이러한 왜곡된 경선결과를 막기 위해 경선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했으나 이미 지난 일이다.

그래서 향후 2차 컷오프와 최종 후보선출 과정에서는 역선택이라는 불합리성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지지자들은 말로만 지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국민의 힘 당원이 되자. 그리하여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선출에 적극 참여하자. 이미 당원이려면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로 지지를 모

으라고 감히 제안한다.

우리는 야권 후보를 위하여 국민의 힘 당원이 되어 우파보수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내야 하는 숙명 앞에 놓여 있다. 실제 투표에서 유효표로 연결될 수 없는 역선택과 같은 정치개그 늪으로 진정한 자유우파 후보를 제외시키려는 집권여당의 전략에 넘어가는 안 된다. 이것이 자유우파 국민이 '국민의 힘' 당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윤석열 후보는 온갖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뜻심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초치얼려하는 후보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대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본선과 가족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불합리한 처사이다.

정치세력 간 경쟁 중에 일방적으로 수사나 고소나 고발이니 하는 정치탄압에 국민들은 서상할 뿐이다. 물론 후보자 겸종의 칼날은 언제나 선명하고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는 말에 참된 후보로서의 진심이 묻어난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플라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2.9*15.3cm)



개정치체를 막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없이 “그렇다”라고 답한다.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느냐?”고 다시 묻는다면 답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필자의 답은 주사와 세력에게 또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건강한 시장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위선, 그리고 독선을 배격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동안 보수정당의 지리멸렬로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1대 총선 등 선거에서 연패하면서 좌파 20년 집권, 영구집권론이 나올 정도로 야권에게 미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좌파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조국사건은 정국의 변곡점이었다. 집권 세력은 조국수호로 맞섰다.

그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 검찰을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 핍박, 겁박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불법행위를 수사하였다.

그 결과 드루킹과 경남지사의 불법선거가 밝혀졌고, 충남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의 여비서 성추문 사건으로 민주당 좌파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미애와 박범계로 이어진 전현직 법무부장

관의 독선은 검찰을 정권의 주구(走狗)로 만들 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자유우파, 보수진영의 단결과 중도층의 우클릭, 일부 좌파진보 인사들의 이탈로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지금 대선후보 경선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느닷없이 조국수사 과잉을 문제 삼는 홍준표 후보는 대체 무슨 이유인가? 민주당정권에서 그렇게도 조국수사를 방해했는데 민주당 사람이란 말인가? 어이없게도 다른 아닌 야권 대선후보가 이런 주장을 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는 더 나아가 집권시 민주당인사를 국무총리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국민의 힘 대선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노리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한 윤석열 후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상징으로 비치는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본선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여겨서인지 일방적으로 지지를 몰아주는 것이다. 마침내 국민의 힘 경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하는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전언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개그이다.

이러한 왜곡된 경선결과를 막기 위해 경선물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했으나 이미 지난 일이다.

그래서 향후 2차 컷오프와 최종 후보선출과

정에서는 역선택이라는 불합리성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지지자들은 말로만 지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국민의 힘 당원이 되자. 그리하여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선출에 적극 참여하자. 이미 당원이라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로 지지를 모으자고 감히 제안한다.

우리는 야권 후보를 위하여 국민의 힘 당원이 되어 우파보수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내야하는 숙명 앞에 놓여 있다. 실제 투표에서 유효표로 연결될 수 없는 역선택과 같은 정치개그 놀음으로 진정한 자유우파 후보를 제외시키려는 집권여당의 전략에 넘어가는 안 된다. 이것이 자유우파 국민이 ‘국민의 힘’ 당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윤석열 후보는 온갖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초지일관

하는 후보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대권경쟁이 치열한 이때 본인과 가족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불량한 처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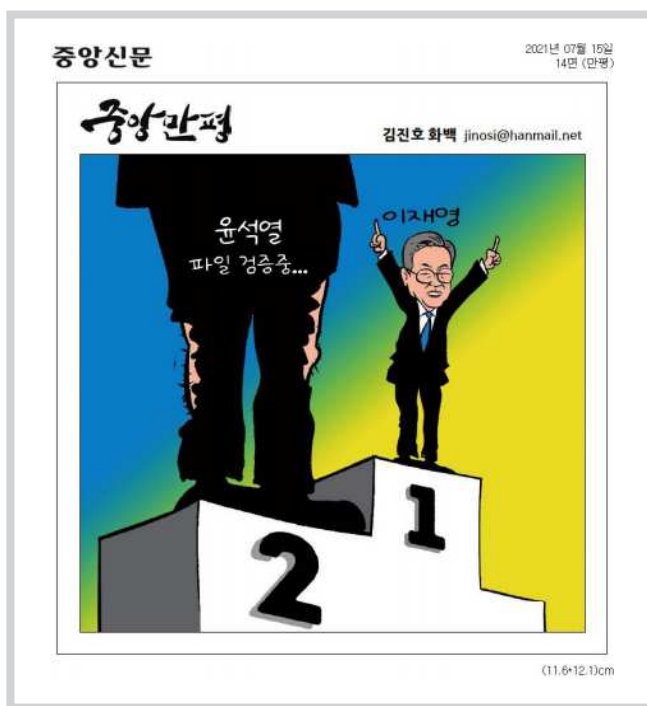
정치세력 간 경쟁 중에 일방적으로 수사니 고소니 고발이니 하는 정치탄압에 국민들은 식상할 뿐이다. 물론 후보자 검증의 칼날은 언제나 선명하고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는 말에 참된 후보로서의 진심이 묻어난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플라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10
언론사	주식회사 중앙신문(중앙신문)
심의대상	중앙신문 7월 15일자 14면 「윤석열 파일 검증 중...」만평 외 19건 [별첨] '심의대상기사 목록' 참조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만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거나, 여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만평을 반복하여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과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0조(사진게재)제1호·제2호·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심의대상기사 목록'

No.	보도일자	지면	제목
1	7월 15일	14	윤석열 파일 검증 중...
2	7월 20일	"	책임이 크신 분이 무슨 대선...?!
3	7월 23일	"	차기 이재명 정부 청년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
4	8월 4일	"	100% 재난지원금도 마음대로 못하면 그게 지방분권이야? 말로만...
5	8월 6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금메달
6	8월 10일	"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했는데...
7	8월 13일	"	이낙연
8	8월 19일	"	이낙연과 황교익 대권 경쟁?!
9	8월 20일	"	상황이...
10	8월 24일	"	역쉬!
11	8월 25일	"	대세...
12	9월 1일	"	민주당 대권 경선
13	9월 2일	"	집중하니 힘이 더 생깁니다!
14	9월 6일	"	이렇게?!
15	9월 8일	"	어쩌나~ 국민은 경기도 차베스를 좋아하는데...
16	9월 14일	"	주거문제가 해결 안되면 말짱 두루묵!
17	9월 15일	"	김종인의 파리 발언의 뜻?!
18	9월 16일	"	사퇴쇼가 아니라면 타후보에게 공직사퇴 요구는 절대 안돼!!
19	9월 17일	"	나머지 민주당 국회의원 대권후보들...
20	9월 27일	"	흥행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중앙신문 2021년 7월 15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7월 20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7월 23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4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6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10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13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19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20일자 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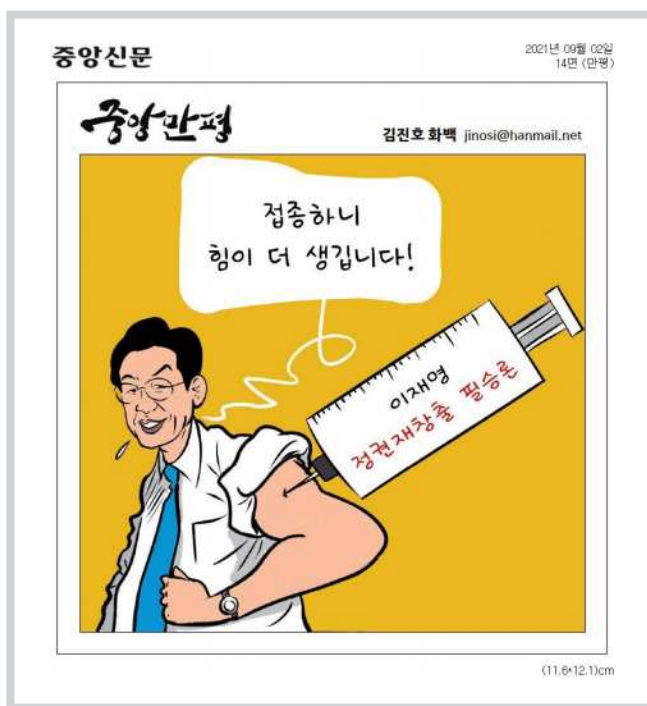
〈중앙신문 2021년 8월 24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8월 25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1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2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6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8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14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15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16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17일자 14면〉



〈중앙신문 2021년 9월 27일자 14면〉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12
언론사	주식회사 헤럴드(헤럴드경제)
심의대상	헤럴드경제 9월 3일자 1면 「“대선, 결국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전문가 10인 전망」 및 3면 「“李 7 · 李 1 vs 尹 6 · 洪 2 · 劉 1 … 대선 승리는 민주당 우세”」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평가단 선정기준 등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한 정치전문가 10인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별 전망을 합산하고, 그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압도적’, ‘우세’ 등과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주요 정당의 최종 후보와 승리 정당 등을 예측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1호 · 제7호 ·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선, 결국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전문가 10인 전망

“각각 여야후보로” 예측 대다수

제 21대 대통령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학 교수와 평론가 등 유력 정치전문가 10명에게 전망을 물었더니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여야 후보로 선출돼 대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었다.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보는냐는 질문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치전문가들의 예상은 여당의 승리 가능성쪽에 더 기울었다.

▶관련기사 3면

헤럴드경제가 국내 정치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최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모두 5명이 ‘이재명-윤석열’

쌍(雙)을 내년 대선 최종 대결 후보로 꼽았다. ‘이재명-홍준표’ ‘이재명-유승민’ ‘이낙연-홍준표’가 각각 1명씩으로 ‘소수의견’이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직 재직시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난 2일 이전에 이뤄졌다.

여야별로 각각 보면 민주당에서 이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7명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를 꼽은 전문가는 1명, 무응답은 2명이었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선 3일 현재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고, 첫 투표 결과 1위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상위 2명끼리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전문가 10명 중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고 보

는 이는 4명,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명이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결선투표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그것이 대세를 뒤집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10명 중 6명이었다. 2명은 홍준표 의원을, 1명은 유승민 전 의원을 꼽았으며 무응답은 1명이었다. 이번 전문가 대선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 2일부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 논란은 향후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대선 승리 정당 전망에선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응답자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은 1명, 무응답은 4명이었다. **홍석희 기자**

(16.2*12.0)cm

<헤럴드경제 2021년 9월 3일자 1면>



“대선, 결국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전문가 10인 전망

“각각 여야 후보로” 예측 대다수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학 교수와 평론가 등 유력 정치전문가 10명에게 전망을 물었더니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여야 후보로 선출돼 대결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었다.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치전문가들의 예상은 여당의 승리 가능성쪽에 더 기울었다.

헤럴드경제가 국내 정치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최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모두 5명이 ‘이재명-윤석열’ 쌍(雙)을 내년 대선 최종 대결 후보로 꼽았다. ‘이재명-홍준표’ ‘이재명-유승민’ ‘이낙연-홍준표’가 각각 1명씩으로 ‘소수의견’이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직 재직시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난 2

일 이전에 이뤄졌다.

여야별로 각각 보면 민주당에서 이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7명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뽑은 전문가는 1명, 무응답은 2명이었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선 3일 현재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고, 첫 투표 결과 1위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상위 2명끼리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전문가 10명 중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 이는 4명,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명이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결선투표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그것이 대세를 뒤집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10명 중 6명이었다. 2명은 홍준표 의원을, 1명은 유승민 전 의원을 꼽았으며 무응답은 1명이었다. 이번 전문가 대선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 2일부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 논란은 향후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대선 승리 정당 전망에선 민주당이 이길 것이란 응답자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란 전망은 1명, 무응답은 4명이었다.

“李 7·李 1 vs 尹 6·洪 2·劉 1...대선 승리는 민주당 우세”

(이재명)

(이낙연)

(문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문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

[일러스트: 박지영]

전문가 10인 대선 전망

이름/과/대상	김우현 한양대 교수	김형준 중앙대 교수	박성영 정치전문가	박원대 국민대 교수	신철 한지대 교수	이준환 연세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이영 정치전문가	황태순 정치전문가	이영 국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망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출신 전망	무응답	0	X	O	O	무응답	X	X	O	무응답
국민의힘 후보 전망	홍준표	문석열	문석열	문석열	무응답	홍준표	유승민	문석열	문석열	문석열
윤석열 전망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국민의힘	무응답	민주당	무응답	무응답	민주당	무응답

(문우현, 김우현, 김형준, 김우현, 김형준, 김우현, 김형준, 김우현, 김형준, 김우현, 김형준)

각 당의 경선 결과가 진보당인 이재명 대선후보가 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될 경우, 이재명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출신 후보는 현재 이재명 19위, 이재명 경선지사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경선이 성공한다면 이재명의 고위 사주 시안이 불거지지 전 실시됐다. 대선 결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에 승리, 1명은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무응답은 4명이었다.

▶민주당 후보 이재명-10명 7명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라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7명이 이 지사를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인 경우 1명, 무응답은 2명이었다. 김형준 정치전문가는 “이 지사가 영남 후보에서 호남의 지지를 받아 지지세가 견고하다. 이 전 대표가 본 위기를 뒤엎으면 호남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었다. 본선 경쟁력도 이 지사가 강하다”고 말했다.

박성영 정치전문가는 “이 지사를 압도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춘 민주당 후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도 인물은 훌륭하다. 그러나 이 지사만큼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이 지사가 뛰어나다. 김부선이나 홍수 욱선은 변수가 안된다. 이미 과거에 다 제기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이낙연 후보가 자신이 왜 지도자가 돼야 하는지와 함께 국정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서 짚어 주어야 할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을 뒤바꾸는 힘은 이 지사가 아니라 이 전 총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환 연세대 교수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는 불안한 요인이 굉장히 많다. 영수 욱선을 한

현재 1위 후보가 각 당 대선후보 가능성

민주당은 이재명-국민의힘은 윤석열 경합

민주당 승리 5명-국민의힘 1명-기권 4명

3차대 변수 작아-여야 일대일 각축전 예상

것이 상당히 치명적이다. 이재명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이 본선 승리가능성을 본다면 이 지사를 따지지 못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100퍼센트 건국대난자원을 지금 한 것 역시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여야 면에서 불만이다”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홍준표도 불합-김형준명 지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후보가 지고 올라오고 있지만 영남 보수지층의 최대 관심사는 정권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후보냐”다. 정권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윤 전 총장을 보는 것”이라며 “보수층에서 보면 여전히 윤 전 총장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내다봤다.

황태순 정치전문가는 “결선 투표가 앞가에 국민의힘 경선은 변수가 제한적이다. 현재의 지지율대로 윤 전 총장이 무난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며 “당원위원들이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주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선후보에 이미 형세가 있다. 홍준표 후보가 젊은층과 호남에서 표가 나온다는데 이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놓고 여선파가 개입된 것이다. 최종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2명이었다. 김유은 한양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은 토론을 하면 갈수록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화제형 전 관사형으로 나뉘지만 직접 나와서 보니까 정말 ‘아니네’ 하는 인상이 강하게 있다. 전 김세환과도 전 검찰총장이 다 아셨을 말을 하고 본인이 할 줄 아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은 사회 사활하게 말하는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비록 국민의힘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윤석열 이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분석이다. 보수층의 최대 관심은 누가 정권교체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지금의 다른 사람이 이변이기에 윤석열로 ‘빨리’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결정적으로 토론을 발표해보면 비추면서 ‘토론을 두려워한다’는 인상이 되어 바뀔다. 세상만사에 토론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 유 전 의원의 포텐셜은 상당하다. 관건은 대중적인 호소력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에서 호소력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차지하려면 민주당처럼 경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본말이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신변을 가자

“李7·李1vs尹6·洪2·劉1…대선 승리는 민주당 우세”

현재 1위 후보가 각 당 대선 후보 가능성
민주당은 이재명·국민의힘은 윤석열 전말
민주당 승리 5명·국민의힘 1명…기권 4명
3지대 변수 적어…여야 일대일 각축전 예상

각 당의 ‘경선 전쟁’이 진행 중인 20대 대통령선거의 큰 틀이 굳어지고 있다는 전망 집계가 나왔다. 현재의 지지율 1위 후보가 최종 각 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는 현재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 불거지기 전 실시됐다. 대선 결과 전망 질문엔 전문가 10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승리’를, 1명은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무응답은 4명이었다.

▶**민주 후보 이재명…10명 중 7명**=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10명 가운데 7명이 이 지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낙연 전 대표가 될 것이란 응답은 1명, 무응답은 2명이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 지사가 영남 후보면서 호남의 지지를 받아 지지세가 견고하다. 이 전 대표가 분위

기를 뒤집으려면 호남에서 지지율을 앞서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본선 경쟁력도 이 지사가 강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를 압도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다른 민주당 후보가 갖기가 어렵다. 이 전 대표도 인물은 출중하다. 그러나 이 지사만큼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이 지사가 ‘위’다. 김부선이나 형수 욕설은 변수가 안 된다. 이미 과거에 다 제기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이낙연 후보가 자신이 왜 지도자가 돼야 하는지와 함께 국정 청사진을 국민들 피부에 딱딱 꽂히게 설득을 해야 판을 흔들 수 있다. 판을 뒤바꾸는 힘은 이 지사가 아니라 이 전 총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는 불안한 요인이 굉장히 많다. 형수 욕설을 한 것이 상당히 치명적이다. 여성 표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이 본선 승리 가능성을 본다면 이 지사를 밀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 역시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여러 면에서 ‘불안하다’는 인식이 유권자 사이에 서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홍준표도 물망**=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정통 보수지지층의 최대 관심사는 ‘정권교체할 수 있는 사

람이 누구냐다. ‘누가 후보냐’보다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윤 전 총장을 꼽는 것”이라며 “보수층에서 보면 여전히 윤 전 총장 지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내다봤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결선투표가 없기에 국민의힘 경선은 변수가 제한적이다. 현재의 지지율대로 윤 전 총장이 무난하게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협위원장들이 윤 전 총장 곁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세론’이 이미 형성돼 있다.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과 호남에서 표가 나온다는데 이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놓고 역선택이 개입된 것이다. 최종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주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2명이었다. 김유은 한양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은 토론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나왔지만 직접 나와서 보니까 점점 ‘아닌데’ 하는 인상이 강해지고 있다. 전 감사원장과 전 검찰총장이 다 이상한 말을 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은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홍

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윤석열, 이분이 워낙 콘텐츠가 없는 분이다. 보수층의 최대 관심은 ‘누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이기에 윤석열로 ‘묻지 마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결정적으로 토론회를 발표회로 바꾸면서 ‘토론을 두려워한다’는 인상이 돼버렸다. 세상천지에 토론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의 포텐셜은 상당하다. 관건은 대중적인 호소력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에서 ‘호소력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차지하려면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처럼 경쟁을 세계 불여야 하는데 지금 분열이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14
언론사	주식회사 투데이충남(투데이충남)
심의대상	투데이충남 10월 14일자 9면 「대선 판세와 주역 점괘」 제하의 기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다른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고

대선 판세와 주역 점괘

김종호
호서대 교수, 법학박사

여야는 지금 대장동을 사이에 두고 백척간두 대회를 벌이는 중이다. 악신(惡神) 아수라와 선신(善神) 제석천의 아수라장 싸움터에서 과연 누가 웃을까? 패를 살피건대, 이재명은 뇌산소와(雷山小過)이고 지화명이(地火明夷)이나, 윤석열은 뇌택귀매(雷澤歸妹)의 형국이다.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일은 한번 지나가면 무엇으로도 바로잡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미 결론이 나고 결정이 된 일은 어떤 경우라도 변경시킬 수 없으니 이재명은 뇌산소과요, 밝음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득세하니 지화명이 아닌가?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는데, 밑에는 연못이 있다. 용이 연못에서 승천하는 형국이니 윤석열은 뇌택귀매의 패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힘 내지 권력감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한 사람의 현명함이 다수의 심리를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여췌든 선거에 나선 사람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잘 간파해야 한다.

사람들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심리는 여전히 위력을 떨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대개문(문파)과 같은 특정 정파 사람들의 집합은 흔히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는 거의 적응하지 못한다. 반면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사에는 번개같이 움직인다. 지금도 매일 쏟아져 나온 윤석열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충분히 그런 집착을 할 수 있다. 상식적인 비율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이버폭력 수준의 댓글과 '종아요'가 달린다. 여론 조작을 위한 키크랩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심증을 떨칠 수가 없다.

누구나 고립된 개인은 반사회적 행동을 자제할 능력을 보유한 반면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런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른바 집단 히스테리를 보인 패거리 문파를 보면 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파가 북돋는 것은 좌파 언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충동들이다. 윤석열을 비난하는 좌파언론의 기사에 문파는 그들을 자극한 원인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잔인하게 활귀고 영웅이라도 되는 양 우물거린다. 참으로 비겁하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극의 원인들은 아주 변화무쌍하며 윤석열에 대한 모든 반응은 이성을 잃은 거의 발광수준이다.

문파는 언제나 그런 자극원들에 이유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변덕스럽다. 야만인과 같은 문파는 자신들의 욕망의 실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애나 간섭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과민반응하고 의심할 나위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흔히 그렇듯 암시에 걸린 모든 개인은 일단 두뇌로 진입한 사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질러 놓고 본다. 논리적 연관성은 필요 없다. 감염력이 작용한 결과 집단화된 모든 개인이 사실을 객관하는 방식도 같은 모양새를 띠기 마련이다. 집단화된 문파의 개인들 중 한 명이 먼저 진실을 객관하는 순간 감염력을 지닌 암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른바 좌표 찍기가 그것인데 조국이나 김여준 같은 인물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양인이든 무지한 자든 누구나 문파에 합세하는 순간부터 객관적인 관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암시의 출발점은 언제나 교주의 막연한 기억이나 회상이 만든 착각과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진단이 유발하는 감염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전염을 피하려면 관련 사건을 순수한 상상력의 소신들로 고찰하면 안 된다. 가짜뉴스는 잘못 관찰한 사실에 대한 공상과 그것들을 관찰하여 얻은 주관적 설명들로 버무린 희망사항들이다.

문파는 분화하여 일부는 이재명파가 되었다. 명심하라. 이재명은 결코 자유로운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빈민의 친구였던 나폴레옹이 피에 굶주린 독재자로 탈바꿈하여 권력을 찬탈하고, 자유를 타락해 가면서 오직 자신의 야망을 증폭시키기 위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물로 변해가듯 이재명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권력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윤석열을 대항마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17.7×25.9)cm



대선 판세와 주역 접매

여야는 지금 대장동을 사이에 두고 백척간두 대회를 벌이는 중이다. 악신(惡神) 이수라와 선신(善神) 제석천의 이수라장 싸움터에서 과연 누가 웃을까? 패를 살피건대, 이재명은 뇌산소과(雷山小過)이고 지화명이(地火明夷)이나, 윤석열은 뇌택귀매(雷澤歸妹)의 형국이다.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일은 한번 지나가면 무엇으로도 바로잡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미 결론이 나고 결정이 된 일은 어떤 경우라도 변경시킬 수 없으니 이재명은 뇌산소과요, 밝음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득세하니 지화명이 아닌가?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는데, 밑에는 연못이 있다. 용이 연못에서 승천하는 형국이니 윤석열은 뇌택귀매의 패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힘 내지 권력감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한 사람의 현명함이 다수의 심리를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나선 사람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잘 간파해야 한다. 사람들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심리는 여전히 위력을 떨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대개문(문과)과 같은 특정 정파 사람들의 집합은 흔히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는 거의 적용하지 못한다. 반면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사에는 번개같이 움직인다. 지금도 매일 쏟아져 나온 윤석열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충분히 그런 집작을

할 수 있다. 상식적인 비율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이버폭력 수준의 댓글과 '좋아요'가 달린다. 여론 조작을 위한 킹크랩 프로그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심증을 떨칠 수가 없다.

누구나 고립된 개인은 반사적 행동을 자제할 능력을 보유한 반면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런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른바 집단 히스테리를 보인 패거리 문파를 보면 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파가 복종하는 것은 좌파 언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충동들이다. 윤석열을 비난하는 좌파언론의 기사에 문파는 그들을 자극한 원인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잔인하게 할퀴고 영웅이라도 되는 양 우쭐거린다. 참으로 비겁하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극의 원인들은 아주 변화무쌍하며 윤석열에 대한 모든 반응은 이성을 잃은 거의 발광수준이다.

문파는 언제나 그런 자극원들에 이유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변덕스럽다. 야만인과 같은 문파는 자신들의 욕망의 실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애나 간섭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과민반응하고 의심할 나위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흔히 그렇듯 암시에 걸린 모든 개인은 일단 두뇌로 진입한 사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질러 놓고 본다. 논리적 연관성은 필요 없다. 감염력이 작용한 결과 집단화된 모든 개인이 사실을 곡해하는 방식도 같은 모양새를 띠기 마련이다. 집단화된 문파의 개인들 중 한 명이 먼저 진실을 곡해하는

순간 감염력을 지닌 암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른바 좌표 찍기가 그것인데 조국이나 김어준 같은 인물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양인이든 무지한 자든 누구나 문과에 합세하는 순간부터 객관적인 관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암시의 출발점은 언제나 교주의 막연한 기억이나 회상이 만든 착각과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진단이 유발하는 감염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전염을 피하려면 관련 사건을 순수한 상상력의 소신들로 고찰하면 안 된다. 가짜 뉴스는 잘못 관찰한 사실에 대한 공상과 그것

들을 관찰하여 얻은 주관적 설명들로 버무린 희망사항들이다.

문과는 분화하여 일부는 이재명파가 되었다. 명심하라. 이재명은 결코 자유로운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빈민의 친구였던 나폴레옹이 피에 굶주린 독재자로 탈바꿈하여 권력을 찬탈하고, 자유를 타락해가면서 오직 자신의 야망을 증폭시키기 위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물로 변해가듯 이재명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권력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윤석열을 대항마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15
언론사	주식회사 경상일보(경상일보)
심의대상	경상일보 10월 19일자 4면 「이재명, 양자대결서 윤석열·홍준표에 다 밀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제목에서 특정 후보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상일보

이재명, 양자대결서 윤석열·홍준표에 다 밀려

KSOI 대선 지지도 조사
 尹 37.1% vs 李 35.4%
 洪 35.9% vs 李 34.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에게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5일~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7.1%로 35.4%의 지지율을 보인 이 후보를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섰다. 지난주에 비해 이 후보가 0.4%p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3.9%p 상승했다.

이 후보와 홍 의원간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34.6%, 홍 의원은 35.9%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1.3%p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0.6%p 하락한 반면, 홍 의원은 2.9%p 상승했다.

경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을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32.9%로 이 후보(32.0%)를 근소하게 앞서며 초박빙의 접전을 벌였다. 안 대표는 3.5%였다.

윤 전 총장 대신 홍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가정했을 경우엔 이 후보가 31.5%의 지지율로 홍 의원(27.5%)을 앞섰다. 심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범보수권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 29.1%, 홍 의원 28.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1.7%,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 4.8%, 안 대표 3.4% 등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모두 지난주보다 각각 3.6%p, 1.0%p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이 41%로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5일 전국 18세 이상 2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전보다 2.0%p 오른 41.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23.1·8.3cm)

2021년 10월 19일
 04면 (정치)

<경상일보 2021년 10월 19일자 4면>



이재명, 양자대결서 윤석열 · 홍준표에 다 밀려

KSOI 대선 지지도 조사

尹 37.1% vs 李 35.4%

洪 35.9% vs 李 34.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에게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5일~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7.1%로 35.4%의 지지율을 보인 이 후보를 오차범위(± 3.1%p) 내에서 앞섰다. 지난주에 비해 이 후보가 0.4%p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3.9%p 상승했다.

이 후보와 홍 의원간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34.6%, 홍 의원은 35.9%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1.3%p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0.6%p 하락한 반면, 홍 의원은 2.9%p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

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을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32.9%로 이 후보(32.0%)를 근소하게 앞서며 초박빙의 접전을 벌였다. 안 대표는 3.5%였다.

윤 전 총장 대신 홍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가정했을 경우엔 이 후보가 31.5%의 지지율로 홍 의원(27.5%)을 앞섰다. 심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범보수권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 29.1%, 홍 의원 28.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1.7%,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 4.8%, 안 대표 3.4% 등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모두 지난주보다 각각 3.6%p, 1.0%p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이 41%로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5일 전국 18세 이상 2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전보다 2.0%p 오른 41.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준표만 이재명 앞섰다…

양자대결 洪 45.1%, 李 40.6%

이 43.7%, 윤 40.6% 접전…3.1%p 앞서
보수 야권 적합도 조사 洪 27.3%, 윤 26.9%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후보와의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26일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 23~24일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와 홍 의원의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40.6%, 홍 의원은 45.1%로 홍 의원이 오차범위 내(4.5%p)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주차 조사 대비 이 후보는 2.0%p 상승한 반면, 홍 의원은 2.9%p 하락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이 후보는 40~50대 연령층,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고, 홍 의원은 남성, 20~30대, 60대 이상 연령층, 서울, 영남권(TK/PK)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77.4%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5.4%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잘 모름)에서는 홍 의원(40.9%)이 이 후보(32.2%)보다 8.7%p 더 높은 지지를 받으며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이 후보와 윤 전 총장 간 가상대결에선 이 후보 43.7%, 윤 전 총장 40.6%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3.1%p)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주차 조사 대비 윤 전 총장은 5.0%p 하락하고 이 후보는 4.1%p 상승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이 후보가 윤 전 총장을 누르고 우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남성, 30~40대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고,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 연령층, 영남권(TK/PK)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83.7%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5.1%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후보(41.5%)가 윤 전 총장(24.1%)보다 17.4%p 더 높은 지지를 받으며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 간 가상대결에선 이 후보 38.9%, 유 전 의원 36.1%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2.9%p)에서 유 전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여성, 40대 이상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권에서 우세를 보였고, 유 후보는 20~30대 연령층, 강원/제주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73.6%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3.3%가 유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유 전 의원(32.3%)이 이 후보(27.5%)보다 4.8%p차이로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40.2%, 원 전 지사 38.6%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1.6%p)에서 원 전 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40~50대 연령층, 경기/인천,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고 원 전 지사는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 서울, 대구/경북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78.1%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7.4%가 원 전 지사를 응원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후보 32.6%, 원 전 지사 32.3%로 두 후보 간 지지세가 팽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 의원(27.3%)과 윤 전 총장(26.9%)가 선두권이었고 이어서 유 전 의원(15.7%), 원 전 지사(5.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9%)순으로 나

타났다.(없음/잘모름 13.9%)

지난 10월2주차 조사 대비 홍 의원(-0.8%p)보다 윤 전 총장(-2.1%p)이 더 큰 하락 폭을 보이며 두 후보 간 순위가 엇갈렸다.

홍 의원은 남성, 20~30대 연령층에서 우세를 보인 반면, 윤 전 총장은 여성,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4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홍 의원 36.7%, 유 전 의원 5.6%, 원 전 지사 4.5%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원지코리아컨설팅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17
언론사	주식회사 전국매일신문(전국매일신문)
심의대상	전국매일신문 10월 15일자 4면 「이재명, 與野 4자 가상대결서 모두 앞섰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특정 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국매일

2021년 10월 15일
04면 (정치)

이재명, 與野 4자 가상대결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34.0% · 윤석열 33.7% · 심상정 4.2% · 안철수 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등과의 4자 가상대결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2027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 윤 전 총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4자 가상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모두 앞섰다.

이 후보 34.0%, 윤 전 총장 33.7%, 심 후보 4.2%, 안 대표 4.0%의 지지율을 보였다.

윤 전 총장 대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가상 4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32.4%, 홍 의원 27.2%, 안 대표 5.1%, 심 후보 5.0%였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 의원 25.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2.5%, 안 대표 4.2%, 원희룡 전 제주지사 3.8%, 김동연 전 총리 2.1%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18.2×9.4)cm

이재명, 與野 4자 가상대결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34.0% · 윤석열 33.7% ·
심상정 4.2% · 안철수 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등과의 4자 가상대결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2027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 윤 전 총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4자 가상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모두 앞섰다.

이 후보 34.0%, 윤 전 총장 33.7%, 심 후보 4.2%, 안 대표 4.0%의 지지율을 보였다.

윤 전 총장 대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가상 4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32.4%, 홍 의원 27.2%, 안 대표 5.1%, 심 후보 5.0%였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 의원 25.5%,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2.5%, 안 대표 4.2%, 원희룡 전 제주지사 3.8%, 김동연 전 총리 2.1%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2\text{P}$ 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18
언론사	일간대구신문 주식회사(대구신문)
심의대상	대구신문 10월 12일자 22면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천기와 미래운」, 11월 9일자 22면 「제 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천운」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판세를 분석하며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운세를 통해 후보자들의 당락을 예측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반복하여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천기와 미래운

류동학의 세상읽기

류동학
해당학술원 원장



이재명후보가 대장동 특혜의혹에서도 경선에 서 2위 이낙연 전 대표의 39.14%(56만392표)를 크게 따돌리고 50.29%(71만9905표)로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다만 3차 국민-일당연합 투표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로 28.30%를 얻은 이 지사를 더블스코어 넘게 이겨 무효표의 정통성 시비가 불가피하고 원팀 구축에 먹구름이 끼고 말았다. 앞으로의 행보도 가시밭길에 예상된다.

그는 경북 안동시에서 1963년 양력12월8일(음력10월23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시는 그동안 필자도 병술시(丙戌時, 19시 30분~21시30분)로 보아 왔으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오후 15시에 서 16시에 태어났다고 이동형 티비8월18일자 유튜브방송에서 본인의 일로 언급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그의 타고난 천기로 그의 명과 미래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주는 대살이 지난 추위가 심하고 삭풍이 물어치는 환경인 중동(中冬)이 지난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한다. 자평명리학의 3대 간법의 하나인 격국론(格局論)에 의하면 그의 격국은 ②자수(子水, 위간) ①음목(乙木, 일간)이 ⑤계수(癸水, 편인)로 투출하여 투출편인격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삭풍이 물어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인동초나 잡초와 같은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한 ①음목(乙木)이다. ①음목(乙木) 일간은 치밀성과 수치계산이 정확하여 현실적용력이 탁월하다. ①음목(乙木)일간인정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약하고 제도권의 교육적인 혜택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그는 정규과정은 초졸로 소년공시절 중졸·고졸의 검정고시로 중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천기적인 특징은 십성상 편인(偏印)의 특징이다. 편인은 직관력과 눈치가 빠르고 아이디어와 기획력 및 시대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기회 포착이 뛰어나고 집요하게 하점파악에 탁월하다. 부정적으로는 편인은 유량이 조화롭지 못해 표리가 부동하고 진실을 위장한 이중성격으로 기만, 위선, 의심, 배신, 남탕 등의 성정과 일차적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다.

②자수(子水)는 자오묘유(子午卯酉)의 왕지(旺地)의 하나로 고집이 강하고, 배락이 쳐도 눈 하나 깜박거리지 않을 만큼의 기세가 있다. 다만 활력수인 ②자수(子水)가 ④묘목(卯木)과 자묘형하고 ③유금(酉金)과 자유파(子酉破)하여 활력수가 파도가 발생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 속성과 인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수육설문제가 대표적이다. 자지가 자묘유(子午卯酉)의 도화살(桃花煞)이 강하여 이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가 2022년 3월9일 대선까지 남아야 할 작은 파도가 형수육설문제, 여배우와의 불륜스캔들이다.

이 사주의 특징은 을목이 년지의 ④묘목(卯木) 비견으로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고 손재(財)와 투기가 강한 ⑥갑목(甲木)갑제로 인하여 부귀를 공유하는 자기색력을 형성하고 파이더 기질이 대관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지의 ③유금(酉金) 편관은 권력의지의 상징으로 권모술수와 모험심이 대관하다. 사회적인 전투력이 강한 심상이 편관이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이자 심성은 생사의 ⑥미토(未土)편제(偏財)이다. 자평명리학은 계절의 조화를 이루는 조후운산을 특별법으로 보아 대운과 사람의 그릇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적용한다. 이 사주는 추위를 녹이는 건조한 생사에 미토(未土)의 지장간에 정화, 을목, 기토가 암장되어 이 사주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 미토 편재는 이성과 경영적인 마인드와 풍류심 및 일확천금의 재물창고이다. 이 사주의 대운은 2004년 42세 이후부터 10년간 기미(己未)대운으로 흘러 상당한 재산축적과 이성과의 인연이 좋은 시기였다. 2014년 10년간은 무오(戊午)대운의 정재대운으로 고정적인 수입창출이 좋고 사주에 강한 계수를 무제함(戊癸)으로 조절하여 현실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의 성남시장 재선과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시기이자 대장동개발시기와 맞물려 있는 시기이다. 을 산측년 무술월은 사주와 윤이 축술미(丑戌未) 삼형으로 인하여 이번 대장동특혜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라 그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동이후인 11월 초순이후 천기가 불리하고 특히 12월 경자월과 2022년 1월 산측년의 산측월은 그의 청와대행과 교도소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보사퇴라는 한국정치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무수저출신의 소년공의 상공신화는 어떤 결말을 맺을지 매우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사주	일주	월주	년주	
⑦계수(癸水) 편인	①음목(乙木) 일간	⑥갑목(甲木) 겁재	⑤계수(癸水) 편인	천간
⑧미토(未土) 편재	③유금(酉金) 편관	②자수(子水) 편인격	④묘목(卯木) 비견	지지
정음기(丁巳)		③임수(壬水) 정인(正印) 사령		지장간

(13.7~30.5cm)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천기와 미래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도 경선에서 2위 이낙연 전 대표의 39.14%(56만 392표)를 크게 따돌리고 50.29%(71만 9905표)로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다만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로 28.30%를 얻은 이 지사를 더블스코어 넘게 이겨 무효표의 정통성 시비가 불가피하고 원팀 구축에 먹구름이 끼고 말았다. 앞으로의 행보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그는 경북 안동시에서 1963년 양력 12월 8일(음력 10월 23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시는 그 동안 필자도 병술시(丙戌時, 19시 30분~21시 30분)로 보아 왔으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오후 15시에서 16시에 태어났다고 이동형 티비(8월 16일자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의 입으로 언급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그의 타고난 천기로 그의 명과 미래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주는 대설이 지난 추위가 심하고 삭풍이 몰아치는 환경인 중동(仲冬)이 지난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한다. 자평명리학의 3대 간법의 하나인 격국론(格局論)에 의하면 그의 격국은 ②자수(子水, 쥐달)월 ①을목(乙木)일간이 ⑤계수(癸水)편인으로 투출하여 투출편인격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삭풍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인동초나 잡초와 같은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한 ①을목(乙木)이다. ①을목(乙木)일간은 치밀성과 수치계산

이 정확하여 현실적응력이 탁월하다. ①을목(乙木)일간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약하고 제도권의 교육적인 혜택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그는 정규과정은 초졸로 소년공 시절 중졸, 고졸의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천기적인 특징은 십성상 편인(偏印)의 특징이다. 편인은 직관력과 눈치가 빠르고 아이디어와 기획력 및 시대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기회 포착이 뛰어나고 집요하게 허점과 약에 탁월하다. 부정적으로는 편인은 음양이 조화롭지 못해 표리가 부동하고 진실을 위장한 이중성격으로 기만, 위선, 의심, 배신, 남탓 등의 성정과 일차적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다.

②자수(子水)는 자오묘유(子午卯酉)의 왕지(旺地)의 하나로 고집이 강하고, 벼락이 쳐도 눈 하나 깜박거리지 않을 만큼의 기세가 있다. 다만 활력수인 ②자수(子水)가 ④묘목(卯木)과 자묘형하고 ③유금(酉金)과 자유파(子酉破)하여 활력수가 파도가 발생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 속성과 인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수 욕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지가 자묘유(子卯酉)의 도화살(桃花殺)이 강하여 이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가 2022년 3월 9일 대선까지 넘어야 할 작은 파도가 형수 욕설 문제, 여배우와의 불륜스캔들이다.

이 사주의 특징은 을목이 년지의 ④묘목(卯木)비견으로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고 손재(損財)와 투기가 강한 ⑥갑목(甲木)갑재로 인하여 부귀를 공유하는 자기세력을 형성하고

파이터 기질이 대단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지의 ③유금(酉金) 편관은 권력의지의 상징으로 권모술수와 모험심이 대단하다. 사회적인 전투력이 강한 십성이 편관이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이자 십성은 생시의 ⑧미토(未土)편재(偏財)이다. 자평명리학은 계절의 조화를 이루는 조후용신을 특별법으로 보아 대운과 사람의 그릇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적용한다. 이 사주는 추위를 녹이는 건조한 생시에 미토(未土)의 지장간에 정화, 을목, 기토가 암장되어 이 사주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 미토 편재는 이성과 경영적인 마인드와 풍류심 및 일확천금의 재물창고이다. 이 사주의 대운은 2004년 42세 이후부터 10년간 기미(己未)대운으로 흘러 상당한 재산축적과 이성과의 인연이 좋은 시기였다. 2014년 10년간은 무오(戊午)대운의 정재대운으로 고정적인 수입창출이

좋고 사주에 강한 계수를 무계합(戊癸合)으로 조절하여 현실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그의 성남시장 재선과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된 시기이자 대장동 개발시기와 맞물려 있는 시기이다. 을 신축년 무술월은 사주와 운이 축술미(丑戌未) 삼형으로 인하여 이번 대장동 특혜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라 그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입동 이후인 11월 초순 이후 천기가 불리하고 특히 12월 경자월과 2022년 1월 신축년의 신축월은 그의 청와대행과 교도소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보 사퇴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무수저 출신의 소년공의 성공신화는 어떤 결말을 맺을지 매우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제 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천운

류동학의 세상읽기

류동학
해명학술원 원장

윤석열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의 흥분표후보를 따돌리고 제 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윤석열후보는 '재배정산 칼집'에서 '조국 수사'와 '추·윤 갈등' 사태로 반 문재인세력의 구심점으로 정치경험 없이 최단 기간 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또한 전과 4범의 이재명후보를 잡아 검사출신 대통령이 될지 관전 포인트이다.

윤후보가 국민들에게 회자된 사건은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이었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정장은 검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행명 파동'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후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2019년 7월 16일 대한민국의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2021년 3월 4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사태로 문재인정부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의 명(命)과 운(運)을 가지고 향후 천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송대(960~1270)에 서자평에 의해서 탄생한 자평명리학(子平明理學)은 음양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의 원리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의 십성(十星)이론과 합형중파해(合刑中破害)의 원리를 기반으로 간명한다. 또한 월지와 일간을 기준으로 간명하는 격국(格局)이론, ①일간과 ②생월의 월지를 기준으로 사주전체의 기세를 분석하는 기세분석적인 관점인 역부(御扶)이론이 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생월의 절기와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의 한냉조습(寒冷燥濕)을 조정하는 조후이론의 삼대간법을 중심으로 간명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으로 명(命)의 회기를 판정하고 사주의 균형을 잡는 중화(中和)이론에 의해서 사주의 균형주와 같은 용신(用神)과 화신(護神)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대운과 세운 및 월운등을 분석하는 미래예측학이다. 일반적으로 자평명리학의 해석법이 어렵

다 보니 각종 12지신과 십살본과 12운성으로만 보는 명리학은 정통자평명리학에서 멀어지고 천운을 보는 것이 한계가 너무 많다.

먼저 타고난 명의 주변환경적인 변화와 삶의 지향점을 보는 10년마다 전개되는 대운(大運)은 주로 한냉조습의 조절을 중심으로 일간의 강약을 참조하는 조후(調後)이론을 우선 적용한다.

현재 그의 천운인 대운은 2007년 이후부터 10년간은 계사(癸巳)대운의 상관운과 편관운으로 파란이 많고 자리변동수가 강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26일 이후부터 10년간은 갑오대운의 편재운과 정관대운으로 진입하였다. 즉 그의 현실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오후(午火)의 조후가 등장하니 천운이 도난다.

한편 격국이론에 의하면 그의 격국은 ⑦계수(癸水)가 천간에 나타난 투출한 금수상관격(金水傷官格)이다. 금수상관격은 다른 상관격과 다르게 금수상관의견관(金水傷官見官)이라 추위를 녹이는 조후가 사급하여 정화(丁火)와 오후(午火) 및 병화(丙火)와 사화(巳火)의 관살(官殺)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윤후보의 천운은 갑오대운이 매우 좋은 천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주는 상관의 자수(子水)가 자진합수(子辰合水)로 인하여 너무 과다하여 구설수와 시기방방이 극대화된다. 그와 참모진의 구설수와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관이 과다하면 상관을 제어하는 ⑥미토(未土)와 ③진토(辰土)에 뿌리를 둔 ⑥무토(戌土) 편인(偏印)이 수의 상관격을 조절하는 상관패인격(傷官配印格)의 상신(相神)이 된다.

기세의 강약을 보는 역부론으로는 수의 상관이 과다한 중화된 사주이다. 다만 조후상 목화의 기운이 보완 되어야 한다. 그의 향후 천운은 2021년은 신축년운으로 겁재운과 축토의 정인의 천을귀인운으로 세력을 모으고 하늘이 돕는다. 그러나 임춘전까지는 무수한 시비와 구설수 및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2022년 1월에서 2월초사이에 안형수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내년 2022년 임인년(壬寅)임인월의 선거기간은 그의 천운이 육임승천하는 운이다. 그의 대선 기간은 천운이 도와서 예상보다 더 좋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굳건하게 정립할 가능성이 높다.

사주	일주	월주	년주
①계수(癸水) 상관	①경금(庚金) 일주	⑥무토(戌土) 편인	⑤경금(庚金) 비견
⑥미토(未土) 정인	③진토(辰土) 편인	②자수(子水) 상관격	④자수(子水) 상관
②정인(正印) ⑦정인(正印)	과강살		지지
천을귀인(天乙貴人)			지장간

(13.7*30.5)cm

제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천운

윤석열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의 홍준표 후보를 따돌리고 제 20대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적폐청산 칼잡이’에서 ‘조국 수사’와 ‘추·윤 갈등’ 사태로 반 문재인 세력의 구심점으로 정치 경험 없이 최단 기간 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또한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를 잡을 검사출신 대통령이 될지 관전 포인트이다.

윤 후보가 국민들에게 회자된 사건은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이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검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항명 파동’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후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2019년 7월 16일 대한민국의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2021년 3월 4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조국사태’와 ‘추·윤 갈등’ 사태로 문재인정부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의 명(命)과 운(運)을 가지고 향후 천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송대(960~1270)에 서자평에 의해서 탄생한 자평명리학(子平明理學)은 음양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의 원리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의 십성(十星)이론과 합형충파해(合刑沖破害)의 원리를 기반으로 간명한다. 또한 월지와 일간을 기준으로 간명하는 격국(格局)이론, ①일간과 ②생

월의 월지를 기준으로 사주전체의 기세를 분석하는 기세론적인 관점인 억부(抑扶)이론이 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생월의 절기와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의 한냉조습(寒冷燥濕)을 조절하는 조후이론의 삼대간법을 중심으로 간명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으로 명(命)의 희기를 관정하고 사주의 균형을 잡는 중화(中和)이론에 의해서 사주의 균형추와 같은 용신(用神)과 희신(喜神)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대운과 세운 및 월운등을 분석하는 미래예측학이다. 일반적으로 자평명리학의 해석법이 어렵다 보니 각종 12지신과 신살론과 12운성으로만 보는 명리학은 정통자평명리학에서 멀어지고 천운을 보는 것이 한계가 너무 많다.

먼저 타고난 명의 주변환경적인 변화와 삶의 지향점을 보는 10년마다 전개되는 대운(大運)은 주로 한난조습의 조절을 중심으로 일간의 강약을 참조하는 조후(調候)이론을 우선 적용한다.

현재 그의 천운인 대운은 2007년 이후부터 10년간은 계사(癸巳)대운의 상관운과 편관운으로 파란이 많고 자리변동수가 강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26일 이후부터 10년간은 갑오대운의 편재운과 정관대운으로 진입하였다. 즉 그의 현실적인 영역이 확대되고 오화(午火)의 조후가 등장하니 천운이 도운다.

한편 격국이론에 의하면 그의 격국은 ⑦계수(癸水)가 천간에 나타난 투출한 금수상관격(金水傷官格)이다. 금수상관격은 다른 상관격과 다르게 금수상관희견관(金水傷官喜見官)이라 추위를 녹이는 조후가 시급하여 정화(丁

火)와 오화(午火) 및 병화(丙火)와 사화(巳火)의 관살(官殺)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윤후보의 천운은 갑오대운이 매우 좋은 천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주는 상관의 자수(子水)가 자진합수(子辰合水)로 인하여 너무 과다하여 구설수와 시기비방이 극대화된다. 그와 참모진의 구설수와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관이 과다하면 상관을 제어하는 ⑧미토(未土)와 ③진토(辰土)에 뿌리를 둔 ⑥무토(戌土)편인(偏印)이 수의 상관격을 조절하는 상관패인격(傷官佩印格)의 상신(相神)이 된다.

기세의 강약을 보는 역부론으로는 수의 상관이 과다한 중화된 사주이다. 다만 조후상 목화의 기운이 보완 되어야 한다. 그의 향후 천

운은 2021년은 신축년운으로 겹재운과 축토의 정인의 천을귀인운으로 세력을 모으고 하늘이 돕는 운이다. 그러나 입춘 전까지는 무수한 시비와 구설수 및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2022년1월에서 2월초사이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내년 2022년 임인년(壬寅年)임인월의 선거기간은 그의 천운이 육일 승천하는 운이다. 그의 대선 기간은 천운이 도와서 예상보다 더 좋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굳건하게 정립할 가능성이 높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21
언론사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심의대상	중앙일보 12월 1일자 35면 「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후보자가 배임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처럼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게재 등을 금지하는 광고로서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The JoongAng
2021년 12월 1일
35면 (광고)

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최소 3,318억원 배임의 공범”

대장동 비리 ‘국민특검’, 1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장 전달! 화천대유 등이 출자액의 2천배가 넘는 8,571억원의 총수의 갖도록 배임!
“검찰이 국민의 이런 노력에도 전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적무유죄’와 책임 져야 할 것” 경고 첨부!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민재판부가 구성될 것이며, 국민적 심판까지 피할 수 없을 것!”

대장동 국민특검 ‘국민 기소장’	공소사실 (범죄사실 요지)
○ 발신자 : 국민특검 ○ 수신자 : 국민재판부 ○ 피고인 : 이재명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적용법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8항, 형법 366조, 제365조 제2항, 제303조 2021년 11월 30일 부동산비리 국민특검 (상업대표 고영주 전 남부지검 검사장, 공동대표 손기호)	1. 피고인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와 책임이 있다.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반주주(50%+1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독권자이며 최종 결정자이자 최고 책임자였다. ‘대장동 개발계획’ ‘성남의 뜰’에 대한 출자 승인 등 최소한 12개 이상의 공문에 직접 관여하면서 사업을 통제했다. 그 과정에서 ‘성남의 뜰’이란 민간 합작 시행사가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계 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국토부 지침에 반하여 6.7%로 대폭 낮춰유증을 벌이 삼아 토지 강제수용의 정당성을 훼손하였으며, 용적률도 당초 계획보다 높여 분양가구를 늘린으로써 막대한 이익이 나도록 하여 화천대유, 천화동원 등 민간 출자사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초과이익 배당과 환수를 포기하는 임무 위해 행위를 하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필요에 토지를 수용하여 비싸게 매각하도록 돼 있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화천대유 등 민간인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 성남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유동규에 대해 “이익을 고령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출자자분이 7%, 3955원인원에 불과한 화천대유 민간 출자자들이 배당금 등 총수익이 2천배가 넘는 8,571억원을 갖도록 한 반면, 출자 자본의 절반 25여만을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8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시와 공사가 큰 손해가 나도록 했다. 피고인은 공사의 공모자로서 및 사업행위시 승인 또는 발의하는 방법으로 위 유동규 등과 공모하여, 성남시와 공사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의 임무 위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제3자의 이익 취득 피고인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민배,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대사업장 부지사임프트장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김민배의 요청에 따라 금융사 주도 연소사용으로 된 ‘성남의 뜰’ 사업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문재인 중재직파 정권 취결’
 당원 가입신청 : 02-717-1948,
 010-3620-5142(문지)

자유민주당 대표 : 고영주 변호사

이 광고는 제4회헌정 유선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보편화됩니다.
 후원전화 : 신원전화 100-034-946599 자유민주당중앙위원회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22
언론사	주식회사 매일신문사(매일신문)
심의대상	매일신문 12월 3일자 1면 「이준석 '잠수' 탄 사이 李 35.5% > 尹 34.6%」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역전당했다...수치로 드러난 국힘 위기

이준석 '잠수' 탄 사이 李 35.5% > 尹 34.6%

〈이재명〉

〈윤석열〉

내분 장기화에尹 지지율 하락
해법도 중재자도 찾기 힘들어
국면 깊어질수록 보수층 환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패싱 논란 끝에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업무를 보이콧하는 조유의 물발 행동을 벌이는 등 국민의힘이 본선 시작부터 '집안싸움'에 골몰하자 정권교체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04-5면

게다가 2일 발표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든크로스(역전)를 이룬 결과마저 나왔다.

채널A가 여론조사회사 리서치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35.5%가 이 후보를 선택했다. 윤 후보는 34.6%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전례 없는 내분 양상을 장기간 보이면서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회사의 분석이다.

하지만 해법도, 중재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이날도 윤 후보 측과 이 대표 측이 가시 돌친 말로 상대를 자극했다.

장예찬 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번 한 번만 형의 정치에서 주인공 자리를 후보에게 양보할 수 없느냐"며 "지금처럼 취중 페이스북으로 폭탄 발언을 하고, 갑자기 침대에서 부산-순천을 오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제1야당 대표다운 행동이 아니다"고 했다.



말문 연李대표

尹 후보 선출된 이후로
저는 당무를 한 적 없어

'윤핵관'의 모욕적 발언
지금 상황 악화시킨 것

이준석 대표는 2일 윤 후보가 자신을 사실상 '패싱'했다며 강력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제4·3평화공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무 거부냐 얘기하시는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제 기억에 딱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당무 공백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의 익명 인터뷰를 사태의 핵심 중 하나로 짚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발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은 심지어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본인 것 같다. 그분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명은 당 대표이고, 다른 쪽은 당의 대선 후보인데 누구 한 명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면이 깊어질수록 보수 야권 지지층마저 정권교체 의지에 의문을 품고, 심지어 환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pyoyo@maeil.com

(11.6·31.4)cm



이준석 '잠수' 탄 사이 추 35.5% > 윤 34.6%

내분 장기화에 윤 지지율 하락
해법도 중재자도 찾기 힘들어
국면 길어질수록 보수층 환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패싱 논란 끝에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업무를 '보이콧' 하는 초유의 돌발 행동을 벌이는 등 국민의힘이 본선 시작부터 '집안싸움'에 골몰하자 정권교체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2일 발표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든크로스(역전)를 이룬 결과마저 나왔다.

채널A가 여론조사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며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35.5%가 이 후보를 선택했다. 윤 후보는 34.6%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전례 없는 내분 양상을 장기간 보이면서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회사의 분석이다.

하지만 해법도, 중재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이날도 윤 후보 측과 이 대표 측이 가시 돌친 말로 상대를 자극했다.

장예찬 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는 사회관계

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번 한 번만 형의 정치에서 주인공 자리를 후보에게 양보할 수 없느냐”며 “지금처럼 취중 페이스북으로 폭탄 발언을 하고, 갑자기 침거에서 부산·순천을 오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제1야당 대표다운 행동이 아니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윤 후보가 자신을 사실상 '패싱'했다며 강력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무 거부냐 얘기하시는데,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제 기억에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당무 공백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이른바 ‘윤희관’(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의 익명 인터뷰를 사태의 핵심 중 하나로 짚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발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은 심지어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분인 것 같다. 그분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명은 당 대표이고, 다른 쪽은 당의 대선 후보인데 누구 한 명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국면이 길어질수록 보수 야권 지지층마저 정권교체 의지에 의문을 품고, 심지어 환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23
언론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서울신문)
심의대상	서울신문 12월 2일자 4면 「이재명 35.5% vs 윤석열 34.6%…李,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신문

2021년 12월 02일
04면 (정치)

이재명 35.5% vs 윤석열 34.6%…李,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리서치앤리서치 조사…尹 지지율 하락
칸타코리아 조사선尹 35.6%,李 29.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널A-리서치앤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5.5%, 윤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4.6%였다. 비록 오차범위 내 박

빙이긴 하지만, 0.9% 포인트 차이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룬 것이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6.0%), 심상정 정의당 후보(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1.6%) 순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렸으며,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조선일보·칸타코리아가 이날 발표한 조사(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1013명)에서는 윤 후보가 35.6%로 이 후보(2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심 후보 4.2%, 안 후보 3.2% 순이었다. 해당 조사에서 윤 후보는 60세 이상과 20대 이하 젊은층에서, 이 후보는 40대에서 앞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13.7×9.8)cm



이재명 35.5%vs윤석열 34.6%...

李,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리서치앤리서치 조사...尹 지지율 하락
칸타코리아 조사선 尹 35.6%, 李29.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널A · 리서치앤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5.5%, 윤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4.6%였다. 비록 오차범위 내 박빙이긴 하지만, 0.9% 포인트 차이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룬 것이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6.0%), 심상정 정의당 후보(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1.6%) 순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렸으며,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조선일보 · 칸타코리아가 이날 발표한 조사(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1013명)에서는 윤 후보가 35.6%로 이 후보(2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심 후보 4.2%, 안 후보 3.2% 순이었다. 해당 조사에서 윤 후보는 60세 이상과 20대 이하 젊은층에서, 이 후보는 40대에서 앞섰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24
언론사	주식회사 세계일보(세계일보)
심의대상	세계일보 12월 2일자 4면 「尹 컨벤션 효과 다했나…李, 지지율 첫 역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계일보

2021년 12월 02일
04면 (정치)

尹 컨벤션 효과 다했나…李, 지지율 첫 역전

李 35.5%·尹 34.6% 오차범위 내 접전
안철수 6% 심상정 4.9% 김동연 1.6%

이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1일 발표됐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가 35.5%, 윤 후보가 34.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의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0.9%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초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최근 대선 100일을 앞둔 조사까지도 이 후보에 앞서왔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와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악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일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와 국토보유세 철회 시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등 정책 노선 수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3.7*8.9)cm

<세계일보 2021년 12월 2일자 4면>

尹 컨벤션 효과 다했나…李, 지지율 첫 역전

李 35.5% ·尹 34.6% 오차범위 내 접전
안철수 6% 심상정 4.9% 김동연 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1일 발표됐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가 35.5%, 윤 후보가 34.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의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0.9%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초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최근 대선 100일을 앞둔 조사까지도 이 후보에 앞서왔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와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악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일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와 국토보유세 철회 시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등 정책 노선 수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25
언론사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
심의대상	한국경제 12월 2일자 6면 「李 35.5% vs 尹 34.6% 지지율 첫 ‘골든크로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李 35.5% vs 尹 34.6%

지지율 첫 '골든크로스'

채널A, 대선 D-100 여론조사

이재명, 오차범위 내 尹 앞질러
윤석열, 당대표 패싱 등 악재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자 구도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정치권에선 줄곧 열세였던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추월하는 '골든크로스'가 실현될지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내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5.5%가 이 후보를 택했다.

윤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4.6%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pm 3.1\%$ 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0.9%포인트)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내년 대선 100일 즈음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윤 후보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컨벤션 효과'를 등에 업고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한때 오차

범위 밖으로 벌렸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에게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가 야당이 주장한 '대장동 특검'을 전격 수용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등 공약에 대해 유연한 방침을 내비치면서 중도층 표심이 이 후보 쪽으로 조금씩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두고 수주째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도 '패싱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20대 중 22.1%가 이 후보를, 14.6%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35.7%, 윤 후보는 28.2%의 지지를 얻었다.

40대에선 이 후보(57.3%)와 윤 후보(19.6%)간 격차가 세 배 가까이 벌어졌다. 다만 50대와 60대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9%,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의 지지를 받았다.

오형주 기자

(11.4*16.7)cm

李 35.5% vs 尹 34.6% 지지율 첫 ‘골든크로스’

채널A, 대선 D-100 여론조사
이재명, 오차범위 내 尹 앞질러
윤석열, 당대표 패싱 등 악재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자구도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정치권에선 줄곧 열세였던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추월하는 ‘골든크로스’가 실현될지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내년 3월 9일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5.5%가 이 후보를 택했다.

윤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4.6%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가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0.9%포인트)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내년 대선 100일 즈음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윤 후보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컨벤션 효과’를 등에 업고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한때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에게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가 야당이 주장한 ‘대장동 특검’을 전격 수용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등 공약에 대해 유연한 방침을 내비치면서 중도층 표심이 이 후보 쪽으로 조금씩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두고 수주째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도 ‘패싱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20대 중 22.1%가 이 후보를, 14.6%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30대에서는 이 후보가 35.7%, 윤 후보는 28.2%의 지지를 얻었다.

40대에선 이 후보(57.3%)와 윤 후보(19.6%) 간 격차가 세 배 가까이 벌어졌다. 다만 50대와 60대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9%,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의 지지를 받았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26
언론사	주식회사 헤럴드(헤럴드경제)
심의대상	헤럴드경제 12월 2일자 5면 「李,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까지...尹, 돌파구 있나」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헤럴드경제

2021년 12월 02일
(05면 (정치))

‘李,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까지...尹, 돌파구 있나

0.9%p차 열세...대진표 완성 이후 처음

李 대표와 갈등 여파...컨벤션 효과 퇴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오차범위 내 초집전이긴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소폭 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후 윤 후보가 이 후보에 열세를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선대위 갈등을 빠른 시간 내 수습하지 못하면 윤 후보의 하락세가 지속하며 본격적인 ‘역전(골든크로스)’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달 27~29일 내선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물은 결과 이 후보는 35.5%, 윤 후보는 34.6%를 각각 기록했다. 두 사람 사이 격차는 불과 0.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후보 선출 직후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 격차가 15%포인트 가량 났던 점을 고려하면 ‘컨벤

션효과’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보면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뒤진 조사는 아직 1건이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역전 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한 번 뒤집어질 것으로 보고 뒤집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골든크로스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자중지탄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김중권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인선 갈등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패싱 논란’ 끝에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내분으로 인해 역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윤희 기자
(14.6*11.1)cm

<헤럴드경제 2021년 12월 2일자 5면>



‘李,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까지…

尹, 돌파구 있나

0.9%P차 열세…대진표 완성 이후 처음 李 대표와 갈등 여파…컨벤션 효과 퇴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긴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소폭 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후 윤 후보가 이 후보에 열세를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선대위 갈등을 빠른 시간 내 수습하지 못하면 윤 후보의 하락세가 지속하며 본격적인 ‘역전(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달 27~29일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물은 결과 이 후보는 35.5%, 윤 후보는 34.6%를 각각 기록했다. 두 사람 사이 격차는 불과 0.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 $\pm 3.1\%$ 포인트)다. 후보 선

출 직후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 격차가 15%포인트 가량 낮던 점을 고려하면 ‘컨벤션효과’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보면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뒤진 조사는) 아직 1건이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역전 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한 번 뒤집어질 것으로 보고, 뒤집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골든크로스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지중지란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인선 갈등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패싱 논란’ 끝에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내분으로 인해 역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28
언론사	주식회사 더뉴스그룹(UPI뉴스통신)
심의대상	UPI뉴스통신 12월 16일자 정치면 「‘골든크로스’ 이재명 35.4% · 윤석열 33.3%」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UPI뉴스

UPI뉴스 > 정치

'골든크로스' 이재명 35.4%·윤석열 33.3%

■ 안재성 / 기사승인 : 2021-12-16 19:40: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 [UPI뉴스 자료사진]

SB5의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5.4%로 윤석열 후보(33.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 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3.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7~28일 SB5·넥스트리서치 조사 때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2.7%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1.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은 34.4%, 이 후보는 32.7%였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라는 물음에는, '영향을 준다'는 응답자가 60.4%를 기록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38.1%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87%, 유선 13%)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upinews.kr

<UPI뉴스 2021년 12월 16일자 정치면>



‘골든크로스’ 이재명 35.4% · 윤석열 3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SBS의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5.4%로 윤석열 후보(33.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 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3.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7~28일 SBS · 넥스트리서치 조사 때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2.7%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1.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은 34.4%, 이 후보는 32.7%였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라는 물음에는, ‘영향을 준다’는 응답자가 60.4%를 기록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38.1%였다.

이번 조사는 유 · 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87%, 유선 13%)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29
언론사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강원도민일보)
심의대상	강원도민일보 12월 10일자 8면 「대선 지지율 이재명 38%, 윤석열 36% '역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강원도민일보

2021년 12월 10일
(8면 (종합))

대선 지지율 이재명 38%·윤석열 36% '역전'

이 후보 5%·윤 후보 2% 각각 상승
한 달여 만 순위 역전... 역대 처음

다자대결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

부터 8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7.2×6.7)cm

〈강원도민일보 2021년 12월 10일자 8면〉

대선 지지율 이재명 38% · 윤석열 36% ‘역전’

이 후보 5% · 윤 후보 2% 각각 상승
한 달여 만 순위 역전… 역대 처음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부호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pm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30
언론사	주식회사 광주매스컴(광주매일신문)
심의대상	광주매일신문 12월 10일자 4면 「“李 38% 尹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李 38% 尹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당선 전망은 각각 39% 동률 기록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31
언론사	주식회사 대구일보사(대구일보)
심의대상	대구일보 12월 10일자 3면 「이재명 38%-윤석열 36% 4자대결 지지율 ‘첫역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일보

2021년 12월 10일
03면 (정치)이재명 38%-윤석열 36%
4자 대결 지지율 '첫 역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가 38%, 윤 후보가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

연령·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30대에서 16% 포인트(29%→45%), 부산·울산·경남에서 12% 포인트(23%→35%)로 크게 올랐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6%포인트(35%→41%)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혜림 기자 hlh@idaegu.com

(5.8*16.7)cm

이재명 38%-윤석열 36%

4자 대결 지지율 ‘첫 역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가 38%, 윤 후보가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

연령·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30대에서 16% 포인트(29%→45%), 부산·울산·경남에서 12% 포인트(23%→35%)로 크게 올랐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6% 포인트(35%→41%)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32
언론사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뉴스통신)
심의대상	아시아뉴스통신 12월 10일자 정치면 「‘한달 만에 역전’ 이재명 38%, 윤석열 36%」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시아뉴스통신 2021년 12월 10일자 정치면〉

보도내용

‘한달 만에 역전’ 이재명 38%, 윤석열 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38%, 윤 후보의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이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를 얻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개요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33
언론사	주식회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심의대상	연합뉴스 12월 9일자 정치면 「“이재명 38% 윤석열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38% 윤석열 36%...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송고시간 | 2021-12-09 12: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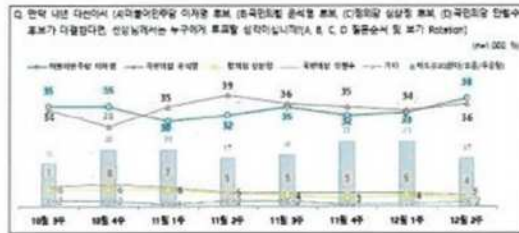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연합뉴스 2021년 12월 9일자 정치면〉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
다.



대선 후보 지지도 (%)	사학수	더불어 민주당 (A)	국민의힘 윤석열 (B)	정의당 심상정 (C)	국민의당 안철수 (D)	그 외 다른 사람	모름/응답 불응
전체	(1,000)	36	39	3	4	2	17
연령별	18-29세	(174)	25	28	8	3	25
	30-39세	(152)	45	28	4	6	18
	40-49세	(135)	54	18	3	3	7
	50-59세	(114)	49	39	3	1	6
	60-69세	(164)	32	54	1	1	4
지역별	70세 이상	(113)	20	56	1	3	8
	서울	(187)	35	38	6	5	2
	인천/경기	(114)	41	35	5	3	10
	대전/세종/충청	(106)	33	38	2	4	15
	충청/전라	(96)	63	11	4	2	6
이념 성향별	자유보수	(17)	15	55	3	0	16
	무소속/진보	(152)	35	37	1	4	12
	자유/진보	(45)	40	35	7	2	12
	전체	(170)	64	11	8	4	3
	연도	(215)	36	35	3	4	12
정치 성향별	보수	(282)	15	65	0	2	12
	진보	(37)	24	29	0	6	18
	자유보수	(144)	64	3	3	1	2
	국민의당	(143)	5	87	0	1	5
	국민의당	(154)	20	18	2	7	35
정치 성향별	국민의당	(154)	20	18	2	7	35
	국민의당	(154)	20	18	2	7	35
	국민의당	(154)	20	18	2	7	35
	국민의당	(154)	20	18	2	7	35
	국민의당	(154)	20	18	2	7	35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 (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sk@yna.co.kr

“이재명 38% 윤석열 36%…

이재명,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34
언론사	주식회사 전국매일신문(전국매일신문)
심의대상	전국매일신문 12월 10일자 4면 「李 38% · 尹 36%…李,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울러 여론조사보도 관련 심의기준을 재차 위반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가 상향될 수 있음을 유념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매일

2021년 12월 10일
(4면 (정치))

李 38%·尹 36%…李,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당선 전망 李·尹 39% 동률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엘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0%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3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현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11.8×12.8)cm

李 38% · 尹 36%… 李, 5%p 상승하며 순위 역전

당선 전망 李 · 尹 39% 동률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 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 리서치 ·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의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35
언론사	주식회사 덕천(전남매일)
심의대상	전남매일 12월 10일자 5면 「이재명 38%·윤석열 36%…첫 역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남매일

2021년 12월 10일
05면 (정치)

이재명 38%·윤석열 36%…첫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11.4*6.6)cm

〈전남매일 2021년 12월 10일자 5면〉

이재명 38% · 윤석열 36%...첫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36
언론사	주식회사 전북중앙신문(전북중앙신문)
심의대상	전북중앙신문 12월 10일자 2면 「이재명 38%-윤석열 36%」… 누가尹 앞질러」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북중앙신문

한국리서치등 저지율 여론조사 한달만에 역전 당선 전망 동률

‘이재명 38%-윤석열 36%’… 누가尹 앞질러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엘브레인 리서치·케이스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 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차 가산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를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이상경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보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8% 득표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지지 조사에서도 ‘결론 미정’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8%,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2월 10일 (수요일)

정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6%)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달렸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33.5% 이상)

〈전북중앙신문 2021년 12월 10일자 2면〉

‘이재명 38%-윤석열 36%’ …

李가 尹 앞질러

한국리서치등 지지율 여론조사 한 달 만에 역전 당선 전망 동률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37
언론사	주식회사 천지일보(천지일보)
심의대상	천지일보 12월 10일자 1면 「이재명, 6주 만에 지지율 역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천지일보

2021년 12월 10일
01면 (종합)

이재명, 6주 만에 지지율 역전

尹과 오차 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6주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12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지난 주 대비 2%p 떨어진 반면, 이 후보는 5%p 올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p로 좁혀졌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셈이다.

두 후보의 뒤를 이어 국민의당 안철

수 후보 4%, 정의당 심상정 후보 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 응답자 비율은 17%였다.

대선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각각 39%를 차지해 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최종 응답률은 28.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대경 기자
(10.8×10.5)cm

이재명, 6주 만에 지지율 역전

尹과 오차 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6주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12월 첫째주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지난주 대비 2%p 떨어진 반면, 이 후보는 5%p 올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p로 좁혀졌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셈이다.

두 후보의 뒤를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 정의당 심상정 후보 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 응답자 비율은 17%였다.

대선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각각 39%를 차지해 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최종 응답률은 28.3%,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text{p}$ 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38
언론사	주식회사 광주일보사(광주일보)
심의대상	광주일보 12월 10일자 3면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8%·윤석열 36%」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부제와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 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 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光州日報

2021년 12월 10일
03면 (종합)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8%·윤석열 36%

4개기관 조사...한달만에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 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13.5*11.3)cm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8% · 윤석열 36%

4개기관 조사…한달만에 역전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 전국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각각 5% 포인트, 2% 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첫째 주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달여 만에 지지율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는 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39% 동률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으로 보는 견해가 46%로 국정 안정론(42%)보다 높았다.

또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윤 후보는 25%, 안 후보는 6%, 심 후보는 2%를 각각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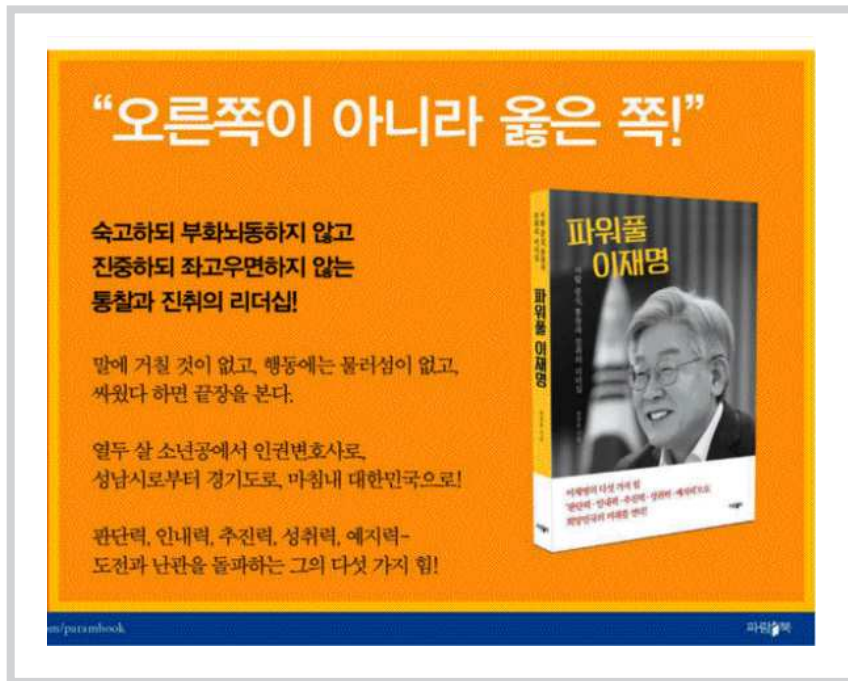
여야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39%)이 국민의힘(35%)보다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43%)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 국민의당 3%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43
언론사	주식회사 한국뉴미디어(한국스포츠경제)
심의대상	한국스포츠경제 12월 23일자 1면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및 1월 3일자 10면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국스포츠경제 2021년 12월 23일자 1면, 2022년 1월 3일자 10면〉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45
연론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주간동아)
심의대상	주간동아 12월 27일자 4-5면 「尹, 여론조사 6승 3패… 무능 이미지 고착 시 데드크로스」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조사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제여건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합산하여 후보자간 승패를 언급하였고, 인용한 9건의 여론조사 결과 모두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간동아 2021년 12월 27일자 4-5면〉

尹, 여론조사 6승 3패... 무능 이미지 고착 시 데드크로스

9개 조사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尹 하락세 가팔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좁혀진 국면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의 한 줄 평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가 다수지만 이 후보 역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를 달성하며 바짝 따라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까지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유권자,尹 능력 의구심 갖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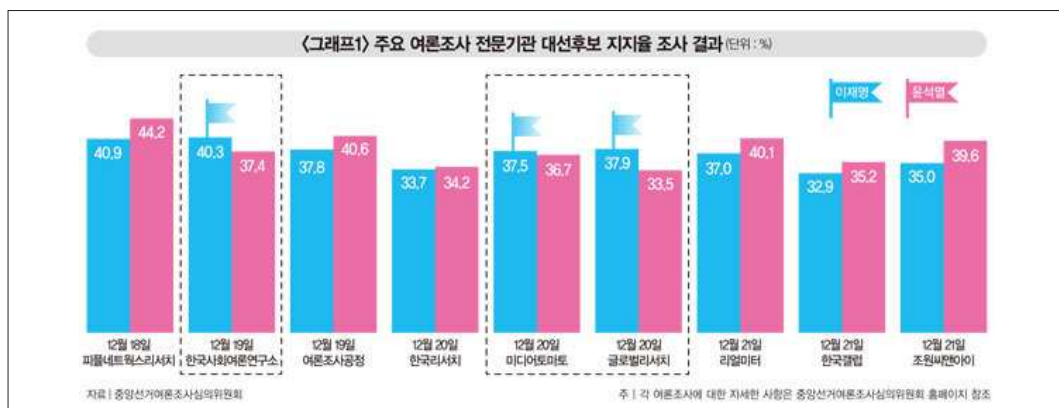
12월 18일부터 나흘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9개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를 분석한 결과 윤 후보는 6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그래프1 참조). 두 후보는 9개 여론조사 모두에서 오차범위 내 공방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과반승’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9개 여론조사 모두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표 참조). 이 후보의 경우 7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관측됐다. 이 후보의 ‘아들 도박·성매매 의혹’과 윤 후보의 ‘배우자 허위 이력 의혹’이 부딪치면서 유권자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의 하락세가 이 후보보다 가파르면서 곳곳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후보가 1위 자리를 탈환했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여야 대진표가 정해진 이래 처음으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질렀다.

김대현 정치평론가는 “대중이 보기에 향후 대통령 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의 문제와 자녀의 도박 문제는 무게감이 달랐다. 특히 윤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이나 운영 등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이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 다툼 역시 악재로 꼽힌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일부 언론인에게 이준석 당대표를 비방하는 영상이 첨부된 문자메



시지를 보낸 사실이 12월 20일 밝혀지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선대위 공보단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두 사람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대표가 12월 22일 선대위 내 모든 직을 내려놔고, 조 의원 역시 이후 공보단장직에서 물러났다.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2월 22일 “처음 선대위를 만들 때 거대하게 만들어놔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는 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갈지는 앞으로 보면 알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대위 개편을 시사했다.

배 소장은 “윤 후보의 경우 이 대표와 관계에서 불화를 보인 가운데 정책 부문에서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교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반면 이 후보는 ‘행정 경쟁력’이 강점이다. 향후 윤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을 얼마나 부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먹고사는 문제 점차 중시될 듯”

이 후보가 민생 문제에 강세를 보이면서 향후 대선구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2월 12일부터 엿새간 전국 유권자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대응 적합 후보’ ‘코로나19 팬데믹 민생 대처 적합 후보’ 항목에서 모두 윤 후보를 앞섰다(그래프2 참조). 지지율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1.8\%p$).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여론조사 대비 대선후보 지지율 변동

여론조사기관	통목일	이재명	윤석열
피플네트웍스리서치	12월 18일	3.4%p ↑	3.7%p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12월 19일	0.3%p ↓	4.6%p ↓
여론조사공정	12월 19일	0.7%p ↓	1.7%p ↓
한국리서치	12월 20일	1.8%p ↓	1.3%p ↓
미디어토마토	12월 20일	1.3%p ↓	2.2%p ↓
글로벌리서치	12월 20일	7.1%p ↓	3.9%p ↓
리얼미터	12월 21일	0.1%p ↓	5.2%p ↓
한국갤럽	12월 21일	3.4%p ↓	1.2%p ↓
조원씨앤아이	12월 21일	3.3%p ↓	3.0%p ↓

자료 | 각 여론조사 전문기관

《그래프2》 방역민생 문제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 평가



민생 문제 대응 기대가 이 후보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김 평론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권자들이 도덕적 가치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중시할 것이다. 윤 후보의 무능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향후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김종인 위원장 등 한 사람에게 권한을 일임하고 적극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약속했다. 디지털산업에 135조 원을 투자해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12월 6일 “2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민생 문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46
언론사	대한미디어 주식회사(The대한일보)
심의대상	The대한일보 12월 21일자 3면 「이재명 40.3% 윤석열 37.4%…李, 2.9%p 차로 역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한일보

2021년 12월 21일자 3면

이재명 40.3% 윤석열 37.4%…李, 2.9%p 차로 역전

부인·아들 논란에 윤 4.6%p, 이 0.3%p 동반 하락
이재명, 윤석열에 오차범위 내 격차 2.9%p로 앞서
후보 선택에 배우자 영향… 있다 68.3% 없다 29.3%
이·윤 동시 특정 해야 52.2%… 대장동 특검만 24.8%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 후보가 선두를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가 TBS 의뢰로 20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0.3%p인 40.3%, 윤석열 후보는 4.6%p인 37.4%

로 집계됐다.

두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4.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3.7%,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은 8.4%였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전직경리 및 이력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으로 공히 가족 문제가 불거졌으나 윤 후보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

보에 1.4%p포인트로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9%p포인트로 제치며 역전했다.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 후보를 앞섰다.

지난 3주간 추이를 보면 11월 29일 윤석열 41.8%·이재명 39.0%, 12월 6일 윤석열 41.2%·이재명 37.9%, 12월

13일 윤석열 42.0%·이재명 40.6%로 오차범위 내 초월한 양상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경향권 남용 의혹 제각 도면에 대해 묻은 결과,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는 응답이 52.2%, ‘대장동 의혹만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8%였다.

경당 지지자는 더불어민주당 32.5%, 국민의힘 30.1%, 국민

의당 8.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E-NET-Top

〈The대한일보 2021년 12월 21일자 3면〉



이재명 40.3% 윤석열 37.4%...

李, 2.9%p차로 역전

부인·아들 논란에 윤 4.6%p,
이 0.3%p 동반 하락
이재명, 윤석열에 오차범위 내 격차
2.9%p로 앞서
후보 선택에 배우자 영향...
있다 68.3% 없다 29.3%
이·윤 동시 특검 해야 52.2%...
대장동 특검만 24.8%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 후보가 선두를 탈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0.3%,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다.

두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4.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3.7%,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은 8.4%였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전시경력 및 이력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으로 공히

가족 문제가 불거졌으나 윤 후보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1.4%포인트로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9%포인트로 제치며 역전했다.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 후보를 앞섰다.

지난 3주간 추이를 보면 11월 29일 윤석열 41.8% · 이재명 39.0%, 12월6일 윤석열 41.2% · 이재명 37.9%, 12월13일 윤석열 42.0% · 이재명 40.6%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묻은 결과,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 ‘대장동 의혹만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3%, 국민의힘 30.1%, 국민의당 8.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47
언론사	주식회사 에이치애프레스(호남신문)
심의대상	호남신문 12월 21일자 2면 「이재명 40.3% 윤석열 37.4%…李, 2.9%p 차로 역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湖南新聞

2021년 12월 21일
(02면 <정치>)

이재명 40.3% 윤석열 37.4%…李, 2.9%p 차로 역전

부인·아들 논란에 윤 4.6%p, 이 0.3%p 동반 하락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 후보가 선두를 탈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S)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0.3%p포인트 하락한 40.3%, 윤석열 후보는 4.6%p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다.

두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4.2% 순으로 나타났다.

공히 가족 문제가 불거졌으나 윤 후보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1.4%p포인트로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9%p포인트로 제치며 역전했다.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 후보를 앞섰다.

지난 3주간 추이를 보면 11월29일 윤석열 41.8%·이재명 39.0%, 12월6일 윤석열 41.2%·이재명 37.9%, 12월13

일 윤석열 42.0%·이재명 40.6%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묻은 결과,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 ‘대장동 의혹만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3%, 국민의힘 30.1%, 국민의당 8.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재환기자

(17.3×15.9)cm

이재명 40.3% 윤석열 37.4%...

李, 2.9%p 차로 역전

부인·아들 논란에 윤 4.6%p, 이 0.3%p
동반 하락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 후보가 선두를 탈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0.3%,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다.

두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4.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3.7%,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은 8.4%였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전시경력 및 이력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으로 공히 가족 문제가 불거졌으나 윤 후보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에는 윤 후보가 이 후보에 1.4%포인트

트로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2.9%포인트로 제치며 역전했다.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지난달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윤 후보를 앞섰다.

지난 3주간 추이를 보면 11월29일 윤석열 41.8% · 이재명 39.0%, 12월6일 윤석열 41.2% · 이재명 37.9%, 12월13일 윤석열 42.0% · 이재명 40.6%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자질이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두 건 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 ‘대장동 의혹만 특검 해야 한다’는 응답이 24.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3%, 국민의힘 30.1%, 국민의당 8.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48
언론사	주식회사 뉴스토마토(뉴스토마토)
심의대상	뉴스토마토 12월 21일자 1면 「이재명, 윤석열에 골든 크로스... 5자 가상대결서 첫 추월」 및 12월 21일자 4면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 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재명, 윤석열에 골든크로스 5자 가상대결서 첫 추월

뉴스토마토 정치 여론조사

양자대결은 오차범위내 접전 비호감도 윤석열 다시 1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달 5일 야야 대결표가 확정된 이후 이 후보의 첫 1위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격차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더 좁아졌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대선 5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섰다.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5.7%), 심상정 정의당 후보(5.1%), 김동원 새로운미래 후보(0.0%) 순이었다.

2주 전 대비 이 후보는 지지율이 38.8%에서 37.5%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도 38.9%에서 36.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비교적 더 크게 하락하면서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다. 두 사람의 지지도 동반하락은 최근 लगातार 하락하는 반면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보도,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경보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대차방석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극단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한 반면 윤 후보는 여론 압박에 마지못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2주 전에 비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지지를 허락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모든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연령별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30대와 40대에서는 이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를 눌렀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40대 지지율은 하락률에도 54.8%로 과반을 넘겨 든든한 지지 기반임을 입증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도했다. 20대와 50대에서는 두 후보가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경기·인천과 강원·제주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전열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에 우세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 후보의 추월에도 여전히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이재명 29.7% 대 윤석열 42.2%로, 이 후보는 격차와도 같은 TK(32.1%)와 PK(33.2%)보다 작은 지지를 획득했다. 대전·충청·세종에서도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대선 양자 가상대결은 이재명 42.5% 대 윤석열 43.3%로 나타났다. 2주 전 대비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다만, 사과에 대한 진정성 논란을 야기한 윤 후보의 지지를 하락 폭이 더 컸다. 이 후보는 지지율이 42.7%에서 42.5%로 0.2%포인트, 윤 후보는 44.7%에서 43.3%로 1.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좁혀졌다.

연령별로 보면 이 후보는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2030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40대·50대·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반대로, 40대와 50대 지지율이 오르며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이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20대와 5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광주·전라에서만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강원·제주와 경기·인천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전열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서울,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후보에 우위를 점했다. 이 후보는 서울 표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동산정책 전환으로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1.3%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3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2주 전에 비해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1.1%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엇갈렸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7%포인트 차이로, 2주 전 조사(0.7%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2주 전과 비교해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반면 40대에서는 비호감도가 팽창 뒤집고 50대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의 비호감도는 40대와 50대에서는 낮아지고,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높아졌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에서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가 특히 서울에서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전열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이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인천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에서는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30.7%, 국민의힘 32.7%로 나타났다. 국민의당(8.5%), 열린민주당(6.9%), 정의당(4.2%), 새로운미래(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2주 전 30.1%에서 30.7%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2.9%에서 32.7%로 0.2%포인트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2.8%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소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2주 전에 비해 30대와 40대 지지율이 상승했다. 2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30대와 40대, 국민의힘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강원·제주와 경기·인천에서도 평균 지지율을 선취하며 국민의힘에 앞섰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서울과 대전·충청·세종에서도 민주당에 우위를 보였다.

한편 국민 34.7%가 이 후보의 강점으로 '실천력'을 꼽았다. 연명법,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살펴봐도 이 후보의 '실천력'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어 8.7%는 대선공약 및 정책, 7.4%는 리더십을, 5.7%는 도덕성을, 5.0%는 소수정당을 선택했다. 앞을 29.3%는 집계했다. 30%에 가까운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이 후보의 숙제로 남겨졌다.

윤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국민 16.1%가 '소속 정당'을 지목했다. 윤 후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다. 정권교체를 현실화할 유력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꼽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2%는 실천력을, 9.6%는 대선공약 및 정책, 8.1%는 리더십을, 7.4%는 도덕성을 선택했다. 도덕성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36.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연선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4명, 응답률은 6.9%다. 지난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연명법·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결과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홍 기자 mhk@stomato.com

▶ 관련기사 4면

(135944 Toon



이재명, 윤석열에 골든 크로스

5자 가상대결서 첫 추월

양자대결은 오차범위내 접전

비호감도 윤석열 다시 1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 달 5일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이 후보의 첫 1위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격차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더 줄어들었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대선 5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꺾었다.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5.7%), 심상정 정의당 후보(5.1%),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1.0%) 순이었다.

2주 전 대비 이 후보는 지지율이 38.8%에서 37.5%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도 38.9%에서 36.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비교적 더 크게 하락하면서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다. 두 사람의 지지도 동반하락은 최근 불거진 가족 논란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도박,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경력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대처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한 반면 윤 후보는 여론 압박에 마지못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2주 전에 비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모든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연령별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30대와 40대에서 이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를 눌렀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40대 지지율은 하락했음에도 54.8%로 과반을 넘겨 든든한 지지 기반임을 입증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압도했다. 20대와 50대에서는 두 후보가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경기·인천과 강원·제주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에 우세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 후보의 추월에도 여전히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이재명 29.7% 대 윤석열 42.2%로, 이 후보는 적지와도 같은 TK(32.1%)와 PK(33.2%)보다 적은 지지를 획득했다. 대전·충청·세종에서도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대선 양자 가상대결은 이재명 42.5% 대 윤석열 43.3%로 나타났다. 2주 전 대비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다만, 사과에 대한 진정성 논란을 야기한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폭이 더 컸다. 이 후보는 지지율이 42.7%에서 42.5%로 0.2%포인트, 윤 후보는 44.7%에서

43.3%로 1.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좁혀졌다.

연령별로 보면 이 후보는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2030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40대·50대·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반대로, 40대와 50대 지지율이 오르고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이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20대와 5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광주·전라에서만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강원·제주와 경기·인천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서울, 대전·충청·세종에서 이 후보에 우위를 점했다. 이 후보는 서울 표심이 예상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동산정책 전환으로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1.1%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3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2주 전에 비해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1.1%포인트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7%포인트 차이로, 2주 전 조사(1.7%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2주 전과 비교해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40대에서는 비호감도가 꺾충 뛰었고 50대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

의 비호감도는 40대와 50대에서는 낮아지고,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높아졌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에서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 후보가 특히 서울에서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이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았지만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윤 후보는 민주당 안방인 광주·전라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에서는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30.7%, 국민의힘 32.7%로 나타났다. 국민의당(8.5%), 열린민주당(6.9%), 정의당(4.2%), 새로운물결(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2주 전 30.1%에서 30.7%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2.9%에서 32.7%로 0.2%포인트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2.8%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소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2주 전에 비해 30대와 40대 지지율이 상승했다. 2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30대와 40대, 국민의힘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50대의 경우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강원·제주와 경기·인천에서도 평균 지

지율을 선회하며 국민의힘에 앞섰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서울과 대전·충청·세종에서도 민주당에 우위를 보였다.

한편 국민 34.7%가 이 후보의 강점으로 '실천력'을 지목했다. 연령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살펴봐도 이 후보의 '실천력'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어 8.7%는 대선공약 및 정책을, 7.4%는 리더십을, 5.7%는 도덕성을, 5.0%는 소속정당을 선택했다. 없음 29.3%은 집계됐다. 30%에 가까운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이 후보의 숙제로 남겨졌다.

윤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국민 16.1%가 '소속정당'을 지목했다. 윤 후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다. 정권교체를 현실화할 유

력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꼽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2%는 실천력을, 9.6%는 대선공약 및 정책을, 8.1%는 리더십을, 7.4%는 도덕성을 선택했다. 도덕성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없다'는 부정적 응답은 36.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4명, 응답률은 6.9%다. 지난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가족 논란에 지지율 동반하락
이, TK·PK서 30%대 선전
서울은 여전히 난공불락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0.1%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가 이를 0.8%포인트 격차로 뒤집었다. 지난달 5일 여야 5자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 이 후보의 첫 1위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실시한 '2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대선 5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가 양강을 형성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5.7%), 심상정 정의당 후보(5.1%),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9%,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8.6%와 2.5%였다.

동원 새로운물결 후보(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9%,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8.6%와 2.5%였다.

2주 전 대비 이 후보는 지지율이 38.8%에서 37.5%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도 38.9%에서 36.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비교적 더 크게 하락하면서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다. 두 사람의 지지도 동반하락은 최근 불거진 가족 논란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도박,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경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2주 전에 비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40대 지지율이 39.3%에서 34.8%로 4.5%포인트 떨어졌다. 50대에서도 44.5%에서 39.8%로 4.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대의 경우

39.1%에서 43.8%로 4.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모든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30대 31.9%에서 29.3%로 2.6%포인트, 40대 25.3%에서 22.9%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30대 이재명 43.8% 대 윤석열 29.3%, 40대 이재명 54.8% 대 윤석열 22.9%, 이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26.3% 대 윤석열 54.0%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 20대 이재명 27.4% 대 윤석열 27.3%, 50대 이재명 39.3% 대 윤석열 36.5%로 두 후보가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61.9% 대 윤석열 33.9%, 정·경·제우 이재명 40.8% 대 윤석열 55.0%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에 우세했다. 대구·경북 이재명 32.2% 대 윤석열 64.4%, 부산·울산·경남 이재명 33.2% 대 윤석열 61.2%였다. 다만 이들 지역이 보수의 텃밭인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 경우 이재명 29.7% 대 윤석열 42.2%로, 이 후보가 여전히 서울을 공격하지 못해 있음을 보여준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이재명 33.3% 대 윤석열 43.3%로, 윤 후보가 우세했다.

정서상향변로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32.0% 대 윤석열 33.0%로 경전을 벌였다.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20.6% 대 윤석열 64.5%,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64.7% 대 윤석열 31.2%로, 두 사람 모두 경쟁 상대 우위를 자랑했다.

박주영 기자 rjpark@tomato.com

2021년 12월 21일
19면 1기

가상대결 다자



(단위: %)

<뉴스토마토 2021년 12월 21일자 4면>

보도내용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대진표 완성 후 첫 역전

가족 논란에 지지율 동반하락
이, TK·PK서 30%대 선전
서울은 여전히 난공불락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재명 37.5% 대 윤석열 36.7%로,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0.1%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가 이를 0.8%포인트 격차로 뒤집었다. 지난달 5일 여야 5자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 이 후보의 첫 1위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9차 정기 여론조

사' 결과, 대선 5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가 양강을 형성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5.7%), 심상정 정의당 후보(5.1%),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9%,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8.6%와 2.5%였다.

2주 전 대비 이 후보는 지지율이 38.8%에서 37.5%로 1.3%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도 38.9%에서 36.7%로 2.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비교적 더 크게 하락하면서 1, 2위 순위가 뒤바뀌었다. 두 사람의 지지도 동반하락은 최근 불거진 가족 논란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도박,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경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2주 전에 비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40대 지지율이 59.5%에서 54.8%로 4.7%포인트 떨어졌다. 50

대에서도 44.5%에서 39.3%로 5.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대의 경우 39.1%에서 43.8%로 4.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모든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30대 31.9%에서 29.3%로 2.6%포인트, 40대 25.3%에서 22.5%로 2.8%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30대 이재명 43.8% 대 윤석열 29.3%, 40대 이재명 54.8% 대 윤석열 22.5%로, 이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28.3% 대 윤석열 54.0%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압도했다. 20대 이재명 27.4% 대 윤석열 27.1%, 50대 이재명 39.3% 대 윤석열 38.5%로, 두 후보가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윤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이재명 61.9% 대 윤석열 13.8%였다. 경기·인천 이재명 39.4% 대 윤석열 33.9%, 강원·제주 이

재명 40.8% 대 윤석열 35.0%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에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후보에 우세했다. 대구·경북 이재명 32.1% 대 윤석열 44.4%, 부산·울산·경남 이재명 33.2% 대 윤석열 41.2%였다. 다만 이들 지역이 보수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 경우 이재명 29.7% 대 윤석열 42.2%로, 이 후보가 여전히 서울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이재명 33.5% 대 윤석열 43.3%로, 윤 후보가 우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32.0% 대 윤석열 31.0%로 접전을 벌였다.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20.6% 대 윤석열 64.5%,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64.7% 대 윤석열 11.2%로, 두 사람 모두 진영별 절대 우위를 자랑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49
언론사	주식회사 뉴시스(뉴시스(NEWSIS))
심의대상	뉴시스(NEWSIS) 1월 3일자 정치면 「이재명 40.9% 윤석열 39.2%…李, 尹에 첫 추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치 > 정치일반

이재명 40.9% 윤석열 39.2%…李, 尹에 첫 추월[리얼미터]

등록 2022.01.03 08:52:08

기사내용 요약

李,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尹에 처음으로 역전
李, 대우분 격차 상승…20대, 李 33.6% 尹 28%
당선 가능성은 李 49.5% 尹 40.6%…오차범위 격차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울=뉴시스]정찬형 기자 = 새해 복두 공개된 자기 대선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추월한 가운데, 리얼미터마저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친 것으로 3일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모바일뉴스 피파로 실시한 지난해 12월 5주차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40.9%, 윤석열 39.2%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올랐으나, 윤 후보는 1.2%포인트 하락하여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이 후보가 선두로 나타났다.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7%포인트였다.

이여 만월수 국민여당 후보 6.6%, 심상정 정의당 후보 3.0% 순이었다. '기타 후보' 2.5%, '없음' 5.7%, '모름/무응답' 2.1%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7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

에서 상승했고, 진보층(4.8%포인트, 66.4%→71.2%)과 중도층(1.1%포인트, 39.2%→40.3%)에서 반등했다.

윤 후보는 TK와 호남, 50대와 70세 이상에서 오른 것 외에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고, 중도층(3.5%포인트, 41.9%→38.4%), 진보층(2.4%포인트, 15.9%→13.5%), 보수층(2.3%포인트, 66.7%→64.4%)에서도 내림세를 보였다.

여기에 20대에선 이재명 후보가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33.6%, 윤석열 후보가 6.6%포인트 내린 28.0%로 뒤집혔다. 특히 20대 남성에서 윤석열(39.0%→25.0%)은 14.0%포인트 급락했으나, 이재명(29.0%→38.3%)은 9.3%포인트 상승해 대비를 이뤘다.

또 이 후보의 진보층 지지율이 71.2%로 상승한 반면, 윤 후보의 보수층 지지율은 64.4%로 하락해 각각 진영내 움직임에서도 윤 후보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매일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 내 역할을 맡으며 공식 합류했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간 합당 절차에 돌입한 것이 내부 진영 다지기와 결속의 모멘텀이 됐다"고 분석했다.

지기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묻는 결과, 이재명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49.5%, 윤석열은 3.5%포인트 내린 40.6%로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9%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만월수 2.1%, 심상정 1.0% 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1.4%, 없음/무응답은 5.4%였다.

대선 투표 의향에선 '투표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92.6%(반드시 76.4%, 기급적 16.2%)로 나타났고,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6.5%(전혀 3.1%, 별로 3.4%)로 조사됐다.

이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층(r=231)에선 이재명 44.6%, 윤석열 42.1%, 만월수 5.1%, 심상정 2.4% 순으로 집계됐다. 적극투표층에서도 전주 대비 이 후보는 1.8%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내렸다.

사회적 약국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는 이재명 40.4%, 윤석열 35.3%, 만월수 7.5%, 심상정 5.9% 순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6~31일 연세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3037명을 대상으로 무선(95%)·유선(5%)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40.9% 윤석열 39.2%…李, 尹에 첫 추월[리얼미터]

李,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尹에 처음으로 역전
李, 대부분 계층 상승… 20대, 李 33.6%
尹 28%
당선 가능성은 李 49.5% 尹 40.6%…
오차 밖 격차

새해 벽두 공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추월한 가운데, 리얼미터마저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친 것으로 3일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지난해 12월 5주차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40.9%, 윤석열 39.2%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올랐으나, 윤 후보는 1.2%포인트 하락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이 후보가 선두로 나타났다.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7%포인트였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6.6%, 심상정 정의당 후보 3.0% 순이었다. ‘기타 후보’ 2.5%, ‘없음’ 5.7%, ‘모름·무응답’ 2.1%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7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승했고, 진보층(4.8%포인트 ↑, 66.4%→71.2%)과 중도층(1.1%포인트 ↑, 39.2%→40.3%)에서 반등했다.

윤 후보는 TK와 호남, 50대와 70세 이상에

서 오른 것 외에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고, 중도층(3.5%포인트 ↓, 41.9%→38.4%), 진보층(2.4%포인트 ↓, 15.9%→13.5%), 보수층(2.3%포인트 ↓, 66.7%→64.4%)에서도 내림세를 보였다.

여기에 20대에선 이재명 후보가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33.6%, 윤석열 후보가 6.6%포인트 내린 28.0%로 뒤집혔다. 특히 20대 남성에서 윤석열(39.0%→25.0%)은 14.0%포인트 급락했으나, 이재명(29.0%→38.3%)은 9.3%포인트 상승해 대비를 이뤘다.

또 이 후보의 진보층 지지율이 71.2%로 상승한 반면, 윤 후보의 보수층 지지율은 64.4%로 하락해 각각 진영내 응집력에서도 윤 후보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내 역할을 맡으며 공식 합류했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간 합당 절차에 돌입한 것이 내부 진영 다지기와 결속의 모멘텀이 됐다”고 분석했다.

지지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 이재명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49.5%, 윤석열은 3.5%포인트 내린 40.6%로 양자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9%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안철수 2.1%, 심상정 1.0% 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1.4%, 없음·잘모름은 5.4%였다.

대선 투표 의향에선 ‘투표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92.6%(반드시 76.4%, 가급적 16.2%)로 나타났고,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6.5%(전혀 3.1%, 별로 3.4%)로 조사됐다.

이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

층(n=2313)에선 이재명 44.6%, 윤석열 42.1%, 안철수 5.1%, 심상정 2.4% 순으로 집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전주 대비 이 후보는 1.8% 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1.2%포인트 내렸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는 이재명 40.4%, 윤석열 35.3%, 안철수 7.5%, 심상정 5.9% 순으로 뽑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6~31일 엿새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3037명을 대상으로 무선(95%)·유선(5%)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8\%$ 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50
언론사	서울뉴스통신 주식회사(서울뉴스통신)
심의대상	서울뉴스통신 1월 3일자 정치면 「이재명 41.0%, 윤석열 37.1%…李, 3주 연속 우위」 및 1월 4일자 정치면 「리얼미터 등 6개 여론조사… 이재명 1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KSOI] 이재명 41.0%, 윤석열 37.1%...李, 3주 연속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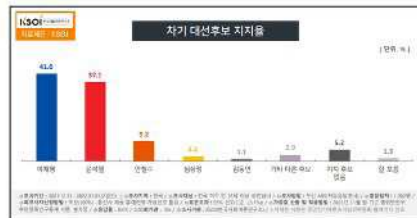
▲ 송혜숙 기자 | © 승인 2022.01.09.09:30



이재명 후보 (좌) 윤석열 후보(우)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1.0%로 국민의힘윤석열(37.1%) 대선 후보를 3.9%포인트 차로 앞서며 3주 연속 우위를 차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난 12월 31일~1월 1일까지 이들 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었다.



자기 대선후보 지지율 / KSOI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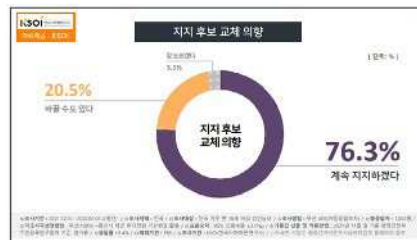
그 결과 이재명 후보 전주대비 3.4%포인트 상승해 41.0%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37.1%로 1.3%포인트 몰랐다.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9.2%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2.2%순이다.

기타 다른 후보는 2.9% 지지후보 없거나(5.2%) 잘 모름(1.3%)은 6.5%이다.

'자기 대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49.1% 윤 후보가 40.0%로 나타나 지난 12월13일 공표치 대비 이 후보는 4.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윤 후보는 6.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3.3% 심 후보는 0.4%로 뒤를 이었다.

'자기 후보 교체'에 대한 질문에는 76.3%가 '계속 지지한다'고 답해 전주 보다 4.7%포인트가 상승했다.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은 전주 보다 4.2%포인트 하락한 20.5%로 나타났다.



자기 후보 교체 의향 / KSOI 제공

지난 해 12월 6일 공표 조사 이후 이재명·윤석열· 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모름) 추이를 보면, 이재명·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오르고, 윤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률 8.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명 41.0%, 윤석열 37.1%...

후, 3주 연속 우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1.0%로 국민의힘 윤석열(37.1%) 대선 후보를 3.9%포인트 차로 앞서며 3주 연속 우위를 차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난 12월 31일~1월 1일까지 이틀 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 전주 대비 3.4%포인트 상승해 41.0%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37.1%로 1.3%포인트 올랐다.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9.2%,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2.2%순이다.

기타 다른 후보는 2.9%, 지지후보 없거나 (5.2%) 잘 모름(1.3%)은 6.5%이다.

‘차기 대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49.1%, 윤 후보가 40.0%로 나타나 지난 12월 13일 공표치 대비 이 후보는 4.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윤 후보는 6.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3.3%, 심 후보는 0.4%로 뒤를 이었다.

‘지지 후보 교체’에 대한 질문에는 76.3%가 “계속 지지한다”고 답해 전주보다 4.7%포인트가 상승했다.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4.2%포인트 하락한 20.5%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6일 공표 조사 이후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지지 후보 없음+모름) 추이를 보면, 이재명·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오르고, 윤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률 8.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통신 2022년 1월 4일자 정치면〉

보도내용

리얼미터 등 6개 여론조사... 이재명 1위

여론조사 기관별 대선후보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에서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리얼미터 등 6개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51
언론사	주식회사 광주매스컴(무등일보)
심의대상	무등일보 1월 4일자 1면 「이재명으로 기울었다…연말연시 골든크로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등일보
2022년 01월 04일
1면 (종합)

이재명으로 기울었다 연말연시 골든크로스

여론조사 결과 이·윤, 19 대 2
오차 밖 7건 중 10%p 이상 3건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앞선 결과가 다수 나왔다.

이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앞지락뒤지락 혼전 양상이었다면,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이 후보의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날까지 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21건 가운데 19건이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친 19건의 여론조사 중에서 오차범위 밖 차이는 7건, 나머지는 오차범위 이내였다. 격차 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1~5.9%p 12건, 6.0~9.9%p 4건, 10.0%p 이상 3건 등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이 후보는 39.3%로, 27.3%를 보인 윤 후보를 눌렀다. 이 조사의 두 후보 격차는 12.3%p로, 연말연시 쏟아진 각종 조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CBS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이 후보는 10.6%p 격차로 윤 후보를 이겼다. 이 조사에서 지지율은 이 후보 35.8%, 윤 후보 25.2%였다.

이 후보가 앞선 조사 중 가장 적은 격차는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씨지에 의뢰한 조사로 0.9%p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이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제친 2건의 여론조사 격차는 각각 0.1%p, 0.4%p였다.

'0.1%p' 격차는 조원씨앤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지난해 12월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천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1.8%p)에서 나왔다. 이 후보 지지율 39.4%, 윤 후보 39.5%였다.

'0.4%p' 차이는 PNR-퍼피플네트웍스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p)에서 나왔으며 이 후보 지지율 40.5%, 윤 후보 40.9%였다.

위 모든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권현우 기자 cr-2022@ndb.co.kr
(14.9>19.45cm)

이재명으로 기울었다...연말연시 골든크로스

여론조사 결과 이·윤, 19대 2
오차 밖 7건 중 10%p 이상 3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앞선 결과가 다수 나왔다.

이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엇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이었다면,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이 후보의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21건 가운데 19건이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친 19건의 여론조사 중에서 오차범위 밖 차이는 7건, 나머지는 오차범위 이내였다. 격차 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1~5.9%p 12건, 6.0~9.9%p 4건, 10.0%p 이상 3건 등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에서 이 후보는 39.3%로, 27.3%를 보인 윤 후보를 눌렀다. 이 조사의 두

후보 격차는 12.3%p로, 연말연시 쏟아진 각종 조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CBS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에서 이 후보는 10.6%p 격차로 윤 후보를 이겼다. 이 조사에서 지지율은 이 후보 35.8%, 윤 후보 25.2%였다.

이 후보가 앞선 조사 중 가장 적은 격차는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씨치에 의뢰한 조사로 0.9%p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 이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제친 2건의 여론조사 격차는 각각 0.1%p, 0.4%p였다.

'0.1%p' 격차는 조원씨앤아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3천 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pm 1.8\%$)에서 나왔다. 이 후보 지지율 39.4%, 윤 후보 39.5%였다.

'0.4%p' 차이는 PNR(주)피플네트웍스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pm 3.1\%$)에서 나왔으며 이 후보 지지율 40.5%, 윤 후보 40.9%였다.

위 모든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52

언론사

주식회사 디지털타임스(디지털타임스)

심의대상

디지털타임스 1월 6일자 4면 「안철수 2030 지지율 2위... 처음으로 윤석열 제쳤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디지털타임스

2022년 01월 06일
(4면 (정지))

안철수 2030 지지율 2위... 처음으로 윤석열 제쳤다

19.1%로 오차범위 내 앞서
“청년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치”
설 전 3강 구도 형성 자신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상승세에 2030이 날개를 달아줬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안 후보가 윤 후보보다 우위를 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5일 공개한 2030세대 여론조사(YTN 의뢰, 조사기간 지난 3~4일, 전국 만 18~39세 남녀 102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다자강대결에서 1위는 33.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이어 안 후보가 19.1%, 윤 후보가 18.4%였다. 안 후보와 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였다. 1위인 이 후보와 2위인 안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4.3%포인트였다.

4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7.5%), 5위는 김동연 새로운미래 대선후보(1.4%)였다. 부동층은 17.4%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10% 대를 돌파했다. 특히 2030 세대의 지지 강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마니투데이 터300 의뢰, 조사기간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결과 이 후보가 37.6%로 1위, 윤 후보가 29.2%로 2위, 안 후보가 12.9%로 3위였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에서 7.5%였으

2030세대 대선후보 지지율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4일 전국 만 18~39세 1024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 무선ARS 100%, 응답률 6.9%



나 5.4%포인트 오르며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8~29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 후보가 27.2%로 가장 높았고, 안 후보가 19.7%, 윤 후보는 15.6%로 집계됐다.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가장 많았고,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였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19.3%였다.

안 후보는 2030 세대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203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청년 공약

을 정말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년 불공정 개선방안과 군대·주거·보육 등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 대선에 나왔다"면서 "제가 당선돼 정권교체를 하고 또 시대를 바꾸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와 만나거나 소통을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설 전까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3강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현재 대선에서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과거 발목잡기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리도 노력해 어떻게 하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the130k@

(22.9.16.7cm)

안철수 2030 지지율 2위...

처음으로 윤석열 제쳤다

19.1%로 오차범위 내 앞서

“청년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치”

설 前 3강 구도 형성 자신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상승세에 2030이 날개를 달아줬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안 후보가 윤 후보보다 우위를 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5일 공개한 2030세대 여론조사(YTN 의뢰, 조사기간 지난 3~4일, 전국 만 18~39세 남녀 1024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다자가상대결에서 1위는 33.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이어 안 후보가 19.1%, 윤 후보가 18.4%였다. 안 후보와 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7%포인트였다. 1위인 이 후보와 2위인 안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4.3%포인트다.

4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7.5%), 5위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1.4%)였다. 부동층은 17.4%였다.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10% 대를 돌파했다. 특히 2030 세대의 지지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머니투데이 더300 의뢰, 조사기간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 결과 이 후보가 37.6%로 1위, 윤 후보가 29.2%로 2위, 안 후보가 12.9%로 3위였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에서 7.5%였으나 5.4%포인트 오르며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8~29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 후보가 27.2%로 가장 높았고, 안 후보가 19.7%, 윤 후보는 15.6%로 집계됐다.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가장 많았고,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였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19.3%였다.

안 후보는 2030 세대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203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청년 공약을 정말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년 불공정 개선방안과 군대·주거·보육 등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 대선

에 나왔다”면서 “제가 당선돼 정권교체를 하고 또 시대를 바꾸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와 만나거나 소통을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설 전까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3강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

보는 “현재 대선에서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과거 발목잡기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라도 노력해 어떻게 하면 미래먹거리, 미래일 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53
언론사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
심의대상	한국경제 1월 6일자 6면 「安 2030 지지율, 尹 추월…“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국경제

2022년 1월 06일
06면 (정치)

安 2030 지지율, 尹 추월…“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

여론조사 2위-이재명은 33%
“尹 반사이익이라 생각 안 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기업 잘 돼야 경제 살아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30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안 후보의 전 연령대 평균 지지율이 12%에 달하기도 했다. 윤 후보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안 후보가 야권과 보수층 표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3. 4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대결(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 양선거연조사심의위원회의 참고)에서 안 후보는 19.1%의 지지를 얻어 윤 후보(18.4%)를 앞섰다. 33.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2위였다.

청년세대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을 실현하기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물어봤을 때도 안 후보는 22.2%를 얻어 이 후보(24.8%)와 오차범위에서 각축을 벌였다. 공정을 기자로 내세웠던 윤 후보는 14.9%에 그쳤다.

한국갤럽의 3~4월 조사(전 연령)에서도 안 후보 지지율은 12.9%로 직전 조사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 연차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맨 왼쪽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병준 기자

7.5%보다 5.4%포인트 뒤였다. 이 후보는 37.6%, 윤 후보는 29.2%였다.

안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자신의 지지를 상승세에 대해 “청년 공약을 열심히 연구에 해결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평가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꼭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게 제대로 된 정책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지지율은) 다른 후보에게 갔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으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시대정신인 이 시대에 제 역할이 있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왔다”며 “저만이 시대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경제 정책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V3(백산)를 만들어 팔았는데 전부 대기업 납품이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줬다”며 “(대기업) 부장 집 앞에 서서 그 부장님이 술 뒤에 들어오면 소매 끝을 붙잡고 돈을 달라고 외쳤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의무감, 사명감 때문에 경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G25-2-17.2cm



안 2030 지지율,尹 추월… “저는 정책과 전문성 갖춰”

여론조사 2위…이재명은 33%
“尹 반사이익이라 생각 안 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기업 잘 돼야 경제 살아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30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안 후보의 전 연령대 평균 지지율이 12%에 달하기도 했다. 윤 후보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안 후보가 야권과 보수층 표를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3, 4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 후보 다자대결(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pm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서 안 후보는 19.1%의 지지를 얻어 윤 후보(18.4%)를 앞섰다. 33.4%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2위였다.

청년세대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을 실현하기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물어봤을 때도 안 후보는 22.2%를 얻어 이 후보(24.8%)와 오차범위에서 각축을 벌였다. 공정을 기치로 내세웠던 윤 후보는 14.9%에 그쳤다.

한국갤럽의 3~4일 조사(전 연령)에서도 안 후보 지지율은 12.9%로 직전 조사(7.5%)보다 5.4%포인트 뛰었다. 이 후보는 37.6%, 윤 후보는 29.2%였다.

안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자신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청년 공약을 열심히 연구해 해결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평가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꼭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게 제대로 된 정책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지지율은) 다른 후보에게 갔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으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시대정신인 이 시대에 제 역할이 있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왔다”며 “저만이 시대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경제 정책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V3(백신)를 만들어 팔았는데 전부 대기업 납품이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줬다”며 “(대기업) 부장 집 앞에 서서 그 부장님이 술 취해 들어오면 소매 끝을 붙잡고 돈을 달라고 외쳤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의무감, 사명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56
언론사	주식회사 뉴스투데이(목포투데이)
심의대상	목포투데이 1월 12일자 4면 「안철수 급부상, 2030 지지율 역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안철수 급부상, 2030 지지율 역전

국민의힘 긴장...일시적 현상 아닌 듯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선대위를 전격 해체하고 발표된 2030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39살 이하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해 지난 5일 내놓은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33.4%, 안철수 후보는 19.1%, 윤석열 후보는 18.4%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스웜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 지지율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차밖에 안 나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7.5%를 기록했다. 답변을 '없음'(12.3%)이거나 '잘 모름'(6.1%)이라고 한 부동층은 17.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 힘 선대위 해체로 이번 대선에서 아권 단일화 없는 정권교체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국민의 힘에서 발 벗고 단일화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 중이라 자칫하면 제1야당이 후보를 내보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면 여론조사 100% 반영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불발돼도 완주하고 얻는 시너지 효과가 많으므로 큰 손해는 아니다. 이번의 상승세를 단단히 붙들면 두번 올해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당당한 캐스팅 보드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윤석열을 떠난 2030은 안철수를 선택했다. 안 후보에게 붙어오는 혼종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양레오키자

〈목포투데이 2022년 1월 12일자 4면〉



안철수 급부상, 2030 지지율 역전

국민의힘 긴장... 일시적 현상 아닌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를 전격 해체하고 발표된 2030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39살 이하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3.1\%$ 포인트)해 지난 5일 내놓은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33.4%, 안철수 후보는 19.1%, 윤석열 후보는 18.4%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스윙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 지지도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7.5%를 기록했다. 답변을 ‘없음’(12.3%)이거나 ‘잘 모름’(5.1%)

이라고 한 부동층은 17.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로 이번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없는 정권교체는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발 벗고 단일화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 중이라 자칫하면 제1야당이 후보를 내보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면 여론조사 100% 반영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불발돼도, 완주하고 얻는 시너지 효과가 많으므로 큰 손해는 아니다. 이번의 상승세를 단단히 붙들어두면 올해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당당한 캐스팅 보트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윤석열을 떠난 2030은 안철수를 선택했다. 안 후보에게 불어오는 훈풍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57
언론사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
심의대상	일간경북신문 1월 20일자 6면 「뒤집혔다…尹 36.1 vs 李 34.9%」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간경북신문

뒤집혔다…尹 36.1 vs 李 34.9%

윤석열 급등…안철수 1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7~1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지율은 34.9%, 윤석열은 36.1%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13.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3.9% 등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이 후보가

2.7%p(포인트) 떨어지고 윤 후보가 6.9%p 오르면서 두 후보 간 차이는 초접전(1.2%p 차이) 양상이었다.

윤 후보는 20대에서 29.1% 지지를 받아 23.3%에 그친 이 후보를 앞섰다. 연령대별로도 지난 조사보다 20대 13.5%p, 30대 10.7%p, 40대 10.3%p 등 고른 상승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10.7%p, 인천·경기 +9.0%p)과 대전·충청(+10.8%p), 부산·울산·경남(+7.5%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윤 후보 39.6%, 이 후보 25.2% 등으로 격차가 커졌다. 중도층에서도 윤 후보가 35.8%로 이 후보

(31.6%)보다 4.2%p 높았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6.5%p 앞섰으나 뒤바뀌었다.

이 후보는 좀처럼 30%대를 뚫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 후보가 확정된 지난해 11월2주차 조사 이후 줄곧 32%~37%대 사이를 맴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권교체' 응답이 56%로 '정권유지'(36.7%) 여론보다 높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4.7%로 '잘하고 있다' 41.2%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9%, 민주당 32.5%, 국민의당 5.6%, 열린민주당 3.9%, 정의당 3% 등이다.

13.5% 지지를 얻은 안 후보는 윤 후보와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 후보 39%, 윤 후보 42.5%, 심 후보 9.1%로 조사된 반

면 안 후보와 3자 대결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 35.7%, 안 후보 43.6%, 심 후보 8.1%로 집계됐다. 이 후보 대비 윤 후보는 3.5%p 우위를 보였는데, 안 후보는 7.9%p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67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17.6%다.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무선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무선 87.8%, 유선 12.2%다. 표본은 통상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방식으로 가중값을 산출,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시스
(23.6×10.0cm)

〈일간경북신문 2022년 1월 20일자 6면〉



뒤집혔다…尹 36.1 vs 李 34.9%

윤석열 급등…안철수 1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7~1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지율은 34.9%, 윤석열은 36.1%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13.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3.9% 등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이 후보가 2.7%p(포인트) 떨어지고 윤 후보가 6.9%p 오르면서 두 후보 간 차이는 초접전(1.2%p 차이) 양상이었다.

윤 후보는 20대에서 29.1% 지지를 받아 23.3%에 그친 이 후보를 앞섰다. 연령대별로도 지난 조사보다 20대 13.5%p, 30대 10.7%p, 40대 10.3%p 등 고른 상승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10.7%p, 인천·경기 +9.0%p)과 대전·충청(+10.8%p), 부산·울산·경남(+7.5%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윤 후보 39.6%, 이 후보 25.2% 등으로 격차가 커졌다. 중도층에서도 윤 후보가 35.8%로 이 후보(31.6%)보다 4.2%p 높았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6.5%p 앞섰으나 뒤바뀌었다.

이 후보는 좀처럼 30%대를 뚫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 후보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2주차 조사 이후 줄곧 32%~37%대 사이를 맴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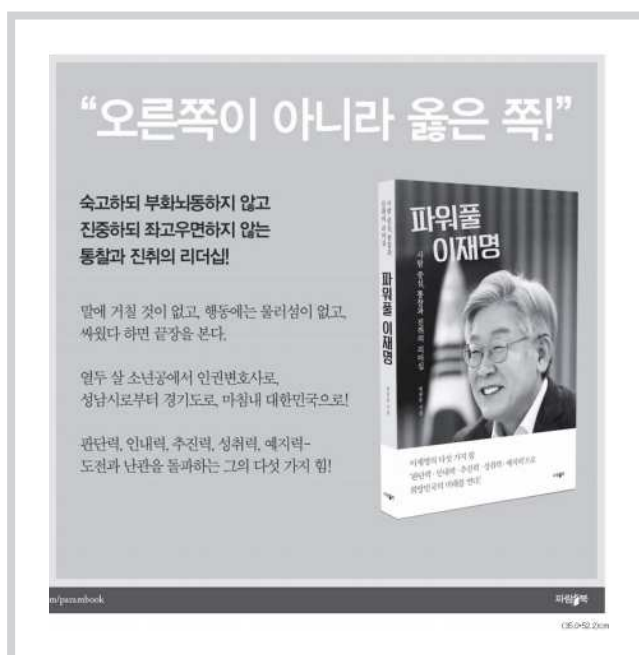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도 '정권교체' 응답이 56%로 '정권유지'(36.7%) 여론보다 높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4.7%로 '잘하고 있다' 41.2%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9%, 민주당 32.5%, 국민의당 5.6%, 열린민주당 3.9%, 정의당 3% 등이다.

13.5% 지지를 얻은 안 후보는 윤 후보와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이 후보 39%, 윤 후보 42.5%, 심 후보 9.1%로 조사된 반면 안 후보와 3자 대결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 35.7%, 안 후보 43.6%, 심 후보 8.1%로 집계됐다. 이 후보 대비 윤 후보는 3.5%p 우위를 보였는데, 안 후보는 7.9%p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67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17.6%다.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실시했으며 무선 87.8%, 유선 12.2%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방식으로 가중값을 산출,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58
언론사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브릿지경제신문)
심의대상	브릿지경제신문 1월 26일자 4면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 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2호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브릿지경제 2022년 1월 26일자 4면〉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63
언론사	주식회사 뉴시스(뉴시스(NEWSIS))
심의대상	뉴시스(NEWSIS) 1월 24일자 정치면 「윤석열 37.8%, 이재명 33.6%… 李·尹, 격차 4.2%포인트[글로벌리서치]」 및 2월 3일자 정치면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한길리서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 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내용 요약과 본문 등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 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 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윤석열 37.8%, 이재명 33.6%...李尹, 격차 4.2%포인트[글로벌리서치]

기사등록 2022/01/24 17:08:08

카카

기사내용 요약

안철수 '14%→10.1%' 지지율 담보...2강 1중 구도
윤·이심 대결서尹 승리, 안·이심 대결은李 승리



[서울=뉴스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양상을 보이며 '2강 1중' 구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37.8%, 이 후보는 33.6%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1월 16~17일)와 대비해 이 후보는 1%포인트 떨어진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포인트 올랐다. 두 사람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지난 조사(14%)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한 10.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8%로 그 뒤를 이었다.

아권 단일화를 통해 윤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면 이 후보를 꺾는 반면, 안 후보가 나설 경우 이 후보에 패배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 세 후보가 대결한다면 윤 후보 40.7%, 이 후보 36.8%, 심 후보 4.5% 순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

반면 이재명·안철수·심상정 세 후보가 대결한다면 이 후보 35.7%, 안 후보 29.7%, 심 후보 4% 순으로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뉴스시스 2022년 1월 24일자〉



윤석열 37.8%, 이재명 33.6%...

李·尹, 격차 4.2%포인트[글로벌리서치]

**안철수 '14%→10.1%' 지지율 답보...2강 1중
구도**

**윤·이·심 대결서尹 승리, 안·이·심 대결은
李 승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양상을 보이며 '2강 1중' 구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37.8%, 이 후보는 33.6%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1월 16~17일)와 대비해 이 후보는 1%포인트 떨어진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포인트 올랐다. 두 사람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지난 조사(14%)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한 10.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8%로 그 뒤를 이었다.

야권 단일화를 통해 윤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면 이 후보를 꺾는 반면, 안 후보가 나설 경우 이 후보에 패배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 세 후보가 대결한다면 윤 후보 40.7%, 이 후보 36.8%, 심 후보 4.5% 순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

반면 이재명·안철수·심상정 세 후보가 대결한다면 이 후보 35.7%, 안 후보 29.7%, 심 후보 4% 순으로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NEWSIS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한길리서치]

등록 2022.03.01 12:00:23 수정 2022.02.03 13:46:19

[이](#)
[상](#)
[관](#)
[가](#)
[가](#)


기사내용 요약

후 5.1%p 급반등 尹 0.5%p 하락...후, 역전
안철수 8.2%, 심상정 3.3%, 허경영 2.1%
후, 3040서 강세...尹, 60세서 과반 지지율



그림: 김민준 기자

[그래픽]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팡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를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협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뉴시스 2022년 2월 3일자〉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한길리서치]

李 5.1%p 급반등 尹 0.5%p 하락...李, 역전
안철수 8.2%, 심상정 3.3%, 허경영 2.1%
李, 3040서 강세...尹, 60세서 과반 지지율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험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64
연론사	대한미디어 주식회사(The대한일보)
심의대상	The대한일보 2월 4일자 3면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부제와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한일보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반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선 전문가 한길리서치가 루키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

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을 집계했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명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2%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 응답률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8.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지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평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3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한 지역에서 상대편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8.0%를 얻으면서 이 후보(28.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다.

자세한 조사결과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2022. 2. 4. 12:55:44

〈The대한일보 2022년 2월 4일자 3면〉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李 5.1%p 급반등 尹 0.5% 하락... 李, 역전
안철수 8.2%, 심상정 3.3%, 허경영 2.1%
李, 3040서 강세... 尹, 60세서 과반 지지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반병 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p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p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p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협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65
언론사	주식회사 호남매일(호남매일)
심의대상	호남매일 2월 4일자 3면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부제와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호남매일

설 민심 ‘2강’...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2022년 02월 04일 03면 (종합)

李 5.1%p 급반등尹 0.5%p 하락...李, 역전

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편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율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7.8×12.0)c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반빙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

<호남매일신문 2022년 2월 4일자 3면>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李 5.1%p 급반등 尹 0.5% 하락… 李, 역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박빙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pm 3.1\%$ 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

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pm 3.1\%$ 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66
언론사	주식회사 광전매일신문(광전매일신문)
심의대상	광전매일신문 2월 4일자 3면 「이 5.1%p 급반등 윤 0.5%p 하락… 이, 역전 이, 3040서 강세… 윤, 60세서 과반 지지율」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전매일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반빙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팡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점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이 5.1%p 급반등 윤 0.5%p 하락… 이, 역전 이, 3040서 강세… 윤, 60세서 과반 지지율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열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편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

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점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협치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뉴스시스

(24.1×8.1)cm

<광전매일신문 2022년 2월 4일자 3면>



이 5.1%p 급반등 윤 0.5% 하락... 이, 역전 이, 3040서 강세... 윤, 60세서 과반 지지율

설 민심 '2강'...

이재명 40.4% 윤석열 38.5% 안철수 8.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반병 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pm 3.1\%$ 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 지지율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1월 8일~10일, 1014명 대상)보다 5.1%포인트로 증가한 반면 윤 후보는 0.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후보 간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2%,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각각 3.3%와 2.1%를 얻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0.7%,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였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은 4.7%였고 ‘기타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0.6%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0.9%였다. 세대별로 지지율이 판이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앞서 있는 가운데 윤 후보는 60대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3.1%, 윤 후보는 34.7%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이 후보는 50.5%로 윤 후보(30.1%)를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후보는 49.3%로 윤 후보(31.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0.9%로, 이 후보(32.1%)를 앞질렀다. 18~29세에서는 이 후보가 31.2%, 윤 후보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캐스팅 보트로 평가되는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에서 모두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4.8%,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를 획득하면서 두 후보 모두 협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가 49.0%를 얻으면서 이 후보(26.7%)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ARS 83.8%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pm 3.1\%$ p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67
언론사	주식회사 문화일보(문화일보)
심의대상	문화일보 1월 27일자 4면 「단일화 적합도는 安...경쟁력은 尹이 앞서」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 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 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일화 적합도는 安... 경쟁력은 尹이 앞서

“단일화 필요하지 않다” 46%
“필요” 42%에 오차범위 내 앞서

■ 문화일보 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중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는 안 후보가 다소 높지만 경쟁력은 윤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관련 질문 내용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셈이어서 실제 두 후보의 단일화가 추진될 경우 조사 문항과 대상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이 46.8%로, ‘필요하다고 본다’는 응답(42.3%)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모름·무응답



은 10.9%다. 야권 성향 응답자는 단일화에 공감하고 있다. 윤 후보 지지층의 65.8%와 안 후보 지지층의 61.2%가 각각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 지지층은 15.1%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정권 교체 지지층(63.5%)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층(61.1%)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에 대해선 안 후보가 43.1%를 기록, 윤 후보(37.6%)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였다. 다른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1%였고 ‘없다’

는 응답은 13.5%, 모름·무응답은 2.7%였다. 하지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로 범위를 좁히면 윤 후보(53.8%)가 안 후보(38.5%)보다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단일화 시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윤 후보(51.5%)가 안 후보(30.9%)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3.1%의 응답자는 다른 후보를 꼽았고 ‘없다’는 응답은 11.3%, 모름·무응답은 3.2%였다.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로 범위를 좁힐 경우 윤 후보(63.8%)가 안 후보(27.8%)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조재연 기자

〈문화일보 2022년 1월 27일자 4면〉



단일화 적합도는 安… 경쟁력은 尹이 앞서

“단일화 필요하지 않다” 46%

“필요” 42%에 오차범위내 앞서

문화일보 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중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는 안 후보가 다소 높지만 경쟁력은 윤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관련 질문 내용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셈이어서 실제 두 후보의 단일화가 추진될 경우 조사 문항과 대상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이 46.8%로, ‘필요하다고 본다’는 응답(42.3%)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10.9%다. 야권 성향 응답자는 단일화에 공감하고 있다. 윤 후보 지지층의 65.8%와 안 후보

지지층의 61.2%가 각각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 지지층은 15.1%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정권교체 지지층(63.5%)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층(61.1%)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에 대해선 안 후보가 43.1%를 기록, 윤 후보(37.6%)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였다. 다른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1%였고 ‘없다’는 응답은 13.5%, 모름·무응답은 2.7%이었다. 하지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로 범위를 좁히면 윤 후보(53.8%)가 안 후보(38.5%)보다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단일화 시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윤 후보(51.5%)가 안 후보(30.9%)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3.1%의 응답자는 다른 후보를 꼽았고 ‘없다’는 응답은 11.3%, 모름·무응답은 3.2%였다.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로 범위를 좁힐 경우 윤 후보(63.8%)가 안 후보(27.8%)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한달만에 재역전

李 2.9%P ↓...尹은 7.9%P ↑

“지지후보 안바꾼다” 85.8%

역대 대선 사상 최고의 혼전
설연휴 막판 의전논란 영향도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다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설연휴 이후 민심의 흐름을 엿볼수 있는 조사로, 두 후보의 위치가 또다시 바뀌면서 혼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지지후보 교체 의향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집중됐던 배우자 검증의 칼날이 설 연휴 기간 과잉의전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로 향하면서 이 후보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는 이달 초 선거대책위원회의 전격 해체를 통한 쇄신책 등 승부수가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진 흐름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빼앗겼던 20대와 중도층에서 과반으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직전 조사(작년 12월 27~28일)보다 7.9%포인트 상승한 45.7%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2.9%포인트 하락한 40.0%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 내 5.7%포인트 격차로 이 후보를 밀어내고 5주 만에 선두자리를 탈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6.9%,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였다.

윤 후보는 20대에서 34.8%포인트 오른 53.7%를 기록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13.5%포인트 끌어올리며 51.2%를 얻어 과반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20대에서 15.1%포인트 빠진 22.0%를, 중도층에서 4.3%포인트 떨어진 34.8%를 기록했다.

이강윤 KSOI 소장은 “설 연휴기간 불거진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이 일정 부분 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성과 상식을 중시하는 중도층이 이 후보에게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까지 한 달여를 앞두고 부동산과 지지후보 교체 의향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은 3.7%(지지할 후보 없음 2.9%+잘 모름 0.8%)로 지난 조사 대비 6.1%포인트나 감소했다. 지지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85.8%로 11.4%포인트 증가한 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의견은 12.6%로 10.3%포인트나 감소했다.

윤 후보 지지층 59.7%는 윤 후보 지지 이유로 “정권교체를 위해서”를 꼽았고, 이 후보 지지층 57.5%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응답했다.

보수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윤 후보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후보별 경쟁력을 물어본 결과, 47.4%가 윤

후보를, 30.3%가 안 후보를 선택했다.

차기 대선 성격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심판을 위해 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정권교체론은 2.4%포인트 오른 50.0%로 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안정적 국정운영과 연속성을 위해 여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국정안정론은 0.7%포인트 하락한 40.1%였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7.1%, 민주당 35.0%, 국민의당 10.2%, 정의당 4.4%였다. 국

민의힘 2.6%포인트, 민주당 3.7%포인트, 국민의당 3.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는 윤 후보(40.2%)와 이 후보(39.5%)가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조사(ARS) 100%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70
언론사	주식회사 뉴스토마토(뉴스토마토)
심의대상	뉴스토마토 2월 10일자 2면 「갈팡질팡 서울 2030 "김혜경 갑질 논란 보고 마음 굳혔어요"」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의 입장만을 보도함으로써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아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1호,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뉴스토마토

의심대상 언론사
신문 1종

갈팡질팡 서울2030 "김혜경 갑질 논란 보고 마음 굳혔어요"

언론
8~9일 거리 민심탐방

"정책은 괜찮다 싶었는데..."
"공정 내세운 이재명에 배신감"
"내일 투표하면 윤석열 찍을 것"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생각"

"김혜경이 갑질 논란을 보고 발칵 뉘엿이었어. 이재명 후보한테 배신감도 좀 느껴요.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은 좀 서늘해 보여요. 이재명(20대)도 낯설고 언짢다고 감라치기 하는 것도 속이 뻘뻘하네요. 배우자 논란도? 부인 김진희의 '스페셜'이 더 크로. 근대 박상우를 찍을지는 선거일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정권교체가 됐으면 해오. 문제 인정받아 부동산정책부터 경제, 코로나19 방역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대선을 한 달이 남은 8일과 9일 <뉴스토마토>

가 만난 서울의 2030 청년세대는 투표의 무게를 덜어낼 만큼 국민투표 후보로 확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양당 주자 모두에 대한 비교감이 강한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앞세웠다. 최재형이 영호를 전(전)후보로 2월 10일자 실 연후 민심 탐방을 진행하고자 만났던 서울의 2030은 주로 "아직까지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의 갑질 논란이 타자자 민심은 요동쳤다. 2030은 윤석열-윤영호를 강조했던 이 후보 가족의 '내로남불' 논란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20대 최민준(이름 김모)씨는 "원인 당할 무효화하면 윤석열을 찍겠다"면서 "보수가 당선돼야 집값이 떨어지고 취업도 잘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3세대 정책은 이재명이 조금 더 괜찮았다 싶었는데, 김혜경은 이 안에 대차하고 해명하는 걸 보곤 비교감이 높아졌다"며 "대통령이 잘못이 나왔을 때도 그럴지언만 이번에 보니까 정말 알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주면서 많이 한단"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에서 만난 30대 강모씨도 "윤석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강씨는 "윤석열과 이재명 둘 중 어떤가 하면 선택할 후보는 모르겠어. 이재명도 윤석열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 비교감"이라고면서도 "일단 정권교체 더 더 시급하기 때문에 후보자나 배우자 논란은 눈에 잘 안 띈다"고 했다. 강씨는 정권교체 이유로 문재인정부 상황을 꼽았다. 그는 "정년퇴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화순정도에 상설감시 등 제 정책이었던 것"이라며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서울의 2030은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굳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도 괜찮은 야권인당 후보가 뽑혔다. "원인 당할 무효화하면 윤석열을 찍겠다"는 30대 이모씨는 "이후 후보를 뽑지만 정책이 구별도 안 되고, 민심 얻기만 급급한 것 같다"며 "어쨌든 정권교체를 해야 하나까 좀 더 깨끗해 보이는데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2030 민심이 갈팡질팡해서 정권교체도 들어선 데는 김혜경이 논란이 큰정적이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여론의 내로남불 비판을 전상에 하는 자적들이 이어졌다. 심지어 과거 이 후보의 '명수

욕설'까지 소환했다. 가족 전체가 욕을 들어야 했고, 이 후보가 강조해왔던 '갈팡' 이미지에도 큰 흠집이 생겼다.

관악구 봉림동의 20대 정모씨에게는 "김진희에 허위정보도 문제지만, 김혜경이 논란이 더 크다"며 "김씨 논란을 보곤 이 후보의 명수욕설과 김씨가 조국과 싸운 것까지 생각이 날 정도였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명수 욕설 등을 수습하기 위해 비윤의 가족사를 설명하며 논리로 사자까지 했다. 하지만 김혜경이 논란에 사자의 진정성은 믿기 힘들어 보여 버렸다. 정씨는 "2030에게 허위정보 의혹은 남의 일일 수도 있지만 '갈팡'은 당장 직장에 위험해 뒷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만난 20대 이모씨는 "김진희에 허위정보 문제에는 윤 후보와 정권교체"라며 "김혜경이 논란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일로 더 큰 윤석열과도 대립점이 돼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서울 2030 민심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2030은 정권교체를 앞세워 정권교체

를 더 희망 듯 했다. 윤 후보에 대한 무효화 정권교체를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갈팡'을 중요하게 여기는 2030은 윤석열 후보나 윤영호 후보의 정권교체로 대체된 지 오래였다.

양천구 목동의 안모씨(30대)는 "이재명이나 정세균에게도 기우뚱기와 불평등에 더 큰 관심이 있다"면서 "가장 상식적으로 공약을 내건 정당을 갖춘 후보는 실 후보"라고 했다. 강동구 양사동의 신모씨(30대)는 "인정사를 보면 안 후보야말로 신임을 가졌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가족에 전의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후에 서울의 2030은 윤 후보와 국민투표에 대한 표심을 밝히기 위해 2021년 2월 20일 일식, 아산가부터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갈팡치기', '갈팡치기', '명수'로, '명수'로 되보" 등으로 급정했다. 윤 후보를 지지한 2030 중에서도 부정적 견해를 많았다. 다만 '차별 시대, 계층을 위한 표심교체를 나쁘게 볼 수 없다',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위해서 분가

비한 전략"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최종호 기자, 유근우·이승우 기자 choh@skkumato.com

<뉴스토마토 2022년 2월 10일자 2면>

갈팡질팡 서울2030 “김혜경 갑질 논란 보고 마음 굳혔어요”

“정책은 괜찮다 싶었는데…”

“공정 내세운 이재명에 배신감”

“내일 투표라면 윤석열 찍을 것”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생각”

“김혜경 씨 갑질 논란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배신감도 좀 느껴요.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좀 서툴러 보여요. 이대남(20대 남성) 표 얻겠다고 갈라치기 하는 것도 속이 뻘하잖아요. 배우자 논란요? 부인 김건희 씨의 ‘스케일’이 더 크죠. 근데 막상 누굴 찍을지는 선거일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정권교체가 됐으면 해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부터 경제, 코로나19 방역 등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8일과 9일 <뉴스토마토>가 만난 서울의 2030 청년세대는 투표의 무게추를 점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양강 주자 모두에 대한 비호감이 강한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앞세웠다. 취재팀이 열흘 전(1월 30일~이달 2일까지) 설문후 민심 동향을 청취하고자 만났던 서울의 2030은 주로 “아직까지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 논란이 터지자 민심은 요동쳤다. 2030은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던 이 후보 가족의 ‘내로남불’ 논란에 상

당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20대 취업준비생 김 모 씨는 “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윤석열을 찍겠다”면서 “보수가 당선돼야 집값이 떨어지고 취업도 잘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정책은 이재명이 조금 더 괜찮겠다 싶었는데, 김혜경 씨 논란에 대처하고 해명하는 걸 보고선 비호감이 높아졌다”며 “대장동 의혹이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보니까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한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에서 만난 30대 강 모 씨도 “윤석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강씨는 “윤석열과 이재명 중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후보는 고르라면 이재명이다. 윤석열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하는 것도 없어서 비호감”이라면서도 “일단 정권교체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후보 자질이나 배우자 논란은 눈에 잘 안 띈다”고 했다. 강씨는 정권교체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꼽았다. 그는 “청년들에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취준생들에게 상실감을 준 게 결정적이었다”며 “또래들도 이때부터 ‘반문’이 됐다”고 했다.

서울의 2030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굳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뽑혀도 괜찮다는 반응이었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30대 이 모씨(여)는 “여러 후보를 봤지만 정책이 구분도 안 되고, 민심 얻기만 급급한 것 같다”며 “어쨌든 정권교체를 해야 하니까 좀 더 깨끗해 보이는 안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2030 민심이 갈팡질팡에서 정권교체로 돌아

선 데는 김혜경 씨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여권의 내로남불 비판을 연상케 하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심지어 과거 이 후보의 ‘형수 욕설’지 소환됐다. 가족 전체가 욕을 들어야 했고, 이 후보가 강조해왔던 ‘공정’ 이미지에도 큰 흠집이 생겼다.

관악구 봉천동의 20대 정 모 씨(여)는 “김건희 씨 허위경력도 문제지만, 김혜경 씨 논란이 더 크다”며 “김씨 논란을 보고선 이 후보의 형수욕설과 김씨가 조카와 싸운 것까지 생각이 날 정도였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등을 수습하기 위해 비운의 가족사를 설명하며 눈물로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김혜경 씨 논란에 사과의 진정성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정 씨는 “2030에게 허위경력 의혹은 ‘남의 일’일 수도 있지만 ‘갑질’은 당장 직장에 취업해 윗사람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만난 20대 이 모 씨는 “김건희 씨 허위경력 문제는 윤 후보와 결혼 전의 일”이라며 “김혜경 씨 논란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일로 더 큰 불공정이고, 대통령이 돼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서울 2030 민심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2030은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를 더 원하는 듯 했다. 윤 후보에 대한 투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2030은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 보였다.

양천구 목동의 안 모 씨(30대 · 여)는 “개혁이나 경제문제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더 큰 관심이 있다”면서 “가장 상식적으로 공약을 내고 진정성을 갖춘 후보는 심 후보”라고 했다. 강동구 암사동의 신 모 씨(30대)는 “인생사를 보면 안 후보야말로 신념을 가졌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가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의 2030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 군인 월급 200만원 인상,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선 대다수가 ‘편가르기’, ‘갈라치기’, ‘혐오 조장’, ‘정치적 퇴보’ 등으로 규정했다. 윤 후보를 지지한 2030 중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다만 “특정 세대, 계층을 위한 표심잡기를 나쁘게 볼 순 없다”,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위해선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72
언론사	주식회사 국제신문(국제신문)
심의대상	국제신문 2월 22일자 4면 「유력해진 다자대결 구도...李 비상체제 돌입 총력전」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며, 후보자 간 지지율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부제와 본문에서 후보자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제신문

2022년 02월 22일
04면 (정치)

유력해진 다자대결 구도...李 비상체제 돌입 총력전

KSOI 조사 6주 만에尹에 앞서
의원들에 뒷골목 선거운동 지시
SNS 홍보 등 지지층 결집 사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다자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 지역구 의원들에게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을 지시하는 등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1일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결렬과 관련, "저희는 4자 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라라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일화 이슈가 겹쳤기 때문에 이제 양 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는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열흘이 승부처"라고 전망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충남 아산 온양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에게 열세를 보이지만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지난 18·19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앞선 것으로 나온 것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조사에서 이 후보는 43.7%, 윤 후보는 42.2%를 기록했다. 지난 주 대비 이 후보는 3.3%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1.3%포인트 하락하며 순위가 6주만에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전일부터 선대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조직을 총 가동하고 있다. 대선을 보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현장 조직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에게 밤 10시까지 현장 선거운동을, 당원들에게 '왜 이재명인가'를 주제로 영상(소츠 등)을 제작하는 등 1인 미디어 활동도 나서 달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전날 회견에서 "선출직 의원을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저도 선대위 당사에서 속삭이면 서 전 상황을 진두지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기강 단속 차원에서 유흥을 금지하고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 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상체제 운영지침'을 각 시도당에 보냈다. 이는 이광재(강원 원주갑)·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골프를 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경고 조치를 받은 때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조원호 기자

(17.3*13.6)cm



유력해진 다자대결 구도…李 비상체제 돌입 총력전

KSOI 조사서 6주 만에 尹에 앞서
의원들에 뒷골목 선거운동 지시
SNS 홍보 등 지지층 결집 사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다자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 지역구 의원들에게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을 지시하는 등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1일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결렬과 관련, “저희는 4자 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일화 이슈가 겹쳤기 때문에 이제 양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는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열흘이 승부처”라고 전망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열세를 보이지만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지난 18·19일, 자세한 사

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앞선 것으로 나온 것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조사에서 이 후보는 43.7%, 윤 후보는 42.2%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지난 주 대비 이 후보는 3.3%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1.3%포인트 하락하며 순위가 6주 만에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선대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조직을 총 가동하고 있다. 대선을 보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현장 조직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에겐 밤 10시까지 현장 선거운동을, 당원들에겐 ‘왜 이재명인가’를 주제로 영상(숏츠 등)을 제작하는 등 1인 미디어 활동도 나서 달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전날 회견에서 “선출직 의원을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저도 선대위 당사에서 숙식하면서 전 상황을 진두지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부 기강 단속 차원에서 유흥을 엄격히 금지하고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상체제 운영지침’을 각 시도당에 보냈다. 이는 이광재(강원 원주갑)·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를 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경고 조치를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자심73

언론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의대상

조선일보 2월 26일자 5면 「5.6%p 격차가 1.6%p로…李 수도권서 역전, 尹2030 계속 우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022년 02월 26일
(토요일)

5.6%p 격차가 1.6%p로…李 수도권서 역전, 尹 2030 계속 우세

본지-TV조선 심의
대선 D-11 여론조사

조선일보-TV조선-컨타이너가 3·9 대선을 2주간만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안에 후보가 존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24일 실시한 이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6.5%)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0.9%)의 차이는 5.6%p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7일 7.1%p에서 0.5%p포인트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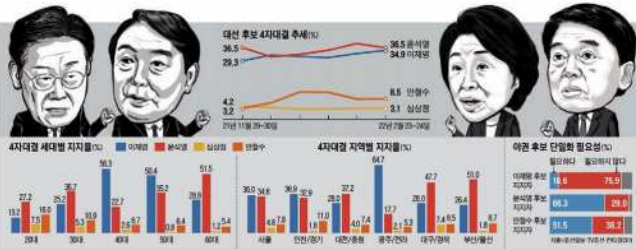
이후 후보의 변동은 수도권에서 지지율 회복이 크게 기여했다. 지난 조사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서울 30.4% 대 41.7%와 인천·경기 32.7% 대 38.1%에서 앞섰지만, 이번엔 서울 30.0% 대 34.8%와 인천·경기 30.9% 대 32.9%에서 역전을 기록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는 모두 5%p포인트 내외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25.9% 대 40.5%였고 이번엔 28.0% 대 47.7%로 윤 후보가 계속 우세를 유지 못한 가운데 차이가 22.0%포인트에서 18.7%포인트로 줄었다.

연립별로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0대(13.2% 대 27.2%)와 30대(25.2% 대 36.7%), 60대 이상(28.8% 대 51.5%) 등에서 앞섰고, 40대(26.3% 대 22.7%)와 50대(50.4% 대 35.2%)에선

경향 지지율 민주당 우세로 역전
선거일엔 兩 지지층 결집 나설것
尹 지지층 66% "野 단일화 필요"
李 지지층 10%만 찬성 대조

이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독립별로는 지난 조사는 자영업자에서 33.8% 대 40.4%로 윤 후보가 12.0%포인트 앞섰지만 이번엔 38.2% 대 42.6%로 차이가 4.4%포인트로 줄었다. 중도층에 지난 조사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8.8% 대 27.4%로 앞섰지만, 이번엔 35.7% 대 31.8%로 이 후보가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선 경향 지지율도 변화했다. 지난 조사는 국민의힘(39.9%)이 민주당(34.1%)보다 높았지만 이번엔 민주당(34.8%)이 국민의힘(32.8%)보다 높았다. 오직경향 내에서 순위가 바뀌었다. 중도층에 지난 조사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8.8% 대 27.4%로 앞섰지만, 이번엔 35.7% 대 31.8%로 이 후보가 더 높았다.

대 27.4%로 민주당이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이번 지지층이 선거를 앞두고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윤석열 후보의 안철수 후보의 '이런 단말화'에 대해서 윤석열의 37.5%가 '필요없다'고 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48.4%였다. 이광 단말화에 대한 견해는 윤석열의 37.5%와 안철수의 48.4%였다. 윤석열의 37.5%와 안철수의 48.4%였다.

『RDD』를 활용한 전화 면담을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로 층당 추출했으며, 인구 배분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불응률은 13.8%다.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출처: 여론조사전문기자

<조선일보 2022년 2월 26일자 5면>



5.6%p 격차가 1.6%p로... 윤 수도권서 역전,尹 2030 계속 우세

정당 지지율 민주 우세로 역전
선거 앞둔 與지지층 결집 나선 듯

尹지지층 66% “野 단일화 필요”
李지지층 10%만 찬성과 대조

조선일보·TV조선·칸타코리아가 3·9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여야 후보가 초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24일 실시한 이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36.5%)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4.9%)의 차이가 1.6%포인트에 불과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5%,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1%였다. 약 열흘 전인 12~13일 칸타코리아 조사에 비해 윤 후보(38.8→36.5%)의 하락과 이 후보(33.2→34.9%)의 상승이 대비되면서 차이가 5.6%포인트에서 좁혀졌다.

이 후보의 반등은 수도권에서 지지율 회복이 크게 기여했다. 지난 조사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서울(30.4% 대 43.7%)과 인천·경기(32.7% 대 39.1%)에서 열세였지만, 이번엔 서울(36.0% 대 34.6%)과 인천·경기(36.9% 대 32.9%)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지난 조사는 25.9% 대 49.5%였고 이번엔 28.0% 대 47.7%로 윤 후보가 계속 50%를 넘지 못한 가

운데 차이가 23.6%포인트에서 19.7%포인트로 좁혀졌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0대(13.2% 대 27.2%)와 30대(25.2% 대 36.7%), 60대 이상(28.8% 대 51.5%) 등에서 앞섰고, 40대(56.3% 대 22.7%)와 50대(50.4% 대 35.2%)에선 이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지난 조사는 자영업자에서 33.8% 대 46.4%로 윤 후보가 12.6%포인트 앞섰지만 이번엔 38.2% 대 42.6%로 차이가 4.4%포인트로 좁혀졌다. 중도층에선 지난 조사는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28.8% 대 37.4%로 앞섰지만, 이번엔 35.7% 대 31.8%로 이 후보가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선 정당 지지율도 변화가 컸다. 지난 조사는 국민의힘(39.9%)이 민주당(34.1%)보다 높았지만 이번엔 민주당(34.9%)이 국민의힘(32.8%)보다 높았다.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가 바뀐 데에는 중도층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조사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이 28.6% 대 38.3%로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이번엔 반대로 37.3% 대 27.4%로 민주당이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여권 지지층이 선거를 앞두고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응답자의 37.5%가 ‘필요하다’고 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49.4%였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견해는 각 후보 지지자별로 달랐다. 윤 후보 지지자는 66.3%가 단일화를 찬성했고 안 후보 지지자도 51.5%였다. 반면 이 후보 지지자는 단일화 찬성이 10.6%에 그쳤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의 경우엔 야권 단일화 찬성이 60.1%로 다수였고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는 찬성이 13.5%에 머물렀다.

◇조사 어떻게 했나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월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88.5%)와 집전화(11.5%)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로 할당 추출했으며,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셀 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 응답률은 13.6%다.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4. 권고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1
언론사	주식회사 광전매일신문(광전매일신문)
심의대상	광전매일신문 7월 14일자 11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희화화」 및 8월 4일자 11면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외부 기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특정 예비후보자 및 여타 출마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전매일신문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는 정치희화화의 주인공이란 점이다. 조국 파동을 겪으며, 조국의 인지도는 대선후보급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정치가 쉽지 않은 이유는 조국이 희화화의 대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렇다. 검찰총장 사위의 권력에 가려진 윤석열 장모의 최가 윤석열 퇴진 후 얼마 안되어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문제는 더 가관이다.

얼마 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줄리”가 아남을 해명하면서 석사학위 두 개, 박사학위를 취득하느라고 “줄리”를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에서 김건희 박사는 문 표정이 엄중하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한, 김건희가 발표한 한 논문에서 “회원 유지” 영역을 “Member Yuji”로 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조국을 버릇한 사회지도층의 자식들을 위한 “논문품앗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던가? 사실이 이 논문 품앗이는 조국이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았지만, 그 전부터 공공연히

만연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줄리”에 관한 진중권의 의견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의 김부선 스캔들이 증거가 없어서 끝난 것이니, 김건희의 “줄리”도 문제가 아니라 식이다. 이재명이 증거를 안남겼으니, 법에서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도덕과 정의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진보논객을 자처한 진중권이 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도이지, 진보가 문제가 생겼다고 반대전영의

칼럼
조영우

공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희화화

를 크게 높인 제1공약 “기본소득”에서 한 발짝 발을 뺀 것이다. 그 동안 증세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수백억원의 홍보비를 들여서 자랑해놓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으니까 슬쩍 “제1공약”이 아니라고 뒷꿈두리를 빼고 말았다. 지도자의 언행이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된다. 윤석열의 희화화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표창장 위조로 조국 아내 정경심교수에 4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장모의 여죄,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논문표절과 주가조작문제, 윤석열 본인의 윤우진세무서장의 범죄문제 관여 등에서 불공정과 정치희화화는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정권교체론을 정권재창론으로 그 흐름을 바꿔놓는 일이다. 그것은 가장 능력있고 품격있는 이낙연 후보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 긍정적인 경제시스템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보수 유력후보 아내의 “줄리” 문제를 감싸고 진보전영에 내부 총질을 한 것 역시 웃음거리다. 진중권도 희화화의 대상인 것이다.

급기야, 김부선은 법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다. 이 자체로 이재명은 정치 희화화 된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일국의 지도자로 체통을 세우기는 어렵다. 본선 진출시 야당의 강한 공격에 시달릴 것도 뻔한 일이다.

이재명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인지도

2021년 07월 14일
11면 (호화나연)

(23.7×12.6cm)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회화화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는 정치회화화의 주인공이란 점이다. 조국 파동을 겪으며, 조국의 인지도는 대선후보급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정치가 쉽지 않는 이유는 조국이 회화화의 대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렇다. 검찰총장 사위의 권력에 가려진 윤석열 장모의 죄가 윤석열 퇴진 후 얼마 안되어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 문제는 더 가관이다.

얼마 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줄리”가 아님을 해명하면서 석사학위 두 개, 박사학위를 취득하느라고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에서 김건희 박사논문 표절이 엄중하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한, 김건희가 발표한 한 논문에서 “회원유지” 영역을 “Member Yuji”로 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조국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자식들을 위한 “논문품앗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던가? 사실 이 논문 품앗이는 조국이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았지만, 그 전부터 공공연히 만연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 “줄리”에 관한 진중권의 의견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의 김부선 스캔들이 증거가 없어서 끝난 것이니, 김건희의 “줄리”도 문제가 아니란 식이다. 이재명이 증거를 안남겼으니, 법에서 자유로울지 모르지

만 도덕과 정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진보 논객을 자처한 진중권이 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도이지, 진보가 문제가 생겼다고 반대진영의 보수 유력후보 아내의 “줄리” 문제를 감싸고 진보진영에 내부 충질을 한 것 역시 웃음거리다. 진중권도 회화화의 대상인 것이다.

급기야, 김부선은 법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다. 이 자체로 이재명은 정치 회화화 된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일국의 지도자로 체통을 세우기는 어렵다. 본선 진출시 야당의 강한 공격에 시달릴 것도 뻔한 일이다.

이재명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인지도를 크게 높인 제1공약 “기본소득”에서 한 발짝 발을 뺀 것이다. 그 동안 증세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수백억 원의 홍보비를 들여서 자랑해놓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으니까 슬쩍 “제1공약”이 아니라고 뒷꿈무늬를 빼고 말았다. 지도자의 언행이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된다.

윤석열의 회화화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표창장 위조로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에 4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장모의 여죄,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논문표절과 주가조작문제, 윤석열 본인의 윤우진 세무서장의 법적문제 관여 등에서 불공정과 정치회화화는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정권교체론을 정권재창론으로 그 흐름을 바꿔놓는 일이다. 그것은 가장 능력있고 품격있는 이낙연 후보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광전매일신문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소장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성격을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로 규정하였다. 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과 부동산 등 정책실패에 대한 정권교체론과 야당 대선후보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정부 검찰과 검찰 출신 윤석열과 최재형의 배신자 응징론에 대한 심판선거의 구도로 보는 것이다.

김소장은 이 기준에서 보면, 윤석열의 입장에서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낙연이 될 것으로 본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주장한다. "2002년 노무현선거처럼 끝날 수 있다. 지역순회경선에서 광주 전에 앞서지기 시작한 것이다. 권리당원의 대부분은 호남이거나 친문이다. 이들 상당수가 이낙연 쪽인데, 이재명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 중 병원에 입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이 역시 이낙연에 큰 호재이다. 그 동안 중립을 지키고 있던 친문세력인 민주주의 4.0 관련 의원들 중 10명 이상이 이낙연 공개지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미,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은 이낙연 캠프에 가세했다.

9월 순회경선이 시작되면, 이낙연 대세론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윤석열에겐 혹독

칼럼
조영무

광명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

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 전 총장의 과거 언행과 가족 문제에 비난이 가열되는 가운데, 급기야 종료 한 건물에 '돌리벽화'까지 등장했다. 정치회화화의 대상이 정치에 그것도 대선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제3지대를 포기하고 국민의 힘에 입당한 윤석열을 두고 추미에 전 법무부장관은 "평이 돌고 돌아 전두환 뿌리 정당에 갔다."고 비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정치가 이해가 안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세력이 만든 당으로, 자신이 국정농단세력으로 구속했던 사람들이 핵심으로 참여했다."고 혹평했다. 제3지대를 포기하고 보수정당에 입당한 것은 배신자의 윤

신록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론의 빌미를 제공한 조국은 란과 정책실패는 향후에 만회 가능하다고. 조국 관련 재판에서 2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인턴 관련해서 조국 딸 친구가 사진 속 안물이 조국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공금이 확대하면서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대책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변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이 난국을 헤쳐간다면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2021년 7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 7

월 수출이 55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95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10년 만에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을 나타냈다.

중도층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전환기에 경제를 안착시킨 민주진보정부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서느냐이다. 그것은 결국,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 실제 광주, 전남북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을 향한 것보다 많다. 최근 이재명 지사의 "한반도 통합에 한반도 백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백제론으로 호남인들이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호남은 항상 정권창출에 주역이 될 수 없는가. DJP연합과 노무현 양자론에서 보듯이 호남의 독자정권창출은 항상 어렵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힌 보수정당 후보와의 싸움에서 여러 스캔들에 시달리는 이재명 후보보다 품격과 안정을 보여주는 이낙연후보의 승리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1년 8월 4일
11면 (호파니언)

(23.7×14.5)cm

<광전매일신문 2021년 8월 4일자 11면>



보도내용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소장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성격을 "정권교체 대 심판선거"로 규정하였다. 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과 부동산 등 정책실패에 대한 정권교체론과 야당 대선후보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정부 검찰과 검찰 출신 윤석열과 최재형의 배신자 응징론에 대한 심판선거의 구도로 보는 것이다.

김소장은 이 기준에서 보면, 윤석열의 입장에서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낙연이 될

것으로 본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주장한다. "2002년 노무현선거처럼 끝날 수 있다. 지역순회경선에서 광주 전에 앞서지기 시작한 것이다. 권리당원의 대부분은 호남이거나 친문이다. 이들 상당수가 이낙연 쪽인데, 이재명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 중 병원에 입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이 역시 이낙연에 큰 호재이다. 그 동안 중립을 지키고 있던 친문세력인 민주주의 4.0 관련 의원들 중 10명 이상이 이낙연 공개지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미,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은 이낙연 캠프에 가세했다.

9월 순회경선이 시작되면, 이낙연 대세론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윤석열에겐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 전 총장의 과거 언행과 가족 문제에 비난이 가열되는 가운데, 급기야 종료한 건물에 ‘줄리벽화’까지 등장했다. 정치회화화의 대상이 정치에 그것도 대선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제3지대를 포기하고 국민의 힘에 입당한 윤석열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팽이 돌고 돌아 전두환 뿌리 정당에 갔다.”고 비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정치가 이해가 안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세력이 만든 당으로, 자신이 국정농단 세력으로 구속했던 사람들이 핵심으로 참여했다.”고 혹평했다. 제3지대를 포기하고 보수정당에 입당한 것은 배신자의 운신폭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론의 빌미를 제공한 조국논란과 정책실패는 향후에 만회가 가능하다. 조국 관련 재판에서 2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인턴 관련해서 조국 딸 친구가 사진 속 인물이 조국 딸 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공급이 확대하면서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대책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변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이 난국을 헤쳐간다면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2021년 7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통해 올 7월 수출이 5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95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10년 만에 4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을 나타냈다.

중도층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전환기에 경제를 안착시킨 민주진보정부에 한 번 더 기회를 중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서느냐다. 그것은 결국,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실제 광주, 전남북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을 합한 것보다 많다. 최근 이재명 지사의 “한반도 통합에 한번도 백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백제론으로 호남인들이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호남은 항상 정권창출에 주역이 될 수 없는가. DJP연합과 노무현 양자론에서 보듯이 호남의 독자정권창출은 항상 어렵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힌 보수정당 후보와의 싸움에서 여러 스캔들에 시달리는 이재명 후보보다 품격과 안정을 보여주는 이낙연 후보의 승리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의결 번호

제20대 대선-자심39

언론사

이데일리 주식회사(이데일리)

심의대상

이데일리 12월 10일자 8면 「한 주 새 5%p 오른 이재명, 윤석열 <오차범위 내> 추월...20대 표심향방 '최대변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비록 제목에 작은 글씨로 <오차범위 내>라고 표기하였으나 유권자가 경쟁자간 차이가 표본차 한계 이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고, 부제와 본문에서도 후보자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호, 제8조(여론조사보도)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데일리 2021년 12월 10일자 8면

한 주 새 5%p 오른 이재명, 윤석열 추월... 20대 표심향방 '최대변수'

(오차범위 내)

정치권익지식 '초격차' 지지율

이데일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표심향방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심향방 '최대변수'

이데일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표심향방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결과 지지율

이데일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대선결과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 새 5%p 오른 이재명, 윤석열 <오차범위 내> 추월... 20대 표심향방 '최대변수'

李 38%, 尹 36%... 6주 만에 역전

李, 3040 · 호남 · 수도권에서 강세
차별화 행보에 중도층 움직인 듯

尹, 60대이상 · 영남서 지지 높지만
선대위 불협화음 등 '주춤'

하락세가 멈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컨벤션 효과'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풍긴다. 이 후보는 이번 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부 조사에선 윤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당선가능성 39%로 동률 이뤄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9일 합동으로 지난 29일~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포인트)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를 기록, 윤

후보(36%)를 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오차범위 내지만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앞선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조사 이후 6주 만이다. 이 후보는 전주대비 5%포인트 상승했지만, 윤 후보는 2%포인트 증가에 그쳐 역전을 허용했다. 당선 가능성은 39%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상승세는 다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더300 의뢰로 이달 6일과 7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36.3%)와 윤 후보(36.4%)의 격차는 0.1%포인트에 불과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윤 후보가 2.0%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이 후보는 0.8%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하락폭이 2배 이상이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후보(35.1%→37.1%, 2%포인트)는 윤 후보(43.7%→45.3%, 1.6%포인트)와 비교해 상승폭에서 앞섰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연령별, 지역별 대결 구도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 후보가 30대와 40대에서 우위를 점한 반면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도 이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 윤 후보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는 상황이다. 두 후보의 주요공약 대상인 20대는 조사기관마다 엇치락 뒤치락 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이 후보(22.3%)가 윤 후보(20%)에 앞섰지만 NBS 조사에서는 (이 후보 20% · 윤 후보 28%) 반대의 결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년1월 골든크로스 전망도

전문가들은 여론의 변화와 관련해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적중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부동산 문제 등 현 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면서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노출된 불협화음과 ‘3김’(김종인·김병준·김한길)으로 대표되는 ‘올드보이’의 전면 배치로 신선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행정능력에서도 이 후보의 경쟁력이 표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후보지지 배경으로 ‘추진력·실행

력’을 꼽은데 반해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들었다. NBS 조사에서도 경제 분야 능력 평가에서 이 후보는 42%의 지지를 얻었지만, 윤 후보는 25%를 얻는데 그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내년 1월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전망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새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싶어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실행 능력을 입증한 이 후보가 유리하다”며 “윤 후보는 ‘반문 캠프’를 연상시키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등 과거를 지향하고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정책이 성공할 경우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5. 안내문 송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한 사례임



<The대한일보 2021년 7월 23일자 15면>

보도내용

2022년 대선 기상도

드센 기세의 폭염도 10여일 후면 꺾일 것이다. 서서히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추석을 지나면 어느새 겨울, 그리고 잠시 후면 봄과 함께 2022년 대선을 맞게 될 것이다.

대선까지 불과 200여 일, 어수선한 여야의 정치 판도도 서서히 대세를 잡아 갈 것이다.

과연 차기 대권을 쥐게 될 정당은 어느 곳이며 누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여권인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30%대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잠시, 현재 45%대의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다. 총선까지 40%대만 유지된다면 여권의 승리는 60% 이상 장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누가 여권의 대권 후보가 되며 또한 과연 누가 대권후보로 선정되어야 승리에 유리한가?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로 본다.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뭔가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적 상황에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그의 가끔씩 나타나는 돌출 행동이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선택을 결정할 때는 뭔가 기대감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출신지역이 경상도 쪽으로 막판 지역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다.

경상도 특유의 전라도 쪽 기피현상은 막판 판세에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장을 그리고 정치지사를 지내며 위기돌파 내지는 과감한 정책들을 성공시킨 성적표이다.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1,2위가 다시 붙을 경우 충분히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른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연합이다. 그러나 경선 막판까지 정세균 후보가 10%를 넘지 못할 것 이라면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추미애 후보의 지지표가 그쪽으로 몰려 돌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대선 승리 그래프는 이재명으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될 경우 이낙연 후보보다 6대4 정도

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일단 후보가 결정되면 반문이니 친문이니 하는 색깔은 없어질 것이고 단합 되리라고 본다.

야당 쪽은 어떠할까? 첫째 후보는 누가 될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복기해 보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윤석열은 언제 국민의 힘에 입당할까... 결국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입당하는 순간 당의 보호보다는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될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당에 입당하여 안철수와 투톱을 이루고 두사람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와 마지막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길 확률이 높다.

이유는 계속되는 검증과정을 통하여 부적격 자질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체된 지지율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에선 누가 후보가 될까...

사실 모두 그만 그만이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중에서 선출될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신은 결국 선택받기 어렵다. 그중에서 원희룡이 가장 유리하리라고 본다.

다수의 국회의원과 김종인 전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신성이다.

그렇게 보면 원희룡과 안철수의 최종 선택은 원희룡 후보로 낙점되고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맞붙을 경우 6.5대 5.5로 민주당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안철수와 이재명의 대결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1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심 의 대 상	중앙일보 2021년 9월 30일자 4면 「성남의뜰, 화천대유 위해 3214억 담보 제공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 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성남의뜰이 화천대유가 대출을 위해 하나투자신탁에 신탁한 땅을 미리 담보로 쓸 수 있도록 일종의 ‘빚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민간사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시정요구인측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화천대유가 돈을 빌릴 당시, 토지가 아니라 배당금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시정요구인이 성남의뜰을 통해 화천대유에 어떠한 특혜를 준 것처럼 과장 보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성남의뜰이 하나투자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을 맺을 당시, 성남의뜰만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화천대유가 돈을 빌린 성남 대장제일차(주) 등이 채무자로 추가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채무자는 화천대유로 볼 수 있고, 성남의뜰 · 하나투자신탁 · 화천대유 간 권리관계는 실질적으로 토지라는 담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며, ‘빚보증’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에 있어 언론이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거나 압축, 강조할 수 있다.

성남의뜰, 화천대유 위해 3214억 담보 제공했다

대장동 개발한 부지 판 성남의뜰
그 땅 산 화천대유 위해 빚보증 선생
금융전문가 “업계선 이례적인 일”
이재명 측 “위험 민간부담”과 배치

‘대장동 의혹’은 복잡한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 그 의혹의 중심에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어떻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중 핵심 쟁점은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측이 내놓은 설명 자료에는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환수한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사업자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다. ‘위험은 민간이, 수익은 공공 우선’이 실질에 맞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각각 지분 ‘50%+1주’와 ‘50%-1주’를 소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을 만들었고 사업의 수익 크기와 무관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503억 원을 환수하게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컨소시엄에 포함된 화천대유는 지분 ‘1%-1주’를 가졌다. 결국 사업이 성공하면 민간사업자는 큰 이익을 보지만 실패하게 되

면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캠프 측 자료는 이를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하이 리스 크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장동 210번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2017년 1월 4일 토지를 취득한 뒤 1월 10일 하나자산신탁에 소유권을 넘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 신탁을 한 것이다. 그런 뒤 10개월 뒤인 2017년 11월 7일 신탁계약을 변경하고 이튿날 이를 신탁원부에 반영하게 된다. 변경된 내용은 ‘우선수익자’ 공동 3순위에 모두 24개(중복 포함) 법인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성남의뜰)의 채권자들인데, 사업 도중 문제가 생겨 강제집행절차 등이 진행되면 수탁자(하나자산신탁)에게 신탁수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들 24개 법인(중복 포함)에게 빚을 진 채무자는 성남대장제일차(주), 성남대장제이차(주), 성남대장제삼차(주)이며 각각 1176억 5000만 원, 1017억 9000만 원, 1019억 2000만 원 등 모두 3213억 6000만 원이 수익권증서금액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성남대장제일차는 어떤 회사일까. 한국기업평가의 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차주(돈을 빌리는 측) 성남대장제일차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업주)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SPC)로 돼 있고 ‘사업주는 대장동 A1 BL(블록) 일원에서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토지신탁(신탁회사: 하나자산신탁) 방식으로 진행 중’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결국 성남대장제일차·제이차·제삼차는 각각 공동주택 분양용지인 A1·A2·A11 구

역 개발을 위해 화천대유에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인 셈이다. 실제 신탁원부에는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 추가 설정을 위한 신탁보수 8000만 원의 부담주체로 화천대유를 명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성남의뜰이 개발용지를 사들여 공공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땅을 하나자산 신탁에 맡기는 신탁계약을 맺었고, 화천대유가 돈을 빌릴 때 신탁된 땅을 담보로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수익권증서금액의 총합인 3213억 6000만 원이 일종의 빚보증인 셈이다.

이는 “민간사업자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이 지사 측 캠프 설명 자료와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이 개발용지 분양 계약을 맺

었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7년 11월엔 화천대유가 아직 소유권을 갖지 못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해 땅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담보를 미리 제공한 것으로 업계에선 이례적인 일”이라며 “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냐”고 했다.

야권에선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이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또한 주택용지 계약을 하면서 별도의 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이날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2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 의 대 상	조선일보 2021년 10월 4일자 4면 「유동규 집 압수수색때, 검사만 먼저 들어가 2~3시간 면담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 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하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이례적으로 검사가 먼저 들어가 유씨를 2~3시간 면담하거나,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등 검찰이 유씨 뒷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압수수색 당시, 유씨 주거지의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고, 유씨가 검사와 면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보도하였고, 이러한 검찰의 부실 압수수색 논란을 두고 마치 시정요구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유씨의 휴대전화를 경기남부경찰청이 습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다만 유씨와 면담한 인물이 ‘검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온라인에 게재한 동일한 내용의 기사 제목 등을 ‘검사’에서 ‘수사팀’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사전체가 허위라는 시정요구인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한 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명백하고, 피시정요구인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보았던 취재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요구인이 향후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당사자를 미리 면담했다’는 보도 내용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선거의 쟁점의 된 사안에 대해 기사 제목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경우로서, 독자나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고, 이후 한 검사가 유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 2~3시간가량 유씨를 별도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 수색을 개시하고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관련 자료를 즉각 확보하는 통상적인 압수 수색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압수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휴대전화)를 너무 허술하게 놓쳤다”며 “압수 수색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장시간 면담했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선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지인을 통해 이 오피스텔을 월세 50만 원에 계약한 뒤 혼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것도 이상하다는 말이 나온다.

검사의 별도 면담은 매우 이례적 유씨가 던진 폰은 최근 바꾼 것 수사팀, 쓰던 폰 알고도 확보 안해

檢내부 “중요 증거 허술하게 놓쳐 수사 확대할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

유씨의 오피스텔에는 창문이 2개가 있는데, 그중 한쪽 창문에서 던지면 1층 도로에 떨어지게 되는데 주변 방범 카메라에 낙하물이 포착된 것은 없었다고 한다. 다른 쪽 창문에서 던질 경우 같은 건물 5층 테라스로 떨어지는 구조인데, 5층 피부과를 통해서만 테라스 출입이 가

능하다고 한다.

건물 입주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런 상황을 검찰 관계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던진 휴대전화는 이후 서울 송파구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더는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씨 측 관계자는 3일 본지와 만나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최근 새로 개통한 것인데 기자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나서 던진 것”이라며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했으나 검찰이 확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옛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이날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에서 “유씨가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유씨 휴대전화는 이번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다. 그 내용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사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유씨가 거주지 압수 수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오피스텔을 구해 주소를 옮겨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또 수사팀이 유씨의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하지 않은 걸 보면 유씨 뒷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3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심 의 대 상	중앙일보 2021년 10월 5일자 4면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 개발 때도 특혜의혹」 및 5면 「민간사업자 분양수익 3000억 원 육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 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이 시장일 당시,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였을 뿐, 해당 사업과 무관함에도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시정요구인의 입장을 전혀 청취하지 않아 공정성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나 공문 발송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가 용도변경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당시 최종 결정권자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피했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구체적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명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으며, 보도 내용이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위법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성남시의 개입으로 인해 연구원의 업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해당 의혹은 주로 연구원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고,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제목 등이 다소 단정적이고, 의혹의 당사자인 성남시 나아가 시정요구인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 유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 제6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경고결정문 게재 또는 주의사실 게재 결정에 해당하는 수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The JoongAng

2021년 10월 05일
04면 (정치)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때도 특혜의혹

자연녹지 → 준주거지로 용도 조정
임대 부지, 일반분양으로 바뀌어
당시 이계명 시장이 고시권자
성남시 "불법 없었던 것으로 안다"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특혜 논란 속에 막대한 이익을 남긴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올 6월 입주한 성남시 백현동 '관고 A아파트'(전용면적 84㎡ 이상 1223가구)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B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수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구단위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계명 현 경

기지사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아파트 단지 개발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이한 점이 여럿이다.

B사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계약을 거쳐 해당 부지(11만2861㎡)를 2187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1044㎡)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상향 조정했고, 준주거지로 바뀐 뒤의 감정평가 금액은 4869억원으로 뛰었다.

이 프로젝트처럼 자연녹지에서 1~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 조정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용적 최대높이가 50m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관고 A아파트 단지, 올 6월 입주했다. 정종선 기자

돈'인데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 이하이고, 준주거지는 400% 이하여서다. 성남시가 이렇게 파격적인 종상향을 해준 명분은 '공공성'이다. 한국식품연구원 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

(17.9·11.3)cm

The JoongAng

2021년 10월 05일
05면 (정치)

민간사업자 분양수익 3000억원 육박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제출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란 '공약'은 1년여 만에 사라졌다. 이 부지의 대가 과정을 감사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당시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부당하게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지원했다며, 실무자 징계(해임 1명, 경직 1명, 주의 2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배경에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주장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

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성남시와 매입자(B사) 합의로 공공기여 면적(기부채납)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공문을 한국식품연구원이 발송한 것은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공문 발송을 민간업체인 B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도록 성남시가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이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불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이 아니다. B사업자는 준주거지

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316%로 높여 받았지만 해당 부지는 고도제한(서울 비행장 인근)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게 허용했고, 사업자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신지리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사 관계자는 "성남시의 과도한 요구로 기부채납 조건인 R&D센터 부지를 예정보다 늘린 8000평으로 조성했고, 시민을 위한 공원도 1만 평이나 조성했기 때문에 사업자 수익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세종=김남준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18.9·11.3)cm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때도 특혜의혹 민간사업자 분양수익 3000억 원 육박

자연녹지 → 준주거지로 용도 조정
임대부지, 일반분양으로 바뀌어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고시권자
성남시 “불법 없었던 것으로 안다”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 대장동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올 6월 입주한 성남시 백현동 ‘관교 A아파트(전용면적 84㎡이상 1223가구)’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B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구단위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아파트 개발 사업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점이 여럿이다.

B사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익계약을 거쳐 해당 부지(11만 2861㎡)를 2187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 1014㎡)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다. B사도 자연녹지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은 가격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1014㎡)의 용도는 자연

녹지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상향 조정했고, 준주거지로 바뀐 뒤의 감정평가금액은 4869억 원으로 뛰었다.

이 프로젝트처럼 자연녹지에서서 1~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조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이하이고, 준주거지는 400%이하여서다. 성남시가 이렇게 파격적인 종상향을 해 준 명분은 ‘공공성’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계획을 제출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란 ‘공익’은 불과 1년여 만에 사라졌다. 이 부지의 매각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당시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부당하게 민간 업체 영리 활동을 지원했다며, 실무자 징계(해임 1명·정직 1명·주의 2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배경에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주장이다. 연구원은 국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성남시와 매입자(B사) 협의로 공공기여 면적(기부채납)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공문을 한국식품연구원이 발송한 것은 “임대에서 일반 분양 전환할 때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공문 발송을 민간 업체인 B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도록 성남시가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의 퇴직 등으로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불법과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B사업자는 준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316%로 높여 받았지

만 해당 부지는 고도제한(서울 비행장 인근)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게 허용했고, 사업자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사 관계자는 “성남시의 과도한 요구로 기부채납 조건인 R&D센터부지를 예정보다 늘린 8000평으로 조성했고, 시민을 위한 공원도 1만 평이나 조성했기 때문에 사업자 수익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4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 의 대 상	조선일보 2021년 10월 6일자 4면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 사업 당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 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하 ‘유씨’)이 시정요구인의 측근이고, 원주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당시 유씨가 ‘내 말이 시정요구인의 말’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유씨가 측근이라는 보도 내용은 근거 없는 추측이고, 대장동원주민의 발언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언론의 보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 김은혜 의원이 지난 6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유씨가 시정요구인의 측근이었다는 정황을 보도하였을 뿐,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부각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시정요구인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그 보도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보도가 비록 의혹의 형식이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 사업 당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와 유씨가 가까운 정황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재와 같은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하는 것은 유씨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고 대장동 개발도 유씨를 통해 이 지사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유씨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와 유씨가 가까운 정황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재와 같은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하는 것은 유씨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고 대장동 개발도 유씨를 통해 이 지사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유씨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고 대장동 개발도 유씨를 통해 이 지사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재와 같은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하는 것은 유씨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고 대장동 개발도 유씨를 통해 이 지사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유씨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고 대장동 개발도 유씨를 통해 이 지사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서울시장.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와 유씨가 가까운 정황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재와 같은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하는 것은 유씨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고 대장동 개발도 유씨를 통해 이 지사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재와 같은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하는 것은 유씨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고 대장동 개발도 유씨를 통해 이 지사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재와 같은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하는 것은 유씨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고 대장동 개발도 유씨를 통해 이 지사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21년 10월 6일자 4면〉

보도내용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 사업 당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 했다”

서로 가까웠던 정황 곳곳에서 드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와 유씨가 가까운 사이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재와 같은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래 유씨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5일 “유씨는 측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012년 5월 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을 공영 개발로 하겠다고 했지만, 유동규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이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이 시장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유동규)가 느닷없이 이 사업에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는 개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시장과 측근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5년 사업자를 선정하며 본격화한 대장동 개발은 유씨 주장처럼 민관 합작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유씨가 이 지사의 생각을 바꿀 만큼 영향력을 가진 측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지시를 받은 성남시의원들이 100% 공공 개발을 포기하도록 집요한 압력을 넣어 예산을 통과시키

지 않는 등 시정까지 방해했다”며 “이런 압력에도 이 지사가 공공·민간 복합 개발을 성사시킨 것”이라고 했다. 유씨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의회의 반대로 100% 공공 개발을 관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野 “유씨 경기관광공사장 임명때
이재명이 ‘동규야 이리와’라고 해”
李측은 “유씨, 측근으로 볼 수 없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4일 밤 페이스북에서 “유동규 씨가 이 지사의 측근 중 측근이라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 직원들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 시절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박 의원은 “여러 경기도청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유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을 때 이 지사가 수여식 절차와 직원들을 물리고 ‘동규야, 이리 와라’ 하면서 바로 티타임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도청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유씨는 평소 ‘이 지사가 넘버1, 정진상(이 지사 대선 캠프 총괄 부실장)이 넘버2, 내가 넘버3’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의명의 신빙성 없는 말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수없이 많은 상황에 배석했지만 이렇게 말쑥

하신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유씨가 대장동 사업 담당자로 일하면서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5일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대장동 원주민 녹취록을 보면, 원주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았고,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가라고 했다”며 “유동규가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하니 (유씨가)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민주당 부대변인 시절이던 2009년 유씨와 민주당 인사 간담회를 주선한 일도 있었다고 5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2009년 9월 김진표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유씨와 정책 간담회를 했다. 당시 유씨는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 직함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2009년에는 분당의 핵심 의제가 아파트 리모델링이었다”며 “정기권이 관심 갖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5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심 의 대 상	중앙일보 2021년 10월 6일자 4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참여 성남시서 사전에 인지한 정황」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2014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련자가 참여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성남시 도시개발단 사업추진과장이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과장 보도하였고, 시정요구인이나 성남시가 남욱 변호사 등의 참여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객관성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2014년 8월 29일 성남시의 회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타 언론사에도 해당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발송한 문서 등 해당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다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기재된 사실을 위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를 적시하였다거나, 시정요구인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참여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은폐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참여 성남시서 사전에 인지한 정황

7년 전 시의회 “민간업자 참여” 문자
사업추진과장 “할 수 있다” 답변
원주민 “토지주 설득 때 남옥 동행”

2014년 당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남옥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련 세력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남시가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2014년 8월 열린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강한구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려면) 민간업자들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통과되면서 강통 차고 떠나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김응구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단 사업추진과장은 “떠나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아직도 있느냐”고 묻자, 김 과장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할 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그 사람들이 민간 시행을 위해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로비가 무위로 끝나는 것 아니겠냐”고 재차 묻자 김 과장은 “공공시행이라도 (민간업자들이) SPc 구성에 참여하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를 놓고 지역 정가에선 강 의원과 김 과장의 문답 속 ‘민간업체’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화천대유 세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토지를 사들이며 민간개발을 추진했다. 201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뒤 공공개발 계획을 밝혔을 당시에는 이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한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과 이 회사가 설립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등이 지주들을 설득해 상당수의 땅을 확보한 상태였다. 남 변호사는 ‘씨세븐’과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 회계사도 관계사 대표를 맡았다.

성남시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이들이 관여한 화천대유가 SPc인 ‘성남의 풀’에 참여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 5호로 참여해 각각 1007억원과 644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장동의 당시 원주민들은 “당시에 땅 매입 작업을 하던 이들이 전복 등 선물을 돌리면서 토지주를 설득했는데 그 때 남 변호사가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캠프 대변인인 성남시의회 이기인 시의원은 “당시 대장동에서 민간개발을 추진한 곳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화천대유 세력이 참여한 한 곳밖에 없었다”며 “(회의록 속 시의원과 시 관계자 문답은) 성남시가 당시 이들이 SPc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11.3×20.6)cm

<중앙일보 2021년 10월 6일자 4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참여 성남시서 사전에 인지한 정황

7년 전 시의회 “민간업자 참여” 문자
사업추진과장 “할 수 있다” 답변
원주민 “토지주 설득 때 남옥 동행”

2014년 당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남옥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련 세력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남시가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2014년 8월 열린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강한구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려던)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통과되면서 강통 차고 떠나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김웅구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단 사업추진과장은 “떠나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강 시의원이 “아직도 있느냐”고 묻자, 김 과장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할 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그 사람들이 민간 시행을 위해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로비가 무위로 끝나는 것 아니겠냐”고 재차 묻자 김 과장은 “공공시행이라도 (민간업자들이) SPC 구성에 참여하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를 놓고 지역 정가에선

강 시의원과 김 과장의 문답 속 ‘민간업체’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화천대유 세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토지를 사들이며 민간개발을 추진했다. 201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뒤 공영개발 계획을 밝혔을 당시에는 이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한 부동산개발회사 ‘씨세븐’과 이 회사가 설립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등이 지주들을 설득해 상당수의 땅을 확보한 상태였다. 남 변호사는 ‘씨세븐’과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 회계사도 관계사 대표를 맡았다.

성남시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이들이 관여한 화천대유가 SPC인 ‘성남의뜰’에 참여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 5호로 참여해 각각 1007억 원과 64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장동의 당시 원주민들은 “당시에 땅 매입 작업을 하던 이들이 전복 등 선물을 돌리면서 토지주를 설득했는데 그때 남 변호사가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캠프 대변인인 성남시의회 이기인 시의원은 “당시 대장동에서 민간개발을 추진한 곳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화천대유 세력이 참여한 한 곳 밖에 없었다”며 “(회의록 속 시의원과 시 관계자 문답은) 성남시가 당시 이들이 SPC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6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 의 대 상	조선일보 2021년 10월 7일자 35면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제하의 사실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시정요구인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던 판결을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났고, 무죄 판결 후 넉 달 만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되는 등 시정요구인의 판결과 관련해 로비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시정요구인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을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제기된 의혹은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심에서 비롯되었고, 위 사실은 로비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권 전 대법관이 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바, 시정요구인이 보도의 주요대상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공직 수행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전 대법관을 비판하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도가 불공정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요즘 해명해야 할 일이 많아 입이 열 개라도 모자랄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그가 엮힌 사건은 ‘천문학적 이익 독점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대장동 의혹만큼이나 큰 문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와 대법원의 도덕성이 통째로 걸려 있다. 그런데 그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변명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그가 유죄 의견을 냈다면 이 지사는 대선 출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판결을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수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면담할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김씨의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문에 세 차례 언급된 상태였다. 권 전 대법관이 회사의 정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그를 만났다.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대법원에서 이 지사가 무죄가 된 지 넉 달 만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세계 문명국 대법관 중

에 이런 처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결코 지나친 추측이라고 할 수 없다. 로비가 있었다면 돈이나 다음 정권에서의 자리가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법원 역사에 전대미문의 일이다. 이 심각한 의문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해명해야 할 사람이 권 전 대법관이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 그가 침묵하는 사이 김씨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간 것”이라고 여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고문으로 일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야당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그에 대해서만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훨씬 심각한 혐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말고도 이번 일에 얽혀 한국 법조계를 추락시킨 법틀기는 여럿이다. 검찰총장, 법무차관, 특검, 검사장 출신도 포함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뒤에 숨어 있다 여당 정권이 연장되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럴 수 없을 것이다.

(17.6×10.5)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7일자 35면〉



보도내용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요즘 해명해야 할 일이 많아 입이 열 개라도 모자랄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그가 엮힌 사건은 ‘천문학적 이익 독점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대장동 의혹만큼이나 큰 문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와 대법원의 도덕성이 통째로 걸려 있다. 그런데 그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변명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유무

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그가 유죄 의견을 냈다면 이 지사는 대선 출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판결을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수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면담할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김씨의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문에 세 차례 언급된 상태였다. 권 전 대법관이 회사의 정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그를 만났다.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대법원에서 이 지사가 무죄가 된 지 넉 달 만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세계 문명국

대법관 중에 이런 처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결코 지나친 추측이라고 할 수 없다. 로비가 있었다면 돈이나 다음 정권에서의 자리가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법원 역사에 전대미문의 일이다. 이 심각한 의문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해명해야 할 사람이 권 전 대법관이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 그가 침묵하는 사이 김씨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간 것”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고문 변호사로 일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야당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그에 대해서만 “사실무근”이라고 했을 뿐이다. 훨씬 심각한 혐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말고도 이번 일에 얽혀 한국 법조계를 추락시킨 법률가는 여럿이다. 검찰총장, 법무차관, 특검, 검사장 출신도 포함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뒤에 숨어 있다 여당 정권이 연장되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7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 의 대 상	조선일보 2021년 10월 7일자 34면 「'버럭' 이재명이 유동규의 '배은망덕'에 왜 잠잠할까」 제하의 칼럼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의 평소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으로 자신을 궁지에 빠뜨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하 '유씨')에게 화를 내지 않거나 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시정요구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정요구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만을 담았고, 유씨가 시정요구인의 측근이라는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필자가 칼럼을 통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불같이 화를 낸다', '폭언을 퍼부었을 것이다' 등의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나,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가 칼럼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분은 평가적 표현에 불과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버럭’ 이재명이 유동규의 ‘배은망덕’에 왜 잠잠할까

김창균 칼럼



는성주인

성남시장, 경기지사 10년간
요직 앉히며 신뢰 쏟았는데
투기 세력 결탁, 대박 챙기며
恩人의 대선 가도에 재 뿌려
성질 못 다스리는李 지사가
유씨에게 화 안 내는 까닭 궁금

유동규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지 아닌지는 두 사람이 판단할 문제다. 제3자가 가타부타 할 일 아니다. 다만 이 지사가 유씨를 유난히 아끼고 챙겨왔다는 건 복수의 ‘팩트’로 확인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유씨는 성남시살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당시 성남시의회의는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인 유씨가 공직 경력이 전혀 없는데 자력을 문제 삼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밀어붙였다. 이 시장이 2014년 재선에 도전할 때 유씨는 선거 캠프에 갔다가 기획본부장 자리로 돌아왔다. 그사이 기획본부장 자리는 바뀌어 있었다. “기획본부장 겸투기 유동규 개인 몫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 1기 때부터 유동규씨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이 지사와 형 이재전씨는 2012년 6월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주변엔 어떻게 유동규 같은 사람밖에 없느냐”고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 통화에서 이재전씨는 “(동생이 보낸) 문자를 보니 유동규 많이 사랑함이다”라는 말도 했다. 이재전씨는 제수보다 먼저 동생에게 유동규씨 “힘담”을 늘어놓았는데, 이재명 시장은 형에게 유동규씨를 감싸고 편드는 담담을 보였다는 뜻이다.

훗날 이 지사는 형과의 불화 원인에 대해 “성남시의 인사 문제까지 개입해서 풀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을 보면 인사 문제의 당사자가 유동규 씨였던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희

가 화순살리기를 누나에게서 떼어놓으려다 남매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사연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 경기지사에게 당선되자 유동규씨는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 이 지사가 중앙대 신세이지 박영이 역병을 함께 찍었던 홍교역제를 양해의 행인 태로 그 자리다. 이 지사가 유씨에게 임명장을 줄 때 주변 사람들을 불러 “동규야, 이리 와라”고 했다. 이는 중앙이 나왔다. 2019년 1월, 이 지사는 트위터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국내 최초 과격 출신에 화제”라는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산하 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는 존경을 담았다. 유 시장이 일 할한다고 공개적으로 장찬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엔 “3년 만에 금강역 한때 불은 이재명-유동규의 부트레벨”이라는 기사도 트위터에 공유했다. 이재명, 유동규 이름이 나란히 제목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엔 “유 시장은 이 지사 관제처럼 버린다. 기사에는 ‘유 시장은 이 지사’와 ‘복합이자 측근’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 지사가 이 기사를 트위터에 소개한 것은 내용을 공개하고 만족한다는 뜻이다.

이 지사가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온 유동규씨가 이 지사를 공직에 배드했다. 화천대유가 대박을 터뜨린 것은 유동규씨가 기획본부장 시절 수억 배본 구조를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자본이 60%+1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만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수익은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물원에 돌아가도록 만

들었다. 공사에서 대당동 사업을 담당했던 개발 2차장은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들어갈 수 있다”며 연인연유를 만들자고 권유했다. 유 본부장도 당당히 2차에서 1차로 옮겨가서 화천대유에게 구조를 유지시켰다. 유 본부장은 그 대가로 200여원을 약속받았다는 녹취록이 있는가 하면, 구속영장에는 이미 50여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대목도 나온다.

단군 이래 최대 공약 완수”라는 이재명 지사의 대표 상봉이 “단군 이래 최대 행방 부기”로 군무박 걸렸다. 이 지사는 투기 세력을 때려잡지 못하는 공무원임을 때렸는데, 이 지사의 부하 직원들은 아예 투기 세력과 한담 대회를 벌였다. 이 지사가 자신의 말 밑에서 말지던 일들 개방을 들었고 주정하면서 “이재명씨”를 일컫는다는 신뢰도 재산으로 드러나고 있다. 모두 유동규씨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심지어 위법행위도 용서해 내다, 발수에게 차마 양어 담을 수 없는 유씨를 두고, 가차없이 꼬리꼬리 불태워 한다고 공개 위협한 수인 배를 고안하라는 중언부언도 했다. 유동규씨는 이 지사의 신뢰를 투기 세력과의 이합타(合)에 이용했다. 배소의 이재명 지사와의 유대(有帶)가 배에 애 붙을 사이지 못하고 깊은 욕인을 가부렸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정했다. 자신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절제 표현엔 쓰여 유씨에 대한선 실은 소리 천다지 안 한다. 그래서 공금에 있다.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씨의 실사(失事)를 할, 무슨 사연이든 있는 것일까.

(DL-011510)

〈조선일보 2021년 10월 7일자 34면〉



보도내용

‘버럭’ 이재명이 유동규의 ‘배은망덕’에 왜 잠잠할까

성남시장, 경기지사 10년간
요직 앉히며 신뢰 쏟았는데
투기 세력 결탁, 대박 챙기며
恩人의 대선 가도에 재 뿌려
성질 못 다스리는李 지사가
유씨에게 화 안 내는 까닭 궁금

유동규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지 아닌지는 두 사람이 판단할 문제다. 제3자가 가타부타 할 일 아니다. 다만 이 지사가 유씨를 유난히 아끼고 챙겨왔다는 건 복수의 ‘팩트’로 확인된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유씨는 성남 시설관리공단(성남 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에 임명된다. 당시 성남시의회의는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인 유씨가 공직 경력이 전혀 없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밀어붙였다. 이 시장이 2014년 재선에 도전할 때 유씨는 선거 캠프에 갔다가 기획본부장 자리로 돌아왔다. 그사이 기획본부장 자리는 비어 있었다. “기획본부장 감투가 유동규 개인 몫이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 1기 때부터 유동규 씨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이 지사의 형 이재전 씨는 2012년 6월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주변엔 어떻게 유동규 같은 사람밖에 없느냐”고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 통화에서 이재전 씨는 “(동생이 보낸) 문자를 보니 유동규 많이 사랑함이다”라는 말도 했다. 이재전 씨는 제수보다 먼저 동생에게 유동규 씨 “힘담”을 늘어 놓았는데, 이재명 시장은

형에게 유동규 씨를 감싸고 편드는 답글을 보내왔다는 뜻이다.

훗날 이 지사는 형과의 불화 원인에 대해 “성남시의 인사 문제까지 개입하려 들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을 보면 인사 문제의 당사자가 유동규 씨였던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최순실 씨를 누나에게서 떼어놓으려다 남매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사연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유동규 씨는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다. 이 지사가 중앙대 선배이자 떡볶이 먹방을 함께 찍었던 황교익 씨를 앉히려 했던 바로 그 자리다. 이 지사가 유씨에게 임명장을 줄 때 주변 사람들을 물리며 “동규야, 이리 와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9년 1월, 이 지사는 트위터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국내 초 파격 출산책 화제’라는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산하 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는 춘평을 달았다. 유 사장이 일 잘한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엔 “3년 만에 금한령 방패 뚫은 이재명·유동규의 투트랙 비법”이라는 기사도 트위터에 공유했다. 이재명, 유동규 이름이 나란히 제목에 등장하면서 파트너십 관계처럼 비친다. 기사에는 “유 사장은 이 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 지사가 이 기사를 트위터에 소개한 것은 내용에 공감하고 만족한다는 뜻이다.

이 지사가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온 유동규 씨가 이 지사를 궁지에 빠뜨렸다. 화천대유가 대박을 터뜨린 것은 유동규 씨가 기획본부장 시절 수익 배분 구조를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

이다. 지분이 (50%+1주)인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1822억만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수익은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개발 2처장은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유 본부장은 담당을 2처에서 1처로 옮기면서 화천대유 횡재 구조를 유지시켰다. 유 본부장은 그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녹취록이 있는가 하면, 구속영장에는 이미 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대목도 나온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던 이재명 지사의 대표 상품이 ‘단군 이래 최대 한탕 투기’로 곤두박질쳤다. 이 지사는 투기 세력을 때려잡지 못하는 공무원 탓을 해 왔는데, 이 지사의 부하 직원은 아예 투기 세력과 한탕 대박을 공모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발 밑에서 벌어진 일을 까맣게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이 일 잘한다”는 신화도 허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모두 유동규 씨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심사가 뒤틀리면 불같이 화를 낸다.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기자들이 껄끄러운 질문을 한다고 귀에 끼었던 수신기를 빼고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다. 유동규 씨는 이 지사의 신뢰를 투기 세력과의 야합(野合)에 이용했다. 평소의 이재명 지사라면 유씨의 ‘배은망덕’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갇은 폭언을 퍼부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잠하다. 자신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절제된 표현을 쓰며 유씨에 대해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한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의 심사를 살펴야 할,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8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심 의 대 상	중앙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줬다더니 20억 준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한 단체가 ‘시정요구인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변호사에게 3억 원 가량의 수입료를 줬다는 주장과 달리, 20억 원대의 거액을 준 의혹이 있다며 시정요구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고발인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이며, '이벤트'에 불과한 고발장 제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고발인이 증거로 제시한 통화내용을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고발인이 원외정당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였고, 시정요구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기사에 불과하여 허위를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정요구인측의 반론이 이미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양쪽의 주장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썼다더니 20억 준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이 캠프 “명백한 허위, 후보 음해 의도”

친문 성향의 단체가 7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비를 받았던 한 변호사에게 20억 원대의 거액 수임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 (지

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던 이 지사가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 단체는 성남 지역 정당이자 지난해 총선 때 비례대표 20번으로 출마했던 원외정당이다.

이 단체는 이 지사 사건을 받았던 A변

호사와 제보자 B씨 간의 대화가 담긴 5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에는 “이 지사 사건 수임료로 20여억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B씨 질문에 A변호사가 여러 차례 “아, 네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이와 별도로 A변호사의 다른 사건 의뢰인이 통화에서 “A변호사가 이 지사 수임

료로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아나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사 한 명에게 20여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의 존재,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

위 변호인단 면면으로 볼 때 이 지사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이 단체의 고발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경선 개입 및 후보 음해 목적의 고발”이라며 “고발 단체가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sang.co.kr
(28.2x5.5cm)

〈중앙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보도내용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썼다더니 20억 준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이 캠프 “명백한 허위, 후보 음해 의도”

친문 성향의 단체가 7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에게 20억 원대의 거액 수임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 (지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 원이라고 했던 이 지사가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여 억 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단체는 성남 지역 정당이자 지난해 총선 때 비례대표 20번으로 출마했던 원외정당이다.

이 단체는 이 지사 사건을 맡았던 A변호사와 제보자 B씨 간의 대화가 담긴 5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에는 “이 지사 사건 수임료로 20여 억 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B씨 질문에 A변호사가 여러 차례 “아, 네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이와 별도로 A변호사의 다른 사건 의뢰인이 통화에서 “A변호사가 이 지사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아나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사 한 명에게 20여 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의 존재,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 면면으로 볼 때 이 지사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이 단체의 고발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경선 개입 및 후보 음해 목적의 고발”이라며 “고발 단체가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9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 의 대 상	조선일보 2021년 10월 8일자 5면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로 한명에 23억 준 정황”」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 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한 시민단체가 ‘시정요구인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번호를 맡았던 A 변호사에게 3억 원 가량의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과 달리, 20억 원 대의 거액을 준 의혹이 있다’며 시정요구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고발인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이며, ‘이벤트’에 불과한 고발장 제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여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고발인이 증거로 제시한 통화내용을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시정요구인은 단체의 성격은 보도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며, 해당 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존재했으며, 다각적인 노력으로 후보자의 반론을 담았다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적격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후보자에게 위법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의혹의 당사자인 후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제목 등에 있어서도 균형을 갖춰 독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판결 2001도6138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고발인과 익명의 취재원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도하였다고는 하나, 보도의 제목 등이 다소 단정적이고, 의혹의 당사자인 시정요구인의 입장이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못하여, 해당 의혹이 모 단체의 고발장 접수 수준을 넘어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 유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선거기사)제10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에 해당하는 수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8일
제4면 (종합)

신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로 한명에 23억 준 정황”

(현금 3억·주식 20억)



**“수임료 3억 해명 거짓”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시민단체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과 주식 20억상당 뒤... 뒷받침할 녹취록 제출할 예정”

李변호사 “주식 받은적 없다”

李지사측 “명백한 허위사실”

로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이 지사 부부 사건을 맡았다.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 이후 이 지사는 ‘전형 강제 입원 논란’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아내 김혜경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소셜미디어 ‘해경군 감색’의 계정주라는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증거 부족이라며 검제를 기소 중지 처리했다. 발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전관이란 점이 불행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재판의 1심, 2심, 파기환송심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가 전환사채로 보이는 20여원어치를 포함해 23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변호사에게 본인 사건을 의뢰하면서 친분을 쌓은 A씨를 통해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가 “3년 후 팔 수 있는 상상사 주식”을 받았다면 전환사채일 가능성이 크다. 이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을 수임한 2018년 7월 이후, 20여원 이상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2018년 11월 “3년 만기 100여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증권기업 C사 정도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 C사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변호사 외에도 C사의 다른 계열사에는 이 지사 캠프 소속 인사 여러 명이 비교적 최근까지 사외이사로 있었다.

이 변호사는 본지에 “수임료는 형상적으로 계좌로 받아 세금 처리했다”며 “전환사채를 받은 적도 없고 금액도 언급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단체가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 지사 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주식 20여원어치 등 23여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 7일 검찰에 접수됐다. 진문(眞文)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상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한 뒤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2년여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 8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아나운서 캠프 측과 설전을 벌이며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원 줄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3억여원이 변호사비라는 위지였다. ‘깨어있는 시민연대’ 측은 그 주장이 허위라며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2018년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027.3-02.81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8일자 5면〉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로 한명에 23억 준 정황”

“수임료 3억 해명 거짓”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시민단체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과 주식 20억 상당 줬…
뒷받침할 녹취록 제출할 예정”
李변호사 “주식 받은적 없다”
李지사측 “명백한 허위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 지사 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주식 20억 원어치 등 23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 7일 검찰에 접수됐다. 친문(親文)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 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한 뒤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2년여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 8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캠프 측과 설전을 벌이며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000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 줄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3억여 원이 변호사비라는 취지였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측은 그 주장이 허위라면

서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2018년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이 지사 부부 사건을 맡았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아내 김혜경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소셜미디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라는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증거 부족이라며 김씨를 기소 중지 처리했다. 이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박문까지 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전관이란 점이 통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선거법사건 재판의 1심, 2심, 파기환송심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가 전환사채로 보이는 20억 원어치를 포함해 23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변호사에게 본인 사건을 의뢰하면서 친분을 쌓은 A씨를 통해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가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면 전환사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을 수임한 2018년 7월 이후, 20억 원 이상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2018년 11월 ‘3년 만기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중견기업 C사 정도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 C사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변호사 외에도 C사의 다른 계열사에는 이 지사 캠프 소속 인사 여러

명이 비교적 최근까지 사외이사로 있었다.

이 변호사는 본지에 “수임료는 정상적으로 계좌로 받아 세금 처리했다”며 “전환사채를 받은 적도 없고 금액도 언급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단체가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10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심 의 대 상	동아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 이익 환수 장치」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중, 대장동 개발 사업만이 초과이익 발생 시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민간이 모든 초과이익을 독식했고, 공공의 관리·감독이 전무해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시정요구인 간의 연관성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결정을 요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는 권은희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피시정요구인이 해당 자료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허위를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시정요구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성남시장이었던 시정요구인이 연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장치나 관리·감독 직원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독식했다’ 또는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등의 표현이 단순한 과장 또는 수사적 표현으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2008~2015년 사업 들여다보니

의왕 백운밸리-하남 풍산 등 4곳
수익 늘어나면 지분만큼 배분 구조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전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김호경 kimhk@donga.com · 최동수·정순구 기자

(21.5·10.4cm)

<동아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보도내용

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2008~2015년 사업 들여다보니
의왕 백운밸리-하남 풍산 등 4곳
수익 늘어나면 지배만큼 배분 구조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

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

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 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전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11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심 의 대 상	동아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1면 1.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제하의 기사 (제1기사) 2. 「「대장동 국감」 앞둔 이재명, 쏟아진 질문 세례」제하의 사진기사 (제2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하는 <동아일보> 1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제1기사의 부제「檢, 계좌추적서 금전거래 내역 확보」와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 중 제1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9억 중 일부가 박영수 전 특별감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제1기사를 보도하며, 제1기사의 제목과 본문이 제2기사를 둘러싼 형태로 게재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자신과 무관한 사안의 기사(제1기사)에 시정요구인의 사진(제2기사)을 배치하여 마치 한 건의 기사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제1기사와 제2기사는 별개의 기사이고, 뉴스가치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기사를 배치하였을 뿐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두 심의대상기사의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사로 인식되어, 박영수 전 특별감사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기사가 시정요구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기사의 크기와 게재 지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정요구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0조(사진게재)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10월 14일자 1면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이재명 후보자의 사진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배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유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및 제10조(사진기재) 위반]



1920년 4월 1일 창간 제31143호 45면 인쇄 02-2000-0114 구독·배포 1989-2020

東亞日報

101
since 1920

면가 43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원복금)

檢, 계좌추적서 금전거래 내역 확보

인척 분양사. 김만배에 109억 받아 20억 밀린 토목업체에 100억 상환 차에 일부 지급된 듯- 대가성 수사 분양사측 “하이 빌러론 돈 같은 것”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팀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7개방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겸임)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2018년 이후 정기 생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하고 있으며, 박 전 특검은 2018년 15월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재무예의 50억인 100억 원을 외딴는 수산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0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와 토목업체 간에 오간 금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국감” 일문 이재명, 쏟아진 질문 제때 대답하던 이재명 의원에게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선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뒤 특검단의 질문에 세게 숙여 국회를 떠나고 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서를 비판하며 “이러한 것이 때느리 부패정부를 뒤지는 꼴”이라고 했다. 사진은동원화면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인 2012, 2013년 사업자금(이오 대표)을 빌렸고, 그 이후에 같은 적이 있다”면서 “특검 근무 이전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앞서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

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을 이관해 ‘50억 약속 금액’ 중의 한 명으로 지적하자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본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만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유종규 전 상·하도시장(공공사업장 자판판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여 원과 박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여 원 등 총 750여 원을 김 씨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13일 평

이소복에 “선과공의 뇌물론 든갑하지 않다 기도 모를 일”이라며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장동항해 검사 2, 4명의 증원을 요구해 수사팀 검사 7, 18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종규 onemove@donga.com·고도희 기자

▶A3-4면에 관련기사

〈동아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1면〉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檢, 계좌추적서 금전거래 내역 확보
인척 분양사, 김만배에 109억 받아
20억 빌린 토목업체에 100억 상환
차에 일부 지급된 듯…대가성 수사
분양사측 “차이 빌려준 돈 값은 것”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 등에서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2018년 이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하고 있으며,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

에 보낸 109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와 토목업체 간에 오간 금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인 2012, 2013년 사업자금을 (이모 대표가) 빌렸고, 그 이후에 갚은 적이 있다”면서 “특검 근무 이전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앞서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을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중의 한 명으로 지목하자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억 원과 광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김 씨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광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성과급이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지도 모를 일”이라며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검사 3, 4명의 증원을 요구해 수사팀 검사가 기존 18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재심1 (원결정 제20대 대선-시심11)
재심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재심청구대상	동아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1면 1.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제하의 기사 (제1기사) 2. 「“대장동 국감” 앞둔 이재명, 쏟아진 질문 세례」 제하의 사진기사 (제2기사)
주 문	1. 우리 위원회의 제20대 대선-시심11 결정에 따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주의사실 게재 명령을 취소한다. 2. 위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 한다.
재심청구취지	제20대 대선-시심11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이 유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대상기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제10조(사진게재)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바 없고, 설혹 위반의 점이 조금 이나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주의사실 게재’에 이르지 않으므로,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 원심 결정(제20대 대선-시심11)의 취소를 구하였다. 2.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등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등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 등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공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실에 어긋나거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7. 30. 2013헌가8 참조) 나.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기사에 기술된 언어적 표현부터 사진이나 이미지, 기사의 배치 등 편집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라면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보도의 결과물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심

- 이 유 청구대상기사 제1기사와 제2기사의 중첩된 배치로 인해 독자들이 하나의 기사로 오인하여 시정요구인에 대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우리 위원회의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후보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 '선거기사'가 아니고, 제1기사와 제2기사가 별개이므로 오인의 가능성이 없으며,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편집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사진을 담고 있지 않은 기사에 사진 게재 관련 조항을 적용한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재조치의 수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심청구인 이외에도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같은 면에 중첩하여 배치한 신문 기사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편집방식이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언론·출판 자유의 보장의 관점 하에서 언론계의 관행이라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고 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대상기사가 관행에 따른 편집에 의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행에 대한 제재는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재조치의 수위를 다시 정할 이유가 있다.

나.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선거기사의 공정성 유지에 두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우리 위원회가 언론의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함께 고려한 비례원칙 하에서 달성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주의사실 게재'를 통해서만 해당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심청구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재심청구인에게 제재의 이유 등을 설명하고 규정 위반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공정정보도 촉구'라는 목적도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이에 우리 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주장 일부를 수용해 제재조치를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 결 번 호	제20대 대선-시심12
시정요구인	이재명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 의 대 상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1. 4면 「정자동 호텔, 용역·시행사 모두 경기주택공 부사장 관련회사」 제하의 기사 (제1기사) 2. 4면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도’ 나오기 직전李, 유동규와 10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 제하의 기사 (제2기사) 3. 4면 「원희룡 “유동규, 폰 버리기전 이재명 복심과 2시간 통화했다”」 제하의 기사 (제3기사) 4. 5면 「이재명에 조폭 돈 20억’ 박철민 폭로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제4기사) 5. 6면 「어떤 역할도 맡겼다 했다고?... 이낙연측, 이재명측에 “도대체 저의가 뭐냐”」 제하의 기사 (제5기사) 6. 10면 「이재명, 윤석열 처가 사업 감사지시」 제하의 기사 (제6기사) 7. 27면 「진실 가리고 비트는 혼탁한 말의 정치」 제하의 칼럼(제7기사) 8. 31면 「재판 거래’ 말 없는 권순일, 대법원이 진상 밝히라」 제하의 사설 (제8기사) 9. 6면 「윤석열 “전두환정권에 고통당한 분께 송구”」 제하의 기사 (제9기사)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① 시정요구인이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제1기사 내지 제4기사), ② 시정요구인이 여당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 이낙연 전 대표측과의 갈등 정황이 있다는 기사(제5기사), ③ 시정요구인이 경기도지사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시행했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는 기사(제6기사), ④ 정치인들의 망언이 공정한 규칙을 해치고 혼란을 야기한다는 외부 필자의 칼럼(제7기사), ⑤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사설(제8기사), 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과 발언과 이를 평가한 기사 (제9기사)를 2021. 10. 22.자 여러 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 유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국민의힘 경선후보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해외 시찰을 다녀온 사정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이나 시정요구인의 반론 없이 의혹을 제기하였고(제1기사 내지 제4기사),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낙연 전 대표측과의 불화를 암시하였으며(제6기사), 편파적인 내용의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는(제7기사 및 제8기사) 등 시정요구인에 대해서는 총 8건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긍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여(제9기사) 양적·질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시정요구인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일방적인 의혹제기가 아니라 관계자들을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고(제1기사), 시정요구인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제2기사), 감사를 지시한 사실(제6기사), 이낙연 전 대표측의 입장(제5기사)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며, 시정요구인측의 주장을 기사에 반영하였고(제3기사, 제4기사), 칼럼이나 사설은 '말의 중요성에 대한 외부필자의 견해 표명이거나'(제7기사) 대법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제8기사) 내용으로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 정치인의 '송구하다'는 발언을 '사과'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제9기사)이라며 항변하였다.

살피건대 언론의 자유 중 편집의 자유란 무엇을 공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자유라 할 수 있고, 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법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다. 다만, 언론은 그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아울러 져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 제8조가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벗어난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각 심의대상기사가 선거 국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거나, 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수행능력 검증에 관한 것인 점, 특정일에 게재된 후보들 간 보도 건수의 비교만으로 유·불리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시정요구인이 신문 편집의 자유를 벗어나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04면 (정치)

정자동 호텔, 용역·시행社 모두 경기주택公 부사장 관련회사

호텔 시행 경험없는 식품회사
사업 승인받기 넉 달 전에야
법인 목적에 '호텔업' 추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신축을 승인한 성남 D호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며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사업 승인이 난 이 호텔 신축 사업 시행을 안태준 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의 관계사가 맡았다는 것이다. 안 부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이 후보의 대외 총괄을 담당한 한 전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안 부사장은 2012년 대선 때는 민주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P사에 '성남시
가용 사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후 P사는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직업체험관 잡월드의 학생 숙박 체험이 불가능하다며 가족호텔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잡월드 부근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업 시행을 P사 관계사인 B사에 맡겼다. B사는 2015년 1월 성남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월에 406실을 갖춘 가족호텔 건축 승인을 받았다. 성남시의 호텔 사업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관계사가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된 사업 시행까지 맡은 것이다.

이와 관련, B사 관계자는 "성남시가 이 사업 연구 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호텔 개발 법인 구성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MOU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B사의 사업 참여도 성남시 권유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의회 의원은 "성남시가 P사에 연구 용역을 줄 때부터 사업 시행까지 맡기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닌지 규명이 필

요하다"고 했다.

원래 식품회사였던 B사는 사명이 4번 바뀌었고 성남시의 호텔 사업 승인을 받기 넉 달 전인 2015년 8월에야 법인 사업 목적에 호텔업을 추가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P사도 호텔 시행 경험이 없었다. 당시 B사의 또 다른 관계사인 U사에는 안태준 부사장이 사내이사(2015년 3월~2016년 1월)로 근무하고 있었다. B사가 호텔 사업 승인을 받고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는 기존 계획보다 432실을 늘리는 사업 계획을 새롭게 승인해 줬다.

호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는데 성남시는 이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8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인 성남시의회의 의원은 "당시 성남시 측은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등 지도 감독 없이 B사의 비용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호텔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

(17.2·13.4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4면>



보도내용

정자동 호텔, 용역·시행社 모두 경기주택公 부사장 관련회사

호텔 시행 경험없는 식품회사
사업 승인받기 넉 달 전에야
법인 목적에 '호텔업' 추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신축을 승인한 성남 D호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며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사업 승인이 난 이 호텔 신축 사업 시행을 안태준 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의 관계사가 맡았다는 것이다. 안 부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이 후보의 대외 총괄을 담당한 한 전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안 부사장은 2012년 대선 때는 민주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P사에 ‘성남시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후 P사는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직업체험관 잡월드와 학생 숙박 체험이 불가능하다며 가족호텔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잡월드 부근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업 시행을 P사 관계사인 B사에 맡겼다. B사는 2015년 1월 성남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월에 406실을 갖춘 가족호텔 건축 승인을 받았다. 성남시의 호텔 사업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관계사가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된 사업 시행까지 맡은 것이다.

이와 관련, B사 관계자는 “성남시가 이 사업 연구 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호텔 개발 법인 구성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MOU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B사의 사업 참여도 성남시 권유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성남시가 P사에 연구 용역을 줄 때부터 사업 시행까지 맡기는 방안

을 염두에 둔 것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래 식품회사였던 B사는 사명이 4번 바뀌었고 성남시의 호텔 사업 승인을 받기 1년 전인 2015년 8월에야 법인 사업 목적에 호텔업을 추가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P사도 호텔 시행 경험이 없었다. 당시 B사의 또 다른 관계사인 U사에는 안태준 부사장이 사내이사(2015년 3월~2016년 1월)로 근무하고 있었다. B사가 호텔 사업 승인을 받고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는 기존 계획보다 432실을 늘리는 사업 계획을 새롭게 승인해 줬다.

호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는데 성남시는 이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8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은 “당시 성남시 측은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등 지도 감독 없이 B사의 비용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호텔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04면 (정치)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도’ 나오기 직전 李, 유동규와 10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

이재명, 출장 다녀온 지 17일 뒤
유동규가 맡긴 용역으로 작성된
‘대장동 SPC 설립’ 보고서 결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9박 11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과 해외 출장을 간 시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안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이 출장 후 17일 만인 2015년 2월 2일 이 후보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 보고서는 유 전 본부장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

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성남시 판교에 트램(노면 전차) 설치를 추진 중이던 성남시가 선진 교통 체계를 배우겠다며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찰단(총 12명)을 꾸려 해외 시찰에 나선 것이다. 시찰단에는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공 인사 2명도 포함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출장을 떠나기 직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유 전 본부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나기 6일 전인 2014년 12월 31일, 성남도공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겼다.

성남에 본부를 둔 이 연구원은 연구 시작 22일 만인 2015년 1월 22일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이 연구를 발주한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은 유동규씨가 공사

기획본부장에 부임한 지 두 달 만인 2014년 10월 구성됐다. 대장동 사업 민간 투자자인 남육·정영학씨 후배인 정민용씨 등 일명 ‘대장동팀’ 멤버가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유 전 본부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지 7일 뒤인 1월 23일 용역 보고서를 내왔고 이날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은 당시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에게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구인데 당시 심의회 위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맡았다.

성남도공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 대장동 사업 설계의 초안 이 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돼 공사 내부에서도 이 런저런 말이 나왔었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17.2·14.3)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4면>



보도내용

2015년 ‘대장동 개발 설계도’ 나오기 직전 李, 유동규와 10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

이재명, 출장 다녀온 지 17일 뒤
유동규가 맡긴 용역으로 작성된
‘대장동 SPC 설립’ 보고서 결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

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9박 11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과 해외 출장을 간 시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안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이 출장 후 17일 만인 2015년 2월 2일 이 후보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 보고서는 유 전 본부장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성남시 판교에 트램(노면 전차) 설치를 추진 중이던 성남시가 선진 교통 체계를 배우겠다며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찰단(총 12명)을 꾸려 해외 시찰에 나선 것이다. 시찰단에는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공 인사 2명도 포함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출장을 떠나기 직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유 전 본부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나기 6일 전인 2014년 12월 31일, 성남도공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겼다.

성남에 본부를 둔 이 연구원은 연구 시작 22일 만인 2015년 1월 22일 SPC 설립을 통한 민간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이 연구를 발주한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은 유동

규 씨가 공사 기획본부장에 부임한 지 두 달 만인 2014년 10월 구성됐다. 대장동 사업 민간 투자자인 남욱·정영학씨 후배인 정민용씨 등 일명 ‘대장동팀’ 멤버가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유 전 본부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지 7일 뒤인 1월 23일 용역 보고서를 내놨고 이날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은 당시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에게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구인데 당시 심의회 위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맡았다.

성남도공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 대장동 사업 설계의 초안이 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돼 공사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나왔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4면>

보도내용

원희룡 “유동규, 폰 버리기전 이재명 복심과 2시간 통화했다”

이재명 측과 유동규 압수수색前 접촉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1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뇌물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복심(腹心)’과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씨가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검찰의 유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유씨가 자살하겠다고 약을 먹었다는 사실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데, 이 후보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이 후보 측과 유씨 간에 검찰 압수수색 전 물밑 접촉이 있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는 게 원 전 이사 주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씨가 검찰에 체포될 당시 전화 통화를 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친구와 통화한 게 최근엔 전혀 없다.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 이른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체포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답변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본인밖에 모를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그분(유씨)이 우리랑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측근에게 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유씨 소식을 누구한테서 보고받았느냐는 물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元 “민주당 안팎의 사람이 제보”

“유동규, 토사구팽이 될 상황에서 이재명 뜻을 정확히 판단하고 중간연결 가능한 사람과 통화

‘유동규 자살 약’ 언급한 이재명 보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겠냐

이 후보의 국감 발언을 두고 원 전 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유씨가 약 먹기 전, 즉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두 시간 동안 통화한 A씨가 있는데, A씨가 통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 나에게 제보했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민주당 안팎의 사람이다.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

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최근 ‘대장동 의혹 1타 강사’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등 대장동 의혹 규명에 적극적이다.

원 전 지사는 A씨가 이 후보 복심이라는 점은 제보뿐 아니라 정황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유씨는 자기가 뇌물받은 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토사구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럼 이 과정에서 과연 내가 주군(主君)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판단해야 했는데, 이재명의 뜻을 정확히 판단하고 중간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통화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보도를 전제로 한 이야기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보도는 없었다’는 진행자 지적에 “이 지사가 가까운 분들과 유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유씨 퇴직 이후에 여러 가지 전했던 사람들이 몇 가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유씨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기 전이나 체포되기 전 통화한 이 후보 측 인사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나 백종선 수행비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05면 (정치)

‘이재명에 조폭 돈 20억’ 박철민 폭로 진실공방

김남국, 박씨 친구 2명 녹취록 공개
“이재명 본적 없어” “돈 전달 안해”
朴 변호인과 대화 녹취 與에 건네

朴 “이준석 형님이 돈 전달 지시”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朴 고소
법조계 “실형 예상되는 이준석
박씨 폭로前 보석, 배경에 의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 주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수감 중인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돈 전달 주장을 펼치자, 여당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박씨 주장을 부인하는 관련자들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박씨가 돈 전달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한 A, B씨를 박씨 변호인인 정영하 변호사가 만나 나눈 대화가 담겼다. 반면 박씨는 녹취록 공개 하루 전 집견은 장 변호사에게 “(A, B씨가)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이 XX들이 배신했다”고 했다고 한다.

박씨는 자신에게 돈을 주고 이 지사에게 건네라고 했다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의 ‘교감’ 하에 이번 폭로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대표가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박씨는 이날도 기존 주장을 이어나갔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장 변호사가 지난 19일 A, B씨를 만나 대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이거나 이준석 대표의 운전기사 등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은수미(성남시장)와 이재명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장 변호사가 “그런데 박철민은 왜 당신이 수차례 돈을 줬다고 할까”라고 묻자 A씨는 “저는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녹음 파일에서 B씨는 “이재명 측근에게 돈 심부름을 한 적 있나”라는 장 변호사 질문에 “아니, 없어요”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박철민씨 주장을 공개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후 박씨 소개로 A, B씨를 각각 A씨 사무실과 본인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장 변호사와의 대화

를 녹음해 민주당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은 “20일 밤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박씨와 이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보석 전 이 대표와 박씨 사이에 얘기가 오갔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준석 대표가 박씨 폭로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왔다. KBS는 지난 9월 7일 ‘이재명 관련 비리를 내놓으라’는 취지의 검찰 압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보도했고 그 직후 2심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했다. 이어 지난 7일 이씨가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씨는 이날 장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공개한 진술서에서 “준석 형님(이준석)이 (2심) 선고까지 이 지사 도움을 받고 터트리지 않고 했으니 저는 준석 형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이 저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먼저 제보를 하게 됐다”며 “A도 2015년쯤 준석 형님이 (사켜서) 1억을 이 지사 측에 갔다 주려 가는 길이라며 1억 처음 보는데 갖고 튀자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조의준·박국희 기자

(17.3×15.6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5면>



보도내용

‘이재명에 조폭 돈 20억’ 박철민 폭로 진실공방

김남국, 박씨 친구 2명 녹취록 공개
“이재명 본적 없어” “돈 전달 안해”
朴 변호인과 대화 녹취 與에 건네

朴 “이준석 형님이 돈 전달 지시”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朴 고소
법조계 “실형 예상되는 이준석
박씨 폭로前 보석, 배경에 의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 주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수감 중인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돈 전달 주장을 펼치자, 여당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서 박씨 주장을 부인하는 관련자들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박씨가 돈 전달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한 A, B씨를 박씨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가 만나 나눈 대화가 담겼다. 반면, 박씨는 녹취록 공개 하루 전 접견 온 장 변호사에게 “(A, B씨가)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이 XX들이 배신했다”고 했다고 한다.

박씨는 자신에게 돈을 주고 이 지사에게 건네라고 했다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의 ‘교감’ 하에 이번 폭로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대표가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박씨는 이날도 기존 주장을 이어나갔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장 변호사가 지난 19일 A, B씨를 만나 대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이거나 이준석 대표의 운전기사 등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은수미(성남시장)와 이재명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장 변호사가 “그런데 박철민은 왜 당신이 수차례 돈을 줬다고 할까”라고 묻자 A씨는 “저는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녹음 파일에서 B씨는 “이재명 측근에게 돈 심부름을 한 적 있나”라는 장 변호사 질문에 “아니, 없어

요”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김용관 국민의힘 의원이 박철민씨 주장을 공개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후 박씨 소개로 A, B씨를 각각 A씨 사무실과 본인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장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민주당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은 “20일 밤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박씨와 이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보석 전 이 대표와 박씨 사이에 얘기가 오갔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준석 대표가 박씨 폭로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왔다. KBS는 지난 9월 7일 ‘이재명 관련 비리를 내놓으라’는 취지의 검찰 압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보도했고 그 직후 2심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했다. 이어 지난 7일 이씨가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씨는 이날 장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공개한 진술서에서 “준석 형님(이준석)이 (2심) 선고까지만 이 지사 도움을 받고 터트리자고 했으나 저는 준석 형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이 저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먼저 제보를 하게 됐다”며 “A도 2015년쯤 준석 형님이 (시켜서) 1억을 이 지사 측에 갖다 주러 가는 길이라며 1억 처음 보는데 갖고 튀자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09면 (정치)

어떤 역할도 맡겠다 했다고?... 이낙연측, 이재명측에 “도대체 저의가 뭐냐”

통화내용 보도놓고 양측 갈등 커져
이재명, 오늘 光州·봉하마을 방문

‘대장동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 대선 준비에 들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첫 단추’인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뒤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원팀 선대위’에 힘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21일

보도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기로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이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 중인 지난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이 즉각 “오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지사 측 정성호 의원과 이 전 대표 측 박광

온 의원이 협의케 하자는 것”이라며 “추측과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선 이 후보 측에 “이러면 될 일도 안 된다” “도대체 저의가 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국감 후 이재명-이낙연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보도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인사는 “이 전 대표와 이번 주말에는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

주면 너무 늦다”고 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주말 회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지사직 사퇴도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 묘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등 민주당의 상징적 장소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22·8·0)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6면>



보도내용

어떤 역할도 맡겠다 했다고?... 이낙연측, 이재명측에 “도대체 저의가 뭐냐”

통화내용 보도놓고 양측 갈등 커져
이재명, 오늘 光州·봉하마을 방문

‘대장동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 대선 준비에 들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첫 단추’인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직을 사퇴한 뒤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원팀 선대위’에 힘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21일 보도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2일 광주 5·18민주묘지, 노무

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기로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이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 중인 지난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이 즉각 “오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지사 측 정성호 의원과 이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이 협의케 하자는 것”이라며 “추측과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선 이 후보 측에 “이러면 될 일도 안 된다” “도대체 저의가 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국감 후 이재명-이낙연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보도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 인사는 “이 전 대표

와 이번 주말에는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 주면 너무 늦다”고 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주말 회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지사직 사퇴도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 묘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등 민주당의 상징적 장소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10면 (사회)

이재명, 윤석열 처가 사업 감사 지시

양평 350가구 아파트 건설 사업
‘뒤늦게 시한 연장’ 문제삼아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
양평군 “입주민들 고려해 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가 시행했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21일 조사담당관실 직원을 양평군에 보내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처남, 처형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아내 김건희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업체 ESI&D가 아파트 35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에 완료하지 못했고,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을 앞둔 2016년 6월에 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를 줬고, ESI&D는 약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업체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인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 시행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주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등은 “1년 8개월 동안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지속했는데, 오히려 시한을 연장하는 변경 고시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정, 특혜 행정”이라며 즉시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원준 청장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입건 전 수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공흥지구에선 350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부실 수도 없었고 입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시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수원=권상은 기자

(10.7*18.1)cm

이재명, 윤석열 처가 사업 감사 지시

양평 350가구 아파트 건설 사업

‘뒤늦게 시한 연장’ 문제 삼아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

양평군 “입주민들 고려해 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가 시행했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21일 조사담당관실 직원을 양평군에 보내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처남, 처형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아내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업체 ESI&D가 아파트 35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에 완료하지 못했고, 양

평군은 아파트 준공을 앞둔 2016년 6월에 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를 줬고, ESI&D는 약 80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업체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인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 시행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주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등은 “1년 8개월 동안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지속했는데, 오히려 시한을 연장하는 변경 고시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정, 특혜 행정”이라며 즉시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원준 청장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입건 전 수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공흥지구에선 350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부술 수도 없었고 입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시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朝鮮日報



권경애의 GPS

2021년 10월 22일
27면 (오표니언)



진실 가리고 비트는 혼탁한 말의 정치

정치는 말[言]로 한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려는 대선 후보들의 난무하는 발언들로 세상이 혼탁하다.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정치란 정언(正言)이다. 정언이란 무엇인가. 정언은 정의(正義)를 말하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사전적으로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국가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에 합의하는 조직체라면, 정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진실을 가리고 비트는 말은 공정한 도리를 허물고 관계와 세상을 망친다. 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말발은 구성원들의 공정한 규칙을 해치고 혼란과 분란을 야기한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끊임없이 사실을 뒤돌고 거짓을 선포하고 진실을 덮었다. 대장동 개발은 범죄와 공공 및 민간업자들이 결탁된 초대형 부패 카르텔의 잘 꾸민 악탈 사업이었다. 주거 안정과 공공복지를 위한 공공의 강제수용권을 민간이 입주민을 약탈하는 무기로 사용한 치밀한 설계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 환수라는 선전으로 가려진 범죄의 현장이었다. 공공 개발로 위장된 약탈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졸지에 '관리 책임에 소홀해서 부하 유동규 개인이 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배임 배리'로 돌변했다.

구속된 유동규의 배임 혐의 핵심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의 배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들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 삽입을 두 차례 건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자본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이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의견을 낸 사업 담당 부서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업 부서를 바꿨다.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업무는 성남시장에게 보고되어야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확정 이익을 정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반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후 열린 국감장에서는 "초과수익 환수 조

항 건의가 있었다는 보고도 못 받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았다"고 허둥지둥 뒷걸음쳤다. 배임 혐의를 벗어 나기 힘들다는 뒤늦은 자각 때문인지 국감장에서의 해명은 일관성도 상실한 것이다.

"부동산과 아파트값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나 아니었으면 5500억원의 공공 환수는 불가능했다"는 것은 어림 반 뿐이지도 않는 해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공공의 확정수익을 정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공공의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규정했어야 했다. 조 단위 사업비가 산정된 공공사업 책임자의 당연한 업무상 주의무였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확정수익의 환수 방식을 택했다는 해명 자체가 거짓이다. 성남의들

**끊임없이 사실 뒤돌고 진실 덮는 이재명
'배임' 핵심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말바꾸기
말잔치로 부패 카르텔 악탈 사업 은폐 못해
윤석열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 잃을 텐가**

은 대장지구의 평당 설계료가 600만원 하는 토지를 평당 300만원에 강제 수용했다. 공공의 강제 수용이 있었기에 가능한 험담 수용이었다. 공공 수용임에도 민간택지로 분류되는 민간 합작 SPV가 사업시행자였기에 분양가상한제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조성한 택지는 평당 2000만원에 분양했다.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사업이었다. 공모에 참여했던 성남의들, 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성이 좋고,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했다. 공공의 강제수용권과 인허가권이 보장한 안전성이었다.

사업성이 높고 안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50%+1주의 지분으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이 5500억원인 반면, 7% 지분의 천화동인화 화천대유사의 수익이 4000억원이다. 택지 분양 수익에서만 그

였다. 화천대유가 수익계약으로 분양받은 5필지에서 진행한 주택분양사업에서도 5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성남의들 주주 간의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초과 수익이 예상되지 터널 사업비 920억원을 추가로 공공 환수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냈다고 자랑해 왔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의들 주주 간 이익 배분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이미 저질러진 부동산 악탈 사업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과 우두마육(牛頭馬肉)의 말잔치로는 저질러진 부동산 악탈을 덮을 수 없다.

야당의 제1대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는 단박한 정치적인 안사로 설화를 반복한다. 120시간 노동자 자유,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의 구분, 순발 노동과 아프리카를 차별하는 연사를 반복하던 윤 후보는 전두환의 정치를 긍정하는 망언에 이르렀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배만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실언을 넘어 망언이다. 당내 결선 과정에서 극우 당원들을 향한 교연영색이라며 구걸한 표는 연을명정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는 않는다. 설화와 망언 후의 대응도 깔끔하지 못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겨우 유감이라고 했다가 21일 오후 다시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송구하다" "정치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고 물러섰다.

허를리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 대중연설로 위대한 독일을 향한 원대한 꿈과 유대인 증오를 심어 주는 일 이외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국정 운영은 총성 경쟁하는 부하들이 전횡하도록 방치했다. 허를러 시대의 복지와 일자리 증가는 나치에 대한 열광을 뒷받침했다.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조국 사태에 전지력을 천 국민들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든다. 파치를 지도자의 정구는 국력 강성 지지자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연행에서 감지되기 시작한다.

번호사·무법사의 저자

(32.0×31.8)cm

진실 가리고 비트는 흔탁한 말의 정치

끊임없이 사실 뒤틀고 진실 덮는 이재명
‘배임’ 핵심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말바꾸기
말잔치로 부패 카르텔 약탈 사업 은폐 못해
윤석열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 잃을 텐가

정치는 말(言)로 한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려는 대선 후보들의 난무하는 망언들로 세상이 흔탁하다.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정치란 정언(正言)이다. 정언이란 무엇인가. 정언은 정의(正義)를 말하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사전적으로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국가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에 합의하는 조직체라면, 정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진실을 가리고 비트는 말은 공정한 도리를 허물고 관계와 세상을 망친다. 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망발은 구성원들의 공정한 규칙을 해치고 혼란과 분란을 야기한다.

이재명 후보의 말은 끊임없이 사실을 뒤틀고 거짓을 선동하고 진실을 덮었다. 대장동 개발은 범조와 공공 및 민간업자들이 결탁된 초대형 부패 카르텔의 잘 꾸며진 약탈 사업이었다. 주거 안정과 공공복지를 위한 공공의 강제 수용권을 민간이 입주민을 약탈하는 무기로 사용한 치밀한 설계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 환수라는 선전으로 가

려진 범죄의 현장이었다. 공공개발로 위장된 약탈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줄지에 ‘관리 책임에 소홀해서 부하 유동규 개인이 업자들과 결탁해 저지른 배임 비리’로 돌변했다.

구속된 유동규의 배임 혐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배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두 차례 건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이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의견을 낸 사업 담당 부서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업 부서를 바꿨다.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든 업무는 성남시장에게 보고되어야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확정 이익을 정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반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후 열린 국감장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가 있다는 보고도 못 받았고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고 허둥지둥 뒷걸음쳤다.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뒤늦은 자각 때문인지 국감장에서의 해명은 일관성도 상실한 것이다.

“부동산과 아파트 값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나 아니었으면 5500억 원의 공공 환수는 불가능했다”는 것은 어림 반 톨어치도 없는 해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공공의 확정 수익을 정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공공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규정했어야 했다. 조 단위 사업비가 산정된 공공사업 책임자의 당연한 업무상 주

의 의무였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확정 수익 환수 방식을 택했다는 해명 자체가 거짓이다. 성남의뜰은 대장지구의 평당 실거래가 600만 원 하는 토지를 평당 300만 원에 강제 수용했다. 공공의 강제 수용이었기에 가능한 헐 값 수용이었다. 공공 수용임에도 민간택지로 분류되는 민관 합작 SPC가 사업시행자였기에 분양가상한제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조성한 택지는 평당 2000만 원에 분양했다.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사업이었다. 공모에 참여했던 성남의뜰, 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3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성이 좋고,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했다. 공공의 강제수용권과 인허가권이 보장한 안전성이었다.

사업성이 높고 안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50%+1주의 지분으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이 5500억 원인 반면, 7% 지분의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수익이 4000억 원이다. 택지 분양 수익에서만 그렇다. 화천대유가 수익계약으로 분양받은 5필지에서 진행한 주택 분양사업에서도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성남의뜰 주주 간의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초과 수익이 예상되자 터널 사업비 920억 원을 추가로 공공 환수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허가를 냈다고 자랑해 왔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의뜰 주주 간 이익 배분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이미 저질러진 부동산 약탈

사업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과 우두마육(牛頭馬肉)의 말 잔치로는 저질러진 부동산 약탈을 덮을 수 없다.

야당의 제일 대신 주자 윤석열 후보는 둔탁한 정치적 언사로 설화를 반복한다. 120시간 노동할 자유,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의 구분, 손발 노동과 아프리카를 차별하는 언사를 반복하던 윤 후보는 전두환의 정치를 긍정하는 망언에 이르렀다.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실언을 넘어 망언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극우 당원들을 향한 교언영색이라면 구걸한 표는 얻을망정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 신의는 잃는다. 설화와 망언 후의 대응도 깔끔하지 못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겨우 유감이라고 했다가 21일 오후 다시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고 물러섰다.

히틀러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서 대중 연설로 위대한 독일을 향한 원대한 꿈과 유대인 증오를 심어 주는 일 이외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국정 운영은 충성 경쟁하는 부하들이 전횡하도록 방치했다. 히틀러 시대의 복지와 일자리 증가는 나치에 대한 열광을 뒷받침했다.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조국 사태에 진저리를 친 국민들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든다. 파시즘 지도자의 징후는 극렬 강성 지지자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언행에서 감지되기 시작한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31면 (오피니언)

‘재판 거래’ 말 없는 권순일, 대법원이 진상 밝히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출입 기록을 비실명으로 요구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지사 무죄 판결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대법원을 드나든 출입 기록이 확인되면서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문제는 법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관계인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 받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국민이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불신하게 되면 법원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재판에서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담하면서 무죄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된다면 이 지사는 대선에 나올 수 없었다. 이 지사 사건에는 대장동 관련 혐의가 포함돼 있었고, 김만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당연히 사건 관

계자였다. 김씨는 이 지사가 진행한 대장동 사업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오랜 친분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 대장동 개발 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가 월 1500만원씩 받기도 했다.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결코 무리한 억측이 아니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아무 말도 없다. 평생 법원에 몸담으며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사법부 위기로 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도 손을 놓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해 관계인이려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만배씨를 이해 관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법원행정처장은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 판결은 이미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그보다 큰 논쟁이 있겠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이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17.5×10.0)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31면>



보도내용

‘재판 거래’ 말 없는 권순일, 대법원이 진상 밝히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출입 기록을 비실명으로 요구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지사 무죄 판결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대법원을 드나든 출입 기록이 확인되면서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문제는 법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관계인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국민이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불신하게 되면 법원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재판에서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담하면서 무죄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된다면 이 지사는 대선에 나올 수 없었다. 이 지사 사건에는 대장동 관련 혐의가 포함돼 있었고,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당연히 사건 관계자였다. 김씨는 이 지사가 진행한 대장동 사업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오랜 친분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 대장동 회사의 고문으로 들어가 월 1500만 원씩 받기도 했다.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결코 무리한 억측이 아니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아무 말도 없다. 평생 법원에 몸담으며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사법부 위기로 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

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도 손을 놓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해 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만배 씨를 이해 관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법원행정처장은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 판결은 이미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그보다 큰 논쟁이 있겠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이 지사 무죄 판결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朝鮮日報

2021년 10월 22일
06면 (경제)

윤석열 “전두환정권에 고통당한 분께 송구”

尹, 어제 오전 유감 표명했지만
파문 가라앉지않자 오후에 사과
홍준표 “내가 당대표였으면 제명”
유승민측 “尹, 호남을 두 번 능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자신의 ‘전두환 발언’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지자와 만나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논란 이틀 만에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선 ‘전두환 재평가’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내용이 계속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권한 위임’을 배우겠다는 취지의 뜻을 고수하자, 경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선 “호남을 두 번 능멸하는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는 논평이 나왔다. 비슷한 시각, 호남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지자와 만나 “전 전 대통령은

통치했을 뿐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총장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정정 조치를 주문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오후 3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며 “대통령은 무한 책임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또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게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라며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었다”며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배면 정치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고, 비판이 일자 “내 발언을 곡해하지 말라”고 했었다. 정치권

에선 윤 전 총장이 이날 오전 ‘유감 표명’으로 여론이 오히려 악화하자 추가 입장문을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오전부터 입장문을 준비했고, 윤 전 총장 발언과 시차가 다르게 나간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어차피 사과할 일을 가지고 우기고 버티는 것이 ‘윤 검사’의 기개인가”라며 “내가 당 대표였다면 제명감”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박세사죄의 자세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날 당 회의에서 “부동산, 원전 정책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 전 의원 측은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로 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5·18 폄해 발언” 2년 만에 당이 ‘전두환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사태로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이준석 대표로 이어진 국민의힘의 ‘서진(西進)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여파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갑 당협위원장이 과거 ‘광주 비하’ 논란이 일면서 이날 자진 사퇴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후보 개인과 당에 부정적인 효과인 것은 분명하다”며 “전두환 논란이 대장동 이슈로 분열된 민주당을 다시 뭉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하·김승현 기자

(22·9·21·5)cm

<조선일보 2021년 10월 22일자 6면>



윤석열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한 분께 송구”

尹, 어제 오전 유감 표명했지만
파문 가라앉지 않자 오후에 사과
홍준표 “내가 당대표였으면 제명”
유승민측 “尹, 호남을 두 번 능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자신의 ‘전두환 발언’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 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논란 이틀 만에 사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선 ‘전두환 재평가’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내홍이 계속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권한 위

임’을 배우겠다는 취지의 뜻을 고수하자, 경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선 “호남을 두 번 능멸하는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는 논평이 나왔다. 비슷한 시각, 호남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전 대통령은 통치했을 뿐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총장이 유감 표명을 했다는데 그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 정정 조치를 주문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오후 3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며 “대통령은 무한 책임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또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게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라며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었다”며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고, 비판이 일자 “내 발언을 곡해하지 말라”고 했었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이날 오전 ‘유감 표명’으로 여론이 오히려 악화하자 추가 입장문을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오전부터 입장문을 준비했고, 윤 전 총장 발언과 시차가 다르게 나간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어차피 사과할 일을 가지고 우기고 버티는 것이 ‘윤 검사’의 기개인가”라며 “내가 당 대표였다면 제명 감”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백배사죄의 자세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날 당 회의에서 “부동산, 원전 정책 두 가지
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
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 전 의원 측은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로 가라”고 했다. 국민의
힘에선 “‘5·18 폄훼 발언’ 2년 만에 당이 ‘전두
환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
다. 이번 사태로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김
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이준석 대표로

이어진 국민의힘의 ‘서진(西進)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여파로 윤석열 캠프
에 합류했던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갑 당
협위원장이 과거 ‘광주 비하’ 논란이 일면서 이
날 자진 사퇴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는 통화에서 “후보 개인과 당에 부정적인 효과
인 것은 분명하다”며 “전두환 논란이 대장동 이
슈로 분열된 민주당을 다시 뭉치게 할 수 있다”
고 했다.

早稲



-
-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 4 심의대상 매체 현황
 - 5 색인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 5.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신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의고려사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에 따른 영향력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6조(정치적 중립성)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주장·공약 등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경우

제3장 세부 심의기준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

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인터뷰 또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이나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사실관계 등을 왜곡 또는 변형하여 게재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2. 선거와 관련한 견해나 반응,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을 지나치게 옹호 또는 비하하거나 의사를 왜곡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0조(사진게재) 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선거기사가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칼럼 등을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4장 결 정

제13조(제재결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17.2.13.>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권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안내문 송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선거법 제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7.2.3.>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안내문 송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할 때에는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재조치의 공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대상 언론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심청구와 관련한 의견진술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회부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구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청구회부인인 경우)
 4. 반론보도청구대상 기사 전문
-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회부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

이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 칙 <규칙 제2021-5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첨 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직업	
	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시 정 요 구 서				
시정요구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E-mail	
시정요구 대상	⑥ 언론사명 (매체명)		⑦ 대표자 성명	
	⑧ 주소 또는 소재지		⑨ 보도일자 및 지면	
	⑩ 보도내용 (별첨 가능)		⑪ 전화번호	
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2.2.20.>

[별지 제5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재심청구서	
원심결정	의결번호	
	결정일자	
청구인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주 소	
	전화번호	
	E-mail	
청구의 취지 및 사유	별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2.2.20. >

[별지 제7호 서식]

반론보도청구회부서				처리시간
				48시간
청구회부인	① 성명 또는 단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주소 또는 소재지	
	⑤ 전화번호		⑥ E-mail	
피청구회부인	⑦ 성명 또는 단체명		⑧ 대표자 성명	
	⑨ 주소 또는 소재지		⑩ 전화번호	
반론보도 청구대상	⑪ 매 체 명			
	⑫ 보도일자 및 지면			
	⑬ 보도내용 (별첨가능)			
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청구회부인인 경우) 4. 반론보도청구대상 기사 전문				수수료 없 음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

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 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 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 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

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

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3.7.>

② 삭제 <2004.3.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 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

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예비후보자”는“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 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

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자명부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

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③ 제69조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제2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거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사회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너.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총 447개 매체

- 일간지 168개(중앙 29, 지역 및 기타 139)
- 주간지 245개(종합 34, 지역 211)
- 월간지 22개(중앙 19, 지역 3)
- 뉴스통신 12개

1. 일간지 168개

중앙 일간지 (29)	종합일간지(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11)	뉴스토마토,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브릿지경제신문, 서울경제, 아주경제, 에너지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e-대한경제
	스포츠지(7)	데일리스포츠한국,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한국스포츠경제
지역 및 기타 일간지 (139)	서울(20)	내외일보, 매일일보, 산경일보, 새한일보, 서울매일, 서울일보, 선경일보, 세계타임즈, 시민일보, 시사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일보, 아시아타임즈, 아시아투데이, 이데일리, 이투데이, 일간투데이, 천지일보, 한성일보
	경기/인천(22)	FACE WORLD,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대한투데이, 도민일보, 문화매일신문, 수도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전국매일신문, 중부일보, 중앙신문, 현대일보, 경도신문, 기호일보, 인천일보, 일간경기
	충북(6)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대전/충남(9)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투데이충남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대구/경북(20)	경대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 경북신문, 경북연합일보, 경북일보, 경북일일신문, 경상매일신문, 경상투데이, 경안일보, 대경일보, 대구경북일보, 세명일보, 일간경북신문, 뉴영남매일, 대구광역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남(10)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연합일보, 경남일보, 뉴스경남, 양산신문, 창원일보, 한남일보
	부산/울산(9)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파이낸셜뉴스, 일간리더스경제신문, 경상일보, 울산광역매일,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지역 및 기타 일간지 (139)	전북(14)	새만금일보, 새전북신문, 전라매일,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제일신문, 전북중앙신문, 전북타임스, 전주매일, 전주일보, 호남제일신문
	광주/전남(16)	The대한일보, 광남일보, 광전매일신문, 광주드림,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광주타임즈,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광투데이, 전남도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호남일보
	제주(6)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문, 뉴제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기타 (5)	농민신문, 디지털타임스, 메트로, 전자신문, 환경일보

2. 주간지 245개

종합 주간지 (34)	잡지(15)	매경이코노미, 미래한국, 시사IN, 시사뉴스, 시사오늘, 시사저널, 씨앤비저널(CNB저널), 위클리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리뷰,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타블로이드(11)	뉴스포스트, 민주신문, 사건의내막, 스페셜경제,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 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기타주간지(8)	글로벌이코노믹, 시사경제신문, 기자협회보, 뉴스웨이, 미디어오늘, 여성신문, 이뉴스투데이, 현대경제신문
지역 주간지 (211)	서울(27)	강남포스트, 격주간 경동신문, 관악뉴스, 관악저널, 광진투데이, 구로타임즈신문, 금천뉴스, 금천신문, 노원신문, 동작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신문, 성동신문, 양천신문, 영등포신문, 영등포시대, 영등포투데이, 종로저널, 주간 강남내일신문, 주간 강동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자치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은평신문, 중구자치신문
	인천/경기(25)	가평타임즈, 경기북부시민신문, 경기헤럴드, 광주뉴스,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반월신문, 부천신문, 수원화성신문, 시흥자치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성신문, 용인시민신문, 자치안성신문, 주간 고양신문, 주간 민안신문, 파주에서, 파주타임스, 파주저널, 평안신문, 포천뉴스, 포천신문, 하남신문, 연수신문, 주간 경인열린신문
	대전/세종/충남(19)	세종매일, 계룡일보, 공주신문, 금산소식, 금산신문, 금산저널, 놀이신문, 당진시대, 당진신문, 보령신문, 서산시대, 서천신문, 아산신문, 주간 태안신문, 천안신문, 청양신문, 충남신문, 홍성신문, 홍주신문
	충북(12)	괴산중평자치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영동신문, 옥천신문, 음성자치신문, 주간 삼군신문, 중부광역신문, 중부포커스, 증평신문, 진천군자치신문, 충청리뷰
	강원(12)	강원고성신문, 강원리뷰, 강원종합복지신문, 영월신문, 원주신문, 원주투데이, 정선신문, 주간 설악신문, 철원신문, 홍천신문, 횡성신문, 횡성희망신문
	대구/경북(29)	팔공신문, 고령신문, 격주간 의성신문, 경북동부신문, 경북문화신문, 경북정치신문, 경북 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주신문, 고령군민신문, 군위신문, 뉴스상주, 문경저널, 봉화일보, 상산신문, 상주신문, 서라벌신문, 성주신문, 안동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천시민신문, 울진신문, 주간 경산자치신문, 주간 김천신문, 주간 문경, 주간 예천신문, 주간 청도신문, 주간 고향신문, 칠곡신문
	경남(29)	The함안신문,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시사신문, 고성신문, 거창韓뉴스, 김해뉴스, 남해미래신문, 남해시대, 남해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양산시민신문, 의령신문, 주간 한산신문, 주간함양, 함양군민신문, 함양신문, 창녕신문, 통영신문,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군민신문, 함안뉴스, 함안신문, 합천신문, 서부경남신문, 한들신문
	부산/울산(8)	기장일보, 부산여성신문, 오륙도신문,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울산시민신문, 울산저널, 영남연합신문

지역 주간지 (211)	전북(19)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 신문, 주간 김제신문, 남원신문, 무주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열린순창, 익산신문, 익산열린신문, 정읍시사, 정읍신문, 주간 군산신문, 주간 완주전주신문,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광주/전남(30)	시민의소리, JINDO TODAY, 강진신문, 고흥신문, 곡성일보, 구례일보, 광양만신문, 광양신문, 나주토픽, 담양곡성타임스, 담양군민신문, 담양뉴스, 목포 투데이, 무안신문, 순천독립신문, 여수투데이,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여향진도신문, 우리군민신문, 완도신문, 장강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중앙신문, 함평군민신문, 함평신문, 해남신문, 해남우리신문, 화순군민신문
	제주(1)	서귀포신문

3. 월간지 22개

중앙 월간지 (19)	종합지(14)	뉴스메이커, 대한뉴스, 더 리더(the Leader), 서울21, 시사뉴스타임, 시사뉴스피플,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 아시아뉴스통신, 월간조선, 월간중앙, 지방시대, 폴리피플, ANDA
	여성지(5)	여성동아, 여성조선, 우먼센스, 주부생활, 쿤
지역 월간지 (3)		시사전북, 차치광장, 영등포포커스

4. 뉴스통신 12개

뉴스통신(12)	국제뉴스, 내외뉴스통신, 뉴스1코리아, 뉴스웍스, 뉴스핌통신,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연합뉴스, NSP 뉴스통신, KNS뉴스통신, UPI뉴스통신, 서울뉴스통신

1) 결정유형별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언론사명	면수
자체심의	주의사실 게재	제20대 대선-자심40	세계타임즈	72
	주의사실 게재	제20대 대선-자심41	호남제일신문	76
	주의사실 게재	제20대 대선-자심60	중앙일보	79
	주의사실 게재	제20대 대선-자심71	전북중앙신문	85
	경고	제20대 대선-자심4	문화매일신문	89
	경고	제20대 대선-자심6	경북신문	92
	경고	제20대 대선-자심7	일요시사	95
	경고	제20대 대선-자심9	호남제일신문	98
	경고	제20대 대선-자심11	중앙신문	102
	경고	제20대 대선-자심13	광전매일신문	104
	경고	제20대 대선-자심19	부천신문	106
	경고	제20대 대선-자심20	세계타임즈	108
	경고	제20대 대선-자심27	열린순창	113
	경고	제20대 대선-자심42	뉴영남매일	117
	경고	제20대 대선-자심44	국제신문	121
	경고	제20대 대선-자심54	새만금일보	124
	경고	제20대 대선-자심55	부산일보	128
	경고	제20대 대선-자심59	조선일보	132
	경고	제20대 대선-자심61	동아일보	133
	경고	제20대 대선-자심62	문화일보	134
	경고	제20대 대선-자심69	경북도민일보	135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	경인종합일보	138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	사건의내막	149
	주의	제20대 대선-자심8	경북도민일보	152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0	중앙신문	155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2	해럴드경제	167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4	투데이충남	173

구분	결정유형	의결번호	언론사명	면수
자체심의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5	경상일보	177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6	뉴영남매일	179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7	전국매일신문	182
	주의	제20대 대선-자심18	대구신문	184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1	중앙일보	191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2	매일신문	192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3	서울신문	195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4	세계일보	197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5	한국경제	199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6	헤럴드경제	202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8	UPI뉴스	204
	주의	제20대 대선-자심29	강원도민일보	207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0	광주매일신문	209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1	대구일보	211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2	아시아뉴스통신	214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3	연합뉴스	216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4	전국매일신문	220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5	전남매일	222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6	전북중앙신문	224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7	천지일보	226
	주의	제20대 대선-자심38	광주일보	228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3	한국스포츠크경제	230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5	주간동아	231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6	The대한일보	234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7	호남신문	236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8	뉴스토마토	238
	주의	제20대 대선-자심49	뉴시스	245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0	서울뉴스통신	248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1	무등일보	252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2	디지털타임스	254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3	한국경제	257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6	목포투데이	259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7	일간경북신문	261
	주의	제20대 대선-자심58	브릿지경제신문	263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3	뉴시스	264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4	The대한일보	269

구분	결정 유형	의결 번호	언론사명	면수
자체심의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5	호남매일	271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6	광전매일신문	273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7	문화일보	275
	주의	제20대 대선-자심68	헤럴드경제	277
	주의	제20대 대선-자심70	뉴스토마토	280
	주의	제20대 대선-자심72	국제신문	283
	주의	제20대 대선-자심73	조선일보	285
	권고	제20대 대선-자심1	광전매일신문	288
	권고	제20대 대선-자심39	이데일리	292
	안내문송부	제20대 대선-자심2	The대한일보	295

구분	결정 유형	의결 번호	시정요구인 / 매체명	면수
시정요구심의	경고	제20대 대선-시심1	이재명 / 중앙일보	297
	경고	제20대 대선-시심2	이재명 / 조선일보	301
	경고	제20대 대선-시심11	이재명 / 동아일보	329
	주의	제20대 대선-시심3	이재명 / 중앙일보	304
	주의	제20대 대선-시심9	이재명 / 조선일보	322
	기각	제20대 대선-시심4	이재명 / 조선일보	308
	기각	제20대 대선-시심5	이재명 / 중앙일보	311
	기각	제20대 대선-시심6	이재명 / 조선일보	314
	기각	제20대 대선-시심7	이재명 / 조선일보	317
	기각	제20대 대선-시심8	이재명 / 중앙일보	320
	기각	제20대 대선-시심10	이재명 / 동아일보	326
	기각	제20대 대선-시심12	이재명 / 조선일보	334

2) 언론사별

구분	언론사명	결정 유형	의결 번호	면수
자체심의	The대한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46	234
	The대한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64	269
	The대한일보	안내문송부	제20대대선-자심2	295
	UPI뉴스	주의	제20대대선-자심28	204
	강원도민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29	207
	경북도민일보	경고	제20대대선-자심69	135
	경북도민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8	152
	경북신문	경고	제20대대선-자심6	92
	경상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15	177
	경인종합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3	138
	광전매일신문	경고	제20대대선-자심13	104
	광전매일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66	273
	광전매일신문	권고	제20대대선-자심1	288
	광주매일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30	209
	광주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38	228
	국제신문	경고	제20대대선-자심44	121
	국제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72	283
	뉴스토마토	주의	제20대대선-자심48	238
	뉴스토마토	주의	제20대대선-자심70	280
	뉴시스	주의	제20대대선-자심49	245
	뉴시스	주의	제20대대선-자심63	264
	뉴영남매일	경고	제20대대선-자심42	117
	뉴영남매일	주의	제20대대선-자심16	179
	대구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18	184
	대구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31	211
	동아일보	경고	제20대대선-자심61	133
	디지털타임스	주의	제20대대선-자심52	254
	매일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22	192
	목포투데이	주의	제20대대선-자심56	259
	무등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51	252
	문화매일신문	경고	제20대대선-자심4	89
	문화일보	경고	제20대대선-자심62	134
	문화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67	275

구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면수
자체심의	부산일보	경고	제20대대선-자심55	128
	부천신문	경고	제20대대선-자심19	106
	브릿지경제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58	263
	사건의내막	주의	제20대대선-자심5	149
	새만금일보	경고	제20대대선-자심54	124
	서울뉴스통신	주의	제20대대선-자심50	248
	서울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23	195
	세계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24	197
	세계타임즈	주의사실 게재	제20대대선-자심40	72
	세계타임즈	경고	제20대대선-자심20	108
	아시아뉴스통신	주의	제20대대선-자심32	214
	연합뉴스	주의	제20대대선-자심33	216
	열린순창	경고	제20대대선-자심27	113
	이데일리	권고	제20대대선-자심39	292
	일간경북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57	261
	일요시사	경고	제20대대선-자심7	95
	전국매일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17	182
	전국매일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34	220
	전남매일	주의	제20대대선-자심35	222
	전북중앙신문	주의사실 게재	제20대대선-자심71	85
	전북중앙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36	224
	조선일보	경고	제20대대선-자심59	132
	조선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73	285
	주간동아	주의	제20대대선-자심45	231
	중앙신문	경고	제20대대선-자심11	102
	중앙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10	155
	중앙일보	주의사실 게재	제20대대선-자심60	79
	중앙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21	191
	천지일보	주의	제20대대선-자심37	226
	투데이충남	주의	제20대대선-자심14	173
	한국경제	주의	제20대대선-자심25	199
	한국경제	주의	제20대대선-자심53	257
	한국스포츠통계	주의	제20대대선-자심43	230
	헤럴드경제	주의	제20대대선-자심12	167
	헤럴드경제	주의	제20대대선-자심26	202
	헤럴드경제	주의	제20대대선-자심68	277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자체심의	호남매일	주의	제20대대선-자심65	271
	호남신문	주의	제20대대선-자심47	236
	호남제일신문	주의사실 게재	제20대대선-자심41	76
	호남제일신문	경고	제20대대선-자심9	98

구 분	매체명 / 시정요구인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시정요구심의	동아일보 / 이재명	기각	제20대대선-시심10	326
	동아일보 / 이재명	경고	제20대대선-시심11	329
	조선일보 / 이재명	경고	제20대대선-시심2	301
	조선일보 / 이재명	기각	제20대대선-시심4	308
	조선일보 / 이재명	기각	제20대대선-시심6	314
	조선일보 / 이재명	기각	제20대대선-시심7	317
	조선일보 / 이재명	주의	제20대대선-시심9	322
	조선일보 / 이재명	기각	제20대대선-시심12	334
	중앙일보 / 이재명	경고	제20대대선-시심1	297
	중앙일보 / 이재명	주의	제20대대선-시심3	304
	중앙일보 / 이재명	기각	제20대대선-시심5	311
	중앙일보 / 이재명	기각	제20대대선-시심8	320

언론중재위원회

안 내

■ 서울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3000, 3010, 3100, 3110
선거기사심의 관련 문의 02) 397-3151~3
팩스 02) 397-3089

■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6층
전화 051) 759-7083~4 | 팩스 051) 759-7093

■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402호
전화 053) 763-0020~1 | 팩스 053) 763-0242

■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5층
전화 062) 676-0360~1 | 팩스 062) 676-0362

■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문화방송국 8층
전화 042) 525-0778~9 | 팩스 042) 525-0768

■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9층
전화 031) 211-9027, 9022 | 팩스 031) 212-0223

■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 춘천사옥 1층
전화 033) 255-2878~9 | 팩스 033) 255-2872

■ 충북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 286-8083, 8081 | 팩스 043) 286-8084

■ 전북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05호
전화 063) 288-0010, 0981 | 팩스 063) 288-0980

■ 경남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03호
전화 055) 263-1787, 1780 | 팩스 055) 263-1769

■ 제주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01 다모양빌딩 3층
전화 064) 722-3328, 3352 | 팩스 064) 726-320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발행일	2022년 9월 7일
발행인	이석형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2팀 (02-397-3151~3)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FAX 02)397-3089 http://www.pac.or.kr
제작	문화공감(02-2266-1897)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대표 02)397-3114 <http://www.pac.or.kr>